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법 무 부	소 관
법 제 처	소 관
감 사 원	소 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 관
헌 법 재 판 소	소 관
대 법 원	소 관

2024.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 목 차 】

Ⅰ. 소관부처 회부예산안 ····· 1

Ⅱ. 심사경과 ····· 3

Ⅲ. 예산안 규모 및 특징 ····· 4

1. 법무부 소관 ····· 4
2. 법제처 소관 ····· 8
3. 감사원 소관 ····· 9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11
5. 헌법재판소 소관 ····· 12
6. 대법원 소관 ····· 14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18

1. 법무부 소관 ····· 18
2. 법제처 소관 ····· 254
3. 감사원 소관 ····· 329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392
5. 헌법재판소 소관 ····· 417
6. 대법원 소관 ····· 477

Ⅴ. 대체토론의 요지 ····· 617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625

Ⅶ. 심사결과 ····· 629

Ⅷ. 부대의견 ····· 637

붙임 1. 2025년도 예산안 조정 총괄표 ····· 643
붙임 2. 2025년도 법무부 예산안 수정현황 ····· 644
붙임 3. 2025년도 법제처 예산안 수정현황 ····· 657
붙임 4. 2025년도 감사원 예산안 수정현황 ····· 661
붙임 5. 2025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안 수정현황 ····· 665
붙임 6. 2025년도 헌법재판소 예산안 수정현황 ····· 667
붙임 7. 2025년도 대법원 예산안 수정현황 ····· 669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4. 11.

법제사법위원회

Ⅰ. 소관부처 회부예산안

1. 법무부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 교도작업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2. 법제처 소관

○ 일반회계 : 세출

3. 감사원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일반회계 : 세출

5. 헌법재판소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6. 대법원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 등기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4. 9. 1.

2. 회부일자 : 2024. 9. 4.

3.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제418회국회(정기회)

□ 제15차 위원회(2023. 11. 4.)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회부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4. 11. 6.)

- 심사(감사원·법무부·법제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수정의결(법제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

□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4 11. 7.)

- 심사(법무부·대법원·감사원)・수정의결(대법원·감사원·법무부)

□ 제16차 위원회(2024. 11. 8.)

-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수정의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Ⅲ. 예산안 규모 및 특징

1. 법무부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 입

○ 규 모

2025년도 예산안	1조 5,436억 8,300만원
2024년도 예산	1조 3,249억 3,000만원
증(△)감	2,187억 5,300만원 (16.5%)

○ 주요 세입 내역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징계부과금	1조 4,719억 6,700만원
면허료 및 수수료	593억 700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	79억 4,500만원
관유물 대여료	11억 1,100만원
기타	33억 5,300만원

(2) 세　출

○ 규　모

2025년도 예산안	4조 4,005억 4,600만원
2024년도 예산	4조 2,935억 7,800만원
증(△)감	1,069억 6,800만원 (2.5%)

○ 주요 세출 내역

인건비	2조 6,610억 8,000만원
기본경비	1,677억 3,200만원
주요사업비	1조 4,829억 7,200만원
기금전출금	887억 6,200만원

나. 교도작업특별회계

(1) 세　입

○ 규　모

2025년도 예산안	1,236억 8,000만원	
2024년도 예산	1,205억 2,900만원	
증(△)감	31억 5,100만원	(2.6%)

○ 주요 세입 내역

교도소 수입	643억 4,300만원
기금예탁원금회수	470억 원
전년도세계잉여금	93억 8,800만원
기금예탁이자수입	27억 4,600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	1억 300만원
잡수입	1억 원

(2) 세　출

○ 규　모

2025년도 예산안	1,236억 8,000만원
2024년도 예산	1,205억 2,900만원
증(△)감	31억 5,100만원 (2.6%)

○ 주요 세출 내역

교도작업	621억 500만원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	526억 2,700만원
직업훈련	43억 9,900만원
시설보완	38억 9,700만원
기본경비	6억 5,200만원

2. 법제처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 출

○ 규 모

2025년도 예산안	454억 1,800만원
2024년도 예산	462억 8,400만원
증(△)감	8억 6,600만원(1.9%)

○ 주요 세출 내역

인건비	237억 8,000만원
기본경비	52억 8,700만원
주요사업비	172억 1,700만원

3. 감사원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 입

○ 규 모

2025년도 예산안	7억 7,000만원
2024년도 예산	7억 4,500만원
증(△)감	2,500만원(3.4%)

○ 주요 세입 내역

수입대체경비수입	6억 1,800만원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억 700만원
경상이전수입	3,000만원
재산수입	1,500만원

(2) 세 출

○ 규 모

2025년도 예산안	1,507억 6,200만원
2024년도 예산(추경)	1,461억 6,700만원
증(△)감	45억 9,500만원(3.1%)

○ 주요 세출 내역

인 건 비	989억 9,400만원
기본경비	138억 3,100만원
주요사업비	379억 3,700만원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 출

○ 규 모

2025년도 예산안	252억 6,800만원
2024년도 예산	206억 8,000만원
증(△)감	45억 8,800만원 (22.2%)

○ 주요 세출 내역

인 건 비	86억 5,900만원
기본경비	45억 600만원
주요사업비	121억 300만원

5. 헌법재판소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 입

○ 규 모

2025년도 예산안	2억 4,400만원
2024년도 예산	6억 4,100만원
증(△)감	△3억 9,700만원(△61.9%)

○ 주요 세입 내역

기타경상이전수입	2억 1,000만원
면허료 및 수수료	1,000만원
잡수입	2,400만원

(2) 세 출

○ 규 모

2025년도 예산안	585억 2,600만원
2024년도 예산	567억 6,600만원
증(△)감	17억 6,000만원(3.1%)

○ 주요 세출 내역

인건비	347억 9,200만원
기본경비	73억 8,300만원
주요사업비	163억 5,100만원

6. 대법원 소관

가. 일반회계

(1) 세 입

○ 규 모

2025년도 예산안	5,027억 7,000만원
2024년도 예산	6,105억원
증(△)감	△1,077억 3,000만원 (△17.6%)

○ 주요 세입 내역

관유물 대여료	41억 6,400만원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1억 5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2억 4,700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	1,223억 700만원
면허료 및 수수료	3,448억 400만원
잡 수 입	4억 9,700만원
특별회계 전입금	305억 9,600만원

(2) 세 출

○ 규 모

2025년도 예산안	1조 9,780억 200만원	
2024년도 예산	1조 8,646억 1,800만원	
증(△)감	1,133억 8,400만원	(6.1%)

○ 주요 세출 내역

인 건 비	1조 3,935억 3,100만원
기본경비	901억 6,800만원
사 업 비	4,943억 300만원

나. 등기특별회계

(1) 세 입

○ 규 모

2025년도 예산안	2,785억 7,400만원
2024년도 예산	3,831억 4,000만원
증(△)감	△1,045억 6,600만원 (△27.3%)

○ 주요 세입 내역

관유물대여료	2억 9,200만원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억 5,500만원
기타경상이전수입	2,000만원
면허료 및 수수료	3,079억 8,800만원
건물 및 토지매각대	116억 5,600만원
전년도세계잉여금	630억 2,200만원

(2) 세 출

○ 규 모

2025년도 예산안	2,785억 7,400만원
2024년도 예산	3,831억 4,000만원
증(△)감	△1,045억 6,600만원(△27.3%)

○ 주요 세출 내역

인 건 비	1,332억 3,400만원
기 본 경 비	42억 7,300만원
주요사업비	924억 8,000만원
회계간 거래	484억 8,700만원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법무부 소관】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Ⅱ. 검토의견

1. 일반회계

◈ 세 입 ◈

가. 기타재산이자수입

(1) 예산안 개요

○ 기타재산이자수입(11-54-546)은 정부의 재산·금융자산·무형자산 소유로 인한 이자 수입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이자 수입으로 구성됨. 2025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대비 6,700만원(△20.2%) 감액된 2억 6,400만원이 계상됨.

<2025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554	331	264	△67	△20.2

(2) 예년 대비 높은 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세입예산 증액 편성 필요

○ 동 세입 수납실적의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이자 수입이며, 2025년 국고보조 이자 수입은 2024년분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를 정산하게 되므로 2024년 금리에 영향을 받음.

○ 법무부의 최근 5년 간 동 세입 수납실적을 보면, 세입예산 편성액은 연도별로 유사하게 편성(2020년~2024년 중 319백만원~331백만원 수준)되는 반면, 실제 수납액은 금리 변동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남. 특히, 2024년의 경우 2023년 1월 3.50%까지 인상 후 2024년 10월까지 유지된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아, 2024년 9월까지의 수납 실적이 예산액 대비 606.3%인 20억 700만원에 달하고 있음.

<기타재산이자수입(11-54-546) 연도별 예산액 대비 수납 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수납률 (B/A)	미수납액
2020	339	437	430	127.0	7
2021	339	189	182	53.7	7
2022	319	147	140	43.9	7
2023	**331**	**561**	**554**	**167.4**	**7**
2024.9월말	**331**	**2,136**	**2,007**	**606.3**	**129**
2025 예산안	264	-	-	-	-

* 자료: 법무부

○ 그럼에도 법무부는 2025년 기타재산이자수입을 2021년부터 2023년 3개년의 평균 수납실적을 토대로 편성한바, 2024년 예산액 대

비 오히려 6,700만원이 감액된 2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수납실적이 예산액의 절반 수준이었던 2021년 및 2022년의 경우 각각 수납실적에 영향을 준 전년도(2020년 및 2021년) 기준금리 수준이 0.50%~1.25%였고, 5억 5,400만원이 수납된 2023년의 경우 전년도(2022년) 기준금리 수준이 1.25%~3.25%였던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25년의 경우 수납실적 기준인 2024년 금리가 3.25%~3.5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바,[1] 2025년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최소한 2023년 수납실적(5억 5,400만원) 이상으로 증액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경과>

발표날짜	기준금리	이전대비
2019. 7. 18.	1.50%	-25bp
2019. 10. 16.	1.25%	-25bp
2020. 3. 16.	0.75%	-50bp
2020. 5. 28.	0.50%	-25bp
2021. 8. 26.	0.75%	+25bp
2021. 11. 25.	1.00%	+25bp
2022. 1. 14.	1.25%	+25bp
2022. 4. 14.	1.50%	+25bp
2022. 5. 26.	1.75%	+25bp
2022. 7. 13.	2.25%	+50bp
2022. 8. 25.	2.50%	+25bp
2022. 10. 12.	3.00%	+50bp
2022. 11. 24.	3.25%	+25bp

1) 2024년 10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였지만,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5명이 연내 금리 동결 의견을 내는 등 2024년 중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참고기사 : 이데일리, 「금통위원 6명 중 5명, “내년 1월까지 추가 금리인하 없을 것”」, 2024. 10. 14.

2023. 1. 13.	3.50%	+25bp
2024. 10. 11.	3.25%	-25bp

* 자료: 한국은행

나. 위약금

(1) 예산안 개요

○ 위약금(12-57-572)은 「출입국관리법」[2]상 보호일시해제제도 및 출국명령이행제도 보증금의 국고귀속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상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분(위약금 성격) 및 지체상금 등 법령과 계약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위약금 수입임.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8,500만원(18.5%)이 증액된 18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위약금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목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위약금 (57-572)	1,494	1,541	1,826	285	18.5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입찰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2조(계약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2) 보호일시해제 및 출국명령이행 보증금의 수납 실적 감소분을 고려한 세입예산 감액 필요

○ 위약금은 2021년을 기점으로 수납액이 크게 증가(2020년 수납액 3억 9,000만원, 2021년 수납액 16억원)하였음. 이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으로 각국이 한국 등 해외로부터의 자국민 입국마저 제한하여 국내 외국인 보호시설의 과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법무부가 동 보호시설 내 감염 예방 및 과밀도 해소를 위해 운영한 '보호일시해제제도' 및 '출국명령이행보증제도' 관련 보증금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즉, ①「출입국관리법」제65조[4]의 보호일시해제제도를 적극 활용함에 따라 일시해제 조건 위반에 따른 보증금 및 위약금 등의 귀속 사례도 비례적으로 증가하였고, ② 2021년부터 신규 도입된 출국명령이행보증제도[5]의 경우 출국조건 위반자의 예치금을 국고로 귀속하면서 위약금 세입이 발생한 것임.

<연도별 위약금(57-572) 예산액 및 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

4) **「출입국관리법」 제65조(보호의 일시해제)**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피보호자(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의 청구에 따라 피보호자의 정상(情狀), 해제요청사유, 자산,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청구,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강제 퇴거 대상 외국인이 예치금을 내면 보호시설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출국한 후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연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수납률 (B/A)	미수납액
2020	687	400	390	56.7	10
2021	687	1,610	1,600	232.8	10
2022	687	2,384	2,383	346.9	1
2023	783	1,495	1,494	190.8	1
2024.9월말	1,541	558	536	34.7	22
2025 예산안	1,826				

* 자료: 법무부

<보호일시해제보증금 및 출국명령이행보증금 제도의 내용>

○ 보호일시해제보증금 제도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또는 피보호자의 청구에 따라 피보호자의 정상(情狀), 해제요청사유, 자산,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하는 제도(「출입국관리법」 제65조)
-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외에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다시 보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출입국관리법」 제66조)

○ 출국명령이행보증금 제도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에게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시키고 보호조치 없이 자진하여 출국할 수 있도록 출국명령하는 제도(「출입국관리법」 제68조)
-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붙인 조건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4항)

○ 그러나 코로나19가 종식된 2023년을 기점으로 위약금(57-572) 수납액은 다시 감소하는 추세로(앞 페이지 표 참조), 2024년의 경우 세입 예산 15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9월말 기준 수납실적은 5억 3,600만원(34.7%)에 불과함.

이러한 세입 수납액의 감소는 2023년 이후 보호일시해제보증금 및 출국명령이행보증금의 귀속액 감소에 따른 것으로, 2021년과 2022년 각각 15억 6,100만원, 23억 1,700만원에 달했던 보증금 국가귀속액은 2023년 13억 8,200만원, 2024년 9월말 기준 4억 9,000만원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연도별 보호일시해제보증금 및 출국명령이행보증금 예치액 및 귀속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말	
	예치액	귀속액	예치액	귀속액	예치액	귀속액	예치액	귀속액	예치액	귀속액
보호일시해제보증금	2,393	255	4,735	1,287	2,856	1,591	2,187	1,273	1,729	380
출국명령이행보증금	–	–	1,053	274	1,070	726	1,047	109	506	110
합 계	2,393	255	5,788	1,561	3,926	2,317	3,234	1,382	2,235	490

* 자료: 법무부

○ 연도별 보호일시해제보증금과 출국명령이행보증금의 예치 실적 및 위반 건수 역시 2023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임.

<연도별 보호일시해제보증금 예치건수 및 위반건수 발생 현황>

(단위: 건)

구 분	예치건수	위반건수			
		합 계	출석요구 불응	출국기한 위반	거주지 조건 위반
2018년	111	18	15	3	-
2019년	94	11	9	2	-
2020년	176	51	44	6	1
2021년	321	102	84	18	-
2022년	240	125	112	13	-
2023년	147	10	10	-	-
2024년 9월말	134	31	19	8	4

* 자료: 법무부

<연도별 출국명령이행보증금 예치건수 및 위반건수 발생 현황>

(단위: 건)

연 도	예치건수	위반건수				
		합 계	보증금 예치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1	226	69	69			
2022	202	134	54	80		
2023	166	54	3	27	24	
2024. 9월말	104	31			18	13

* 자료: 법무부

○ 그럼에도 법무부는 위약금 세입 예산을 두 제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보증금 예치 및 국고귀속 실적이 가장 높은 해인 2021년 및 2022년을 포함한 3개년(2021~2023)의 평균 수납실적을 토대로 2025년 세입예산을 편성한바, 제도 운영 현황을 감안

했을 때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동 세입 예산은 코로나19가 종식된 2023년 이후 보호일시해제제도와 출국명령이행보증제도의 실제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감액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세 출 ◈

가. 법무활동

(1) 기업환경지수 개선

(가) 예산안 개요

○ 기업환경지수 개선(1032-307)은 국제세미나, 서울 국제콘퍼런스, 기업투자환경 개선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역량 강화를 통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25억원(988.1%) 증액 편성된 27억 5,300만원임.

<2025년도 기업환경지수 개선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기업환경지수 개선	222	253	2,753	2,500	988.1

(나) 사업 간 연계 추진 등을 통한 집행관리 철저 필요

○ 법무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 내역사업인 “기업환경평가대응 분쟁해결분야 역량 강화”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대

한 민간경상보조(320-01) 방식으로 이루어짐.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6]에 따라 1966년에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하고 있음. 동 내역사업은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Business-Ready)[7]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보조[8]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증액된 예산 25억원은 전액 동 내역사업에 신규 편성되었음.

---

6) **「중재법」 제40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국내외 상사분쟁(商事紛爭)을 공정ㆍ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商事仲裁)를 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7)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는 각국의 기업환경을 분석하여 순위를 측정하는 제도로서, 기존 평가방식인 Doing Business(DB)에서 2023년도부터 새로운 평가방식인 신 기업환경평가 Business Ready(Business-Ready)로 변경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24년 평가대상국에 포함되어, 2025년에 평가결과가 발표될 예정임.

8)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재정 지원)**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하는 사업
2. 제6조에 따라 교육 주관기관이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하는 사업
3. 그 밖에 제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추진하는 사업

<“기업환경평가대응 분쟁해결분야 역량 강화” 내역사업 세부 편성내역>

(단위: 천원)

구분	편성 내역	합계
전문인력 확보	o 사무국 전문인력(중재사건처리 변호사) 1,100,000 = 33,333*12월*1명 + 25,000*12월*1명 + 16,667*12월*2명 o 홍보/운영인력 200,000 = 6,667*12월*1명 + 4,167*12월*1명 + 2,917*12월*2명 o 위원회 위원 수당 100,000 = 417*12월*20명	1,400,000
사업비	o Civil Law Summit for Asian Arbitration 개최 100,000 = 메인콘퍼런스 25,000 + 행사위탁(계약) 40,000 + 운영비 35,000 o 한국국제중재 홍보 200,000 = 법제, 판례, 중재판정 등 영문자료 제작 200,000*1년 o 국제중재센터 설명회/세미나 200,000 = (해외전략 대상국가 설명회 임차료 30,000 + 여비 13,600 + 운영비 6,400) + (해외중재기관 개최 행사 참석 및 홍보 여비 61,200 + 참가비 22,800 + 홍보비 66,000) o 국내기업 대상 산업별 국제중재 홍보사업 100,000 = 강사사례금 500*5회*10명 + 자료집 5,000*5회 + 운영비 8,000*5회+행사안내 2,000*5회 o 중재전문인력 양성 100,000 = Vis Pre-Moot 행사 50,000 + 한국인 국제중재인 양성 프로그램 50,000	700,000
운영비	o 임차료, 관리비, 시설비 등 400,000*1년	400,000
합계		2,500,000

* 자료: 법무부

○ 다만, 신규 편성된 동 내역사업 외에도 대한상사중재원 보조 사업이 있었는바, 법무부는 2024년에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1033-304)”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중재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25억 7,800만원을 보조한 바 있음.

<연도별·사업별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보조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2021	2022	2023	2024	2025(안)	
세부사업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 (1033-304)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 (1033-304)	기업환경지수 개선 (1032-307)
내역사업	중재산업 활성화				중재산업 활성화	기업환경평가 대응 분쟁해결분야 역량 강화
예산액	2,524	2,365	2,365	2,578	1,771	2,500

* 자료: 법무부 제공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2개 세부사업의 구체적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두 사업은 모두 해외 설명회·세미나 등 우리나라의 국제중재 홍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즉, 기존 세부사업의 경우 중재사건 유치를 위한 해외설명회 개최와 중재안내서·영문저널 제작 등을 내용으로 하고있으며, 신규 증액된 별도 세부사업도 국제중재센터 홍보를 위한 설명회 개최 및 중재 관련 영문자료 제작 예산을 편성하였음.

또한, 기존 세부사업은 '국제중재 실무자 교육' 및 '신규 위촉 중재인의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세부사업 역시 '한국인 국제중재인 양성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2개 사업에 나뉘어 편성된 국제중재 홍

보 및 교육 예산을 사업 간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각 세부사업별 보조금 예산 편성내역 비교>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1033-304)	기업환경지수 개선(1032-307)
가. 사업비 (421,200천원) 1) 해외설명회 (20,000천원) 2) 국제중재 행사 개최 (80,000천원) - 국제중재 주간(Seoul Arbitration Week) 3) 중재 콘텐츠 강화 (136,000천원) - 중재안내서, 영문저널, 홈페이지 개선 등 4) 중재전문 인력 양성 (185,200천원) - 국제중재 실무자 교육, 신규 위촉 중재인 전문성 강화 교육, 중재전문 인력 관리 나. 운영비 (1,349,341천원) - 임차료, 관리비, 회의수당, 국제중재센터 시설 개선 등	가. 국제중재센터 전문인력 확보 (1,400,000천원) 1) 사무국 전문인력(국제중재사건 처리 변호사) 사무총장급, 수석변호사, 사건담당 변호사 (1,100,000천원) 2) 국제중재센터 홍보/운영인력 (200,000천원) 3) 국제중재센터 위원회 위원 수당 (100,000천원) 나. 사업비 (700,000천원) 1) Civil Law Summit for Asian Arbitration (대륙법계 아시아 중재기관 연합 콘퍼런스) 개최 (100,000천원) 2) 한국 국제중재 홍보 - 법제, 판례, 중재판정 등 관련 영문자료 제작 (200,000천원) 3) 국제중재센터 설명회/세미나 (200,000천원) 4) 국내기업 대상 산업별 국제중재 홍보 사업 (100,000천원) 5) 중재전문 인력 양성 (100,000천원) - Vis Pre-Moot 행사 주최 - 한국인 국제중재인 양성 프로그램 운영 다. 운영비(국제중재센터) (400,099천원) - 임차료, 관리비, 시설비 등
1,770,541천원	2,500,099천원

* 자료: 법무부 제공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법무부는 이에 대하여,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1033-307)” 홍보 예산은 대한민국을 중재지 또는 심리장소로 하는 해외 중재기관 중재사건 유치를 위한 설명회 등을 위한 것이고, “기업환경지수 개선(1032-307)” 사업 예산의 경우 우리 중재 시스템과 중재기관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해외기업의 국내 기관 중재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목적과 내용이 달라 양자는 별도 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대한민국을 중재지 또는 심리장소로 하는 중재사건 유치와, 우리나라의 중재제도 및 중재기관을 활용한 국제중재 활성화는 상호 연계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양 사업은 동일하게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이고, 사업 목적·방향 및 국재중제 홍보, 중재전문인력 양성 등 세부 내용에 있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짐.

이를 감안할 때, 2025년도 각 세부사업의 수행은 개별 사업단위의 예산 집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법무부는 국제중재 기능의 강화를 통한 기업환경평가 대응이라는 신규 내역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이 각 세부사업에 편성된 보조금 예산 중 국제중재 홍보, 국제중재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점검하는 등 사업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가) 예산안 개요

○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1038-305)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9]을 주관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8,600만원(1.7%) 증액 편성된 52억 8,300만원임.

<2025년도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4,439	5,197	5,283	86	1.7

(나) 해외출장 예산의 관행적 편성 지양 필요

○ 동 사업은 2025년도 예산안에 선진국 법조인 선발제도 및 시험문제 유형 실태조사를 위하여 국외업무여비(220-02) 1,9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9) 변호사로서 요구되는 이해관계의 충돌 등 직역윤리에 관한 규범의 습득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법조윤리시험을 합격하여야 변호사시험 응시를 위한 자격이 주어짐.

<“선진국 법조인 선발제도 및 시험문제 유형 실태조사” 세부 편성내역>

(단위: 천원, 달러)

편성내역	원화	외화
가. 뉴질랜드 (검사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1명, 6일)	19,364	$ 5,336
o 항공료 3,000,000원*4명	12,000	
o 일비 ($30*4명)*8일	1,325	$ 960
o 숙박비 ($106*4명)*7박	4,096	$ 2,968
o 식비 ($44*4명)*8일	1,943	$ 1,408
나. 계수조정	271	
단수조정	△176	
합계	19,459	$ 5,336

* 자료: 법무부

○ 이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의 해외출장 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도에는 독일 국가 사법시험의 디지털시험 시행 참관 및 오스트리아 법학 교육 및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 관련 면담 등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 1,945만원을 초과한 2,245만원을 집행하였음.

2022년에는 영국, 2019년에는 노르웨이·스웨덴을 방문하였으나, 2020년~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출장의 제한, 2023년에는 변호사시험 CBT 시행 준비 비용 충당을 위하여 국내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임.

<2019년～2024년 국외출장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국가명	일자	방문기관	출장내용	편성내역	집행내역10)
2024	독일, 오스트리아	‘24.6.2. ~ ‘24.6.10.	독일 사법시험청, 베를린 자유대학교 전자 시험센터, 오스트리아 빈 대학 법학부 등	독일 사법시험의 디지털 시험 시행 참관, 사법시험 응시제한, 합격자 결정 기준 등 제도 운영 관련 면담, 오스트리아 법학 교육 및 법조인 선발 · 양성 제도 관련 면담	19,459	22,459
2023	–	–	–	–	19,459	0
2022	영국	‘22.10.31. ~ ‘22.11.6.	런던시티대 로스쿨, 법정 변호사 기준 이사회, 런던 시험센터 등	영국 CBT 프로그램 시범 이용, CBT 진행방식 관련 면담 및 시험장 방문 등	19,132	13,572
2021	–	–	–	–	21,258	0
2020	–	–	–	–	21,000	0
2019	노르웨이, 스웨덴	‘19.6.1. ~ ‘19.6.10.	오슬로대, 노르웨이 변호사협회, 스톡홀름 델피 사무소 등	노르웨이 법학교육 과정 및 재응시 제한, 시험출제 등 면담, 스웨덴 법조인 선발 · 양성 제도 관련 면담, 변호사 수급 등 면담	23,471	19,692

* 자료: 법무부

10) 2024년의 경우 2024.9.기준, 2020년, 2021년 코로나로 인한 국외출장 제한, 2023년 변호사시험 CBT 시행 준비 비용 부족으로 국내여비로 조정하여 집행(법무부)

○ 다만, 예산 편성 시 출장 계획과 실제 출장대상국 및 목적이 일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최근 5년 간 동 사업 국외업무여비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2022년 예산 편성 시에는 호주 캔버라 및 스위스 제네바, 2023년에는 호주 캔버라, 2024년·2025년에는 뉴질랜드 방문 계획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하였음.

<2022년～2024년 국외업무여비 세부 편성내역>

(단위: 천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가. 호주 캔버라(검사 1명, 사무관 2명, 6일)	8,650	가. 호주 캔버라(검사 1명, 사무관 2명, 6일)	6,335	가. 호주 캔버라(검사 1명, 사무관 2명, 6일)	18,883	가. 뉴질랜드(검사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1명, 6일)	18,936
1) 항공료	4,831	1) 항공료	2,769	1) 항공료	12,000	1) 항공료	12,000
2) 일비	690	2) 일비	644	2) 일비	1,238	2) 일비	1,248
3) 숙박비	2,069	3) 숙박비	1,932	3) 숙박비	3,829	3) 숙박비	3,858
4) 식비	1,060	4) 식비	990	4) 식비	1,816	4) 식비	1,830
나. 스위스 제네바(검사급 1명, 책임관 2명, 8일)	12,542	나. 스위스 제네바(검사급 1명, 책임관 2명, 8일)	12,033	나. 계수조정	576	나. 계수조정	523
1) 항공료	4,852	1) 항공료	4,852				
2) 일비	2,333	2) 일비	786				
합계	21,258	합계	19,132	합계	19,459	합계	19,459

* 자료: 법무부 제공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국외출장 소요가 발생하여 예외적으로 출장 대상국 및 목적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연례적으로 동일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출장 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의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① 인터넷·E-mail 또는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이 가능한 경우, ② 해외공관이나 주재관 활용이 가능한 경우, ③ 국제회의 참석 등과 병행하여 자료조사가 가능한 경우 등에는 출장을 제한하고, 현안타결을 위한 해외출장 위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11)]

○ 이를 바탕으로 할 때, 법무부는 선진국 법조인 선발제도 및 시험문제 유형 실태조사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편성 시, 매년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할 필요가 있고, 과거 집행실적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출장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1)「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p.238

(3) 법무실 기본경비

(가) 예산안 개요

○ 법무실 기본경비(7011-253)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법무실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임.

○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억 1,900만원(20.1%) 증액 편성된 7억 900만원임.

<2025년도 법무실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법무실 기본경비	546	590	709	119	20.1

(나) 조직개편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 반영 필요

○ 법무부는 2023. 8. 8.「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공포·시행에 따른 직제 변경으로 국제법무국을 신설하고, 기존 인권국 소속이었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실로 변경하였음.[12](2심의관 8과 → 2심의관 6과 1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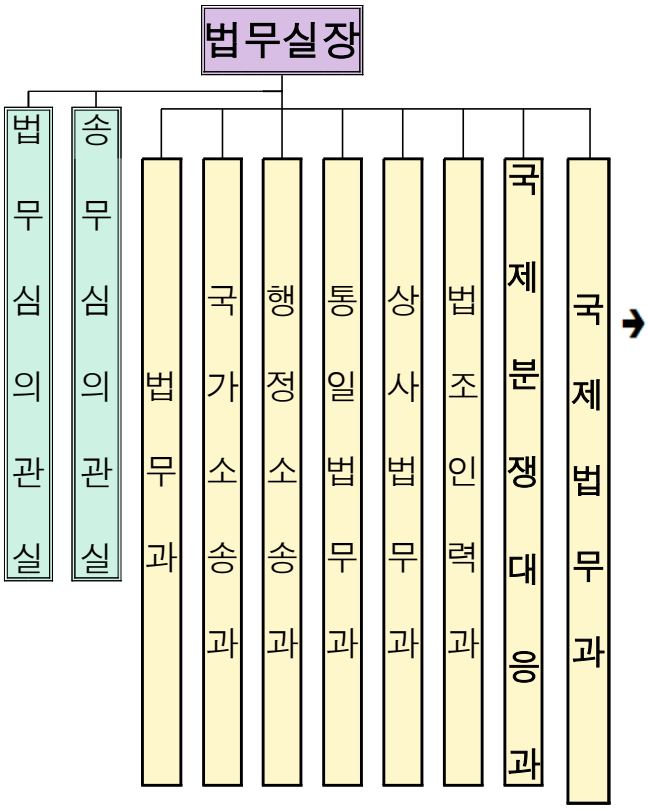
---

1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법무실)** ①법무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0.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지도·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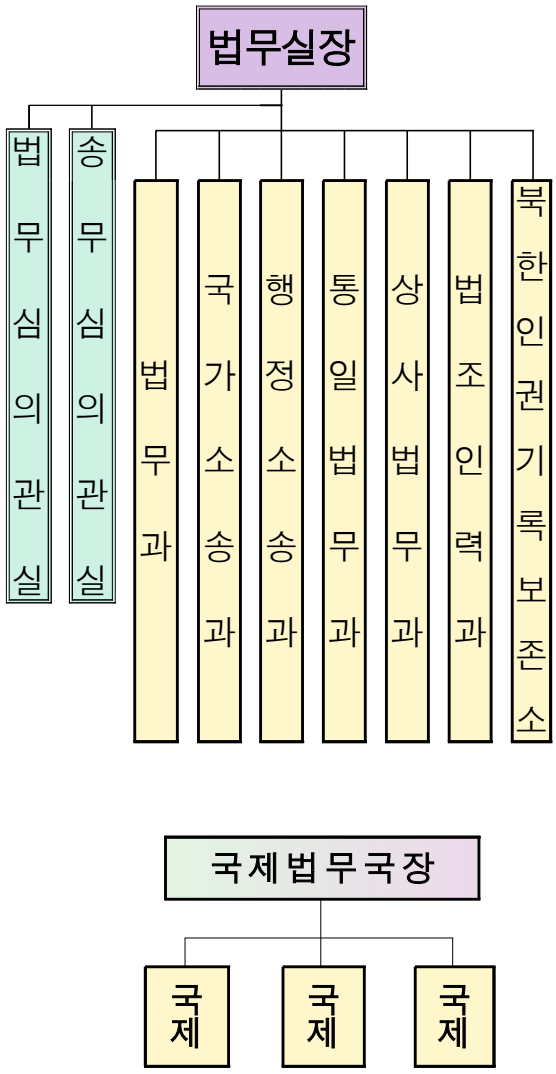
제11조의3(국제법무국) ① 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약 등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및 통상협상 참가와 관련 법률자문 및 그 국내적 시행에

〈법무부 조직개편 전 · 후 조직도 변화〉

－조직개편 전 (법무실: 2심의관 8과)



－ 조직개편 후 (법무실: 2심의관 6과 1소
국제법무국 신설 :3과)



관한 사항
2.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국제규범 성안 회의 등 법무(형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5. 법무협력관 관련 업무 및 국외 정보 · 자료의 조사 · 수집 · 연구 · 간행 및 국제협력 · 교류에 관한 사항
6. 국제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7.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8. 대통령 ·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 · 상사 분야 국제분쟁(통상분쟁은 제외한다) 및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9. 부 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

제34조의3(직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 · 관리 및 그와 관련된 사무를 관장한다.

법무정책과 법무지원과 투자분쟁과

기존 법무실에 속해 있던 국제법무과, 국제분쟁대응과가 각각 국제법무정책과, 국제투자분쟁과로 변경되어 국제법무국으로 이관되고, 민사·상사 분야의 국제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을 위한 국제법무지원과가 새롭게 신설되었으며(1국 3과 체제), 법무실 통일법무과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음.

○ 국제법무국 신설에 따라 2024년에는 법무부 예산안 중 국제법무기본경비(7011-266) 사업이 신설되면서 사무용 집기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430-01) 3,725만원과 우편, 통신요금[공공요금및제세(210-02)] 72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기존 인권국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있던 북한인권기록소 자산취득비(430-01) 400만원과 전화료·우편료 등 공공요금(210-02) 700만원이 법무실기본경비로 이관되었음.

○ 그러나, 법무실기본경비 중 사무용 집기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430-01), 우편 및 통신요금(210-02)은 기존 국제법무과와 국제분쟁대응과가 국제법무국으로 이관되었음에도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3년도 예산안과 동일하게 편성하

여 산출근거와 그 금액이 같고, 2025년도 예산안도 2024년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편성되어 조직개편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법무부는 기존의 국제법무과와 국제분쟁대응과가 국제법무국으로 이관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법무실 기본경비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관 편성·집행내역>

	2023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안		2025년 예산안
	편성내역	집행내역	편성내역	집행내역	편성내역
법무실 기본경비 (7011-253)	[210-02] 공공요금및제세				
	o 우편요금 12월*1,000,000원 = **12,000천원** o 전화 등 통신요금 12월*2,000,000원 = **20,000천원**	o 우편요금 = 20,989천원 o 전화 등 통신요금 = 9,012천원	o 우편요금 12월*1,000,000원 = **12,000천원** o 전화 등 통신요금 12월*2,000,000원 = **20,000천원** o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전화료, 우편료 등 = 7,000천원	o 우편요금 = 14,085천원 o 전화 등 통신요금 = 5,699천원 o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전화료, 우편료 등 = 1,713천원	o 우편요금 12월*1,000,000원 = **12,000천원** o 전화 등 통신요금 12월*2,000,000원 = **20,000천원** o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전화료, 우편료 등 = 7,000천원
	[430-01] 자산취득비				
	o 사무용 집기류 = **43,555천원**	o 사무용 집기류 = 62,225천원	o 사무용 집기류 = **43,555천원** o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사무기구 = 4,000천원	o 사무용 집기류 = 41,429천원 o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사무기구 = 집행내역 없음[13]	o 사무용 집기류 = **43,555천원** o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사무기구 = 4,000천원
인권국 기본경비 (7011-263)	[430-01] 공공요금및제세				
	o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전화료, 우편료 등 = 7,000천원	o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전화료, 우편료 등 = 2,811천원			
	[430-01] 자산취득비				
	o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사무기구 = 4,000천원	o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사무기구 = 38,779천원			
국제법무국 기본경비 (7011-266)	[210-02] 공공요금및제세				
			o 국제법무국 우편, 통신요금 = 7,200천원	o 국제법무국 우편, 통신요금 = 4,400천원	o 국제법무국 우편, 통신요금 = 7,200천원
	[430-01] 자산취득비				
			o 국제법무국 사무용 집기류 = 37,250천원	o 국제법무국 사무용 집기류 = 27,787천원	o 국제법무국 사무용 집기류 = 37,250천원

* 자료: 법무부 제공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법무부에 따르면, 우편 및 통신요금(공공요금및제세)과 관련하여, 국제법무국 신설 이전 구 국제분쟁대응과, 국제법무과의 우편 및

13) 2024년의 경우 9월 기준이며,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실 기본경비(7011-253)중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사무기구 구입을 위한 예산은 11월 중 전액 집행 예정임.

통신요금은 2022년도~2023년도에 연평균 약 30만원 내외를 집행하고 있어, 전체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였음.

또한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자산취득비)과 관련하여, 2023년도 국제법무국 신설로 법무실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 8,711천원({43,555천원/10과}×2과)을 배분하였고, 2024년도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개편과 아포스티유 공무직 2명 증원에 따른 필수 집기류 및 전산기기 등을 우선적으로 구입하여, 2023년도 법무실 소속 각 부서에서는 내용 연한이 경과한 집기류 등을 교체하지 못하였음.

○ 그러나, 2023년도에 법무실 기본경비 예산은 구 국제분쟁대응과 및 국제법무과의 예산을 포함하여 편성되었음에도 사무용 집기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1,867만원 초과집행한 점, 2024년 예산부터 기존 인권국 기본경비에 포함되어 있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자산취득비가 법무실 기본경비로 이관되어 편성된 점 등을 고려할 때, 2025년 예산안부터는 최소한 국제법무국(구 국제분쟁대응과 및 국제법무과)에 해당하는 자산취득비의 감액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법무실 기본경비 중 국제법무국 소관 과에 해당하는 경비를 분리하여 별도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최근 3년(2021년~2023년)간 국제분쟁대응과 및 국제법무과 등 국제법무국 소관 집기류 구입을 위한 집행액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내역에 한하여 감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최근 3년간 법무실 기본경비 중 국제법무국 관련 집행내역>

(단위: 원)

2023		2022		2021	
날짜	내용 및 집행액	날짜	내용 및 집행액	날짜	내용 및 집행액
3.6.	국제법무과 텔레비전 구매 (1,519,000)	12.15.	국제법무과 종이펀칭기 구매 (1,370,000)	3.4.	국제분쟁대응과 사무용 집기(책상) 구매 (175,000)
11.23.	국제법무정책과 사무용품 구매 (17,671,000)				
11.27.	국제법무국 IP전화기 구매 (3,762,000)				
합계	22,952,000 (법무실 예산액 중 집행액 : 5,281,000)[14]	합계	1,370,000	합계	175,000

* 자료: 법무부 제공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법무실 기본경비 중 국제법무국 관련 집행내역을 보면,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17만5천원 및 137만원을 사무용 집기류 구입에 집행하였고, 2023년의 경우 법무실 기본경비 예산액 중 528만원을 집행하였음.

○ 따라서 법무실 기본경비 중 2025년 예산안은 최근 3년간 국제법무국 소관 사무용 집기류 구입을 위한 집행액의 평균인 228만원의 감액 조정이 필요함.

14) 법무부는 국제법무국 신설로,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 사무용품(책상, 의자 등) 구입 소요를 위하여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0) 자산취득비 17,671,000원을 자체 전용하여 충당하였다는 입장임.

<2025년도 법무실 기본경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조정의견>

(단위: 백만원, %)

비목명	2025년 예산안(A)	조정의견 (B)	증 감 (B-A)	비 고
자산취득비(430-01)	56	54	△2	사무용 집기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28만원 감액

나. 인권활동

(1) 법률구조

(가) 예산안 개요

○ 법률구조(1131-300)는 경제적 어려움 및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서비스를 제공·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에 법률구조 사업비를 수지차 보전 방식[15]으로 보조하고, 다양한 법률구조 기구·제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28억 8,000만원(4.4%) 증액 편성된 676억 9,700만원임.

<2025년도 법률구조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법률구조	59,795	64,817	67,697	2,880	4.4

15)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이란 예산절감을 위해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기관임.

(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인건비와 퇴직적립금 예산 조정 및 편성 구체화 필요

○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동 사업을 통해 기본급, 상여금, 법정부담금, 퇴직기금전출금 등 인건비를 수지차 방식으로 보조받고 있음. 그러나 최근 10년간 호봉제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증가로 인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실제로 적립하는 퇴직급여 적립액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여, 퇴직급여 적립률은 급격히 감소하고 부채비율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음.

<최근 10년 간 대한법률구조공단 퇴직급여 적립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퇴직급여충당부채 ; 적립의무액(A)	퇴직급여적립액(B)	퇴직급여 적립율(B/A)
2013년	27,241	19,947	73.2
2014년	31,923	20,909	65.5
2015년	37,408	22,391	59.9
2016년	39,879	22,452	56.3
2017년	44,731	25,187	56.3
2018년	48,821	25,545	52.3
2019년	53,072	24,356	45.9
2020년	57,103	24,065	42.1
2021년	59,520	20,941	35.1
2022년	65,803	17,862	27.1
2023년	65,631	15,809	24.1

*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최근 10년 간 대한법률구조공단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기타	자본총계	
2013년	118,761	888	27,241	28,129	-	90,632	90,632	31.04
2014년	120,646	1,131	31,923	33,054	-	87,593	87,593	37.74
2015년	119,697	1,874	37,376	39,250	-	80,448	80,448	48.79
2016년	121,200	1,798	39,776	41,574	-	79,626	79,626	52.21
2017년	123,678	2,036	44,590	46,626	-	77,052	77,052	60.51
2018년	123,217	1,695	48,551	50,246	-	72,971	72,971	68,86
2019년	125,116	2,089	52,944	55,033	-	70,083	70,083	78.53
2020년	124,597	1,777	56,779	58,556	-	66,041	66,041	88.67
2021년	115,295	2,188	59,520	61,708	-	53,587	53,587	115.15
2022년	104,311	1,501	65,803	67,304	-	37,007	37,007	181.87
2023년	92,535	1,785	65,631	67,416	-	25,119	25,119	268.39

*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 특히, 지난 10년간 법률구조 사업에서 장래 퇴직금 지급을 위해 별도로 편성된 퇴직급여적립 예산을 당초 편성 취지와는 다르게 기본급 등 인건비로 자체 전용하여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해왔으며, 이에 따라 퇴직급여적립액은 당초 예산 편성분 만큼 적립되지 못하는 결과가 지속되고 있음.

<최근 10년간 퇴직급여적립액 예산 집행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퇴직적급여적립액		증감(B-A)
	당초 예산(A)	수정 예산(A)	
2013년	1,625,156	1,869,648	244,492
2014년	1,418,141	948,588	△469,553
2015년	1,368,022	918,022	△450,000
2016년	1,797,964	1,922,527	124,563
2017년	1,800,000	968,613	△831,387
2018년	1,800,000	470,989	△1,329,011
2019년	1,994,000	273,445	△1,720,555
2020년	1,994,000	934,927	△1,059,073
2021년	1,994,000	357,872	△1,636,128
2022년	1,994,000	1,407,004	△586,996
2023년	1,800,000	1,166,317	△633,683

*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지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법무부에 “인건비가 처한 구조적 현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보조금 지급 시 인건비 내 전용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예산에 편성된 퇴직급여 적립금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며, 신규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퇴직적립금 충당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생활안정자금 대부 제도를 축소 운영함으로써 공단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였음.[16)]

- 이에 대해 법무부 및 공단은 예산총칙 개정을 통해 퇴직적립금전출금 전용을 법무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하여 전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퇴직금 적립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건비 절감 방안[17)]과 호봉제 보수체계의 직무급적 연봉제로의 개편 등을 추진 중이며, 생활안정자금 대부 제도를 중단하는 등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2024년도 및 2025년도 예산안의 각목명세서를 살펴보면, 인건

---

16)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 시정요구명: 퇴직급여 적립금 전용 지양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 제도 축소 운영 등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 필요
- 지적사항: 최근 10년간 호봉제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증가로 인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적립하는 퇴직급여 적립액은 매우 부족하여 퇴직급여 적립률이 급격히 감소함. 공단은 지난 10년간 퇴직급여적립 예산을 기본급 등 인건비로 자체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퇴직급여적립액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는「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상 기준에 비해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로 운영되고 있음.
- 시정요구유형: 시정
- 시정요구사항: 법무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인건비가 처한 구조적 현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중・장기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보조금 지급 시 인건비 내 전용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예산에 편성된 퇴직급여 적립금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며, 신규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퇴직적립금 충당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생활안정자금 대부 제도를 축소 운영함으로써 공단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것

17) 임기제 변호사제도 운용, 간부급 직원의 공통처우개선분 동결, 퇴직자 공석에 대한 신규인력 미채용, 임금피크제 진입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정년퇴직 시 일시 지급하는 제도 도입 등 인건비 절감 방안 시행 중

비 예산은 정원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연례적으로 결원 비중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편성된 인건비는 실소요분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기본급과 퇴직기금전출금을 구분하지 않고 “기본급 및 퇴직기금전출금 등”으로 편성하고 있어 당해연도 편성 예산에 따라 적립될 퇴직급여적립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즉, 2025년도 법률구조 사업에 편성된 공단의 인건비 예산 664억 5,700만원은 781명의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나,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평균적으로 71.8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2025년도 예산안의 인건비는 실소요 대비 10%가량 과다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음.

<2024년도 및 2025년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인건비 예산(안) 각목명세서>

(단위: 천원)

2024년도 예산 각목명세서			2025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내역	산출근거	금액	내역	산출근거	금액
1) 인건비		64,572,000	1) 인건비		66,457,000
가) 기본급	776명*3,601,115원*12월=	33,533,583	가) 기본급 및 퇴직기금전출금 등	36,316,999,000원=	36,316,999
나) 상여금 등	776명*2,246,467원*12월=	20,919,101	나) 상여금 등	21,496,999,000원=	21,496,999
다) 법정부담금	776명*469,855원*12월=	4,375,290	다) 소송성과급	2,265,000,000원=	2,265,000
라) 퇴직기금전출금	1,854,026,000원=	1,854,026	라) 법정부담금	4,493,006,000원=	4,493,006
마) 24년 증원인력(2명) 반영	50,000,000원=	50,000	마) 24년 정기증원인력(2명) 반영	51,000,000원=	51,000

바) 소송성과급 이관	104명*5,444,712원*4회=	2,265,000	바) 25년 정기증원오류(3명) 반영	99,000,000원=	99,000
사) 법률구조 공통처우개선분(2.5%)	1,575,000,000원=	1,575,000	사) 혁신계획 정원 감축 △4명	-201,000,000원=	△201,000
			아) 25년 공통처우개선분(3%)	1,936,000,084원=	1,936,000
			자) 계수조정	-4,000원=	△4

- 또한, 2024년도까지 구분되어 편성되던 기본급과 퇴직기금 전출금이 2025년도에는 “기본급 및 퇴직기금전출금 등”으로 묶어서 편성되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편성된 인건비 내에서 퇴직적립금으로 적립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움.

○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재 공단의 2025년 인력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현원 및 결원 등을 검토하고 있는바, 국회 예산 확정 후 공단의 세부 예산명세 편성 시에는 편성된 총 인건비 예산 내에서 2025년 예상 현원을 고려하여 인건비를 감액조정하고, 해당분만큼을 퇴직기금전출금으로 증액편성하며, 기본급과 퇴직기금전출금을 정확한 소요액별로 분리하여 편성·집행하도록 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대한법률구조공단 인건비 예산 세부 명세 편성 계획(안)>

ㅇ ’25년 퇴직적립금 의무액 예상치(4,653백만원)의 **80% 수준인 3,722백만원 편성 예정**

- 최근 5년간 퇴직적립금 의무액 연평균 증가율 적용하여 ’25년 퇴직적립금 의무액 4,653백만원 산출

연평균증가율	
’19~’23년	1.5%
’20~’24년	1.4%

»

예상 퇴직적립금의무액
’24년 4,588백만원
’25년 4,653백만원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비중, 결산액, 결원 등을 고려하여 퇴직적립금 전출금을 3,722백만원으로 편성하고, 기본급 등을 조정 예정

(단위 : 천원)

’25년 명세(710명[18]) 기준)		산출 내역
인건비	66,457,000	정부안 편성 총인건비
기본급	37,025,000	’24년 기본급 실집행액에 처우개선비 3.0% 반영
상여금	3,057,000	최근 3년 인건비 예산 평균 비중(4.6%) 적용
제수당	11,127,000	소송성과급 포함
복리후생비	4,453,000	최근 3년 인건비 예산 평균 비중(6.7%) 적용
기타직보수	1,800,000	개방형 1명 및 임기제 21명(현원)에 대한 인건비 산출

퇴직기금전출금	3,722,000	'25년 예상 퇴직적립금 의무액의 80% 적용
법정부담금	5,273,000	최근 3년 평균 결산액 반영

* 자료: 법무부제출 자료 가공

○ 따라서 법무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계획대로 2025년도 공단의 세부 예산명세 편성 시 정원 기준으로 편성된 인건비를 현원 및 일부 결원비중을 고려하여 감액 조정하고, 그 차액을 퇴직적립금 목적으로 재편성하는 등 퇴직적립금 고갈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고,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인력운용계획 등을 사전에 확정하여 공단 세부 예산명세 뿐만 아니라 국회에 제출되는 각목명세서에도 기본급 및 퇴직기금전출금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국회가 예산심사 시 기본급 및 퇴직기금전출금의 확정 편성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18) 2025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정원 781명 중 결원 71명 예상하여 710명 기준으로 인건비 세분화 (' 21. ~ ' 24. 10. 16.까지 평균 결원 71.8명)

(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비 및 사생활보호형 상담실 구축 예산 감액 조정 필요

○ 2025년도 예산안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비에는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비”와 “사생활보호형 상담실 구축 사업비”가 각각 1억 2,400만원, 4억 600만원 편성되어 있으나, 그동안의 실집행내역, 사업의 효과성·필요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일부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2025년도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비”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각목명세서상 4,900만원은 “사업평가체계 연구용역”을 목적으로, 7,500만원은 “제도조사”를 목적으로 편성되었음.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비 각목명세서 세부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4년 예산액	’25년 예산안	증감
합계	**124**	**124**	**-**
1) 사업평가체계 연구용역	49	49	-
2) 제도조사	75	75	-

* 자료: 법무부

- 그러나, 해당 예산의 최근 6년 간 편성 및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을 배정받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체 상세 명세서에는 당초 예정된 목적인 “사업평가체계 연구용역” 및 “제도조사”와는 다르게 “일반수용비” 및 “교육훈련비”로 재편성되어, 각종 간담회, 워크숍, 해외기관 방문 등 국회의 예산안 심사·확정을 위해 제출된 각목명세서의 내용과는 상이하게 불요불급한 행사 등에 집행되어 왔음.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비 각목명세서 및 공단 예산명세서 세부 편성 내역 비교>

<법무부 각목명세서>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	137	124
1) 사업평가체계 연구용역	49	49
2) 제도 조사	88	75

<공단 예산명세서>	2023년		2024년	
	예산	결산 19)	예산	결산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	137	39	124	21
1) 일반수용비	60	11	60	17
2) 교육훈련비	77	28	64	3

* 자료: 법무부

<2019년도-2024년도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비 실집행내역>

지출일	지출내용	지출액	과목(목)
2019. 06.	2018년 경영실적 평가 용역 계약금	11,000,000	일반수용비
2019. 07.	재일민단 생활상담센터 간담회	2,144,500	일반수용비
2019. 09.	카자흐스탄공화국 법무부장관 간담회	234,200	일반수용비
2019. 11.	변호사 실무수습과 공단 법률구조업무와의 연계방안 연구용역 선금	11,000,000	일반수용비
2019. 11.	법률구조 사례집 제작	92,400	일반수용비
2019. 11.	연구용역비 선금(지엔디정보센터)	12,000,000	일반수용비
2019. 04.	지부장 회의	1,487,780	교육훈련비
2019. 07.	공단발전협의회	843,974	교육훈련비
2019. 08.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규임용 심사관 간담회	399,660	교육훈련비
2019. 11.	2019년도 해외법률구조기관 방문	18,732,781	교육훈련비
2019. 11.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워크샵	5,760,400	교육훈련비
2019. 12.	분쟁조정교육훈련	3,305,500	교육훈련비
2019. 12.	19년도 법률구조세미나	20,153,550	교육훈련비
2020. 01.	연구용역 잔금(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6,000,000	일반수용비
2020. 02.	연구용역 잔금(지엔디정보센터)	6,000,000	일반수용비
2020. 06.	2019년 경영실적 평가 용역	11,000,000	일반수용비
2020. 08.	법률구조 연구자료 제작 등	258,800	일반수용비
2020. 11.	제도조사 관련 물품구입	206,000	일반수용비
2020. 12.	연구용역비 선금(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15,000,000	일반수용비
2020. 03.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규임용자 간담회	1,113,800	교육훈련비
2020. 10.	인공지능 법률지원시스템 구축 TF	840,975	교육훈련비
2020. 11.	법률구조등 우수사례 발표대회	1,971,800	교육훈련비
2020. 12.	현안과제 토론회	1,721,300	교육훈련비
2020. 12.	분쟁조정교육훈련	5,140,204	교육훈련비
2021. 05.	2020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제작 관련 인쇄비	1,093,620	일반수용비
2021. 06.	연구용역비 잔금(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7,000,000	일반수용비
2021. 07.	2020년도 경영실적평가 용역대금	11,000,000	일반수용비
2021. 11.	경영전략 수립 및 조직진단 용역비	37,000,000	일반수용비
2021. 02.	현안과제토론회	3,396,180	교육훈련비
2021. 02.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간담회	1,593,576	교육훈련비
2021. 05.	지소 화상상담 설명 및 간담회	260,000	교육훈련비
2021. 05.	전국 지부장 회의	234,310	교육훈련비

19) 법무부 설명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수지차기관으로 국고와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는데, '23년 자체수입 부족으로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 지출을 축소하여 예·결산액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지출일	지출내용	지출액	과목(목)
2021. 05.	분쟁조정교육훈련	3,790,650	교육훈련비
2021. 06.	전략수립워크숍	902,341	교육훈련비
2021. 11.	경영전략 수립 및 조직진단 용역비	28,450,000	교육훈련비
2021. 11.	예산등 주요현안 설명 및 토론회	11,894,186	교육훈련비
2021. 12.	법률구조등우수사례발표대회	374,196	교육훈련비
2021. 12.	제1차 공단 예산개선 현안 간담회	1,250,000	교육훈련비
2021. 12.	제2차 공단 예산개선 현안 간담회	1,250,000	교육훈련비
2021. 12.	공단 예산개선 현안 간담회	5,026,543	교육훈련비
2022. 02.	전략기획부 연구도서 구입	153,500	일반수용비
2022. 06.	2021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제작	1,056,000	일반수용비
2022. 06.	ADR을 통한 분쟁해결 활성화 업무협약	231,400	일반수용비
2022. 08.	2021년도 경영실적평가 용역대금	11,000,000	일반수용비
2022. 11.	재일민단 생활상담센터 공단 방문	1,729,280	일반수용비
2022. 04.	신규임용 직원 간담회	1,580,840	교육훈련비
2022. 07.	전국 지부장 · 고객지원부장 회의	1,312,910	교육훈련비
2022. 08.	분쟁조정교육훈련	3,306,670	교육훈련비
2022. 11.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워크숍 차량대여	4,483,110	교육훈련비
2022. 12.	외국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 일본사법지원센터등 방문	20,001,100	교육훈련비
2022. 12.	법률구조등 우수사례 발표대회	1,744,952	교육훈련비
2022. 12.	공익소송활성화	1,156,140	교육훈련비
2022. 12.	임기제변호사간담회	1,350,000	교육훈련비
2023.08.	2022년도 경영실적 평가 용역비	11,000,000	일반수용비
2023.12.	법률구조제도 및 형사법무정책 조사 ·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77,850	일반수용비
2023.06.	일본사법지원센터등 방문(외국 법률구조제도조사연구)	13,879,783	교육훈련비
2023.09.	공익소송 및 법률 복지 포럼	6,567,000	교육훈련비
2023.08.	본부 관리자 워크숍	3,404,570	교육훈련비
2023.07.	제1차 및 제2차 법률구조 라운드테이블	3,393,700	교육훈련비
2023.12.	법률구조등 우수사례 발표대회	768,920	교육훈련비
2024.03.	의사 집단행동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상담사례집 제작 용역 대금 지급	5,000,000	일반수용비
2024.08.	재일민단 생활상담센터 간담회	1,745,050	일반수용비
2024.08.	2023년도 경영실적 평가 용역비	11,000,000	일반수용비
2024.03.	전국지부장간담회	1,607,600	교육훈련비
2024.07.	전국 지부장,고객지원부장 간담회	1,672,880	교육훈련비

* 자료: 법무부

○ 한편, 2025년도 “청사취득 및 관리비” 예산안에는 “사생활보호형 상담실 구축 사업비” 4억 600만원이 시설장비유지비로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4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인 휴게시설 설치를 위해 편성된 4억 600만원의 집행이 완료된 후, 2025년도에는 해당 금액분을 사생활보호형 상담실 구축 사업비로 편성한 것임.

<청관사 취득 및 관리비 예산 세부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3년 예산액	’24년 예산액	’25년 예산안	증감
합계	**3,712**	**4,502**	**7,183**	**2,681**
1) 임차보증금	765	765	3,446	2,681[20]
2) 임차료	1,634	1,662	1,662	-
3) 시설장비유지비	1,313	1,669	2,075	406
4) 휴게시설 설치	-	406	-	△406

* 자료: 법무부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25년에는 4억 600만원을 활용하여 상담자 수가 많은 부산 및 대구지부의 상담실을 우선적으로 변경할 계획이며, 그 이후에는 개인정보 누설 예방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39개기관의 상담실을 모두 사생활보호형 상담실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0) 2024년도까지 예·결산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임차보증금 회수·집행액을 2025년도에는 세입·세출로 편성하여 임차보증금 예산이 26억 8,100만원 증액 편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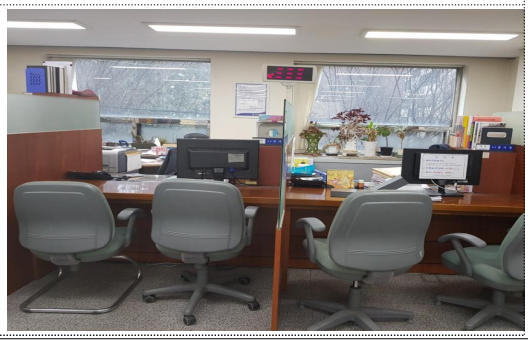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생활보호형 상담실 구축 추진계획 >

○ 사생활보호형 상담실 구축 추진계획

- '25년 부산지부('11년 구축), 대구지부('10년 구축) 우선 변경 후, '26년 광주지부('12년 구축), 대전지부('13년 구축) 사무실 변경 예정
  ⇨ **부산지부 소요예산 231백만원, 대구지부 소요예산 158백만원**

※ 18개 지부(전국 지방법원·검찰청 단위), 7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서울, 수원,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42개 출장소(전국 지원·지청 단위) 67개 소속기관 中 **39개 기관 사생활보호형 상담실로 변경 필요**

개선 전 (개방형)



⇒

개선 후 (사생활보호형)



* 자료: 법무부

- 다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체수입 부족으로 1억 2,400만원이 소요되는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 사업이 축소 운영되고 있고, 퇴직적립금 마저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 기관의 상담원이 근무하고 있는 상담실 전체를 모두 사생활보호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관당 약 2억원, 향후 39개 기관 기준 약 80억원 가량의 리모델링 예산의 편성·집행이 필요한 바, 전체 변경 계획이 필요하고 적정한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오히려 간단한 일상적 상담은 현재의 개방형 상담실에서 진행하고, 이혼, 가정폭력, 성폭력 사건 등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심층적 상담에 대해서는 기존에 구축된 회의실이나 공용으로 마련

된 사생활보호형 상담실로 이동하여 상담하는 것이 상담직원의 안전보호 및 효율적인 상담관리와 사업예산절감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지부별로 2~3개의 공용 사생활보호형 상담실을 구축·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매년 계획과 상이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으로 집행되는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비를 실제 편성 목적인 “사업평가체계 연구용역” 및 “제도조사”에 필요한 수준으로 감액하고, 상담실 리모델링은 사업의 효과성·필요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상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부별 2~3개로 축소하여 동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사생활보호형 상담실 구축 예산 조정(안)[21] >

’25년 추진 예정	전체 상담실 변경	지부별 3개 상담실 변경		
부산지부	231백만원	일반직 16명 * 변호사는 폐쇄형 상담실 사용중	3개실	49.8백만원
대구지부	158백만원	일반직 17명 * 변호사는 폐쇄형 상담실 사용중	3개실	49.8백만원
총 계	**389백만원**	일반직 23명	6개실	**99.6백만원**

21) 가장 최근 시행한 사생활보호형 상담실 구축 비용(’ 21년 서울중앙지부)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상담실 개당 구축 예산 산출
① 서울중앙지부 총구축비 627,036,120원 / 구축 상담실 41개 = 15,293,564원
② ’ 22~’ 23년 건설공사비지수 증감률(’ 22년 6.0%, ’ 23년 2.3%)* 적용 = 16,584,035원
* 국가통계포털 공시 건설공사비지수 중 건축보수 부문 전년 대비 증감률

(2) 인권국 국외업무여비 관련

(가) 예산안 개요

○ 인권국 기본경비(7011-263)는 인권국의 기본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여비, 사업지원 경비가 편성되어 있음.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대비 1억 4,600만원(15.3%) 증액 편성된 10억 9,900만원임.

<2025년도 인권국 기본경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인권국 기본경비	967	953	1,099	146	15.3

○ 국제인권역량강화(1139-300)는 국제인권 이슈에 대응하고, 정부 대응 역량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문위원 및 영문 에디터 채용, 국제인권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인권정책개선 연구사업이 편성되어 있음.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대비 500만원(2.1%) 증액 편성된 2억 4,600만원임.

<2025년도 국제인권역량강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국제인권역량강화	206	241	246	5	2.1

(나) 실소요를 반영한 국외업무경비 편성 및 계획에 따른 실집행 필요

○ ‘인권국 기본경비’ 및 ‘국제인권역량강화’ 사업의 2025년 예산안에는 인권국에서 수행하는 국제업무 및 해외시찰을 위한 해외출장비와 국제인권전문가 초청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등이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별 상세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5년 인권국 국외업무여비 편성내역>

세부사업	출장목적	금액 (천원)
국제인권 역량강화	**합계**	**30,000**
	1. UN국제인권규약 심의 참석(스위스)	15,000
	2. UN기업과 인권 포럼	15,000
인권국 기본경비	**합계**	**115,867**
	1.UN인권이사회 참석(스위스)	26,673
	2.UN인권,민주주의,법치 포럼 참석(스위스)	14,623
	3.UN초국적회의 실무그룹 참관(스위스)	12,247
	4.국제인권 전문가 초청	15,412
	5.유럽 범죄피해자지원협회 연례 회의(포르투갈)	18,684
	6.해외 구금보호시설 현장방문(미국)	14,392
	7.여성아동인권 관련 해외법제 및 제도운영 실태 파악(영국)	13,836

* 자료: 법무부

○ 그러나 최근 6년 간 인권국 국외업무여비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실제 출장대상국 및 목적이 예산안 편성 시 계획과 일치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고, 2025년도 예산안에 계획된 출장의 절반 이상이 지금까지 수차례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출장대상국 및 목적과 유사해 2025년도에도 계획과 다른 대상국·출장목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임.

<2018-2023년도 인권국 국외업무여비 편성 목적 및 실집행 내역>

구분	예산 편성 목적		실집행 내역	
	출장지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목적
2018	스위스 제네바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	스위스 제네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 정부대표단 참석
	스위스 제네바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참가	스위스 제네바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따른 제17,18,19차 국가보고서 심의 정부대표단 참석
	스위스 제네바	UN인권이사회 참가		
	스위스 제네바	UN기업과 인권포럼 참가		
	미국 뉴욕	UN총회 참가		
		국제인권전문가 초청 국제회의 개최		국제인권심포지엄 외빈 초청
	타이완	선진 범죄피해자 실태조사		
	스웨덴	유럽 범죄피해자지원회의 참석	스웨덴 체코	유럽 범죄피해자지원회의 참석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관 방문
	프랑스	유럽 구금보호시설 현장방문		
	스위스 제네바	인권관련 국제회의 참석		
	미국 LA	해외 성폭력피해자 지원 실태조사		
			태국	AICHR주최 기업과 인권에 관한 모범사례 공유를 위한 회의 참가 및 법률구조 · 범죄피해자 지원 회원국 협의
			홍콩	제16회 세계 피해자학 학회 참석
			호주	범죄피해자보호지원제도 해외사례 연구
			일본 도쿄, 오사카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영국 런던	영국 구금보호시설 인권침해 예방 실태 파악 기관 방문
			태국	태국의 여성 · 아동대상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및 자료 수집
			영국	여성 · 아동 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영국내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증진
2019	스위스 제네바	UN아동권리협약위원회 심의 정부대표단 참가	스위스 제네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제5 · 6차 국가보고서 심의 참가
	스위스 제네바	UN인권이사회 참가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정부대표단 참석
	스위스 제네바	UN기업과 인권포럼 참가	스위스 제네바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참석
	스위스 제네바	UN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포럼 참가		
	미국 뉴욕	UN총회 참가		
		국제인권전문가 초청 국제회의 개최		국제인권심포지엄 외빈 초청
	일본	선진 범죄피해자 실태조사		
	파리	유럽 범죄피해자지원회의 참석		
	스위스 제네바	인권관련 국제회의 참석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과 2030 의제 회의 참석 및 국제인권 협력체계 개선방안 논의
	미국	구금보호시설 현장방문		
	미국 LA	해외 성폭력피해자 지원 실태조사		
			타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아세안 협력강화 추진
2021	미국 뉴욕	강제실종방지협약 서명식 참석		
	스위스 제네바	UN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 심의 정부대표단 참가		
	스위스 제네바	UN 인권포럼 참가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 민주주의 법치 포럼 참석
		국제인권전문가 초청 국제회의 개최		
	베를린	유럽 범죄피해자지원회의 참석		
	스위스 제네바	인권관련 국제회의 참석		
	미국 LA	여성아동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		
			프랑스 스페인	외국인 보호시설의 인권보호 실태 등 파악
2022	스위스 제네바	UN 자유권규약위원회 심의 정부대표단 참석		
	스위스 제네바	UN 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 심의 정부대표단 참가	스위스 제네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심의 정부대표단 참가
	스위스 제네바	UN 기업과 인권포럼 참가	스위스 제네바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참석 등
		국제인권전문가 초청 국제회의 개최		
	독일 베를린	유럽 범죄피해자지원 회의		
	미국 워싱턴	구금보호시설 현장방문		
	미국 LA	여성아동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		
			미국 워싱턴	제2차 한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회 참석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 민주주의 법치 포럼 참석 등
			캐나다	캐나다 피해자 지원체계 및 프로그램 협력 사례 등 파악
2023	스위스 제네바	UN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심의 참석	스위스 제네바	제4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참석
	스위스 제네바	UN 자유권규약 심의 참석	스위스 제네바	제5차 유엔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국제인권전문가 초청 국제회의 개최		
	영국 런던	유럽 범죄피해자지원 회의		
	미국	구금보호시설 현장방문		
	미국 LA	여성아동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		

※ 2020년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국외업무여비 집행이 없었으므로 생략

* 자료: 법무부

- 구체적으로 2025년도 계획안의 ‘국제인권 전문가 초청’, ‘유럽 범죄피해자지원협회 연례 회의’, ‘해외 구금보호시설 현장방문’, ‘여성아동인권 관련 해외법제 및 제도 운영 실태 파악’ 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미실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예산 편성 당시와 달리 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음.

<2025년도 인권국 국외업무여비 편성 목적 및 미실시 유사사례>

세부사업	2025년도 국외업무여비 편성 목적	계획변경으로 인한 미실시 유사사례*
국제인권 역량강화	합계	-
	1. UN국제인권규약 심의 참석(스위스)	-
	2. UN기업과 인권 포럼	-
인권국 기본경비	합계	-
	1.UN인권이사회 참석(스위스)	-
	2.UN인권,민주주의,법치 포럼 참석(스위스)	-
	3.UN초국적회의 실무그룹 참관(스위스)	-
	4.국제인권 전문가 초청	국제인권 전문가 초청 - 2018년 6인 계획 3인 초청 - 2019년 5인 계획 2인 초청 - 2021년 4인 계획 미실시 - 2022년 6인 계획 미실시 - 2023년 6인 계획 미실시
	5.유럽 범죄피해자지원협회 연례 회의(포르투갈)	유럽 범죄피해자지원 회의 - 2019년(프랑스) 미실시 - 2021 · 2022년(독일) 미실시 - 2023년(영국) 미실시
	6.해외 구금보호시설 현장방문(미국)	구금보호시설 현장방문 - 2018년(프랑스) 미실시 - 2019 · 2022 · 2023년(미국) 미실시
	7.여성아동인권 관련 해외법제 및 제도운영 실태 파악(영국)	여성아동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태조사 - 2021 · 2022 · 2023년(미국) 미실시

* 자료: 법무부

※ 2020년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국외업무여비 집행이 없었으므로 사례에서 제외하였고, 코로나 미집행을 제외하고 2018년~2023년까지 2회 이상 계획변경으로 미실시된 경우만을 적시하였음.

○ 실집행 과정에서 연중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국외출장 소요가 발생하여 예외적으로 출장 대상국 및 목적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나, 연례적으로 유사한 목적의 출장이 편성되고 계획이 변경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거 집행실적을 분석하여 실소요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① 인터넷·E-mail 또는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이 가능한 경우, ② 해외공관이나 주재관 활용이 가능한 경우, ③ 국제회의 참석 등과 병행하여 자료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을 제한하고 있고, 과거 집행실적을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국외여비는 삭감하고 현안타결을 위한 해외출장 위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법무부는 예산안 편성 시 과거 집행실적과 차년도 국외출장 소요를 보다 철저히 분석하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외업무여비가 당초 출장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다. 출입국관리 활동

(1) 이민정책연구원운영

(가) 예산안 개요

○ 이민정책연구원 운영(1231-302)은 국가 간 이주현상 분석 및 이민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종합적·중장기적 이민정책 방향을 연구하는 이민정책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8억 9,300만원(34.9%) 증액 편성된 34억 5,500만원임.

<2025년도 이민정책연구원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이민정책연구원 운영	2,268	2,562	3,455	893	34.9

(나) 이민정책연구원 이전을 위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

○ 이민정책연구원(IOM移民政策研究院, 영어: IOM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IOM MRTC)은 국제이주기구(IOM)와 대한민국 정부 간 협정으로 이민정책 개발 및 학술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설립

된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 공직유관단체임.[22]

○ 이민정책연구원은 현재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보호관찰소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현 임차청사는 2024년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 및 2025년 본공사 예정으로, 임대기관 요청에 따라 2025년 3월 연구원 이전을 추진할 예정임.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신규 청사 임차 시 도심외 지역 건물, 공공청사 및 지방교육기관 등의 유휴건물 활용 우선 검토 등 임차료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23] 이민정책연구원은 퇴거요청을 통보받은 2023년 2월부터 서울대학교, 수도권 내 지방자치단체 등 국유재산 또는 공공시설로의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면적 또는 임대기간 등이 적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민간건물로의 이전을 추진하였음.

그에 따라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비상교육 사옥 '그라운드 V'를 이전 예정지로 선정하였는데,[24] 이민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주무부

---

22) **※ 기관 개요**
- 위치 : 서울시 양천구 목동남로 93 양천빌딩 별관 2-3층('20. 5월 이전)
- 정원 : 28명('24. 9. 기준) (원장 1, 부원장 1, 연구직 15명, 행정직 11명)
- 이사회 : 이사장, 원장 외 법무부·IOM·기재부·외교부·행안부·서울시·경기도에서 지명한 이사 9명(이상 이사)으로 구성(총 11명)

※ 설립 및 운영 경과
- '09. 12.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이주기구 IOM과의 협정에 따라 IOM의 협력 연구원으로 설립(개원)
※ 법적으로 국내법에 따라 법인격을 가지며,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에 해당
- '15.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 ' 19. 1.「기타공공기관」지정 해제(소규모 기관으로 공공기관 지정실익 부족)
- ' 23. 4.「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설립 근거 마련(제22조의2)

※ 주요 기능
- 이주 정책 및 외국 법률 관련 조사, 연구, 자문 및 정보교환
- 국내외 이주법 및 정책 관련 전문가 훈련
- 이주 정책 및 법률 관련 국제교류, 학회 및 연구 지원 활동
- 학술자료, 정기간행물, 보고서 및 그 밖의 전문 서적의 발간 및 보급
- 기타 각국 정부, 국제기구, 학계 및 시민사회 등과의 협력 사업

23)「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p.225

24)**※ 이전청사 '그라운드V' 계약 예정 내용**

처인 법무부와의 정책연구 협업 등 접근성 향상 측면 및 연구인력 등 직원 증원('20년 23명→'24년 28명) 등에 따른 사무공간 추가 비율(22%)을 고려하여, 임차면적 948㎡ 규모로의 이전(서울 양천→경기 과천)을 추진하게 되었음.

<2025년 이민정책연구원 이전청사 및 이전 소요면적 산출내역>

[이전청사 '그라운드V' 개요]

✤ 위치 : 경기 과천시 과천대로2길 54

✤ 시설규모 : 연면적 63,191.7㎡ (지하 5~12층)

✤ 임차면적 : 948㎡(전용 287평, 3층)

✤ 입주시기 : 2025년 3월



[이전 소요면적 산출내역]

시설명	면적(㎡)		산출근거 (정부청사관리규정 준용)
	현재	이전시	
1. 원장실	66.0	33	33㎡×1실=33㎡
2. 부원장실	50.0	33	33㎡×1실=33㎡
3. 실장실	66.0	34	17㎡×2실=34㎡
4. 행정실	70.0	66	6.6㎡×10명=66㎡
5. 전문연구원실	70.0	26.4	6.6㎡×4명=26.4㎡
6. 개인연구실	126.0	170	17㎡×10명=170㎡
7. 교육장	49.0	99	1실
8. 회의실	51.4	125	50㎡(중회의실), 25㎡×3=75㎡(소회의실)
9. 국제회의실	77.0	132	1실
10. 도서자료실	85.0	122	1실
11. 문서고	35.6	35.6	1실 순사무실 면적 x 7%
12. 창고	31.0	36	1실
13. 휴게실	0	36	
계 (전용면적)	**777**	**948**	**소수점 면적 절사**

* 자료: 법무부

- 임차 건물 소유주 : 주식회사 비상교육
- 임차 대상 : 3층 중 일부
- 임대차 계약기간 : 3년
- 임대기준: ① 보증금: 451,230원/평, ② 임대료: 45,123원/평, ③ 관리비: 8,022원/평

○ 이를 위하여 법무부는 내역사업인 “연구원 운영비”의 2025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7억 3,800만원 증액한 9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바, 2025년 3월 내 이민정책연구원 이전계획을 감안하여 시설 임차 및 관리비를 현청사의 경우 1제곱미터당 14,600원 2개월분, 이전청사 1제곱미터당 30,400원 10개월분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음.

○ 입주를 위한 공사비는 2억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동 공사에는 이전 예정 청사 948제곱미터에 대한 가설공사, 수장공사, 전기·소방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음.

<연구원 청사 이전 관련 예산 세부 편성내역>

(단위: 천원)

구분	편성 내역	합계
시설 임차 및 관리비	현청사 23백만원(777㎡×14.6천원×2월) + 이전청사 287백만원(948㎡×30.4천원×10월) = 310백만원 (+174백만원)	309,777
임차보증금	948㎡×332.2천원	315,000
이사비	28명×0.78대×1.2백만원	26,208
입주공사비	948㎡×236.3천원	224,000
합계		874,340

* 자료: 법무부

○ 이민정책연구원은 2025년 2월 말까지 현 청사에서 퇴거를 요청받은 상황임. 따라서 입주공사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절차 및 선정, 입주공사와 이사의 전 과정이 2개월 내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과정이 지연되는 경우 이민정책연구원의 정책연구 업무 등에 지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 임차청사의 퇴거가 지연될 수 있고, 실제 입주 이전 이전청사 등에 대한 임차료가 먼저 집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25년 2월 이전 입주를 위한 공사 및 이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외국인보호관리

(가) 예산안 개요

○ 외국인보호관리(1233-300)는 단속 등에 의하여 신병이 확보된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하고, 급식·피복·의료관리 등 적정 처우 후 본국으로 송환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9억 1,500만원(△4.1%) 감액 편성된 213억 7,200만원임.

<2025년도 외국인보호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외국인보호관리	20,977	22,287	21,372	△915	△4.1

(나) 장기공석 의무관 임상연구비 예산 감액 및 의료인력의 조속한 확충 필요

○ 법무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 외국인보호시설 근무 의무관에 대한 임상연구비 2,736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는바, 이는 화성·청주·여수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3개소에 대한 각 912만원 일반연구비(260-01)의 합임.

의무관에 대한 임상연구비 지원은 외국인 보호시설 등의 특수한

진료 환경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 문제들을 인식하고, 보호외국인에게 보다 나은 의료 환경 제공을 위하여 의무관의 임상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보호외국인의 건강권 및 의료권 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법무부 훈령 제1496호)[25] 및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법무부 이민조사과-6117호)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2023회계연도의 경우 의무관 임상연구비 예산은 전액 집행되지 못하였고, 2024년도 예산 역시 2024년 10월 기준으로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각 시설별 의무관 임상연구비 예산액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의무관 임상연구(화성)		의무관 임상연구(청주)		의무관 임상연구(여수)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2020	9,120	9,120	9,120	8,882	9,120	9,348
2021	9,120	-	9,120	9,120	9,120	9,120
2022	9,120	9,120	9,120	8,208	9,120	-
2023	9,120	-	9,120	-	9,120	-

* 자료: 법무부

25)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제2조(연구비 지급대상)**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와 그 소속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국립법무병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외국인보호소, 출입국 · 외국인청, 출입국 · 외국인사무소(이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인 의무직 공무원(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으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사람으로 한다.

○ 법무부는 이에 대하여, 2023년도 외국인보호소 의무과장의 공석(청주, 여수) 등으로 임상연구비를 집행하지 못하여, 임상연구비 편성예산 2,700만원은 외국인보호소의 공공요금 비용으로 충당하였으며, 특히 여수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배속된 의무인력은 2022년부터 장기간 공석 상태로, 2024년 10월 현재 채용공고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임.

<2020년~2023년 의무관 임상연구 수행 현황>

구분		연구 제목
화성 외국인 보호소	2020	보호외국인의 의료처우에 대한 미연방 규범과의 비교고찰
	2021	미실시('21. 4. 12. 의무과장 퇴직)
	2022	보호외국인들의 의무과 진료 방해 행태 및 의료갈등 개선방안 고찰
	2023	미실시(개인사정으로 인한 중도 포기)
청주 외국인 보호소	2020	보호외국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정신 건강 문제
	2021	국내 외국인 전문보호시설 외부진료 환자에 대한 조사연구(공동)
	2022	보호외국인들의 육체적 · 정신적 건강의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영성에 대한 고찰
	2023	미실시(의무과장 휴직)[26]
여수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2020	의료네트워크를 활용한 급 · 만성 정신질환 보호외국인의 협력적 치료관리 방안
	2021	국내 외국인 전문보호시설 외부진료 환자에 대한 조사연구(공동)
	2022	미실시(의무과장 퇴직)
	2023	미실시(의무과장 퇴직)

* 자료: 법무부

○ 따라서 여수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의무관의 장기공석 상태를 감안할 때, 2024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된 2025년도 예산안의 집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여수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의 의무관 임상연구비 예산을 감액하고, 차년도 이후 의무관의

26) 2023. 12. 31. 복직

충원에 맞추어 해당 예산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보호시설별 입·퇴소 현황 및 평균 보호기간 등>

구 분	보호시설	입소자(명)	퇴소자(명)	평균 보호기간(일)	일 평균 보호 인원(명)
2020	화성	4,825	4,551	24	320
	청주	2,619	2,498	24	171
	여수	2,014	1,910	26	145
	계	9,458	8,959		
2021	화성	3,030	3,210	31	258
	청주	2,282	2,345	26	161
	여수	1,462	1,541	39	155
	계	6,774	7,096		
2022	화성	2,731	2,573	27	201
	청주	1,815	1,683	22	111
	여수	1,189	1,070	27	89
	계	5,735	5,326		
2023	화성	11,879	11,581	12	381
	청주	2,732	2,714	12	88
	여수	4,986	4,786	14	191
	계	19,597	19,081		
2024.9.	화성	8,716	8,336	12	389
	청주	3,802	3,642	12	161
	여수	2,692	2,601	14	134
	계	15,210	14,579		

* 자료: 법무부

○ 이와 더불어, 국내체류 외국인의 증가 및 그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 보호 외국인 수용 인원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법무부는 보호 외국인의 건강권 및 의료권 보장을 위하여 의료인력의 처우개선 등 외국인 보호시설 의료인력을 조속히 확충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5년도 외국인보호관리 사업 예산안에 대한 조정의견>

(단위: 백만원, %)

비목명	2025년 예산안(A)	조정의견 (B)	증 감 (B-A)	비 고
일반연구비(260-01)	27	18	△9	여수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의 의무관 임상연구비 912만원 감액조정

(3) 외국인사회통합지원

(가) 예산안 개요

○ 외국인사회통합지원(1233-301)은 국제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 외국인 근로자, 외국 국적 동포, 난민 등 대한민국 내 체류 외국인 의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25억 1,200만원(16.3%) 증액 편성된 179억 3,900만원임.

<2025년도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외국인사회통합 지원	13,280	15,427	17,939	2,512	16.3

(나) 난민생계비의 적정수준 분석 및 지급 방안 마련 필요

○ 「난민법」 제40조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생계비 지원 근거를 정하고 있는데,[27]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취업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난민생계비는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 동안 난민신청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음.

27) **「난민법」 제40조(생계비 등 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

○ 법무부는 내역사업인 “난민업무 지원”을 통하여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바, 이를 위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 전년 대비 3억 4,900만원(61.4%) 증액된 9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코로나19 이후 난민신청자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2024년 예상 난민신청자 수인 19,164명에 최근 5년간 난민신청자 수 대비 지급인원 비율인 2.5%를 곱하여 산출된 479명에 대한 예상 지급 금액임.

<난민생계비 지원제도 및 예산 편성·집행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9.	2025(안)
난민 신청건수	15,452	6,684	2,341	11,539	18,837	14,062	
생계비 지원 신청자수 (명)	717	460	78	225	568	378	
생계비 지급인원 (명)	542	262	42	177	379	175	
신청자 대비 지급인원 비율	75%	57%	53%	78%	66%	46%	
생계비 예산(A) (산출근거)	793백만 (523명 × 3.50개월 × 433천원)	839백만 (591명 × 3.28개월 × 433천원)	839백만 (591명 × 3.28개월 × 433천원)	839백만 (591명 × 3.28개월 × 433천원)	710백만 (500명 × 3.28개월 × 433천원)	568백만 (292명 × 3.33개월 × 583천원)	917백만 (479명 × 3.28개월 × 583,400원)
생계비 집행(B)	711백만 (542명 × 3.03개월 × 433천원)	546백만 (262명 × 4.81개월 × 433천원)	52백만 (42명 × 2.86개월 × 433천원)	247백만 (177명 × 3.22개월 × 433천원)	568백만 (379명 × 3.28개월 × 433천원)	390백만 (175명 × 3.82개월 × 583천원)	
집행률(B/A)	90%	65%	6%	29%	80%	69%	

* 자료: 법무부

○ 이와 관련하여, 2025년도 예산안의 난민신청자별 지원액은 난민지원시설 비이용자인 1인 가구 생계비 583,4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법무부고시인 「2023년 생계비 지원액 고시」[28]에 근거한 것임.

<2023년 생계비 지원액 고시>

▪ 난민지원시설(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비이용자

가구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원/월)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 생계비 지원액(난민지원시설 비 이용자 포함)은 가구 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5인까지 지급

▪ 난민지원시설(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이용자

가구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원/월)	291,700	489,000	629,200	768,150	903,650

※ 난민지원시설 이용자는 비 이용자의 50% 상당액 지급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은 감액될 수 있음

* 자료: 법무부 고시

○ 생계비 지원액 수준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2024년 기준 난민 생계비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81.8% 수준인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의 취지가 한시적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현 생계비 지원액이 난민신청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정도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으

28) [시행 2023. 1. 1.] [법무부고시 제2023-9호, 2023. 1. 12., 제정.]

며, 2021년 이후 매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와의 격차 또한 증가 추세에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임.

<연도별 난민신청자 생계비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기준금액>

(단위 :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법무부 난민신청자 생계비	432,900	432,900	432,900	488,800	583,400	583,400
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41,900	454,900	488,800	583,400	623,300	713,100

* 자료: 법무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호-272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난민협약[29]에 명시된 바에 따라 난민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서울고등법원 역시 난민신청자 생계비는 난민인정 신청일 이후 취업허가가 부여되지 않는 6개월 동안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적 지원의 의미를 가진다고 판시한바 있음.[30]

○ 따라서 법무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보다 낮은 수준인 난민신청자 생계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난민신청자에게 필요한 최소한 생계비 수준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를 「생계비 지원액 고시」

29)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발효일 1993. 3. 3] [다자조약, 제1166호]

30) 서울고등법원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단순한 시혜적인 조치를 넘어 난민신청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까지는 난민법령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난민생계비는 난민신청자에게 주요 생계수단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어서 난민생계비 지원 신청자로서는 그 선정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처분 사유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음(서울고등법원 2016. 9. 27. 선고 2016누36934 판결 난민생계비미지급처분취소).

등 관련 규정과 생계비 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다) 조기적응프로그램 목표 교육인원을 충족할 수 있는 수강비율 제고방안 마련 필요

○ 내역사업인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31]로 대한민국의 기초 법·제도, 의료·교통·통신 등의 필수 사회적응 정보 제공 등 사회통합 교육을 수행하는 사업임.[32]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 호텔·유흥(E-6-2) 체류자격 외국인 연예인은 동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그밖에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자, 중도입국 청소년, 밀집지역 외국인, 재정착 난민은 자율적인 이수가 가능함.

2024년까지 교육과정은 대한민국의 기초 법·질서 등(공통과목) 2시간, 체류유형별 맞춤형 교육(특수과목)[33] 1시간을 더해 총 3시간을 교육하였는데, 2025년도부터는 이에 더해 ‘외국인 대상 범죄

---

31)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일본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불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우즈베크어, 미얀마어, 카자흐어, 벵골어, 라오어 등 18개 언어로 교육을 실시중임.

3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5(결혼이민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결혼이민자 등의 자격으로 입국하려고 하거나 최초로 입국한 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류허가 · 영주자격 · 국적 신청 및 기초생활 법질서 등의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 방법, 그 밖에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33) 외국인 유학생(유학생 필수정보), 결혼이민자(가족 간 상호이해), 중도입국 청소년(미래 진로), 외국국적동포(국내정착), 외국인연예인(인권보호), 계절근로자(계절근로자 필수정보), 외국인근로자(안전수칙 및 인권보호), 재정착난민(국내정착)

예방 교육’과 ‘산업안전 기초교육과정’[34]을 각 1시간씩 추가하여 총 5시간을 이수하게 됨.

○ 이에 따라, 법무부는 동 사업예산을 전년대비 12억 5,500만원(130%) 증액한 22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술한 교육시간 증가(3시간→5시간)에 더하여, 목표 교육인원을 2024년 대비 높게 설정하여 강사료가 10억원 이상 증액 편성된 데 주요 원인이 있음.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의 2024년 및 2025년 예산 편성내역 비교>

(단위 : 천원)

민간경상보조 (320-01)	2024년도 예산 편성내역	2025년도 예산안 편성내역	증감액
강사료	1,720회×117천원×3시간 = 601,920천원	2,700회×126천원×5시간 = 1,701,000천원	1,099,680
교재비 등	39,000명×3.5천원 = 136,318천원	81,000명×3.5천원 = 290,312천원	153,994
운영비	4개기관×2,185천원×12월 = 104,912천원	4개기관×2,185천원×12월 = 104,912천원	-
전담인력 인건비	4개기관×1명×2,516,000원×12월 = 120,768천원	4개기관×1명×2,559,400원×12월 = 122,851천원	2,083
합계	963,918	2,219,075	1,255,157

* 자료: 법무부

○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조기적응프로그램의 목표 교육인원인 81,000명은, 2023년도 프로그램 참여자 수에 2024년 외국인력 쿼터 증가분인 78,000명의 50%를 단순 합계하는 방식으로 추산하였으며(42,000 + 78,000/2 = 81,000), 목표 교육인원 81,000명을 1

34) 법무부에 따르면, 2024. 6. 24.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의 사상자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로, 입국 초기의 산업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규 교육과정을 편성하였음.

회 당 교육인원 30명으로 나눈 2,700회의 강사료를 편성하였음.

<연도별 교육대상·인원 및 2025년도 예산편성 상세내역>

(단위 : 명, 천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3월)	2025년 소요(안)
교육 대상	신규외국인 등록자 수 (전년대비 증가율)	294,000 –	119,000 (△59.5)	105,000 (△12.0)	208,000 (98.3)	282,000 (35.5)	72,000	360,000* (27.7)
교육 인원	프로그램 참여자수 (수강비율) (전년대비 증가율)	51,000 17.4	6,000 5.6 (△87.1)	7,000 6.9 (9.3)	30,000 14.2 (308.4)	42,000 15.1 (43.4)	9,000 12.5 (–)	81,000** 22.5 (92.8)

* '23년 대비 외국인력 쿼터 증가분 78천명 반영 (282천+78천=360천)

** '24년 외국인력 쿼터 증가분 78천명의 50% 수준 반영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물량(A)	단가(B)	계(A×B)
2024	강사료	1,720회(39천명/23명)×3시간	117천원	602
	교재비 등	39천명	3.5천원	136
	인건비	4명×12월	2,516천원	121
	운영비	4개기관×12월	2,185천원	105
	계			964
2025	강사료	2,700회(81천명/30명)×5시간	126천원	1,701
	교재비 등	81천명	3.5천원	290
	인건비	4명×12월	2,559천원	123
	운영비	4개기관×12월	2,185천원	105
	계			2,219

* 자료: 법무부

○ 그러나,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추산하게 되면 2025년의 신규 외국인 등록자 수 대비 참여자 수의 비율은 22.5%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수강비율인 11.8%를 훨씬 상회하는 비율에 해당함.

실제로, 2024년 9월 기준 신규 외국인 등록자 수는 197,053명,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등록자 수의 15%인 29,890명에 해당하는바, 이를 감안할 때 2025년도 예산안의 목표 교육인원이 과다하게 추계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음.[35]

<2024. 9. 기준 신규외국인 등록자 수 및 프로그램 참여자 수 등>

신규등록외국인 수	참여자 수	참여비율(수강비율)
197,053명	29,890명	15.2%

* 자료: 법무부

○ 따라서, 법무부는 2025년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의 목표 교육인원이 충족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더불어,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및 안내는 사회통합정보망홈페이지,[36] 리플렛 제작·배포, 조기적응 운영센터 및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에 더해 조기적응프로그램 의무화 대상 확대, 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의 수강비율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5)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그간 신규 등록외국인 대비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지 않았던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개설함에 따라 충분한 교육 참여가 불가능한 것에 원인이 있다는 입장임.

36) www.socinet.go.kr

(4)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가) 예산안 개요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운영(1233-304)은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 및 국내정착 관련 정보 취득을 지원하고,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에게 국제결혼관련 법령, 현지문화·관습 및 국제결혼 성공·실패 사례를 소개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31억 5,500만원(29.3%) 증액 편성된 139억 900만원임.

<2025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운영	10,511	10,754	13,909	3,155	29.3

(나) 비자 전환 현황 등을 바탕으로 한 예산 편성 및 전환 쿼터 달성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 필요

○ 신규사업인 “숙련기능인력 양성 사회통합프로그램 특별반”은 기존 비숙련 외국인근로자(E-9)가 숙련인력으로 계속 거주(정주화)

하면서 국익에 기여하도록 필수 한국어 교육을 통해 한국사회 적응 및 자립을 지원하려는 민간위탁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반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전체 과정(0~5단계, 515시간) 중 초급 교육과정인 215시간(0~2단계)의 교육으로 이루어짐.[37)]

○ 정부가 2023년 9월에 발표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은 ① 정부의 외국인력 활용 방향을 비숙련·단기순환형(E-9등 단순노무인력)에서 숙련·정주형(E-7-4)으로 전환하고, ② 전환 규모를 35,000명 수준(2023년 대비 30,000명 증가)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단순노무(E-9 등)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 제도에 따라 능력 등이 검증되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되고, 그 후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 요건까지 갖추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됨.

---

37)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의 한국어 구사능력과 한국문화 등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켜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의 이해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국내체류외국인 대상 표준 교육프로그램임.

「출입국관리법」 제39조(사회통합 프로그램)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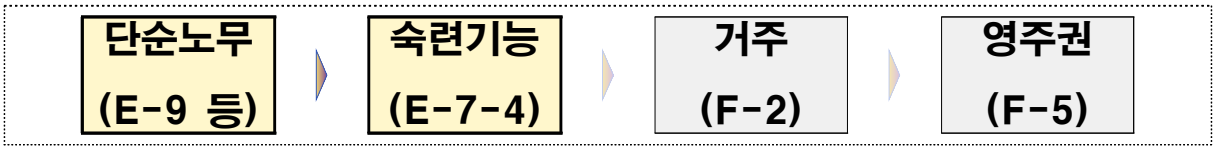
1.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⑤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운영기관의 지정·관리 및 지정 취소, 그 밖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우대)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 체류 관련 각종 허가 등을 할 때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를 우대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발급 단계>



이에 “숙련기능인력 양성 사회통합프로그램 특별반”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2가지(①일반형, ②조선업 현장 방문형)에 더하여 외국인력 유입 급증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수요 증가, 특히 예정 쿼터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숙련·정주형 외국인력인 E-7-4 인력에 대해 언어·문화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임.

<종류별 사회통합프로그램 현황>

구 분		일반형 (2009년~현재)	조선업 현장 방문형 (2024년 ~ 현재)	숙련기능인력 특별반 (2025년 추진예정)
대상	자격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외국인등록 後)	희망 조선업체 내 외국인근로자	합법 취업 중인 외국인근로자
	교육인원	일반외국인 57천명	조선업 취업외국인 6.5천명	외국인근로자 13.4천명
교육내용		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 전반	한국어 기초	한국어 기초
교육상세	장소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기관	조선업체 사업장 내 교육장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기관
	시간	515시간(7개 과정) * 사전평가결과에 따라 이수시간 차등 적용	115시간	215시간
	수강방식	지정기관 출석 교육	강사가 업체 직접방문	지정기관 출석 교육
비자 혜택		①영주권 신청시 우대 ②국적필기시험 면제	-	숙련기능(E-7-4)비자 전환시 우대

* 자료: 법무부

○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 동 사업 예산 3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13,423명 560개반(반별 인원 24명)에 대하여 215시간 분량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실시를 위한 강사비로 구성되며, 교육대상 13,423명은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확대분(30,000명)과 동반가족 수(17,430 = 30,000 × 58.3%[38])를 더한 값에 기초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비율 28.3%[39]를 적용하여 산출한 값임.

<숙련기능인력 양성 사회통합프로그램 특별반”예산 편성 상세내역>

(단위: 명, 천원)

구 분	물량(A)				단가(B)	계 (A×B)
	총수요	교육대상	강좌수	시간	강사료	
본인 (E-7-4)	30,000 –	8,490 (30,000명×28.3%)	354 (8,490명/24명)	215 –	26 –	1,978,860
동반가족 (F-3)	17,430 (30,000명×58.1%)	4,933 (17,430명×28.3%)	206 (4,933명/24명)	215 –	26 –	1,151,540
합 계	47,430	13,423	560	215	26	3,130,400

* 자료: 법무부

○ 그러나, 2024년 9월까지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된 인력은 9,397명으로 2024년 목표 쿼터 35,000명 대비 27% 수준에 불과하여, 2025년까지 목표 쿼터의 달성 여부가 불분명한바,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된 숙련기능인력(E-7-4) 목표 쿼터 및 그에 따른 동반가족 수가 과다하게 추계된 것으로 보임.

38) 외국인 1인당 동반가족비율

39) 숙련기능인력으로 양성이 필요한 외국인 및 동반가족 중 기초 한국어교육 필요 비율로, ‘23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인 28.3%을 적용하였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임.

<2021년~2024년 비자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1.~9.
합계		1,218	1,781	12,035	9,397
비전문취업 (E-9)	제조업(E-9-1)	1,090	1,482	11,083	8,651
	건설업(E-9-2)	4	7	46	83
	농업(E-9-3)	71	155	581	558
	어업(E-9-4)	25	78	135	90
선원취업(E-10)		28	59	190	13
방문취업(H-2)		0	0	0	2

* 자료: 법무부

○ 또한, “숙련기능인력 양성 사회통합프로그램 특별반”의 수강대상은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취득하려는 사람으로서, 단순노무인력(E-9) 비자를 가진 사람이 대부분인데, E-9 인력이 기존 조선업체 등에 근무하여 “조선업 현장 방문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면, “숙련기능인력 양성 사회통합프로그램 특별반” 과정의 일부를 기(旣)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목표 수강인원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2024년 9월 기준 “조선업 현장 방문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E-9, H-2 비자 소지자 수는 약 1,300명 수준임.

<2024.9.기준 조선업 현장 방문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구분	과정 참여 인원
E-7	5,385명
E-9	1,293명
H-2 등 기타	90명
합계	6,768명

* 자료: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table>
<tr><td></td><td colspan="5">한국어와 한국문화</td><td colspan="2">한국사회이해</td></tr>
<tr><td>단계</td><td>0단계</td><td>1단계</td><td>2단계</td><td>3단계</td><td>4단계</td><td colspan="2">5단계</td></tr>
<tr><td>과정</td><td>기초</td><td>초급1</td><td>초급2</td><td>중급1</td><td>중급2</td><td>기본</td><td>심화</td></tr>
<tr><td>평가</td><td>없음</td><td>1단계 평가</td><td>2단계 평가</td><td>3단계 평가</td><td>중간평가</td><td>영주용 종합평가</td><td>귀화용 종합평가</td></tr>
<tr><td>총 교육시간</td><td>15시간</td><td>100시간</td><td>100시간</td><td>100시간</td><td>100시간</td><td>70시간</td><td>30시간</td></tr>
<tr><td rowspan="3">해당 사회통합프로그램</td><td colspan="6">일반형
(최대 515시간)</td></tr>
<tr><td colspan="2">조선업 현장 방문형
(115시간)</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3">숙련기능인력 특별반
(215시간)</td><td colspan="3"></td></tr>
</table>

* 자료: 법무부 제공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이와 관련하여, 2024년 9월까지 “조선업 현장 방문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는 6,768명인바, 이들은 이미 115시간(0단계+1단계)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으므로, 이들이 추후에 숙련기능인력 특별반에서 수강할 경우, 100시간(2단계)만의 추가 교육으로 해당 사회통합프로그램 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수 현황>

(단위: 명)

총 계	'09년~'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1~9월
515,226	117,408	41,500	50,639	56,535	36,620	43,552	42,163	58,028	68,781
(일반형)	(158,908)	(41,500)	(50,639)	(56,535)	(36,620)	(43,552)	(42,163)	(57,040)	(62,013)
(조선업종)	(-)	(-)	(-)	(-)	(-)	(-)	(-)	(988)	(6,768)[40]

* 자료: 법무부

○ 따라서,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의 전환 현황을 바탕으로 "숙련기능인력 양성 사회통합프로그램 특별반"의 예상 수강인원을 산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숙련기능인력 양성 사회통합프로그램 특별반" 목표 수강인원의 215시간 일괄 수강 전제 하에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기존 "조선업 현장 방문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해서는 100시간 수강 분의 예산 편성으로도 집행이 가능할 것이므로, 차년도 이후 예산 편성 시에는 기존 "조선업 현장 방문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숙련기능인력 양성 사회통합프로그램 특별반" 사업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0) 총 272개 과정

아울러, 2023년에 계획한 숙련인력비자(E-7-4) 전환 쿼터를 달성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비자 취득요건 완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라. 검찰활동

(1) 검찰 특수활동비

(가) 예산안 개요

○ 특수활동비(230목)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41]로써, 2025년도 검찰활동 특수활동비는 총 7개 세부사업에 전년대비 8억원(11.1%) 증액된 80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검찰활동 특수활동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 수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검찰활동 특수활동비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등 7개 세부사업	7,209	8,009	800	11.1

(나)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 및 관련 검토 사항

○ 검찰활동 프로그램(1300) 내 7개 세부사업에 편성·집행하고 있는 특수활동비는 2025년의 경우 “국민생활침해 범죄수사(1335-303)” 및 “마약수사(1335-304)” 2개 세부사업에서 각각 전년대비 3억원, 5억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5개 세부사업의 경우 모두 2024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음.

41)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p.242

2개 세부사업의 증액사유를 보면, “국민생활침해 범죄수사” 사업의 경우 ①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2억원), ②자본시장 교란행위 감시·처벌 등 금융·증권범죄 대응(0.5억원), ③「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024. 7)에 따른 시세조종, 무신고 거래소, 예치금 사기 등 가상자산범죄 대응(0.5억원) 등의 목적이며, “마약수사” 사업의 경우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운영 및 마약류 위장거래자금 활용 등의 목적임.

<2025년 특수활동비 증액 편성 현황 및 사유>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4 (A)	2025안 (B)	증감 (B-A)	증액사유
국민생활침해 범죄수사	1,324	1,624	300	•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2억원 • 자본시장 교란행위 감시·처벌 등 금융·증권범죄 대응 +0.5억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에 따른 시세조종, 무신고 거래소, 예치금 사기 등 가상자산범죄 대응 +0.5억원
마약수사	248	748	500	•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운영 및 마약류 위장거래자금 등 +5억원

* 자료: 법무부

○ 법무부와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전년대비 증액 편성한 것은 2020년 이후 처음임. 2024년 특수활동비가 전년대비 8억원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2025년 특수활동비 예산안은 다시 2023년 수준으로 편성(80억 900만원)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2023년과 2025년 예산안의 특수활동비 구성은 세부사업별로 차이가 있음. 즉, 검찰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7개 세부사업 중 “국민생활침해 범죄수사(1335-303)” 및 “마약수사(1335-304)” 사

업은 2023년과 비교하여 각각 1억 5,300만원, 4억 7,300만원 증액 편성된 반면, 그 외 5개 세부사업은 모두 2023년 대비 감액편성된 것임.

<2023년, 2024년과 2025년 검찰 특수활동비 세부사업별 편성 비교>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 예산	2024 예산	2025 예산안	2024 대비	2023 대비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536	482	482	-	△54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122	110	110	-	△12
형사부 등 수사지원	5,074	4,567	4,567	-	△507
공공수사	356	320	320	-	△36
국민생활침해 범죄수사	**1,471**	**1,324**	**1,624**	**300**	**153**
마약수사	**275**	**248**	**748**	**500**	**473**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175	158	158	-	△17
합 계	**8,009**	**7,209**	**8,009**	**800**	**-**

* 자료: 법무부

○ 한편, 2020년 이후 검찰활동 특수활동비 예산 규모를 보면, 2020년 93.7억원에서 2024년 72.1억원으로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2025년 특수활동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원 증액하여 2023년 특수활동비 수준(80억 900만원)으로 편성하는 것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과 비교하면 13억 5,800만원(△14.5%) 감액된 것으로, “마약수사” 세부사업이 2020년 대비 4억 2,6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을 제외하면 모든 세부사업에서 감액 편성되었음.

<검찰활동 특수활동비 연도별(2020~2025) 편성 추이>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0 예산	2021 예산	2022 예산	2023 예산	2024 예산	2025 예산안	전년 대비	2020 대비
인권보호등 검찰업무지원	627	565	536	536	482	482	-	△145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143	129	122	122	110	110	-	△33
형사부 등 수사지원	5,934	5,341	5,074	5,074	4,567	4,567	-	△1,367
공공수사	416	374	356	356	320	320	-	△96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1,720	1,548	1,471	1,471	1,324	1,624	300	△96
마약수사	**322**	**290**	**275**	**275**	**248**	**748**	**500**	**426**
사회경제질서침해범죄수사	205	184	175	175	158	158	-	△47
합 계	**9,367**	**8,431**	8,009	**8,009**	**7,209**	**8,009**	**800**	**△1,358**

* 자료: 법무부

○ 이처럼 특수활동비 증액 사유 및 연도별 편성 추이를 토대로 2025년 검찰 특수활동비 편성의 특징을 보면,

2020년 이후 특수활동비의 전반적인 감액 편성 기조는 유지하되, 마약범죄,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가상자산 및 금융·증권범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피해 및 파급력이 큰 범죄 수사에 지원을 강화할 목적으로, 특정 세부사업에 한해 상대적으로 큰 폭의 특수활동비 증액을 추진한 것으로 해석됨.

○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을 예산안 심사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마약범죄, 민생침해범죄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은

인정되나, 관련된 특정 세부사업에 대한 특수활동비를 증액 편성한 결과 지금까지의 추세와는 달리 2025년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안의 전체 규모가 전년 대비 증액된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직접수사 사건(인지사건 등)의 증감 추이를 고려하여 그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검찰 직접 인지사건 현황>

(단위: 건)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9.
건 수	9,114	7,724	6,542	4,447	3,927	5,138	3,413

* 주: 처리시점 기준
* 자료: 법무부

○ 둘째,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2024년도 국정감사 등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및 지출내역에 대한 공개 필요성을 제기한바,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정보공개소송 대법원 판결[42]로 일부 공개된 검찰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중 일부에서 정해진 특활비 목적 외로 사용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언론·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우리 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법무부와 검찰에 “검찰 특수활동비의 부적정한 집행을 시정하고,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내역 등을

42) 대법원 2023. 4. 13.선고 2022두69728 판결[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투명하게 공개·제출할 것”을 시정요구(시정)로 채택한바 있음.

(2)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형사부 등 수사지원 등 3개 세부사업)

(가) 예산안 개요

○ 금융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43] 및 제4조의2[44]에 따라 검찰 등 수사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공을 요구한 수사기관이 부담함. 금융결제원 및 금융회사는 매년 반기별로 통보비용 청구 현황을 취합하여 검찰 등에 송부하고, 검찰 등은 그 비용을 정산하고 있음.[45]

이에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형사부 등 수사지원”(1335-301), “사회공정성 저해 사범 수사”(1335-306), “검찰청운영 기본경비”(7018-252) 등 3개 세부사업에 관련 예산(일반수용비)을 편성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4억 4,960만원이 편성되었음.

---

4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4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한다.**

45) 금융결제원이 취합하는 대상은 제1금융권이며, 그 외 증권사, 저축은행 등은 자체적으로 통보비용을 청구하고 있음.

<2025년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 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	2023년	2024년	2025년(안)	산출내역
형사부 등 수사지원	435,100	305,100	305,100	152,550건×2,000원
사회공정성 저해 사범 수사	200,000	140,000	140,000	70,000건×2,000원
검찰청운영기본경비	75,000	4,500	4,500	3,000건×1,500원
합 계	710,100	449,600	449,600	225,550건

* 자료: 법무부

(나) 부진한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 2020년 이후 3개 세부사업에 편성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 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실적이 매년 부진한 것으로 확인됨.

○ 국회는 2024년도 법무부 예산안 심사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 예산에 대해 ① 집행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점, ② 등기우편(2,000원) 대비 단가가 낮은 전자문서(SNS 및 문자, 500원)를 이용한 모바일통보서비스[46]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점[47] 등을 감안하여 3개 세부사업에 편성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 예산을 2023년 대비 2억 6,000만원 감액한바 있음.

그러나 감액편성된 2024년에도 9월말 기준 전체 예산 4억 4,960만원 중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및 “검찰청운영 기본경비”

46) 2021년 8월부터 개시
47) 전체 통보건수 대비 모바일 통보건수 비중 : 2021년 0.43% → 2022년 6.74% → 2023년 7.78%

에 편성된 예산은 전혀 집행되지 않았고, “형사부 등 수사지원” 세부사업에 편성된 예산만 9,245만원 집행되는 등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이 20.6%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됨.

<세부사업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9월말)
형사부 등 수사지원	435,100	-	435,100	-	435,100	61,419	435,100	-	305,100	92,445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200,000	265,158	200,000	172,666	200,000	25,062	200,000	169,407	140,000	-
검찰청운영 기본경비	75,000	-	75,000	-	75,000	-	75,000	-	4,500	-
합 계 (집행률)	710,100	265,158 (37.3%)	710,100	172,666 (24.3%)	710,100	86,481 (12.2%)	710,100	169,407 (23.9%)	449,600	92,445 (20.6%)

* 자료: 법무부

○ 반복적인 예산 집행 부진의 원인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예산상 통보 건수가 실제 통보 건수보다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는 것에 기인함.

수사 과정에서의 금융거래정보 필요성에 대해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여유분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2024년 예산 및 2025년 예산안에 법무부와 검찰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예상 통보 건수를 222,550건(우편통보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데, 최근 검찰의 실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건수는 매년 10만 건 안팎이며, 최근 5년 간 통보 건수가 가장 많은 2019년에도 약 16.7만 건이었음. 이를 감안하면, 2025

년 예산안은 여전히 실소요대비 예산이 과대 편성된 측면이 있다고 보임.

<연도별 검찰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건수>

(단위: 건)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통보 건수	167,528	109,967	49,544	67,342	106,695

* 자료: 법무부

○ 따라서 2025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은 최근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건수 및 예산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바, “형사부 등 수사지원”(2025년안 3억 510만원 편성),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2025년안 1억 4,000만원 편성) 두 세부사업에 편성된 통보비용 예산을 각각 일정비율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48)]

48) 법무부와 검찰은 코로나19 이후 2022년부터 수사 활동 증가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구체적 감액비율을 논의할 때 참고할 여지가 있음.

(3) 과학수사인프라구축 사업

(가) 예산안 개요

○ 과학수사인프라구축 사업(1333-302)은 DNA 감식, 법화학감정, 음성·영상분석 등 새로운 과학수사기법 개발을 통하여 과학수사활동을 지원하고, 과학수사 시설 및 장비를 운영하며, 국제과학수사 협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2억 2,900만원(11.2%) 증액된 12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과학수사인프라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과학수사인프라구축	8,797	11,021	12,250	1,229	11.2

(나) 영상녹화조사의 구조적 실적 감소를 고려한 노후장비 교체 예산 재검토 필요

○ 영상녹화조사는 수사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녹음·녹화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49] 등에 근거를 두고 있

49)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음.

검찰청은 2004년부터 동 세부사업 예산으로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하여 2023년말 기준 전국 검찰청에 총 903실의 영상녹화조사실을 운영하고 있음.

<영상녹화조사실 설치 현황>

연도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개소	838	841	885	890	890	899	903

* 자료: 법무부

2025년도 영상녹화조사실 관련 예산안은 전년대비 3,750만원(9.2%) 증액된 4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세부 내역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210-09)로 편성된 영상녹화조사실 및 영상녹화장비 유지보수 비용이 전년과 동일하게 1억 2,500만원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430-01)로 편성된 노후 영상녹화장비 교체 비용이 전년대비 증액된 3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 영상녹화조사 관련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천원)

구분	비목	2024 예산	2025 예산안	증감
영상녹화조사실 유지관리	210-09	19,400	19,400	-
영상녹화장비 유지보수	210-09	105,616	105,616	-
영상녹화장비 구매	430-01	282,500	320,000	37,500
합 계		**407,516**	**445,016**	**37,500**

* 자료: 법무부

○ 노후 영상녹화장비 교체 비용이 증액된 것은 내용연수 도과와 고장 등으로 보수가 불가능한 장비 교체 수량이 2024년 113세트에서 2025년 128세트로 증가하였기 때문임.[50)]

그러나, 검찰의 영상녹화조사 활용 실적이 크게 낮아지는 추세에서, 노후 영상녹화장비 교체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기준 검찰의 영상녹화 조사실적은 4,001건으로, 전체 조사건수 대비 6.4%로 나타나며,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10%를 하회하고 있음.

<연도별 영상녹화 조사실적>

(단위: 건, %)

구 분	전체 조사건수(A)	영상녹화 조사건수(B)	영상녹화 조사비율(B/A)
2017년	227,415	37,007	16.3
2018년	212,324	24,145	11.4
2019년	184,479	19,768	10.7
2020년	111,763	6,553	5.9
2021년	64,991	4,902	7.5
2022년	57,938	4,694	8.1
2023년	**62,564**	**4,001**	**6.4**

* 자료: 법무부

○ 검찰의 영상녹화조사 활용 실적 부진은 ① 공판과정에서 영상조사녹화물의 「형사소송법」상 독립적 증거능력 불인정,[51)52)] ②

50) 교체물량 128세트 × 단가 250만원 = 3억 2,000만원

51)**[대법원 2014.7.10.선고 2012도5041판결]**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 성립 입증수단으로써 영상녹화물 활용 불가(2020년 2월 「형사소송법」 개정[53]), ③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방식 변경[54] 등으로 인한 검찰의 직접조사 범위 축소 등의 사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특히, 이러한 사유들은 검찰의 영상녹화조사제도와 관련한 형사사법 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해당하는바, 영상녹화장비 규모 대비 영상녹화조사 수요 부족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구조적인 요인으로 판단됨.[55]

타당하다.

52) 2020. 2. 4.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21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개정(2022. 2. 4.시행) 이후에도 대법원은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검찰 조사 단계에서 촬영된 피의자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함.

53)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고 규정했던 「형사소송법」제312조제2항이 삭제되었음.

54) 직접조사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뀜(「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신설(2020.2.4.))

55) 다만, 2023년 7월 11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10. 12. 시행)에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을 일정 요건 하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된 부분은, 성폭력범죄 등 특정 범죄 수사에 대해 영상녹화조사 수요가 유지될 수 있는 부분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1.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다만,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의 경우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19세미만피해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망

나. 외국 거주

다. 신체적, 정신적 질병·장애

라. 소재불명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는 법무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시 “변화된 형사사법 환경에 비추어 과잉 설치된 측면이 있는 영상녹화조사실 및 장비에 대해 타용도 전환 모색 등 효율적 활용과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시정요구(제도개선)를 채택한바 있음.

○ 영상녹화조사 실적의 구조적 감소 요인, 국회 결산심사 취지 등을 고려하면, 노후 영장녹화장비 교체는 현재 법무부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① 내용연수 도과 여부 ② (도과하더라도) 고장 및 노후화 상태 등 장비 특성적 요소 외에도, 장비를 보유한 검찰청사에 “설치된 영상녹화조사실 규모 및 사용 실적”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장비 교체 주기를 늘리고, 보유 수량도 일부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5년 예산안의 경우, 영상녹화장비를 다수 보유하여 일부 장비를 교체주기에 맞추어 교체하는 대신,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폐기하더라도 영상녹화조사실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지검 단위 청사(18개 청)의 교체 계획 예산(53개 장비, 1억 3,250만원)은 일부 감액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임.[56)]

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영상녹화물을 유죄의 증거로 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또는 제33조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6) 이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각 검찰청에 대한 실사조사를 바탕으로 내구연한 도래 장비 중 실제 정상작동이 어려운 장비 중심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교체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함.

<각 급 검찰청사(대검 제외) 영상녹화장비 교체 수량 및 영상녹화 실적>

(단위: 개소, 대, 회)

구분	영상녹화실 수	영상녹화장비 총 보유 대수	영상녹화장비 교체 수량		영상녹화 실시 횟수	
			2024년 9월말 현재	2025년 (계획)	2023년	2024년 9월말 현재
서울고검	9	6	9	0	0	1
수원고검	5	5	0	0	0	1
대전고검	2	2	4	0	18	8
대구고검	2	2	0	0	1	2
부산고검	3	3	0	0	25	8
광주고검	3	3	0	0	0	1
서울중앙지검	**71**	**86**	**27**	**8**	**179**	**178**
서울동부지검	**42**	**43**	**23**	**0**	**102**	**51**
서울남부지검	**37**	**37**	**0**	**1**	**136**	**52**
서울북부지검	**26**	**27**	**0**	**3**	**71**	**60**
서울서부지검	**29**	**28**	**0**	**4**	**77**	**21**
의정부지검	**22**	**22**	**0**	**4**	**65**	**11**
고양	17	18	0	3	8	18
남양주	9	9	0	0	36	54
인천지검	**44**	**44**	**0**	**4**	**219**	**55**
부천	20	20	8	1	147	223
수원지검	**49**	**50**	**1**	**3**	**74**	**85**
성남	19	20	3	2	20	30
여주	6	7	0	2	14	4
평택	13	13	0	6	13	46
안산	22	22	13	0	42	33
안양	17	17	0	8	196	181
춘천지검	**10**	**10**	**0**	**2**	**37**	**39**
강릉	8	11	0	2	151	118
원주	5	5	4	0	42	113
속초	4	4	0	1	12	18
영월	6	6	1	2	2	8
청주지검	**18**	**19**	**0**	**5**	**164**	**117**
충주	6	6	0	1	11	2
제천	4	4	0	2	5	7
영동	2	2	0	0	0	8
대전지검	**19**	**21**	**0**	**3**	**125**	**54**
홍성	7	7	0	3	57	39
공주	4	4	0	1	2	5
논산	4	5	1	1	4	3
서산	7	9	0	4	30	38
천안	13	13	7	1	109	510
대구지검	**22**	**26**	**0**	**3**	**188**	**30**
안동	6	6	0	3	2	3
경주	5	5	0	1	27	5
김천	7	7	4	1	27	9
상주	4	4	2	0	1	4
의성	3	3	1	1	42	18
영덕	3	3	0	0	88	2
포항	8	8	5	2	62	15
서부	16	16	0	3	62	18
부산지검	**40**	**48**	**0**	**2**	**135**	**91**
동부	15	15	0	1	79	95
서부	15	15	0	4	26	42
창원지검	**18**	**18**	**0**	**2**	**101**	**74**
진주	5	5	0	1	38	46

구분	영상녹화실 수	영상녹화장비 총 보유 대수	영상녹화장비 교체 수량		영상녹화 실시 횟수	
			2024년 9월말 현재	2025년 (계획)	2023년	2024년 9월말 현재
통영	9	9	0	2	49	60
밀양	5	5	0	2	7	2
거창	3	3	0	1	4	1
마산	9	9	0	0	36	21
울산지검	**15**	**15**	**0**	**2**	**47**	**215**
광주지검	**23**	**25**	**0**	**3**	**64**	**49**
목포	15	15	0	0	60	15
장흥	3	3	0	1	4	6
순천	14	14	0	2	166	54
해남	4	4	0	3	16	7
전주지검	**19**	**19**	**0**	**4**	**40**	**21**
군산	10	12	0	2	29	63
정읍	4	4	0	3	8	2
남원	3	3	0	2	6	0
제주지검	**16**	**17**	**0**	**0**	**27**	**71**
합 계	**903**	**946**	**113**	**128**	**3,635**	**3,241**

* 자료: 법무부

(4) 검찰업무정보화 사업

(가) 예산안 개요

○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사업(1334-500)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을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검찰업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보안체계 강화를 추진하며, 일선 검찰청의 노후 네트워크 장비 및 PC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5억원(△9.5%) 감액된 333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검찰업무정보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검찰업무정보화 (정보화)	30,811	36,839	33,339	△3,500	△9.5

(나) 신규 도입된 검찰 정보화 장비의 실제 리스료를 반영한 예산 조정 필요

○ 법무부와 검찰은 동 세부사업에서 각급 검찰청사에서 사용하는 전산장비, 업무용 소프트웨어, 정보보안장비, 고속스캐너 등을 리스계약으로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안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도입한 기존 정보화 장비에 대한 당해연도 리스료와, 2025년 신규 도입하는 정보화 장비 리스료를 포함한 임차료(210-07) 60억 7,774만원이 편성되었음.

<검찰 정보화 장비 도입 리스료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

(단위: 천원)

세부항목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비고
2019년 도입분	464,818	-	2024년 종료
2020년 도입분	1,200,102	669,177	2025년 종료(6~9개월분만 편성)
2021년 도입분	1,421,497	1,421,497	
2022년 도입분	984,920	984,920	
2023년 도입분	943,472	865,502	실제 리스료 반영
2024년 도입분	**538,485**	**1,471,867**	**계약시점 고려, 3~6개월분만 편성(24년)**
2025년 도입분	-	665,350	계약시점 고려, 3~6개월분만 편성(25년)
(계수조정)	△494	△571	
합 계	5,553,788	6,077,742	

* 자료: 법무부

○ 법무부와 검찰은 2024년 예산에 PC 등 노후 전산장비 교체,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정보보안장비 도입 등을 위해 5억 3,849만원을 편성하였음. 각 정보화 장비는 5년 단위 리스계약이기 때문에, 2024년 신규 구입 분에 대해 2025년에도 1년 치 리스료가 편성되어야 하는바, 법무부와 검찰은 2025년 예산안에 2024년 예산액을 기준으로 14억 7,187만원을 편성함.

그러나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①노후 전산장비 교체, ②정보보안장비, ③고속스캐너의 경우 예산안 국회 제출 후인 2024년 10월 현재 실제 리스 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2025년 예산에는 실제 계약에 근거한 정확한 리스료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노후 전산장비 교체”의 경우, 2024년 예산상 리스료

(회당)는 1억 7,826만원이었으나, 실제 계약은 회당 1억 7,079만원에 체결된바, 2025년에 실제 리스료는 1년 기준 6억 8,317만원을 납부하게 되므로, 2025년에 편성된 '2024년 노후 전산장비 교체' 리스료 예산 7억 1,302만원 중 2,985만원을 감액조정하는 것이 가능함.

<`24년 도입 장비 예산 대비 실제 리스료를 기반으로 한 `25년 예산 조정안>

(단위: 천원)

구분	계획 (`24 예산)	실제 계약	2025년 리스료		
	리스료(회당)	리스료(회당)	예산안(a) (`24예산기준)	수정안(b) (실제 계약기준)	증감 (b-a)
노후 전산장비 교체	178,256	170,794	713,023 (178,256×4회)	683,176 (170,794×4회)	△29,848
업무용 소프트웨어	51,448	발주진행중	205,792 (51,448×4회)	좌동	-
정보보안체계	28,763	28,546	115,052 (28,763×4회)	114,184 (28,546×4회)	△868
형사절차 전자화 고속스캐너 임차	36,500	28,119	438,000 (36,500×12회)	337,428 (28,119×12회)	△100,572
합 계			1,471,868	1,340,580	△131,287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현재 계약 체결이 완료된 "정보보안체계", "고속스캐너"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2025년에 편성되는 '2024년 도입분 정보화 장비 리스료'는 총 13억 4,058만원을 실제 납부하게 되므로, 예산안(14억 7,187만원) 대비 1억 3,129만원 감액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 불요불급하게 신규 편성된 일반수용비 항목 감액 필요

○ 동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에는 ‘전문가위원 기념품’ 구입 예산 105만원, ‘음원이용료’ 예산 198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음.

<검찰업무정보화 사업 일반수용비(210-01) 상세 편성 내역>

(단위: 천원)

항목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증감
1. 전산소모품	88,730	120,906	32,176
2. 정보화사업 평가경비	13,200	28,400	15,200
3. 검찰방송 영상콘텐츠 제작 운영비	21,100	21,100	-
4.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료	3,680	4,076	396
5, 홈페이지 본인확인서비스 사용료	1,100	1,100	-
6. 정보통신 전문화 교육	43,000	43,000	-
7. 정보화교육 교재 제작비	1,000	1,000	-
8. 조달수수료	17,300	22,927	5,627
9. 전문가위원 등 기념품		**1,050**	**신규**
10. 음원이용료		**1,980**	**신규**
11. 계수조정	△33	△11	22
합 계	**189,077**	**245,528**	**56,451**

* 자료: 법무부

○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전문가위원 기념품’의 경우 정보화사업 자문위원 및 정보통신 전문화 교육 강사 등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음원이용료’의 경우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활기찬 직장 분

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구내방송(전관방송[57])시스템을 활용하여 출·퇴근 시간 및 점심시간에 송출할 계획인 음원의 사용료 지불을 위해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자문위원 및 교육 강사에게는 근거 법령에 따른 자문료 및 강사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기념품을 구입·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58]

스마트폰과 음원플랫폼 및 송출장치(블루투스 이어폰 등)의 발달로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각자 선호에 맞는 음원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구내방송을 활용하여 직원들에게 스트레스 해소용 음원을 송출하기 위한 사업은 직원의 수요와 의사, 일괄적 송출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감안할 때, 그 목적과 수단의 적정성을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두 항목의 예산은 총 303만원으로 소액이나, 일반수용비(210-01)는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 편성이 원칙[59]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중한 예산 편성이 필요해 보이므로, 해당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으며,

두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동 사업에 편성된 일반수용비가 2025년 전년대비 5,342만원(28.3%) 증액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기념품 구입 및 음원이용료가 필요한 경우 편성된 일반수용비 범위 내에

57) 학교, 대형 건물, 아파트 단지 등 다수 건물에 거주·근무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소리를 방출하기 위한 음향설비 시스템(Public Address system). 아파트 안내방송, 학교 수업 종, 대형 건물 화재경보 등에 활용.

58) 필요시 검찰국 기본경비로 기념품을 구입하거나, 타 사업·행사시 제작한 기념품을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함.

59)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p.217

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5) 형사부 등 수사지원 사업

(가) 예산안 개요

○ 형사부 등 수사지원 사업(1335-301)은 전국 검찰청 형사부에 근무하는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수사활동 경비와 수사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경비, 수사보조인력인 검사실 사무보조원과 속기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4억 8,800만원(1.7%) 증액된 879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형사부 등 수사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형사부 등 수사지원	85,223	86,475	87,963	1,488	1.7

(나) 신규 편성된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수당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 법무부와 검찰은 동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에서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심의 수당으로 1억 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제12조제1항[60]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61]에 따라 공개

6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설치·운영하는 심의 기구임. 검찰은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2005년 7월 대검 예규인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고, 대검찰청 및 산하 고검·지검·지청 등 67개 검찰청에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운영해오고 있음.

○ 한편,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심의회의 객관적·중립적 운영을 위해 심의회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청의 경우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의해 3분의 1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규정[62]하고 있음.

이와 관련,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3조는 당초 전체 심의회 위원 7인[63] 중 2인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 · 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6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1개 이상 설치 · 운영해야 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각 목 생략)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6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63) 대검은 예규에 따라 7인으로 구성되나, 각급 검찰청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12조제2항에 근거하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검찰은 2024년 7월 예규를 개정하여 법 취지에 맞게 대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전문가를 3인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음.[64] 또한 검찰은 향후 예규를 추가 개정하여 외부전문가를 '3인 위촉'에서 '3인 이상 위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각급 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도 외부전문가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임.[65]

○ 신규 편성된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수당(1억 5,100만원)은 그동안 각급 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에게 지급되지 않던 참석 수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66]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공개심의회 심사를 위해 외부위원의 적극적인 참석을 유도하고자 하는 편성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최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실적을 고려할 때, 신설된 외부위원 수당이 다소 과다편성된 측면이 있다고 보임. 2025년 예산안에 편성된 1억 5,100만원은 외부위원 3인, 참석 수당 15만원/회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각급 검찰청(67개)별 연간 5회씩 총 335차례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규모임.

여 각 청 사정에 맞추어 정보공개심의회를 5인 ~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64)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대검찰청예규 제1444호, 2024. 7. 10. 전부개정) 제3조(심의회 구성)**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한다.
④ 검찰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별을 고려하여 법조계 · 학계 또는 비영리 시민단체 등의 **외부전문가 3인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65) 전체 위원이 7인인 경우 외부전문가 3인 이상, 전체 위원 5인인 경우 외부전문가 2인 이상으로 운영하되, 검찰은 현재 전체 위원 5인으로 운영하는 지청 단위의 경우에도 전체 위원 7인, 외부전문가 3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66) 검찰은 외부위원 수당지급을 위해 2024년 7월 예규 전부개정시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음.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대검찰청예규 제1444호, 2024. 7. 10. 전부개정) 제7조(수당 및 경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각 급 검찰청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실적을 보면, 2022년 190회(기관 당 2.8회), 2023년 191회(기관 당 2.9회)에 그쳤으며, 2024년의 경우 9월말 현재 194회(기관 당 2.9회)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연간으로 환산시 259회(기관 당 3.9회) 수준으로 2025년 예산상 기준(335회, 기관 당 5회)에 미치지 못함.

<최근 3년간 각급 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실적>

(단위: 회, 명)

2022년			2023년			2024년(9월말)		
개최 실적	기관당 평균	회당 평균 참석인원 (전체/외부)	개최 실적	기관당 평균	회당 평균 참석인원 (전체/외부)	개최 실적	기관당 평균	회당 평균 참석인원 (전체/외부)
190	2.8	6.6/2.1	191	2.9	6.3/2	194	2.9	6.2/2

* 자료: 법무부

○ 또한 검찰이 향후 관련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외부위원 비중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나, 현재 일부 지청 단위 검찰청[67]은 여전히 정보공개심의회를 5인으로 구성하고 있고, 이 경우 외부위원을 2인으로 위촉하고 있음.

즉, 지침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외부위원 3인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한 것 역시 예산이 실소요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

○ 따라서, 검찰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수당 예산은 최근 개최 실적(200회 미만) 대비 2025년 개최 목표 횟수(335회)가 다소 높게 책정된 점, 일부 청은 여전히 외부위원을 2인으로 운영한다는

67) 검찰에 따르면 67개 기관(대검, 고검, 지검, 지청) 중 약 20개 지청에서 정보공개심의회를 5인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점 등을 고려하여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만, 추후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을 3인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는 검찰의 입장을 감안하여 구체적 감액 규모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68]

(다) 시민 옴부즈만 사례금의 최근 집행 실적을 반영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 검찰은 2003년 7월부터 검찰 업무에 정통하면서 민원인들과 적극 소통할 수 있는 시민(일반인)을 “국민 소통 옴부즈만”으로 위촉하여 형사 절차, 사건 민원 등에 대한 상담·질의에 응대하는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국민 소통 옴부즈만(시민 옴부즈만) 제도 개요>

68) 예를 들어, 검찰의 적극적 확대 의지를 감안하여 외부인원의 예산상 기준 인원을 3명 → 3.5명으로 상향하고,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수를 2024년 실적을 감안하여 335회→260회로 하향할 경우, 10%(1,500만원) 가량 감액 조정이 가능함.
* 260회 × 3.5인/회 × 15만원 = 약 1억 3,600만원 (정부안 대비 △1,500만원)

○ **임기 및 인원** : 임기(1년, 연임가능), 인원(각 청별로 자율 선정)

○ **근무지 및 보수** : 검찰청 내 별도 사무실, 무보수(실비 지급 가능)

○ **접수유형** : 직접대면, 전화상담, 인터넷 상담(각청 홈페이지), 서면 등

○ **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례** : 최우선 상담자 지정

※ 최우선 상담자 :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족, 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60세 이상 노인, 가정·성폭력 피해자, 기타 영세민

○ **소통 방법** : 민원인은 옴부즈만에게 형사 절차, 사건민원 등 관련 상담, 질의, 의견제시 → 옴부즈만은 민원인을 상담하고 상세 내용 안내

※ 옴부즈만은 상담 관련 내용을 검찰 관계자에게 문의 가능, 검찰은 수사보안 및 사생활 보호 등에 문제 없는 범위에서 설명 / 검찰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민원인 직접 면담하고 설명 가능

○ **자격** : 50세 이상으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법률·검찰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시민단체.지자체.변호사회 등 법조계.법학 교수회 등의 추천 받은 자
- 변호사 등 법률 자격 소지자 또는 법률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검찰에 10년 이상 근무한 덕망 있는 전직 원로 검사·수사관

※ 법조 직역에 종사하여 사건 관계인으로 될 우려 있는 사람은 제외

※ 가급적 상담 분야에 능통하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을 우선 선발

○ **위촉 절차**

-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모집 또는 추천을 통해 후보자 선정
- 기관장이 후보자 중 적임자 선발

* 자료: 법무부

위촉·활동하는 옴부즈만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급여나 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으나, 국가업무 조력자에 대한 사례금을 일반수용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 예산집행지침[69]에 따라 실비 성격의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5년 예산안에도 동 사업 일반수용비(210-01)에 '시민 옴부즈만 사례금' 명목으로 예년과 동일한 2억 3,470만원이 편성되었음.

○ 최근 시민 옴부즈만 운영 실적 및 사례금 집행 실적을 보면,

69)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24. 1, p.151

2021년 및 2022년은 코로나19 여파로 민원인 방문 상담 및 옴부즈만 출근일이 감소하여 운영 실적이 크게 저조하였으나, 2023년부터 집행액 등은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옴부즈만을 위촉한 검찰청은 17개로 오히려 코로나19 시기보다도 2개 감소하였으며, 위촉 옴부즈만 수도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국민 소통 옴부즈만(시민 옴부즈만) 운영 및 예산 집행 실적>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말
옴부즈만 위촉 청	19	19	19	18	17	17
위촉 옴부즈만 수(명)	88	87	78	73	71	70
운영실적(상담건수)	3,039	2,036	948	1,039	1,895	1,305
예산액(천원)	234,700	234,700	234,700	234,700	234,700	234,700
집행액(천원)	213,462	142,692	101,162	137,875	192,987	142,010

* 자료: 법무부

특히, 2019년과 비교하면 전반적인 운영실적과 사례금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시민 옴부즈만'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검찰 콜센터' 가 2019년 6월 개소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검찰콜센터는 전국 검찰 민원전화번호를 '1301'로 통합하여, 사건·벌과금 문의 등을 전담하는 검찰청 공식 콜센터로, 검찰국 소관 다른 세부업인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1333-306) 사업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안에는 콜센터 운영지원 1억원(일반수용비), 공공요금 1억원(공공요금 및 제세), 콜센터 장비 유지보수 1억 8,500만원(시설장비유지비), 콜센터운영 위탁용역비 3억

4,500만원 등 7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이처럼 2019년 6월 개소한 검찰콜센터가 기초적인 사건 상담 및 벌과금 상담, 보이스 피싱 상담, 기록 열람/등사 및 불기소이유고지서 등을 유선으로 상담하게 되면서,[70] 시민 옴부즈만 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일정 부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시민 옴부즈만 사례금' 예산은 2019년 이후 동일하게 2억 3,470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바, 검찰콜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2020년 이후에는 옴부즈만 사례금 집행액이 지속적으로 2억원을 하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동 사업에 편성된 '시민 옴부즈만 사례금'은 검찰콜센터 개소 이후 전반적인 상담 실적 및 예산 집행 실적 부진, 최근 옴부즈만 위촉 청 및 위촉 옴부즈만 수의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하여 일정부분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 공공수사 사업

(가) 예산안 개요

○ 공공수사 사업(1335-302)은 선거사범·국가안전위해사범·불법집단행동사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6,200만원(4.9%) 증액된 34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70) 출처 : 대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 - 검찰소개 - 1301검찰콜센터

<2025년도 공공수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공공수사	3,106	3,276	3,438	162	4.9

(나) 2025년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예산 감액 검토 필요

○ 「정치자금법」 제54조[71] 및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법무부령)[72]에 따라 수사기관인 검찰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선거범죄 사건 해결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은 동 사업에 매년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안에도 전년과 동일한 4,512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러나 검찰의 선거범죄신고포상금은 매년 예산 집행 및 지급 실적이 크게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17년 이후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집행실적을 보면, 2018년 한 차례(43.56%)를 제외하고는 선거범죄포상금 집행률은 1% 미만으로 나타남. 전국단위 선거인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가 치러진 올해의 경우에도 9월말까지 검찰이 접수한 선거범죄포상금 신청은 단

71) **「정치자금법」 제54조(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은 정치자금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72)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범죄의 신고(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범죄"라 함은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죄 중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건에 불과하고, 지급 결정은 0건으로 2023년에 이어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음(집행률 0.0%).

<연도별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집행실적>

(단위: 천원, 명)

연도	해당연도 주요 공직선거	예산	지 급		
			인원	금액	집행률
2017	제19대 대통령선거	50,000	1	30	0.06%
2018	제7회 동시지방선거	50,000	1	21,780	43.56%
2019		50,000	0	0	0%
2020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	45,000	0	0	0%
2021		11,120	1	80	0.72%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동시지방선거	45,121	1	380	0.84%
2023		45,121	0	0	0%
2024 (9월기준)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45,121	0	0	0%

* 자료: 법무부

○ 검찰의 선거범죄신고포상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배경에는 공직선거 주무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제262조의3[73]에 근거하여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단위 선거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초기 신고, 제보, 포상금 신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편성하는 위법행위예방활동(1133-333)과 당해연도 주요 공직선거 실시 여부에 따라 대통령선거(1133-300), 국회의원선거(1133-301), 전국동시지방선거

73) **「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133-302), 재보궐선거(1133-303) 등의 세부사업을 편성하여 신고포상금을 운영·지급하고 있음. 2020년 이후 집행 실적을 보면, 지급 인원 수, 지급액, 예산집행률 등에서 전반적으로 법무부보다 포상금 지급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0년 이후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단위: 천원, 명)

연도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급		
			인원	금액	집행률
2020	위법행위예방활동	20,000	1	19,000	95.00%
	국회의원선거관리	298,000	43	257,650	86.46%
2021	위법행위예방활동	31,073	7	29,600	95.26%
2022	위법행위예방활동	20,000	1	15,000	75.00%
	대통령선거관리	185,000	4	6,400	3.46%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150,000	0	0	0%
	재보궐선거관리	13,200	0	0	0%
2023	위법행위예방활동	20,000	2	18,800	94.00%
	재보궐선거관리	4,000	0	0	0%
2024 (6월기준)	위법행위예방활동	20,000	3	4,100	20.50%
	국회의원선거관리	200,000	12	103,200	51.60%
2025 예산안	위법행위예방활동	20,000	-	-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재구성

특히,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가 동시에 있었던 2022년의 경우 선거범죄신고포상금을 최대 3억 6,800만원까지 편성하였다가, 재보궐선거 외에 공직선거가 없었던 2023년에는 2,400만원까지 축소 편성하는 등 중앙선관위는 주요 공직선거 실시 연도인지에 따라 예산을 탄력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74)]

2025년의 경우에도 중앙선관위는 전국단위 공직선거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2025년 예산안에 “위법행위예방활동” 사업에만 2,000만원의 선거범죄신고포상금을 편성하고 있는바, 오히려 검찰이 주무부처인 중앙선관위보다 2.3배 가량 많이 편성(4,512만원)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법무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①선거범죄신고포상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②공직선거가 없는 해에는 미집행 최소화를 위한 예산 축소 등 예산을 탄력적·합리적으로 편성·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요구(제도개선)를 채택한바 있음.

따라서 동 사업의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예산은 저조한 집행실적과 국회 결산심사 시정요구 취지, 주무부처인 중앙선관위 사례 등을 감안하여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법무부와 검찰도 전국단위 공직선거가 없었던 2021년에는 선거범죄신고포상금을 1,112만원으로 축소 편성한 사례가 있는바, 이를 참고하여 감액 규모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2021년 수준으로 편성시 3,400만원 감액).

74) 2023년의 경우 오히려 검찰의 선거범죄신고포상금(4,512만원)이 중앙선관위(2,400만원)보다 88% 가량 많이 편성되었음.

(7)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사업

(가) 예산안 개요

○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사업(1335-303)은 주가조작,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지능형·경제형 국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수사 지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원, 범죄신고자 보호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7억 6,400만원(5.2%) 증액된 154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12,474	14,644	15,408	764	5.2

(나) 신규 편성된 '금융·증권분야 위탁교육' 사업 준비 상황을 고려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 2025년 동 사업 예산안에는 신규 사업으로 '금융·증권분야 위탁교육' 예산 2억 8,000만원(일반수용비)이 편성되었음.

'금융·증권분야 위탁교육' 사업은 지능화·고도화되는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검사·수사관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금융·증권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과 협의하여 교육기간 2년의 석사과정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교육과정이 개설되면 2025년부터 매

년 20명 규모의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고, 별도의 교육훈련 파견 없이 야간 및 주말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수료하도록 할 예정임.

<금융·증권분야 위탁교육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지능화·고도화되는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 금융·증권 분야 우수인력 양성

□ 사업 필요성

○ 금융·증권 분야는 법체계가 복잡하고 실무지식이 필수적이므로, 전문적인 교육과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접목할 수 있는 위탁교육 실시 필요

□ 사업 내용

○ 교육 기간 : 2년 석사 과정

※ 야간 및 주말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선발 대상자의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 위탁교육 기관 :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 세부 학과 명칭 및 구체적인 운영 계획 협의 중

○ 주요 커리큘럼

- '기업회계와 재무보고', '가상자산 실무연구', '금융시장론' 등 금융·증권 분야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과목으로 구성 예정
- 수료 요건 등 구체적인 학과 일정 및 내용은 법무부-서울대 협의 중

○ 교육 대상자 선발 규모 : 매년 20명(검사 15명, 수사관 5명) 선발 예정

○ 선발 시기 및 일정 : 예산 확정 후 서울대와 협의하여 추후 결정

□ 소요 예산

○ 2025년 : 일반수용비 2억 8,000만원

- 14,000천원 × 20명 = 280백만원

※ 1인 총 교육비 年 2,000만원 중 1,400만원 지원(교육생 자부담 600만원)

○ 2026년 이후 : 2년 과정이므로 연간 교육생 40명에 대해 5억 6,000만원 매년 투입 예정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정리

○ 지능화·고도화되는 자본시장 범죄에 대응하여 수사기관의 역량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금융·증권분야 위탁교육'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다만, 현재 법무부와 서울대 간 업무 협의 진행

상황, 예산 확정 후 선발 절차 등을 고려하면, 교육과정을 2025년 1학기부터 운영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임.

현재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법무부와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간 협의가 진행 중이나,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학과 명칭, 운영 비용 부담, 수료 요건 및 구체적인 학사 운영 계획 등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

또한, 위탁교육 실시를 위해서는 교육 대상자를 선발해야하는데, 법무부·검찰 차원의 내부 선발절차 뿐만아니라, 선발된 교육훈련 대상자는 다시 서울대학교의 별도 입학사정(서류전형 및 면접고사)을 모두 거쳐야 함.

그러나 법무부·검찰의 내부 선발절차가 예산 확정 이후에 가능하고,[75] 서울대 융학과학기술대학원 학사일정[76]상 2025년도 1학기 교육대상자는 일반적으로 2024년 12월 초 입학지원서 접수, 12월 중순 면접 및 구술고사를 거쳐 2025년 1월 초에 합격자가 확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25년 1학기 학사 일정에 맞추어 그 전에 서울대 입학사정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기에는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계약학과) 2025년 신입생 입학전형>

75) 법무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다음해 상반기에 진행되는 위탁교육의 경우, 해당 기관의 정기인사, 선발자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하반기 중 내부 선발이 완료되어야 함**.

76)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 개설·운영되고 있는 수리정보과학과(계약학과)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기준

구분	일시	비고
1. 입학지원서 접수	2024. 12. 02.(월) 10:00 ~ 12. 06.(금) 17:00까지	인터넷접수
2. 지원 서류 제출	2024. 12. 02.(월) 10:00 ~ 12. 06.(금) 17:00까지	방문 또는 우편
3. 면접 및 구술고사	2024. 12. 13.(금) 15:00	
4. 합격자 발표	2025. 01. 10.(금)	
5. 합격자 등록	2025. 02. 03.(월) ~ 02. 07.(금) 17:00 까지	
6. 충원 합격자 발표	2025. 02. 10.(월)	
7. 충원 합격자 등록	추후공지	

* 자료: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홈페이지(https://convergence.snu.ac.kr/)

○ 한편, 검찰국 내 다른 세부사업인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1334-501)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 사업의 경우, ‘금융·증권분야 위탁교육’과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융합과학기술대학원 계약학과)에서 석사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77] 해당 과정이 최초 개설된 2013년의 경우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학기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신규 편성된 ‘금융·증권분야 위탁교육’ 사업은 사업 준비 상황 및 교육생 선발 절차 소요 시간, 타 교육과정 선례 등을 고려하여, 사업 첫 해인 2025년에는 2학기부터 위탁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반영하여 교육비 지원 예산은 한 학기 분인 1억 4,000만원으로 50% 감액 편성하는 방

77) 디지털수사 역량 강화 및 법학·정보기술 분야 융합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2013년 개설하였으며, 매년 10명의 교육생을 선발, 1인 당 1,4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함(2025년 20명(재학생10명, 신입생10명)에 대한 훈련지원비로 일반수용비 2억 8,000만원 편성).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수사 사업

(가) 예산안 개요

○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수사 사업(1335-305)은 성범죄(성폭력,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등),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 사범 수사 및 피해자를 지원하고, 사건관계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분석하는 진술분석관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2,300만원(6.4%) 증액된 37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수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수사	4,244	3,481	3,704	223	6.4

(나) 연례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범죄피해자 심리·예술치료' 사업 추진 여부 재검토 및 예산 조정 검토 필요

○ 법무부와 검찰은 동 사업에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등 범죄 피해자들이 범죄 피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예술치료[78]를 지원하고 있음. 2025년 예산안에는 전년과 동일한 1,580만원이 편성되었음.

78) 개인의 정신/심리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예술매체(미술, 소리, 동작, 연극 등)를 사용하는 현대 정신치료의 한 분야

검사가 조사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심리·예술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표상담사[79]에게 직접 의뢰하거나, 대표상담사를 통해 지역별 예술심리상담사를 연계하여 심리·예술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범죄피해자 심리·예술치료' 사업의 최근 실적을 보면, 2019년 33건, 2020년 18건 실시하였으나, 이후 치료 실적이 크게 떨어져 2022년에는 치료 실적이 없었고, 2023년 및 2024년(9월말 기준)의 경우 단 1건의 심리·예술치료를 실시하였음.

<연도별 범죄피해자 심리·예술치료 실적>

(단위: 건)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9월말
33	18	3	-	1	1

* 자료: 법무부

또한 '범죄피해자 심리·예술치료' 비용으로 지출되는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2019년 이후 매년 예산 집행실적이 크게 저조하여 예산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임.

2019년 이후 올해까지 범죄피해자 심리·예술치료 예산은 30% 이상 집행된 적이 없으며,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에는 3.8%만 집행되고 2022년에는 전혀 집행되지 않았음. 부진한 집행 실적을 반영하여 2019년 7,000만원 규모였던 심리·예술치료 예산은 2023년 2,280만원, 2024년에는 1,580만원이 편성되는 등 2019년 대비

79) 검찰청사에 직접 배치되는 심리·예술치료 상담사로, 재경지검 및 수원지검에 총 3명의 대표상담사가 배정되어있음. (서울남부·동부지검 1인, 서울동부·수원지검 1인, 서울중앙·북부지검 1인)

4분의 1 이하로 크게 축소되었음.

<연도별 범죄피해자 심리·예술치료 예산 집행 실적>

(단위: 천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9월말)	2025(안)
예산액	70,000	70,000	60,000	60,000	22,800	15,800	15,800
집행액	15,760	18,266	2,291	0	3,254	1,200	
집행률	22.5	26.1	3.8	0.0	14.3	7.6	

* 자료: 법무부

○ 법무부와 검찰은 '범죄피해자 심리·예술치료' 사업 실적 부진 원인에 대해 일선청의 제도 인지 부족 및 검사실 사건처리 부담으로 인해 제도 활용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재경지검 및 수원지검 관련 부서에 심리·예술치료 제도 안내자료를 배포 및 적극 활용을 요청하였고(2024. 2월), 전국 청에도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예산이 2,280만원으로 크게 감액된 2023년에도 집행률은 14.3%에 그쳤고, 예산이 추가로 감액 편성(1,580만원)된 2024년도 9월말까지 집행률이 7.6%에 그치는 등 예산의 축소 편성에도 집행률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

○ 현재 범죄피해자 심리치료는 일반회계에서 검찰이 수행하는 '범죄피해자 심리·예술치료' 외에,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80]에

80)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근거하여 법무부 인권국이 소관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1135-300)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범피기금 사업은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지원 시설인 ‘스마일센터’를 운영[81]하고, 범죄피해자가 정신과 진료 또는 심리상담 후 그 치료 비용을 청구하면 그 실비를 지원[82]하는 방식임.

검찰의 ‘범죄피해자 심리·예술치료’와 달리 범피기금 사업의 경우 예산이 대부분 집행[83]되는 등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는 범피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일반회계로 추진 중인 ‘범죄피해자 심리·예술치료’ 사업은 극히 저조한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는 한편, 관련 예산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디지털성범죄, 스토킹범죄 대응 사업의 적극적 사업 추진 방안 마련 필요

○ 법무부와 검찰은 동 사업 일반수용비(210-01)로 ‘디지털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관련 전문화 교육’(이하 ‘디지털성범죄 전문화 교육’)과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81) 2025년 예산안에 전국 17개소 설치된 스마일센터 운영예산(민간경상보조)으로 85억 7,100만원 편성

82) 2025년 예산안에 범죄피해자 치료비(신체·정신) 지원 목적으로 20억 9,960만원 편성

83) 2023년 스마일센터 운영 예산 98.6% 집행, 범죄피해자 치료비 지원사업 98.9% 집행

있음.

‘디지털성범죄 전문화 교육’은 전국 5개 권역별 고등검찰청 산하 성폭력 전담 검사 및 수사관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성범죄 수사교육 자료집 제작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추진하였으며, 2025년 예산안에는 예년과 동일한 9,100만원이 편성되었음.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 사업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능동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전담 검사 워크숍을 개최하고, 스토킹범죄 수사 매뉴얼 및 우수사례집 등 제작을 목적으로 2023년 신규 편성한 사업이며, 2025년 예산안에는 2023년·2024년과 동일한 6,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최근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 교제살인 등 스토킹범죄가 증가하는 상황과, 해당 범죄의 심각성 및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효과적 대응 및 역량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은 매우 중요다고 할 것임. 그러나 두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연례적으로 집행 실적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취지 및 예산 편성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디지털성범죄 전문화 교육’의 경우 2021년 40.5% 집행된 이후 매년 집행률이 하락하여 2024년 9월말 기준 3.6% 집행에 그치고 있으며,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최초 편성된 2023년 2.2%만 집행되었고, 2024년 9월말 기준 집행률은 0.2%에 불과함.[84]

84) 검찰은 2024년 11월 중 ‘스토킹처벌법 벌칙 해설서’를 발간하여 1,485만원을 집행할 예정이

<‘디지털성범죄 전문화 교육’ 및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 사업 집행 실적>

(단위: 천원, %)

		2021	2022	2023	2024 (9월말)	2025(안)
디지털성범죄 전문화 교육	예산액	91,000	91,000	91,000	91,000	91,000
	집행액	36,812	11,060	7,122	3,315	
	집행률	40.5	12.2	7.8	3.6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	예산액	-	-	67,000	67,000	67,000
	집행액	-	-	1,441	163	
	집행률	-	-	2.2	0.2	

* 자료: 법무부

○ 두 사업의 부진한 집행실적과 관련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당시 법무부와 검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2023년 상반기까지 집합 교육·워크숍 개최 등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코로나19와 무관한 2024년의 집행실적이 오히려 2023년보다 더욱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두 사업의 저조한 집행 실적은 코로나19 외에도 예산 과다편성, 디지털성범죄·스토킹범죄 관련 수사부서의 사업 인지도 부족, 검사실 업무부담에 따른 참여 및 협조 부족 등의 원인이 중첩된 결과라고 판단됨.

○ 디지털성범죄 및 스토킹범죄는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안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디지털성범죄 전문화 교육’과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 사업은 각 범죄 유형별 대응 역량 강화라는 추진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 집행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프

라고 설명함. 그러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집행액은 1,501만원, 집행률 22.4% 수준에 그침.

로그램을 발굴,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한편,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실제 집행가능성도 중요한 고려 요소이므로, 현재 편성된 예산안 규모('디지털성범죄 전문화 교육' 9,100만원,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 6,700만원)가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국제법무활동

(1)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

(가) 예산안 개요

○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1431-300)은 정부부처 등이 당사자인 주요 국제소송 법률지원 기능 강화 및 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 대상 범위 확대 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억 3,500만원(35.4%) 증액 편성된 5억 1,600만원임.

<2025년도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	-	381	516	135	35.4

(나) 해외진출기업 법률자문을 하나의 세부사업에 통합하여 지원할 필요

○ 내역사업인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은 해외진출기업에 대하여 법률지원 강의 등을 개최하고, 온라인 법률지원, 외국정부와의 MOU 등을 체결하는 사업으로, 법무부는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억 3,500만원 증액한 3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바, 이는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의 대상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임.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의 2024년 및 2025년 예산 편성내역 비교>

(단위 : 천원)

	2024년도 예산 편성내역	2025년도 예산안 편성내역	증감액
일반수용비 (210-01)	o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강의 등 개최 (76,000천원) o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책자 등 발간 (65,000천원)	o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강의 등 개최 (**116,000천원**) o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책자 등 발간 (65,000천원) o 해외진출기업(중견기업 등) 온라인 법률지원 (**89,000천원**)	129,000
국외업무여비 (220-02)	o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현지 설명회 참석 (24,000천원) o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외국정부와의 MOU 체결 (25,000천원)	o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현지 설명회 참석 (24,000천원) o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외국정부와의 MOU 체결 (25,000천원)	-
사업추진비 (240-01)	o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강의 다과비 등 (4,800천원) o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MOU 체결 업무추진 (7,020천원)	o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강의 다과비 등 (4,800천원) o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MOU 체결 업무추진 (7,020천원)	-
임차료 (210-07)		강연장 대관료 2건×3,000천원 (**6,000천원**)	6,000
합계	202,000	337,000	**135,000**

* 자료: 법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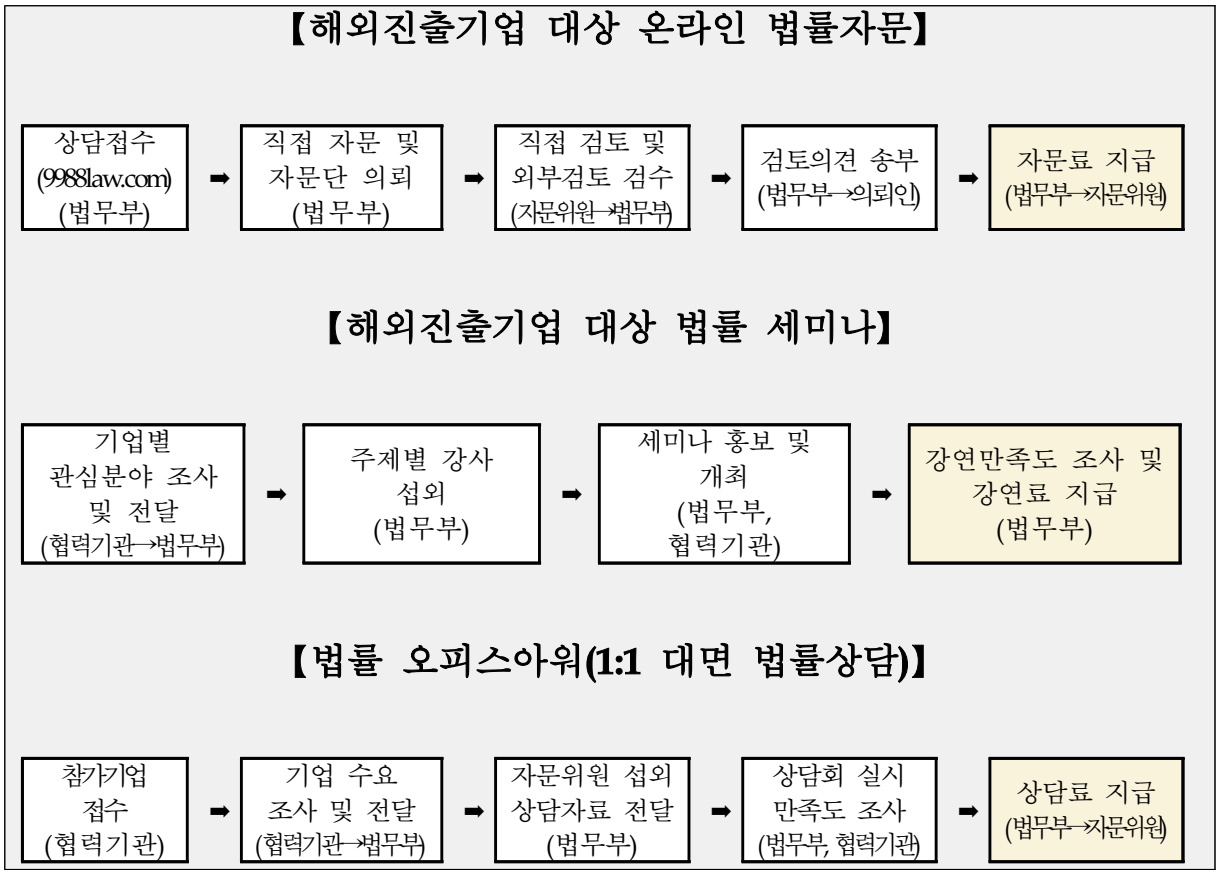
○ 2024. 6. 3. 경제관계장관회의('24. 6. 3.)에서 발표한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방안」[85]에 따라 법무부는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 졸업 후 지원 절벽을 겪는 중견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 방안을 검토한바 있음.

그에 따라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2024. 7. 1.)하여 중견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2025년 법률자문 상담을 2024년 40개 기업에서 2025년 60개 기업으로 확대하며,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온라인 법

85) **(법률 자문)**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지원대상을 초기 중견기업(3년)*까지 확대하고 수출 바우처(산업·중기부)와 연계강화
* (현행) 중소기업만 대상 → (개선) 중소기업 + 초기 중견기업(졸업 후 3년 이내)

률지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해외진출기업 대상 법률자문, 세미나 등 진행과정>



* 자료: 법무부

○ 그런데, 법무부는 이미 타 세부사업인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1431-301)” 사업을 통하여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는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법무 분야 전문가(213명)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임.

자문위원단의 법률자문 진행을 위한 예산으로 자문료 7,100만원[일반자문(30만원)×170건 + 전문자문(100만원)×20건]이 편성되어

있는데, 법무부에 따르면 이는 온라인 법률자문만을 위해 편성된 예산임.

<각 세부사업별 해외진출기업 대상 법률지원 사업 편성내역 비교>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1431-300)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1431-301)
o 일반수용비(210-01) : 270,000천원 가.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강의 등 개최 (116,000천원) · 강사료 36만원×12회=4,320천원 · **법률자문 상담료 등 150천원×60개기업×12회= 108,000천원** · 동시통역비용 등 2,000천원×2회=4,000천원 나.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책자 등 발간 (65,000천원) · 원고료 5,000천원×5종=25,000천원 · 인쇄비 등 16천원×500부×5종=40,000천원 다. 해외진출기업(중견기업 등) 온라인 법률지원 (89,000천원) · **일반자문료 80건×300천원+50건×500천원 = 49,000천원** · **전문자문료 1,000천원×40건 = 40,000천원** o 임차료(210-07) : 6,000천원 · 강연장 대관료 2건×3,000천원 = 6,000천원 o 국외업무여비(220-02) : 49,000천원 가.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현지 설명회 참석 (24,000천원) · 6,000천원×4회=24,000천원 나.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외국정부와의 MOU 체결 (25,000천원) · 필리핀 1,375천원×2명=2,750천원 · 사우디아라비아 5550천원×4명=22,200천원 o 사업추진비(240-01) : 12,000천원 가.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강의 다과비 등 (4,800천원) · 400,000원*12회=4,800천원 나.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MOU 체결 업무추진 (7,020천원) · $5,400*1회*1,300원=7,020천원	o 일반수용비(210-01) : 86,600천원 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 (81,000천원) · **자문료 : 374천원×190회 =71,000천원** · 자료발간 : 10,000천원×1회 =10,000천원 o 사업추진비(240-01) : 1,000천원 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간담회 (1,000천원) · 1,000천원x1회=1,000천원

○ 따라서, 현재 국제법무국에서 수행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은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1431-300)” 세부사업에서 수행중인 1:1 대면 법률자문과,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1431-301)” 세부사업에서 수행중인 온라인 법률자문으로 이원화되어 진행중인바, 전자의 세부사업 소관 부서는 국제법무지원과이고 후자의 경우 국제법무정책과임.

이에 더하여, 법무부는 2025년도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온라인 법률자문 예산을 기존 온라인 법률자문 수행 사업인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1431-301)” 사업이 아니라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1431-300)”에 추가 편성하였음.

○ 해외진출기업 대상 법률자문은 사업 수행방식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의 차이가 있을 뿐 목적·취지·성과목표 등이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이라고 보여짐. 같은 사업을 사업수행주체가 다른 서로 다른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수행하는 것은 사업 수행과정의 비효율성과 예산의 중복 편성·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법무부는 해외진출기업 법률자문 사업은 실제로 하나의 부서(국제법무지원과)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국 신설로 인한 조직개편과정에서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 이관이 병행되지 못하여 예산이 두 개의 세부사업에 나뉘어 편성되어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이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사업성과 제고 차원에서 바

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해외진출기업 법률자문 지원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이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국제법무지원과 산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두 세부사업을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1431-300)” 사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86]

86)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중견기업 및 공기업의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분쟁과 지방자치단체·경제자유구역 등의 외자유치 관련 분쟁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국제법무국 국제법무지원과 산하에 둔다.

(2)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가) 예산안 개요

○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1431-301)은 국제거래규범 성안·도입, 해외 법무 요인 등과의 법무분야 국제협력, 기업·청년 해외진출지원, FTA, BIT[87] 등 통상·투자 협정 관련 법률지원,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중앙당국으로서[88] 아동반환을 위한 행정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600만원(0.8%) 증액 편성된 7억 3,400만원임.

<2025년도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621	728	734	6	0.8

87)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국가간 협정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 투자보장협정) : 외국인투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본 유입국과 투자국 간에 체결된 협정

88)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협약의 적용을 받는 1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중앙당국”이란 협약 제6조에 따라 지정되어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각 체약국의 국가기관을 말한다.

제4조(중앙당국의 지정)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나) 사업 성과 파악을 바탕으로 관련 예산 추가확보 노력 필요

○ 내역사업인 “기업·청년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청년법조인들에게 국제업무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년법조인 대상 국제법무 전문 교육과정인 ‘O.K. 아카데미’[89] 및 국제기구·로펌 실습 프로그램인 ‘글로벌 펠로우십’ 등을 실시하고 있음.

○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해외 로펌, 국제기구 등에 한국의 청년법조인(1~10년차)을 파견(3개월~1년)하여 현지 법제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O.K. 아카데미 수료 기준을 충족한 수강생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지며, 2024년 10월부터 제10기 O.K. 아카데미가 진행중임.

<O.K. 아카데미 실시 현황>

구분	교육기간	수료생
제1기	2014. 9. ~ 2015. 7.	57
제2기	2016. 3. ~ 2016. 6.	70
제3기	2017. 3. ~ 2017. 7.	45
제4기	2018. 3. ~ 2018. 7.	32
제5기	2019. 3. ~ 2019. 6.	36
제6기	2020. 9. ~ 2020. 12.(온라인)	66
제7기	2021. 10. ~ 2021. 12.(온라인)	36
제8기	2022. 9. ~ 2022. 12.(온라인)	23
제9기	2023. 10. ~ 2024. 1.	77
제10기	2024. 10. ~ 2024. 12.	진행중

* 자료: 법무부

89) Overseas Experience for Korean Young Lawyers의 약자임.

법무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 동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료 360만원, 교육 및 홍보자료 발간 등을 위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런데,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2023년 국제법무국 국제법무지원과 신설을 계기로 개편된 해외인턴 파견사업으로, 이전까지는 장·단기 해외인턴 파견사업[90]으로 운영되던 중,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실상 중단되었던 사업을 전면 개편한 것임.

동 사업은 2015년 이후 2020년 코로나19로 중단되기 이전까지 장기 해외인턴이 점차 감소하였고, O.K. 아카데미 수료 여부와 무관한 예비법조인 대상 단기 해외인턴 파견 위주로 운영되는 등 사업 운영 실적이 저조하였으며, 동 사업을 통하여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법조인 현황도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았던 점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2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바 있음.[91]

<장·단기 해외인턴 파견 현황>

(단위: 명)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 2023	개편	2024
장기 해외인턴	7	5	3	3	1	코로나19로 중단	글로벌 펠로우십	15
단기 해외인턴	47	46	38	38	46		단기 해외인턴	24

90) 단기 해외인턴(2주)은 예비법조인(로스쿨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며, 장기 해외인턴은 청년법조인을 대상으로 3개월~1년간 파견하는 프로그램임.
91) 국회 예산정책처,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p.94

* 자료: 법무부 제공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8월 국제법무지원과가 신설되면서,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전면 중단되었던 청년법조인 해외 진출 사업 중 장기 해외인턴 파견사업을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여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 중으로, 2024년에 10개국 19여 곳의 파견기관을 마련하여 총 6개국 11개 기관에 15명을 파견하였으며, 파견기관 역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

<2024년 제1회 글로벌 펠로우십 파견기관 및 선발 현황>

국가	지역	파견기관	모집 인원	선발 인원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ICC)	2명	1명
프랑스	파리	Arche Legal	1명	0명
폴란드	카토비체	KBZ Legal	1명	1명
UAE	두바이	Al tamimi	2명	2명
	두바이	지음 두바이사무소	1명	1명
베트남	하노이	세종 하노이사무소	2명	2명
	하노이	김 · 장 법률사무소	1명	1명
	호치민	세종 호치민사무소	2명	2명
	하노이 등	화우 베트남 사무소	1명	1명
	호치민 등	광장 베트남 사무소	1명	0명
인도	뉴델리	Buddtree Management	3명	1명
러시아	모스크바	율촌 러시아사무소	1명	0명
중국	베이징	광장 베이징사무소	2명	0명
	베이징	세종 베이징사무소	1명	0명
	베이징	King & Wood Mallesons	1명	0명
	상하이	King & Wood Mallesons	1명	0명
싱가포르	싱가포르	피터앤김 싱가포르	1명	0명
대한민국	서울	율촌	2명	2명
	서울	피터앤김	1명	1명
총계			총 10개국 27명	총 6개국 15명

* 주: 제1회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 공고 당시 총 10개국 19개 기관(총 27명)을 섭외하였으며, 로펌 측 선발, 중복 합격자의 철회 등 과정에서 최종 15명(6개국, 11개 기관) 파견 완료

* 자료: 법무부

○ 다만, 내역사업 “기업·청년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O.K.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강사료 및 교육자료 예산 560만원만을 편성하고 있을 뿐,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 자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외 파견기관 섭외 등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보임.

○ 또한, 동 사업의 목적이 청년법조인의 해외 취업임을 감안할 때,

파견된 청년법조인이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 종료 이후 해당 또는 별도의 해외기관에 정식 취업하였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통계를 수집하여 사업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법무부는 기존 ‘장기 해외인턴 파견’ 사업이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으로 개편된 점을 감안하여,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성과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파견기관 확대 및 프로그램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92)]

92) 법무부는. 현재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 제1회 파견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 대화방 개설 등 SNS를 활용한 수시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파견자 사전 간담회 실시, ▲월간 업무 일지 제출·관리, ▲파견처·파견자 대상 상시 점검, ▲취업 현황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임.

바. 교정활동

(1) 교도소행정지원

(가) 예산안 개요

○ 교도소행정지원 사업(1531-300)은 교정시설 운영을 위한 공무직 인건비 등과 야근자 건강검진 등 직원 근무지원, 민영교도소 및 직장보육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30억 100만원(6.2%) 증가한 515억 1,600만원임.

<2025년도 교도소행정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교도소행정지원	47,406	48,515	51,516	3,001	6.2

○ 동 사업은 1)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전국 교정기관 시설 및 장비 임차, 사무실 개보수를 위한 “교정기관 행정지원”, 2)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회복프로그램 운영, 야근자 건강검진, 교정공무원 여비, 사업추진비를 지원하는 “교정공무원 업무지원”, 3) 공무직 인건비와 복지비 등을 지원하는 “공무직 처우개선”, 4)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재정효율화 정책연구를 위한 “교정정책 연구(순증)”, 5) 2025년 아태교정본부장 회의 개최를 위한 “국제행사 지원(순증)”, 6) 민영교도소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민간이전사업” 6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년도 교도소행정지원 내역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교도소행정지원	47,406	48,515	51,516	3,001	6.2
· 교정기관 행정지원	3,771	4,830	4,830	-	
· 교정공무원 업무지원	4,411	3,466	4,192	726	20.9
· 공무직 처우개선	26,511	27,384	29,533	2,149	7.8
· 교정정책 연구	-	-	300	300	
· 국제행사 지원	-	-	298	298	
· 민간이전 사업	12,713	12,835	12,363	△472	△3.7

* 자료: 법무부

(나) 교정공무원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정신건강 회복 지원 예산 비목 변경 필요

○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지원 사업은 수용자에 의한 폭행, 수용자 자살 등 폐쇄적 공간인 교도소에서 수용자 관리라는 특수하고 위험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교정공무원에게 생기는 트라우마나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음나래 프로그램”과 “직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으로 구분되고, “마음나래 프로그램”은 외부전문상담,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프로그램 구성>

《표-1》 ■ 마음나래 프로그램

《표-2》

《표-3》 외부전문상담	《표-4》 외부 상담 전문가를 통한 가족관계, 대인관계, 스트레스, 조직적 등에 관한 대면, 전화, 온라인(화상) 상담 실시
《표-5》 긴급 《표-6》 심리지원	《표-7》 수용자·교정공무원 자살(자살 기도), 수용자에 의한 교정공무원 폭 피해 등 교정관련 사고 발생 시 교정기관 방문 및 개별 센터방문 통한 긴급 개인심리지원
《표-8》 정신과 진료비 지원	《표-9》 1인당 연 50만원 한도
《표-10》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	《표-11》 전국 교정기관 방문, 정신건강 관리 및 정신건강 인식 개선 교 뇌파·맥파 검사를 통한 심리진단 및 상담, 피지컬 상담 실시

《표-12》

《표-13》 ■ 직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비대면 및 대면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

《표-14》 • 비대면 프로그램: 'ZOOM'프로그램

《표-15》 • 신규교도관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표-16》 • 장기근속자 자긍심 회복 프로그램

《표-17》 •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 자료: 법무부(https://maumnarae.co.kr)

○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 15억 3,600만원 대비 7억 550만원 증액(46%)된 2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중 “폭행피해 교도관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에 2억 5,800만원(163.8%), “자살 및 병사 사건처리 교도관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에 4억 4,750만원(426.2%)을 증액 편성하였음.

<2025년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천원, %)

사업명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1,536,702**	**2,242,202**	**705,500**	**45.9**
·폭행피해 교도관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157,500	415,500	258,000	163.8
·자살 및 병사 사건처리 교도관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105,000	552,500	447,500	426.2
·심리치료 프로그램	238,502	238,502	-	-
·직무스트레스 해소 관련 교육	344,500	344,500	-	-
·현장근무자 정신건강회복 프로그램	691,200	691,200	-	-

* 자료: 법무부

○ 정신건강회복 프로그램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회복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마음나래 프로그램” 중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음나래 프로그램”은 교정현장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수용자 자살, 수용자의 교정공무원 폭행 등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발생한 경우 전화 스크리닝 후 긴급상담을 통해 심리지원을 하고, 폭행피해 관련 상담을 받은 자에게 진료 및 치료비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임.

○ 연도별 정신건강회복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이후 “마음나래 프로그램” 중 ‘찾아가는 심신케어’ 실적은 2022년 2,211명에서 2023년 4,332명과 2024년 9월기준 4,836명으로, ‘외부 전문상담’ 실적은 2022년 902명, 2023년 893명, 2024년 9월 기준

1,232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긴급 심리지원’(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2022년 276명에서 2023년 285명과 2024년 9월 기준 265명으로 비교적 미미하게 증가하였는데, 2025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는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에 7억 550만원을 증액하였음. 이는 법무부가 교정공무원의 트라우마 치료에 보다 집중 지원하려는 예산 조치로 볼 수 있을 것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프로그램 이용 현황>

(단위: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
① 마음나래 프로그램	외부 전문상담	418	478	720	902	893	1,232
	긴급 심리지원	211	111	16	276	285	265
	찾아가는 심신케어	2,151	코로나-19 미운영	2,774	2,211	4,332	4,836
② 직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300	코로나-19 미운영	785	1,029	1,540	1,080
계		3,080	589	4,295	4,418	7,050	7,305

* 자료: 법무부

○ 그런데,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 세출각목명세서 상 ‘폭행피해 교도관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자살 및 병사 사건처리 교도관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심리치료 프로그램’ 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으나, 사업 관리는 프로그램별로 구분하여 집행하지 않고 있는 바, 2025년의 경우 증액한 예산이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에 집행될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지원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안
	예산	집행	예산	집행 (9월 기준)	
폭행피해 교도관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157,500	503,499	157,500	314,310	415,500
자살 및 병사 사건처리 교도관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105,000		105,000		552,500
심리치료 프로그램	238,502		238,502		238,502
직무스트레스 해소 관련 교육	344,500	493,000	344,500	316,176	344,500
현장근무자 정신건강회복 프로그램	691,200	549,154	691,200	384,851	691,200
합계	1,536,702	1,545,653	1,536,702	1,015,337	2,242,202

* 자료: 법무부

○ 법무부는 「심리치료 업무지침」[93]에 따라 교정공무원 폭행 사건이나 수용자 자살 사건 뿐만 아니라, 수용자 관리 과정에서 겪는 폭언,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고소·고발 위협 등 정신적 문제[94]가 발생한 경우 교정시설 장은 해당 교정공무원이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을 지원 받도록 하거나, 교정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동 프로그램의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여 연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도록 하고 있는데, 트라우마극복 프로그램 예산 7억 550만원의 증액 취지에 맞게 긴급심리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트라우마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93) 법무부예규 제1330호(시행 2023.11.27.)

94) 김광훈, 박종익, 이수정, 장광호, “교정시설 내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4p., 2017

○ 따라서, 법무부는 교정기관의 교정공무원이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 기회를 보장[95]하고,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주기에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상담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을 위해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홍보[96]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2025년 예산 각목명세서를 보면,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프로그램 사업은 일반수용비로 편성하고 있는 바, 2024년의 경우 프로그램을 위탁·수행하는 전문기관에 매월 위탁 비용을 집행하고 있는 구조이므로, 2025년도 예산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97]에 따라 일반용역비로 변경하여야 할 것임. 이와 관련 법제사법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사업’ 수행을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일반용역비로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이라는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음.

95) 법무부가 조사한 개인상담 만족도 결과 종합평균(5점 만점 척도) 4.6점 이상 나타남
96) 김묘연・김형빈, 「교정공무원의 외상후스트레스(PTSD)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 지원 방안」, 지방정부연구 제26권제4호, 2023.2
97)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31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유형	조치대상기관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프로그램사업의 일반용역비 변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도소 행정지원(1531-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프로그램 등 각각의 프로그램별로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집행한 것으로 일반용역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사업' 수행을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일반용역비로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 자료: 법제사법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다) 교정정책연구비 적정성 검토 필요

○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수용인원 증가와 경상경비 증가로 국가의 재정부담이 심화되었는 바, 국가재정 효율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정정책연구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그런데, 2025년 세출각목명세서에 편성된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구체적인 정책연구 용역과제를 명시하지 않고 총액만을 표시하고 있음.

<정책연구비 예산 편성 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산출내역		
교도소 행정지원	정책연구비(260-02) 1.교정정책 연구용역	300,000,000원=	300,000

* 자료: 법무부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98]에

따르면, 정책연구비는 행정 및 제도개선 과제 중 시간의 제약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가 곤란한 전문적 특수사업에 한하여, 업무 활용 가능성 및 과거의 연구용역 내용과 중복 또는 유사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법무부의 다른 실·국 사업 중 정책연구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① “변호사제도의 선진화”사업의 정책연구는 ‘법률시장 효율성 제고 및 법조 공익성 강화 관련 연구용역’,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 관련 연구용역’을, ②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지원”사업의 정책연구는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등 법률지원 관련 연구 용역’, ‘법률시장 및 서비스 개방대비 국제경쟁력 강화 관련 연구용역’,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관련 연구용역’ 등 구체적인 정책연구 용역과제를 명시하여 과제별로 정책연구비를 각각 산출하고 있음.

<타 실국의 정책연구비 편성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산출 근거		
	정책연구과제명	산출내역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1.법률시장 효율성 제고 및 법조 공익성 강화 관련 연구용역	2건*10,000,000원 =	20,000
	2.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 관련 연구용역	1건*20,000,000원 =	20,000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1.북한 및 남북법령 연구개발비	22,000,000원*3개소위*1회=	66,000
	2.남북법률통합 연구개발비	26,500,000원*2회 =	53,000
	3.통일대비 법무계획 연구개발비	30,000,000원*2회 =	60,000

98)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48

외국인사회 통합지원	1.외국인 취업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351,000,000원=	351,000
	2.지역특화형 비자 지자체 성과분석 및 평가	210,000,000원=	210,000
	3.불법체류외국인 발생의 제도적 원인 및 고용실태 분석을 통한 감축방안 연구	60,000,000원=	60,000
	4.국내 유입 외국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유치지원 기관에 관한 법제 연구	50,000,000원=	50,000
	5.국내 이민 2~3세대 사회통합 정책 방향성 연구	40,000,000원=	40,000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	1.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등 법률지원 관련 연구 용역	10,000,000원*1회=	10,000
	2.법률시장 및 서비스 개방대비 국제경쟁력 강화 관련 연구용역	10,000,000원*1회=	10,000
	3.헤이그 국제아동탈취 관련 연구용역	10,000,000원*1회=	10,000

* 자료: 법무부

○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정책 연구용역과제로 ‘교정기관 국가재정 효율화 방안’과 ‘교정공무원 조직진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위 2건의 연구용역에 편성된 3억원은 다른 실·국의 정책연구비와 비교할 때 정책과제의 목적·내용·방식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음.

또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99]에 따르면, 용역과제 선정에 앞서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중복여부를 사전 검증하여 걸러내도록 하는 취지인 바, 2025년 추진 예정인 ‘교정공무원 조직진단’이라는 연구용역과제는 지난 2019년의 「교정기관

99)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48

인력운영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100]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바, 기존 연구용역 내용과 유사중복되지 않았는지, 몇 년만에 새로이 연구용역을 추진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예산안 심사 시 법무무로 하여금 정책연구 용역과제의 목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적절한 단가를 산출하여 제시하도록 하는 등 해당 예산안의 적정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100)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과제명: 교정기관 인력운영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비공개) □ 수행기관 및 수행연구원: (재)한국산업개발연구원, 서효동 □ 계약방식 및 계약금액: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9,400만원 □ 연구기간: 2019. 4. 4~2020. 3.31 □ 연구 주요내용 1. 교정기관의 인력운영 적정성 검토 및 분석- 교정기관 규모(교도소/구치소), 규모(수용정원), 경비처우등급에 따른 인력운영 현황 조사・분석 2. 국내외 유사조직 직원 정원 산정모델 비교・분석- 경찰, 소방 등 국내 유사조직 인력산정 방식 및 관련법령 조사-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가 교정조직 인력운영 기준안 조사・분석 3. 교정조직의 정부기능분류체계(BRM), 법무부 기능분류표, 법무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교정기능 및 조직의재설계안 제시 4. 교정시설의 운영에 소요된 업무시간을 바탕으로, 기관기능, 수용규모,경비처우등급 등 공통변수와 인력보충계수(SRF)를 적용하여 현행 교정기관의 적정인력과 신설기관의 인력산출모델 개발 5. 실무자의 업무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력산출모델 프로그램화

(2)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

(가) 예산안 개요

○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1531-302)은 전국 교정기관의 노후시설·장비 유지보수, 수용관리 등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전자경비시스템 설치, 수용거실 출입문 자동화 등 시설·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52억 3,800만원(15.1%) 감소한 855억 9,600만원임.

<2025년도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94,303	100,834	85,596	△15,238	△15.1

○ 동 사업은 1)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정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각종 시설유지관리 예산을 지원하는 “교정기관 재난·안전 관련 시설 유지관리”, 2) 교정시설의 주요 기반시설 및 노후 수용동 등 개보수 예산을 지원하는 “노후 교정시설 개보수”, 3) 의료·취사 장비 예산을 지원하는 “수용처우 장비”, 4) 행정사무용 및 난방장비 예산을 지원하는 “행정사무 장비”, 5) 마약반입 차단 등 첨단장비 도입 예산을 지원하는 “보안장비 현대화”, 6) 호송차량 교체예산을 지원하는 “노후 호송차량 교체” 6개 내역사업으로 구성하고 있음.

<2025년도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내역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100,834	85,596	△15,238	△15.1
. 교정기관 재난·안전 관련 시설 유지관리	12,487	14,338	1,851	14.8
. 노후 교정시설 개보수	64,089	45,730	△18,359	△28.6
. 수용처우 장비	5,988	5,988	-	-
. 행정사무 장비	9,349	9,433	84	0.9
. 보안장비 현대화	4,921	6,107	1,186	24.1
. 노후 호송차량 교체	4,000	4,000	-	-

* 자료: 법무부

(나) 경북북부 교도소 진입교량 보수 공사비 단가 적정성 검토 및 정밀안전진단 횟수 축소 필요

○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주요 기반시설 및 노후 수용동 등의 개보수를 위해 45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중 경북북부 교도소[101] 진입교량인 광덕교[102]의 보수·보강을 위해 22억 9,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101)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북북부제1교도소, 경북북부제2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로 이루어져 있음

102) 경북북부 교도소에 진입가능한 유일한 교량임

<광덕교 보수·보강 공사 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역	금 액
공사비	800㎡×2.5백만원	2,013
설계비	2,013백만원×4.72%	95
감리비	2,013백만원×1.36%	27
시설부대비	2,013백만원×0.36%	7
정밀안전진단비	86백만원×2회(착공 전후 각 1회)	172
합계		2,314

* 자료: 법무부

○ 청송지역 교정시설 진입 교량인 광덕교 보수공사는 2023년 하반기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해당 교량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조치가 필요한 D등급을 통보[103]받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104]에 따라 해당 교량의 보수·보강을 추진하게 된 것임.

○ 광덕교 보수공사의 건설비 산출 근거와 관련하여 공사비 단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대해 다음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광덕교 보수공사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법무부는 「2022년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추정자료」에 근거하여 단위공사비를 ㎡당 2,516,000원으로 추정하여 공사비를 20

103)

시설물 명	관리주체	관리부서	소유자	시설물 종류	안전등급
광덕교	경북북부제1교도소 시설과	법무부	국유재산	도로교량	D등급

10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① 관리주체는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그런데 「2022년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추정자료」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단지 및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의 후보지 선정, 개발계획(안) 수립 및 사업착수 등 투자의사결정을 위한 검토 시 필요한 조성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추정을 위하여 기 발주한 사업지구 및 최근의 설계자료, 관련 연구보고서 등을 기초로 공종별 단위공사비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자료[105]이므로 이 추정자료만으로 광덕교 보수공사 공사비 단가로 활용하기에는 성격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공사비 산출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자료 중 「2022 도로업무편람」상 교량(고속국도 4차로기준)형식 별 평균단가가 「2022년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추정자료」상 공사비와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교량 공사 단가별 비교 및 교차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해당 교량은 보수·보강 공사임에도 일부 산출자료는 신설공사의 비용에 준하여 산출한 부분이 있는 바, 이를 면밀하게 구분하여 단가를 책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105) 「2022년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추정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고시「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른 조성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추정에 활용하고, 기본시설공사 단위공사비, 기타시설공사 단위공사비, 조사설계비, 조성예비비등을 명시하고 있음

<「2022 도로업무편람」상 교량 평균단가>

(단위: 백만원)

○ 고속국도 건설(구조물별)

(단위 : 천원, 제잡비 포함)

구 분		평 균 단 가					
교량 (고속국도 4차로 기준)	교량 형식	Rahmen 계열	PSC거더 계열			Preflex 계열	강합성 계열
			일반형 (s≤35m)	개량·보강형 (35m<s≤50m	분절형 (s>50m)		
	m^2당	3,471	2,259	2,221	2,326	2,557	3,238
터널 (NATM 공법)	구분	2차로			3차로		
	m당	15,560			20,218		

〈 비 고 〉

- 본 자료는 '최근 설계준공된 고속도로 설계단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표준공사비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

교량 평균공사비 = $\sum_{i=1}^{3} C_i L_i$ (C : 구조물별 평균단가, L : 해당공종의 면적)

터널 평균공사비 = $\sum_{i=1}^{3} C_i L_i$ (C : 구조물별 표준단가, L : 터널의 설계연장)

- 2013년부터 교량계열별로 재분류하여 산출하였으므로 특정교량형식 공사비 산출시 별도 검토 필요
- 교량 평균단가는 전체공사비를 평균하여 산출하였으므로, 상부슬래브 공사비 산출시 별도 검토 필요

* 자료: 국토교통부「2022 도로업무편람」p170.

○ 둘째, 법무부는 광덕교 보수공사 착공 전후 각 1회씩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 1억 7,200만원(8,600만원×2회)을 편성하였음.

정밀안전진단 실시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106]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이후 관리주체인 교정기관에

10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서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임. 정밀안전진단[107]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로 보수·보강공사 착수 전 결함 원인 등을 조사하는 절차라 할 수 있음.

○ 광덕교 보수·보강공사 착공 전후 각 1회씩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2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며, 착공 이후에 정밀안전진단을 재실시할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1회분 경비 8,600만원은 감액할 필요가 있음.

(다) 영상감지장비(CCTV) 교체 대상의 종류별 구분 편성 필요

○ 법무부는 국가정보원의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노후 영상감지장비(CCTV) 교체시 보안 성능인증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2024년 대비 7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2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⑤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025년 영상감지장비(CCTV) 교체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노후 영상감지장비 교체	1,530	2,250

* 자료: 법무부

○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보안용 CCTV는 전국 54개 교정기관에 총 19,274대이고, 그 중 2025년 교체 예정인 CCTV는 2007년 구축 후 16년이 경과된 거실용 390대, 구내용 1,021대, 실외용 137대로 총 1,548대가 교체대상이라고 밝힘.

<2025년 영상감지장비(CCTV) 교체 대상 현황>

(단위: 대)

대상기관 (2007년 구축)	거실용		구내용		실외용		CCTV 보유량 (A+B+C)	25년 교체 수량 (가+나+다)
	전체수량 (A)	교체대상 (가)	전체수량 (B)	교체대상 (나)	전체수량 (C)	교체대상 (다)		
천안교도소	104	102	294	288	41	37	439	427
진주교도소	92	88	210	200	35	29	337	317
대구구치소	75	64	140	135	22	18	237	217
충주구치소	78	77	155	154	29	27	262	258
통영구치소	50	49	138	133	16	15	204	197
평택지소	23	10	115	111	11	11	149	132
합계	**349**	**331**	**799**	**777**	**127**	**111**	**1,275**	**1,244**

* 자료: 법무부

○ 그런데, 2025년도 예산안 세출각목명세서를 보면, '보안장비 현대화'를 위한 자산취득비 중 노후영상감지장비(CCTV) 교체 예산은 종류별 CCTV 단가가 상이함에도 종류별 단가와 대수를 구분하여 계상하지 않고 CCTV 1000대를 종류별 단가 합계의 평균가격

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상정하여 2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산출하였음.

<2025년 영상감지장비(CCTV) 종류별 당초 교체 계획에 따른 예산 소요액>

(단위:천원, 대)

교체대상	교체 물량	단가	소요예산
거실용 CCTV	390대	1,450	565,500
구내용 CCTV	1,021대	1,950	1,990,950
실외용 CCTV	137대	3,350	458,950
합계	**1,548대**		**3,015,400**

* 자료: 법무부

[2025년 노후영상감지장비(CCTV) 교체 예산안 산출 근거]

1,000대×{(1,450천원(거실용 CCTV)+1,950천원(구내용 CCTV)
+3,350천원(실외용 CCTV)) ÷ 3}
= 2,250,000천원

* 자료: 법무부

○ 이에 대해 법무부는 CCTV 교체 등 보안시설의 유지관리 사업은 매년 꾸준히 관리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평균 교체 수량 및 단가를 적용하였고, 2025년도의 경우 당초 계획에 따른 예산 30억 1,500만원보다 낮은 예산이 편성·반영되었는 바, 향후 집행시 교체 수량을 확정된 예산에 맞춰 조정하겠다고 설명함.

○ 그러나, 최근 3년간 CCTV 교체 예산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예산액은 평균 교체 수량 및 단가를 적용하여 확정하였으나, 집행규모는 상시적으로 이를 초과하고 있음. 이와 같이 매년 책정된 CCTV 예산보다 초과하여 집행함으로써, 동 사업 내 다른 '수용처우 장비'나 '행정사무 장비' 등의 유형자산(자산취득비)

취득은 거의 불가능한 바, 반복하여 당초 확정된 CCTV 교체에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사·확정권의 취지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최근 3년간 CCTV 구입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년도	예산	교체 대상	물량	단가	집행액	
2022	1,530백만원 (1,000대 × 1,530천원)	거실용 CCTV	427대	987,037원	421	1,588
		구내용 CCTV	640대	1,452,113원	929	
		실외용 CCTV	90대	2,639,156원	238	
2023	1,530백만원 (1,000대 × 1,530천원)	거실용 CCTV	392대	1,463,171원	574	1,944
		구내용 CCTV	605대	1,969,893원	1,192	
		실외용 CCTV	52대	3,431,769원	178	
2024. 8	1,530백만원 (1,000대 × 1,530천원)	거실용 CCTV	292대	1,482,019원	433	2,089
		구내용 CCTV	694대	1,956,509원	1,358	
		실외용 CCTV	87대	3,422,058원	298	

* 자료: 법무부

○ 따라서, 법무부는 내역사업 별 유형자산(자산취득비) 등 편성시 세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편성 내역과 집행액간 오차를 줄이고, '수용처우 장비'·'행정사무 장비' 등 유형자산 취득의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3) 대체복무 시설 개선 및 운영

(가) 예산안 개요

○ 대체복무 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1531-304)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의 대체복무역을 위한 합숙 복무시설을 개보수하고, 대체복무 인원에 대한 피복비, 급식비, 공공요금, 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7억 8,200만원(4.8%) 증가한 172억 4,100만원임.

<2025년도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	13,287	16,459	17,241	782	4.8

○ 동 사업은 1) 대체복무 인원에 대한 급식비, 피복비, 일반수용비 등 대체복무제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대체복무 운영경비”, 2) 대체복무 예비군 소집에 따른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대체복무 예비군”, 3) 대체복무 운영을 위한 합숙시설 및 업무지 등 개보수를 지원하는 “대체복무 시설개선”, 4) 대체복무 요원 및 운영기관의 물품구입을 지원하는 “대체복무 물품구입”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5년도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 내역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	16,459	17,241	782	4.8
. 대체복무 운영경비	13,170	14,659	1489	11.3
. 대체복무 예비군	25	113	88	352
. 대체복무 시설개선	2,948	2,438	△510	△17.3
. 대체복무 물품구입	316	31	△285	△90.2

* 자료: 법무부

(나) 신규 대체복무시설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적정성 검토 필요

○ 대체복무 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은 지난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5조제1항[108]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가 대체복무자를 교도소 등에서 36개월간 합숙근무 하도록 하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체복무법”)을 2019년 12

108)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나.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2. 예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현역을 마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1) ~ 10) (생략)
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이 아닌 사람
5. 전시근로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월 31일 제정하여 2020년 6월 30일에 시행되었고, 동 제정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 사업이 편성되었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 요지>[109]

구분	주요내용
위헌여부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병역자원의 감소를 논할 정도가 아니고, 이들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을 뿐 병역자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으므로,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만을 규정한 병역종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남. ○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최소 1년 6월 이상의 징역형과 그에 따른 막대한 유·무형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하는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면 넓은 의미의 안보와 공익실현에 더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므로, 병역종류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개선시한	○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병역의 종류와 각 병역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어 일체의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므로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 ○ 2019. 12. 31.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병역법 제5조제1항은 2020. 1. 1.부터 효력상실

○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대체복무시설은 전국 교정시설 54개 기관(구치소 포함) 중 31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 3개 기관에 대체복무시설이 추가 될 예정임.

109)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전원재판부 결정

<대체복무시설 운영기관 현황(2025년 신규 포함)>

(단위: 명)

연번	기관	대원 정원	예비군 정원	연번	기관	대원 정원	예비군 정원
1	목포(교)	54명	6명	18	김천소년(교)	40명	
2	대전(교)	96명	8명	19	전주(교)	40명	
3	의정부(교)	42명		20	울산(구)	38명	
4	군산(교)	56명	5명	21	영월(교)	48명	6명
5	천안(교)	78명	8명	22	영월교육센터	-	
6	부산(교)	42명	6명	23	청주(교)	51명	
7	대구(구)	42명		24	춘천(교)	48명	
8	포항(교)	50명	6명	25	화성직훈(교)	72명	6명
9	안동(교)	48명		26	여주(교)	78명	6명
10	충주(구)	42명		27	통영(구)	36명	
11	서울(구)	96명		28	인천(구)	66명	6명
12	원주(교)	48명		29	제주(교)	30명	6명
13	진주(교)	48명		30	서울남부(구)	77명	6명
14	순천(교)	66명		31	서울남부(교)	62명	
15	경북2(교)	36명		32	광주(교)	43명	6명
16	경북1(교)	36명		33	서울동부(구)	44명	6명
17	공주(교)	46명		34	수원(구)	44명	6명

ㅇ 대체복무 운영기관 : (2024) 31개 기관 → (2025) 34개 기관(+3개 기관)
ㅇ 대체복무 인원 : (2024) 1,612명 → (2025) 1,743명(+131명)
ㅇ 대체복무 예비군 소집예정인원 : (2024) 160명 → (2025) 700명(+540명)

* 자료: 법무부

○ 그런데, 2025년에 광주교도소, 서울동부구치소, 수원구치소 3개 기관에 총 131명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임에도, 대체복무시설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인 자산취득비가 2024년도 대

비 90%이상 감액[110]되어 대체복무시설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음.

<2025년도 대체복무시설 자산취득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대체복무시설 자산취득비	316	30	△286	△90.5

* 자료: 법무부

○ 대체복무시설은 대체복무요원이 공동생활하는 생활관으로 보통 6~8인이 1실을 사용하고, 생활관 1실 기준으로 TV·냉장고·에어컨 등 전자제품과 공용세탁실에 세탁기 등을 비치하고, 복지시설로 체력단련실, 교육/회의실, 휴게실 등을 구성하고 있음.

법무부는 대체복무시설 1기관 당 기본시설과 복지시설에 필요한 물품 소요예산을 약 1억원 이상으로 추산하였는 바, 대체복무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체복무시설 1기관 당 운영 예산안 >

(단위: 천원)

구분		물량	단가	금액	단가 산출 근거
기본시설	침대(1인용)	1기관 × 50개	340	17,000	나라장터 쇼핑몰(우드메탈)
	매트리스(1인용)	1기관 × 50개	352	17,600	" (비엠비)
	(군용)사물함	1기관 × 50개	480	24,000	" (우드그린)
	텔레비전(107cm)	1기관 × 8대	562	4,496	" (대우써머즈)
	냉장고(289L)	1기관 × 8개	499	3,992	" (삼성전자)
	세탁기	1기관 ×	1,300	7,800	" (LG전자)

110) 법무부는 예산 편성 시 2020년 대체복무 시행 이후 제반 여건이 안정화되고 기관에서 사용하던 물품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설명함.

		6개			
	건조기	1기관 × 6개	1,150	6,900	" (LG전자)
	냉방기(에어컨)	1기관 × 8개	764	6,112	" (삼성전자)
	합계		**(A)**	**74,888**	
복지시설	공용 PC	1기관 × 10개	570	5,700	" (서버앤컴퓨터)
	PC용 모니터	1기관 × 10개	240	2,400	" (한성컴퓨터)
	프린터	1기관 × 4개	245	980	" (삼성전자)
	PC용 책상	1기관 × 10개	108	1,080	" (크로바가구)
	사무용 의자	1기관 × 10개	176	1,760	" (탑체어)
	회의용 탁자	1기관 × 6개	343	2,058	" (인퍼스)
	책장(6단)	1기관 × 3개	820	2,460	" (다나, 3열 6단)
	물품보관용 캐비닛	1기관 × 20개	155	3,100	" (평화사무용가구)
	소파	1기관 × 4개	1,580	6,320	" (코알라소파, 4인용)
	운동기구	1기관 × 1식	11,504	11,504	2023년 공주교도소 견적가 적용
	합계		**(B)**	**100,538**	
합계(A+B)				**125,262**	**통상 1개 기관당 소요예산**

* 자료: 법무부

(4) 교정교화

(가) 예산안 개요

○ 교정교화 사업(1532-301)은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 운영비·구호 및 교정비·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노후 교화시설과 센터 시설 개선 및 장비 교체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4억 6,300만원(3.9%) 감액한 114억 5,700만원임.

<2025년도 교정교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교정교화	9,638	11,920	11,457	△463	△3.9

○ 동 사업은 1)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운영비와 구호 및 교정비,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2) 노후 교화시설과 센터 시설 개선 및 장비 교체를 지원하는 “수용자 교정교화 시설 개선”, 3) 수용자 각종 정보 수집 및 교정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정보보안활동[111]을 지원하는 “교정 정보보안활동”, 4) 무위탁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무의탁 출소자 지원”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111) 기존 특수활동비를 정보보안활동비로 전환

<2025년도 교정교화 내역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교정교화	11,920	11,457	△463	△3.9
.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9,019	9,036	20	0.2
. 수용자 교정교화 시설 개선	1,824	1,239	△585	△32.0
. 교정 정보보안활동	571	676	105	18.4
. 무의탁 출소자 지원	506	506	-	-

* 자료: 법무부

(나) 가상현실(VR)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가진 기술적 제약 등을 고려한 사업관리 철저

○ 법무부는 마약류·스토킹 범죄 등 이수명령 대상 범죄가 추가 신설 되고, 심리치료 대상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교정교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112]할 계획임. 이에 따라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기술을 수형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접목하여 실제 현실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재범 경험', '피해자 공감', '혐오 자극' 등 심리치료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가상현실(VR)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비 7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1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교화프로그램) ① 소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상담 · 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범죄원인별로 적절한 교화프로그램의 내용, 교육장소 및 전문인력의 확보 등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상현실(VR)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2025년 예산안
VR 개발(연구용역)	63백[1)]×10개 프로그램[2)]	630
VR 장비 도입	6백[1)]×2대[3)]×10개 기관[4)]	120
계		750

* 자료: 법무부

1) 프로그램 개발 견적 단가 적용

2) 디지털 성폭력, 소년 성폭력, 아동학대, 중독, 가정폭력, 스토킹, 이상동기범죄, 정신질환, 우울특화, 자기통제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10종

3)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2명씩 활용(통상 수용자 10명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

4) 심리치료센터(남부·포항·밀양·청주·정읍) 5개 기관, 심리치료과(안양·의정부·진주·천안·군산) 5개 기관

○ 법무부는 기존의 집합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인원이 많아질수록 공간과 인력 등의 제약이 많아 심층교육이 곤란[113)]해지고, 형 집행기간 내 교육 미이수 사례가 발생하며, 수형자 개인의 범죄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루기도 어렵고, 교육진행자의 설명에 의존하여 행동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설계 방식임. 반면, 가상현실(VR)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개별 수형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리치료가 가능하고,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할 경우 범죄유발상황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대처하는 훈련이 가능한 방식이라고 설명함.[114)]

113) 기관별 심리치료 시행기관이 달라 수형자 이송을 수반하고 교육 대상자의 개별 형기 차이에 따른 교육 계획 수립의 어려움과 대규모 교육장의 필요, 모든 교육대상자에 대한 1:1 상담 진행으로 직원의 소진이 야기되고 있음.

114)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가상현실 프로그램 관련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2020), 「교정시설 내 성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에서 치료집단의 재범률(26.8%)이 비치료집단 재범률(30.2%)보다 3.4% 낮음

●동국대학교(2022), 「성폭력·중독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에서 성폭력 심리치료 참여자의 재범가능성이 60%이상 감소

●류창현, 연성진(2016), 「충동조절장애의 환자들에 대한 뇌파(EEG) 맵핑(mapping) 분석을 통한 분노조절 가상현실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에서 매회 1시간 30분씩, 총 6회 분노조절 가상현실 인지행동치료를 진행. 4개 척도도구 및 뇌파(EEG) 등을 사용하여 사전사후로 평가한 결과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입증됨

○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4년 현재 심리치료 대상 수형자의 일반(공통)적 특성인 폭력성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25년에는 범죄 유형별 고유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임.

○ 현재 마약류·스토킹·가정폭력 등 이수명령 부과 대상 범죄가 증가하여 최근 5년간 이수명령 대상인원이 52% 증가하고, 주요 심리치료 대상 수형자도 18% 이상 증가하였으며, 디지털성범죄,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빈발하는 등 급격히 늘어나는 심리치료 수요와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수형자 심리치료의 다양화·전문화·고도화는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음.

<최근 5년간 심리치료 프로그램 대상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주요 심리치료 대상인원*		20,364	21,343	22,401	23,631	24,124
이수명령 대상인원	성폭력	5,324	5,417	5,643	5,934	6,315
	아동학대	113	120	193	279	284
	마약류	-	-	73	848	1,351
	가정폭력	-	-	5	40	63
	스토킹	-	-	11	95	299
	계	5,437	5,537	5,925	7,196	8,312

* 성폭력, 아동학대, 중독(마약류·알코올), 정신질환, 가정폭력, 스토킹, 이상동기범죄, 우울증 등

자료: 법무부

○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17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고 개발한 ‘알코올 중독 범죄자 가상현실(VR) 치료프로그램 사업’을 2018년부터 알코올 중독 보호관찰 대상자 약 5,000명에게 가상현

실(VR)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115]하였음.

[알코올 중독 범죄자 치료를 위한 가상현실 사업]

□ **개요**

○ (추진배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17년도 정보통신기술(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에 "알코올 중독 범죄자 치료를 위한 가상현실(VR HMD) 개발" 공모·선정 ('17. 2.)

○ (사업기간) '17. 4. ~ 11.

○ (사업금액) 10억원(계약금액 964,701,400원)

○ (사 업 자) ㈜메딕션 컨소시엄

□ **사업 내용**

○ 가상현실(VR HMD) 기반의 알코올 중독사범 케어 콘텐츠 개발

- 환경별, 상황별, 조건별 알코올 문제인식 및 대처능력 등 다양한 유형을 3차원 컴퓨터그래픽(3D CG)·애니메이션(3D Motion and Animation)으로 제작하여 현실감, 생동감, 흥미감 유발 콘텐츠 개발

○ 알코올 중독사범 치료를 위한 사용자 및 운영자 소프트웨어개발

- 사용자·운영자 소프트웨어 개발
- 사용자 이력정보, 체험정보, 결과정보 등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 보호관찰소에 가상현실(VR HMD) 기반의 치료실 내 시스템 설치

- 전국 10개 보호관찰소(수강집행센터) 내 시스템 설치

□ **기대효과**

○ 정량적 효과

- 가상현실 치료 실시로 인한 심리치료 및 재범방지로 사회적 비용 절감

○ 정성적 효과

- 피치료자 중심의 프로그램 전환, 1인 집행 가능, 알코올 중독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로 국민안전 확보 등

자료:법무부 보도자료(2017.12.18)

○ 그러나, 위 '알코올 중독 범죄자 치료를 위한 가상현실 사업'에 따른 가상현실(VR) 치료 프로그램 사업은 이용자들의 음주에 대한 변화 의지나 서비스 활용도가 상승하였다는 효과가 있었던 반면, VR기기

115) 법무부 보도자료(2017.12.18), '알코올 중독 범죄자 가상현실(VR) 치료 본격 시행..재범률 낮춘다'

설치 후 프로그램 이용기간이 짧은 점, 1회성 이용자가 다수인 점, VR기기 이용자가 음주운전 체험 시 비음주 상태 설정에서도 운전대가 민감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 VR게임 경험자의 본 프로그램에 대해 현존감이 떨어진다고 말한 점 등에서 한계가 나타남.[116]

○ 이와 함께, 가상현실(VR) 프로그램은 가상현실 프로그램의 장비 오류로 인한 이용자의 집중력 분산, 가상현실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자극들의 제한성, 가상현실경험에 의한 부작용(사이버멀미, 지각운동장애, 낮은 각성상태, 편두통 등) 발생, 고정된 가상현실 프로그램 세트 구성은 다양한 상황에 요구되는 유연한 통제력 제한 등의 단점[117]이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법무부는 '알코올 중독 범죄자 치료를 위한 가상현실 사업'의 성과와 한계, 가상현실(VR) 프로그램 연구 등에서 나타난 단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상현실(VR)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수형자에게 적용함에 있어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처우와 더불어 재범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116) 「2018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성과보고서(총괄)」
- 동 사업은 효과성 검증에 어려움이 있었고 예산상의 이유로 2020년까지 수행되고 현재에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

117) 연성진・류창현, 「분노형범죄에 대한 새로운 정책대안으로서의 가상현실치료(VRT)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12

사. 범죄예방활동

(1) 소년원생수용 사업

(가) 예산안 개요

○ 소년원생수용 사업(1632-300)은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 송치된 보호소년들을 수용하고 교과교육 및 직업능력 개발훈련 등을 제공하여 보호소년의 재범 방지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8,400만원(0.3%) 증액 편성된 269억 7,100만원임.

<2025년도 소년원생수용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소년원생수용	24,565	26,887	26,971	84	0.3

(나) 출원생 외래진료비 지원 활성화 필요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소년법”) 제5조제1항[118]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을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고, 동조 제2항[119]은 의료재활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11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소년원의 분류 등)** ①법무부장관은 보호소년의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을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소년원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120]에 따라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하는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의료재활소년원에 수용하여야 하며, 의료재활소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없음. 이에 따라 법무부는 “대전소년원”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음.[121]

한편, 2020. 10. 20. 개정된 개정 보호소년법 제20조의3[122]은 의료

---

11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소년원의 분류 등)**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재활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소년원을 의료재활소년원으로 운영한다.

120)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121)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제2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의한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 소년원 : 서울소년원, 대구소년원, 전주소년원, 안양소년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 서울소년원, 부산소년원, 광주소년원, 청주소년원, 안양소년원, 춘천소년원, 제주소년원

3. 의료·재활교육 소년원 : 대전소년원

4. 특수단기교육 소년원 : 전주소년원, 청주소년원, 제주소년원

1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출원생의 외래진료)** ① 의료재활소년원장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出院生)이 외래진료를 신청하는 경우 의료재활소년원에서 검사, 투약 등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신청하는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진료의 기간과 방법 및 진료비용

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신청하는 경우 지정법무병원[123]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는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출원 후에도 계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지원함으로써 최대한 원만하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이에 따라 법무부는 동 사업의 구호및교정비(320-06)로 출원생 외래진료비 예산을 매년 편성·집행하였음. 다만, 2022년 및 2023년은 총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여 각각 47만원 및 427만원이 집행되어 실집행률은 0.4% 및 3.7%로 나타났고, 2024년 예산은 그간의 집행부진을 고려하여 1억원 감액된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4년 9월 기준 216만원이 집행되어 여전히 부진한 상황임.

<최근 3년간 출원생 외래진료비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
구호및교정비 (320-06)	편성액	-	115,000	115,000	15,000
	집행액	-	473	4,266	2,155
	집행률(%)	-	0.4	3.7	14.4

*자료: 법무부

○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출원생 외래진료는 의료재활소년원인 대전소년원 출원생 중 희망자에 한하여 지원되고, 무상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5개의 지정법무병원에 한정되어 지리적 접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23) 서울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공주·춘천·나주·부곡병원 등 5개 기관

근성이 떨어지며, 부모 등 보호자의 관리가 미흡한 점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하는 처분은 정신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면서도, 위탁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시간상 제약[124]이 있어 재범 방지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출원 이후의 사후관리가 중요함. 이를 고려하여 보호소년법 시행규칙 제44조의4제1항[125]은 지원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의 기간을 출원일로부터 10년까지로 길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함.

출원생 외래진료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위탁소년의 출원 시에 보호자교육을 통해 동 제도를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바, 이에서 나아가 보다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지원실적을 제고하고 출원생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봄.

○ 2025년도 출원생 외래진료비는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1,5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법무부는 출원생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124) **「소년법」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① 제32조제1항제1호 · 제6호 · 제7호의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

12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4(출원생의 외래진료의 기간 · 방법)** ①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진료기간은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일부터 10년의 범위로 한다.

(다) 임상연구비 등 연례적 집행부진 예산 조정 및 사업관리 개선 필요

○ 법무부는 2025년도 동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에 급식관리위원회 외부위원 수당 지급을 위한 명목으로 매년 1,320만원을, 감염병 예방 등 안전보건관리 명목으로 5,8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음.

<2025년도 소년원생수용 사업 중 일반수용비 예산안 세부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산정기준	편성액
[210-01]일반수용비		
15. 급식관리위원회 참가비	11기관*1명*100,000원*12회=	13,200
18. 감염병 예방 등 안전보건관리	58,103,000원=	58,103

*자료 :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법무부는 동 사업의 일반연구비(260-01)에 의사 임상연구비 명목으로 1억 1,856만원을 편성하였음.

<2025년도 의사 임상연구비 예산안 세부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산정기준	편성액
[260-01]일반연구비		
1. 의사 임상연구비		118,560
가. 탁월	2과제*10,032,000원=	20,064
나. 우수	9과제*9,120,000원=	82,080
다. 보통	2과제*8,208,000원=	16,416

*자료 :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상의 사업은 다음의 측면에서 예산 조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급식관리위원회 수당은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집행실적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감염병 예방 등 안전보건관리 예산은 집행추이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법무부는 소년보호기관(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예규인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에서 급식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126] 동 예규는 급식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당해 기관의 과장 이상 직위자 또는 영양·조리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127] 이에 따라 각 소년원에 설치된 급식관리위원회는 1~2명의 외부위원을 두고 있으며, 당해 사업에 급식관리위원회 참석 수당 예산이 매년 편성되고 있음.

---

126)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12조(기능)** 소년보호기관에 두는 급식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식의 품종선택과 그 수량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선택된 품종과 수량에 대한 함유 영양량의 검토에 관한 사항
3. 급식에 관한 위생 및 시설관리 그 밖에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127)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13조(구성)** ① 소년보호기관에 두는 급식관리위원회(이하 "급식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급식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당해 기관의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영양 또는 조리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국 소년원의 급식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급식관리위원회 위원	
		내부위원	외부위원
서울소년원	7	5	2
부산소년원	9	7	2
대구소년원	7	6	1
광주소년원	10	8	2
전주소년원	7	5	2
대전소년원	7	5	2
청주소년원	7	6	1
안양소년원	6	5	1
춘천소년원	6	4	2
제주소년원	7	5	2
서울소년분류심사원	8	6	2
총계	81	62	19

*자료 : 법무부

그런데 최근 3년간 급식관리위원회 개최횟수 및 수당 집행 내역을 보면, 매년 1,320만원의 수당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액은 2022년에 130만원, 2023년에 225만원 등으로 실집행률은 매년 20%도 미치지 못하였음.

<급식관리위원회 회의 개최횟수 및 수당 집행 내역>

(단위 : 회, 천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
회의 개최횟수	103	106	99
수당편성액	13,200	13,200	13,200
수당집행액	1,300	2,250	1,900

*자료 : 법무부

이는 외부위원의 참석률이 저조했기 때문으로, 2023년의 경우 106회를 개최하였으나 외부위원 수당 집행건수는 19건으로 외부위원 참석률이 2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부위원 참석이 저조해졌고, 그 종료 후에도 낮은 참석률이 유지되어 발생한 결과라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종료(2022. 4. 18.)된지 2년 이상이 흘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5년 예산도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바, 법무부는 외부위원의 회의참석률 저조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집행을 개선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법무부는 2025년 예산안에 감염병 예방 등 안전보건관리 명목으로 2024년 예산과 동일 규모인 5,810만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소년원생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한 마스크·진단키트 등의 구입 예산으로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2022년부터 편성·집행된 것임.

그런데 2022. 4.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

료되었고,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4급까지 순차적으로 하향 조정[128]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등 안전보건관리 예산의 편성·집행액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감염병 예방 등 안전보건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
감영병 예방 등 안전보건 관리	편성액	-	-	69,542	58,630	58,103
	집행액	-	-	106,850	51,441	23,018
	집행률(%)	-	-	153.6	87.7	39.6

*자료 : 법무부

9월까지의 집행을 기준으로 2024년도 집행액을 추산하면 약 3,070만원(집행률 52.8%)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2025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사한 집행추이일 것으로 사료됨. 또한, 이와 관련하여 각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원생의 의료비 예산

1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은 동 사업의 구호및교정비(320-06)에서 집행되고 있는데, 해당 예산 또한 2023년 이후 집행액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소년원생 비급여 의료비[129]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
구호및 교정비 (320-06)	편성액	260,066	260,066	260,066	260,066	426,660
	집행액	419,738	588,099	820,682	224,136	312,726
	집행률(%)	161.4	226.1	315.6	86.2	73.3

*자료 : 법무부

따라서, 감염병 예방 등 안전보건관리 예산은 2025년에 실제 집행이 가능한 규모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의사 임상연구비는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므로, 실제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 규모를 조정하되, 의사 충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법무부훈령인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에 따르면, 임상연구비는 법무부와 그 소속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치료감호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근무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인 의무직 공무원으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사람에게 지급

129) 소년원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으로 집행되지 아니하는 부분

하도록 하여 의무직 공무원의 임상연구를 지원하고 있음.[130]

이에 따라 법무부는 소년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임상연구비 지급을 위하여 매년 1억 1,856만원을 편성였는데, 2022년 집행액은 5,472만원, 2023년 집행액은 6,566만원으로 집행률이 각각 46.1% 및 55.3%에 그치는 등 매년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음.

<최근 5년간 의사 임상연구비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
일반 연구비 (260-01)	탁월	과제수	2	1	1	2	평가등급 12월 결정
		집행액	21,888	10,944	10,944	21,888	
		비율(%)	18.3	12.5	20.0	31.4	
	우수	과제수	8	6	4	4	
		집행액	72,960	54,720	36,480	36,480	
		비율(%)	66.7	62.5	66.7	57.1	
	보통	과제수	2	3	1	1	
		집행액	14,592	21,888	7,296	7,296	
		비율(%)	15.0	25.0	13.3	11.5	
	총계	과제수	12	10	6	7	6
		집행액	109,440	87,552	54,720	65,664	27,360**
		편성액	118,560	118,560	118,560	118,560	118,560
		집행률(%)	92.3	73.8	46.2	55.4	23.1

*자료 : 법무부

**(2024년 9월) 현재 임상연구 계획이 승인, 중간평가 완료 연구과제(6개)에 대해 평가등급 우수에 해당하는 연구비의 50%(4,560천원)를 각 의무관에게 지급

130)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제2조(연구비 지급대상)**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와 그 소속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국립법무병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인 의무직 공무원(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으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는 소년원 의무관의 정원 대비 현원이 56.5%로 결원율이 높다는 점이 주요 원인이라고 사료됨.

<각 소년원의 의사(의무관)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안양	춘천	제주	서울소
정원(23)	2	2	2	2	2	3	2	2	2	2	2
현원(13)	1	1.5	0.5	1	1	2.5	1	2	0.5	0.5	1.5

*자료: 법무부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1명당 0.5명으로 표기

따라서, 법무부는 소년원 내 의료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무관 충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고, 임상연구비는 2025년도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치료감호소운영 인건비(총액) 사업

(가) 예산안 개요

○ 치료감호소운영 인건비(총액) 사업(7002-106)은 국립법무병원에서 피치료감호자를 수용관리하는 공무원의 인건비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2,900만원(1.6%) 증액 편성된 330억 360만원임.

<2025년도 치료감호소운영 인건비(총액)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치료감호소운영 인건비(총액)	29,710	32,507	33,036	529	1.6

(나) 유휴병동 운영 재개를 위한 인력 확충 필요

○ 국립법무병원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131]에 따른 치료감호시설로서, 현재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운영되고 있음.

13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① 제16조제1항에서 "치료감호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립법무병원

2.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법무병원"이라 한다)

국립법무병원 개요

1. 설립근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2. 설립일 : 1987. 11. 3.

3.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4. 시설 : 총 25개 병동, 건물면적 51,261㎡

5. 임무

-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와 치료

- 법원·검찰·경찰 등에서 의뢰한 자에 대한 정신감정

국립법무병원은 총 25개[132]의 병동이 있고, 치료감호 최대 수용정원은 총 1,200명임. 그러나 간호인력 등의 부족으로 10개 병동이 유휴 상태이고, 실제 운영 중인 병동의 정원은 총 846명임.

<국립법무병원 병실현황 및 수용인원 현황>

*자료 : 법무부

병동명 (총 25병동)	정원(명)	현재원 (총 801명)	병동면적(㎡)	1인당 수용면적(㎡)**
검사	40	7	216	5.4
11	36	유휴	〃	6
12	36	유휴	〃	〃
13	10	유휴	〃	21.6

132) 국립법무병원은 본래 17개의 병동을 운영 중이었으나 2023. 11. 신축 병동 준공에 따라 8개의 병동이 추가되었음.

22	36	유휴	〃	〃
23	36	유휴	〃	〃
31	30	유휴	〃	7.2
32	30	23	〃	7.2
52	85	91	504	5.93
53	85	90	〃	〃
54	82	88	〃	6.15
55	82	90	〃	〃
56	84	91	〃	6
61	38	27	216	5.68
62	38	37	〃	〃
63	38	유휴	〃	〃
64	38	유휴	〃	〃
71	47	47	625	13.3
72	47	47	〃	〃
73	47	42	〃	〃
74	47	47	〃	〃
81	47	27	〃	〃
82	47	47	〃	〃
83	47	유휴	〃	〃
84	47	유휴	〃	〃

**정원 기준

○ 현재 국립법무병원 수용인원은 총 801명으로 실제 운영 중인 병동의 정원 내에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원실의 면적은 환자 1명당 6.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에도 현재 운영 중인 다수의 병실은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133]

13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정신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 ① 정신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법」에 따른다. 이 경우 「의료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신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정신의료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보건복지부령 제78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 1명당 4.3제곱미터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해당 시행규칙이 입원실의 면적기준을 강화한 것은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의료인 등 종사자의 안전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치료,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촉진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법무병원은 현행 법령상의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현행 법령상의 입원실 면적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유휴병동의 운영 재개가 필요한데, 현재 간호인력상으로는 유휴병동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임.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국립법무병원의 일반

기관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별표 3]

입원실의 면적(벽·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은 제외한다)은 환자 1명이 사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고(면적의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환자 2명이상이 사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당 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병동(50명 이하) 기준 1개 병동의 최소 운영 인력은 15명이고, 확장병동(120명 이하)의 최소 운영 인력은 23명임.

<국립법무병원 일반병동 및 확장병동의 최소 운영 인력 수>

(단위 : 명)

구분	일근 (09:00~18:00)	주간 (09:00~18:00)	야간 (18:00~9:00)	비번	휴무	합계
일반병동	3	3	3	3	3	15
확장병동	3	5	5	5	5	23

*자료 : 법무부

따라서, 국립법무병원의 25개 병동을 모두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간호인력의 수는 415명[134]에 달하고, 그 외 5급 이상 중간관리자 간호사 3명과 간호업무 외에 병동업무 지원을 위한 과 서무, 병동 수용사고 관련 업무, 외부병원 호송 및 입원환자 감호 등에 배치된 17명의 간호인력까지 포함하면 총 430명 이상의 간호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현재 국립법무병원의 간호인력은 정원 323명 대비 현원은 306.5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유휴병동 운영을 위해서는 간호인력 증원이 필요함.

134) 각각 23명의 간호인력이 필요한 확장병동 5개(병동 52, 병동 53, 병동 54, 병동 55, 병동 56)에 대하여 총 115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각각 15명의 간호인력이 필요한 일반병동 20개에 총 300명의 인력이 필요하므로, 도합 415명의 간호인력이 필요함.

<국립법무병원 간호인력 정원 및 현원 현황>

(단위: 명, %)

연도	간호		간호조무사		간호인력 합계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충원율
2020	141	124.5	158	155	299	279.5	93.5
2021	141	130.5	158	148.5	299	279	93.3
2022	148	133.5	163	157	311	290.5	87.3
2023	160	145.5	163	158	323	303.5	94.0
2024. 9.	**160**	**147.5**	**163**	**159**	**323**	**306.5**	**94.9**

자료: 법무부

특히, 간호인력 정원은 2023년 11월 신규병동 준공으로 총 8개의 병동이 증가하였음에도 2022년 대비 12명이 증원되었을 뿐인바, 이후 법무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유휴병동 운영에 필요한 간호인력 소요 예산의 반영 등 국립법무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 의사 인력 확보방안 마련 필요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동 법률은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를 수용하고 치료하기 위한 치료감호시설로 국립법무병원 및 지

정법무병원을 규정[135]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법무부는 1987년부터 국립법무병원을 개청하여 운영 중인데,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과 의사 정원 15명 대비 실제 근무하는 정신과 의사는 2024년 9월말 기준 7명이고, 피치료감호자 수용 현원은 801명으로 의사 1인당 평균 담당 환자 수는 114명임.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 정·현원 및 1인당 평균 담당 환자 수>

(단위: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9.
정원	15	15	15	15	15
현원	8.5	5.5	8	8.5	7
정신과 의사 충원율	56.7%	36.7%	53.3%	56.7%	46.7%
국립법무병원 수용인원	1,038	935	825	814	801
정신과 의사 1인당 평균 담당 환자수	122	170	103	96	114

*자료 : 법무부

○ 「치료감호법」 및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136]에

---

13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치료감호시설로 국립법무병원 및 지정법무병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치료감호가 이루어지는 시설은 국립법무병원이 유일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① 제16조제1항에서 "치료감호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립법무병원

2.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법무병원"이라 한다)

136) 법무부훈령 제1487호

따르면,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는 정신병원에 준하여 의사의 조치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국립법무병원장은 피감호자가 입소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인을 담당의사로 지정하고, 그 담당의사는 피감호자의 출소 시까지 모든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137]

한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수 기준에 따르면, 입원환자 60명당 1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138] 이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 등은 시정명령, 사업정지명령,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폐쇄를 명령할 수 있음.[139]

---

13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피치료감호자의 처우)** 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의 건강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의류, 침구, 그 밖에 처우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는 정신병원에 준하여 의사의 조치에 따르도록 한다.

③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료와 개선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방적이고 완화된 처우를 하여야 한다.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14조(치료의 기본방향) 피감호자에 대한 치료는 정신질환이 치유되어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제16조(담당의사) ① 소장은 피감호자가 입소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인을 담당의사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의사는 피감호자의 출소시까지 모든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를 담당한다.

13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별표 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입원환자 6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공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0.5명으로 본다.

13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정신의료기관의**

○ 최근 5년 동안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과 의사 1인당 담당 환자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으로 규정한 60명을 매년 초과하였는데, 2024년의 경우에도 114명으로 나타나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는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법무부는 임금인상·처우개선 등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는 제도개선을 요청한바 있음.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유형	조치대상기관
국립법무병원의 의료 인력 확충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치료감호자 수용관리(1634-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최근 5년동안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과 의사 1인당 담당 환자수는 매년 1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인 60명에 맞지 않는 등 피		

개설·운영 등) ① 정신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법」에 따른다. 이 경우 「의료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신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의료기관이 제4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1. 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의 기준과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유형	조치대상기관
		치료감호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 ○ 유휴병동 및 신설병동 운영을 위한 간호인력 추가 소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충원률은 2022년도의 경우 87.3%에 불과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임금인상·처우개선 등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공무원 보수지침상의 기준연봉의 250~350% 수준으로 조정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민간 정신과 의사의 급여 평균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고,[140] 국립법무병원이 읍·면지역(충남 공주시 반포면)에 소재하여 근무여건 및 정주여건이 좋지 못하며, 범죄성향이 있는 범법정신질환자 진료에 대한 부담으로 정신과 의사의 결원율이 높다는 입장임.

<예산 각목명세서상 정신과 의사 평균 기본급 추이>

(단위: 천원, %)

구분	2022	2023	2024	2025(안)
기본급(연봉)	89,803	113,547	166,881	184,548
전년대비 증감률	-	26.4	47.0	10.6

*자료 : 법무부

140) 법무부에 따르면 2024. 9. 기준 국립법무병원 의사 평균 연봉은 2억 1천만원 수준임.

<정신건강의학과 근무의사 연평균 임금>

(단위: 천원)

구분	2018	2019	2020
정신건강의학과	200,507	223,686	235,815

*자료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의료적 처우가 열악할 경우 피치료감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어렵게 하고, 국민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법무부는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적정수준의 인건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국립법무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업무경감, 연구·교육기능 강화 등의 처우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3) 전자감독 사업

(가) 예산안 개요

○ 전자감독 사업(1635-301)은 전자감독·신상정보등록 및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전자감독대상자가 부착하는 장치와 감독시스템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44억 2,000만원(13.6%) 증액 편성된 368억 4,700만원임.

<2025년도 전자감독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전자감독	28,783	32,427	36,847	4,420	13.6

(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적정 보유 수량 기준 마련 필요

○ 장치 및 시스템 개선 사업은 전자감독(1635-301)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전자감독대상자를 24시간 위치추적하기 위한 장치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관리 시스템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장치 및 시스템 개선 사업은 매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구입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7억 9,982만원 감액된 41억 5,198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전자감독장치 구입 예산 세부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산정기준	편성액
[430-01]자산취득비		
1. 전자감독장치 구입	2,306세트*1,800,510원=	4,151,976

*자료 :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 현재 법무부는 발목형 및 손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운영하고 있음. “발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람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141]을 받은 자에 대해 부착하는 것인바, 해당 장치의 보유수량은 2021년 4,950세트에서 2024년 말 5,947세트로 예상되어 매년 증가추이를 보여왔음.

<최근 5년간 발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운영현황>

(단위:대)

연도	전년도말 재고 (a)	당해연도 제작수량 (b)	당해연도 사용량 (c=a+b)	당해연도 폐기량 (d)	당해연도말 보유수량 (e=c−d)
2021년	4,521	2,229	6,750	1,800	4,950
2022년	4,950	2,300	7,250	1,601	5,649
2023년	5,649	2,150	7,799	1,623	6,176
2024년	6,176	2,000	8,176	2,229	5,947

14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연도	전년도말 재고 (a)	당해연도 제작수량 (b)	당해연도 사용량 (c=a+b)	당해연도 폐기량 (d)	당해연도말 보유수량 (e=c-d)
(예상)					
2025년 (예상)	5,947	2,000	7,947	2,300	5,647

*자료: 법무부

○ “손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2020년 2월 개정된 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142]에 따른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의 시행을 위한 장치[143]로, 현재 1,260개를 보유·유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손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운영현황>

(단위:대)

연도	전년도말 재고 (a)	당해연도 제작수량 (b)	당해연도 사용량 (c=a+b)	당해연도 폐기량 (d)	당해연도말 보유수량 (e=c-d)
2021년	0	1,260	1,260	0	1,260
2022년	1,260	0	1,260	0	1,260
2023년	1,260	0	1,260	0	1,260
2024년 (예상)	1,260	500	1,760	500	1,260
2025년 (예상)	1,260	0	1,260	500	760

*자료: 법무부

○ 그런데 각 유형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발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2020년 이후 4,000명 내외

14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8조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

143) 법무부는 보석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 기존의 발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주는 부정적 선입견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도입하였음.

를 유지 중이고, “손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200명 내외를 유지 중임.

<최근 5년간 각 유형별 전자장치의 부착 대상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자감독 대상자(계)	4,052	4,316	4,421	4,188	4,270
발목형 전자장치	4,052	4,096	4,205	3,924	4,087
손목형 전자장치	-	220	216	264	183

* 자료: 법무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대상자 대비 보유수량을 보면, 2024년 말 기준 발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145%로 나타났고, 손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6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수요대비 보유수량이 과도한 부분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경우 현재 부착대상자에 대한 수량 외에도 신규 부착, 가석방, 장치 교체를 위한 예비용 전자장치가 필요하며, 재처리를 위한 배송, 장치상태점검, 재처리 대기 및 재처리 진행, 정상작동여부 테스트 중인 전자장치 등을 고려하여 예비수량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최근 5년간 재처리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수량**>

(단위:대)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
발목형	3,389	3,789	4,285	4,000	3,749
손목형	-	-	300	822	586

* 자료: 법무부

**재처리 소요일수는 평균 35일(5주)

○ 법무부의 의견과 같이 현재 부착 대상자에 대한 수량 외에도, 신규 소요나 장치 교체 및 재처리 등을 위한 예비수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적정수량 이상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보유는 제작·관리 비용과 기술노후화에 따른 폐기비용 확대 등 예산집행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나 적정 보유 수량 산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등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존재함.

실제로 “손목형”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경우 최초제작 당시 실제 소요를 과대평가하여 부착대상자 대비 6배의 수량이 제작됨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이 발생하였는바, 사업관리 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결론적으로, 법무부는 신규 부착, 가석방, 장치 교체를 위한 예비용 전자장치 및 재처리 전자장치의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적정 보유 수량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재처리소요기간, 보호관찰기관 간 예비수량

의 분배, 비용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업관리를 보다 체계화 할 필요가 있음.

아. 특별감찰관활동

(1) 예산안 개요

○ 특별감찰관활동 프로그램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감찰[144]하는 특별감찰관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① 특별감찰관 인건비(1802-150), ② 특별감찰관 기본경비(1818-250), ③ 사무실 임차료·관리비를 지원하는 특별감찰활동(1831-300) 등 총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특별감찰관 프로그램의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4,000만원(4.4%) 감액된 8억 7,400만원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특별감찰관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4,000만원(14.7%) 감액된 2억 3,200만원, 특별감찰관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억 3,800만원, 특별감찰관활동비도 전년도와 동일한 4억 4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144) 「특별감찰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5년도 특별감찰관활동 프로그램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특별감찰관 인건비	-	272	232	△40	△14.7
특별감찰관 기본경비	98	238	238	-	-
특별감찰관활동	530	404	404	-	-
합 계	628	914	874	△40	△4.4

(2) 과다한 사무실 임차 예산 낭비를 개선하기 위한 사무실 이전 적극 추진 필요

○ 특별감찰관실은 2016년 9월 특별감찰관 사직 이후 장기간 공석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특별감찰관실 전원[145]이 결원인 상태이며, 파견공무원 2명[146]과 공무직(무기계약직) 1명이 근무하고 있음.

○ 현재 특별감찰관실은 실제 특별감찰활동은 수행하지 않고 사무실 유지·관리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2023년도 “특별감찰활동” 사업에서는 3인이 근무하는 264평의 사무실[147] 임차를 위해 연간 5억 2,900만원, 월평균 4,400만원의 임차료·관리비를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유사한 수준의 임차료·관리비가 집행되고 있음.

145) 「특별감찰관법」 및 「특별감찰관 직제」 별표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실은 특별감찰관(차관급) 1명, 특별감찰관보(고위공무원단) 1명, 감찰담당관 6명(3·4급 상당 1명, 5급 상당 5명)로 구성(법 제7조제2항 및 제9조)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20명 이내의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음(법 제10조제1항).

146) 행정안전부 1인, 조달청 1인

147)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에 위치

- 이러한 예산낭비는 특별감찰관실의 전원 결원이 유지되고 있는 2018년도 이후부터 매년 반복되어 왔으며, 임차료·관리비의 실집행 소요가 당초 임차료·관리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자, 연례적으로 특별감찰관실 결원 시 불용되어야 하는 “특별감찰관 인건비” 사업의 인건비 등을 전용하여 사무실 임차료·관리비로 집행해왔음.

<특별감찰관실 사무실 임차 관련 비용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임차보증금	임차료	관리비	합계
2016년	9	321	176	506
2017년	9	330	180	519
2018년	10	427	186	623
2019년	10	526	191	727
2020년	10	542	197	749
2021년	11	558	203	772
2022년	-	349	169	518
2023년	-	356	173	529

* 자료: 특별감찰관실

<특별감찰관활동 사업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0	383	-	**368**	-	751	749	**195.5**	-	2
2021	364	-	**409**	-	773	772	**212.1**	-	1
2022	399	-	**127**	-	526	519	**130.1**	-	7
2023	399	-	**138**	-	537	530	**132.9**	-	7

○ 2025년도 “특별감찰관활동” 사업에 편성된 임차료 및 관리비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2억 8,800만원, 1억 1,6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으나, 과거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현재 임차 중인 사무실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를 전용하여 당초 편성된 임차료·관리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예산 낭비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됨.

<2023년-2025년 특별감찰관실 임차료 및 관리비 예산(안)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2024(’ 24.7월말)							2025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공공요금 및 제세	105	173	173	-	0	116	116	104	116	104	-	-	116
임차료	288	357	356	-	1	288	288	204	288	204	-	-	288

○ 한편, 특별감찰관실의 사무실 임차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는 2019년도 및 2020년도 결산 과정에서 임차 예산 낭비가 반복되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최근 2023년도 결산 심사에서도 법무부 및 특별감찰관실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세종, 서울, 과천 등 정부청사 내 유휴공간을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과다한 사무실 임차로 국가재정 낭비가 반복되는 상황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음.

<최근 5년간 특별감찰관활동 사업에 대한 국회 결산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구분	시정요구명 (유형)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
2019결산	특별감찰관 공석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지출 개선 필요 (제도개선)	○ 2016년 9월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특별감찰관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매년 편성된 관련 예산 중 필수 소요경비를 제외한 상당규모의 예산이 불용되고 있으며, 6~7억 규모의 사무실 임차관련 예산(임차보증금·임차료·관리비)이 지출되는 등 예산 집행상 문제가 있음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특별감찰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어 약 26억 2,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였고, 예산의 장기간 불용으로 예산편성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	○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별감찰관의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특별감찰관의 장기공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관련 예산의 불용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020결산	특별감찰관 공석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지출에 대한 조치 필요 (제도개선)	○ 특별감찰관 공석이 장기화되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6~7억 규모의 사무실 임차관련 예산(임차보증금·임차료·관리비)을 포함하여 매년 8억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음	○ 법무부는 특별감찰관 공석에 따른 불필요한 임차관련 예산 지출 등 예산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정부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추천을 공문으로 요청하는 등 적극적 자세를 견지하고, 2021년 내로 임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2023 결산	특별감찰관 장기공석으로 인한 과다한 사무실 임차 예산 낭비 개선 필요 (주의)	○ 특별감찰관은 공석이고, 사무실 유지·관리 인력 3인(파견2인, 공무직1인)만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용되어야 하는 '특별감찰관인건비'의 인건비 등을 '특별감찰활동'으로 전용하여 연간 5억 2,900만원을 264평의 사무실 임차료·관리비로 지출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함. - 특별감찰관 임명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해당 기간 동안 신규 사무실 임차 등 준비가 가능하고, 2024년 10월 10일까지 임대차 갱신 및 관련 조건 협의가 가능한 상황임.	○ 법무부 및 특별감찰관실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세종, 서울, 과천 등 정부청사 내 유휴공간을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등 과다한 사무실 임차로 국가재정 낭비가 반복되는 상황을 개선할 것

* 자료: 재정경제통계시스템(NABO STATS)

- 이에 특별감찰관실은 2023년 국회 결산 심사 이후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와 정부청사 사무실 이전 협의를 진행하였고, 향후 서울지역에 정부청사 공실이 예상되어 내년도 하반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음.[148] 다만, 현재 임차하고 있는 사무실의 계약기간[149]은 2025년 1월 10일에 만료되는데, 특별감찰관실은 사무실의 정부청사 이전 전까지는 현 사무실의 임차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임대인과 연장조건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는 입장임.

○ 따라서 특별감찰관실은 현재 진행 중인 정부청사 사무실 이전 협의를 지속하여 내년도 하반기 사무실 이전 계획이 집행될 수 있

148) 특별감찰관실은 기존 정부청사 입주기관의 이전일정 지연 가능성, 특별감찰관실 이전을 위한 사무실 최소공간 확보 등을 이유로 사무실 이전일정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는 입장임.

149) '22.01.11.~'25.01.10.

도록 적극 추진함으로써, 사무실 임차료 과다 등 국가재정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음.

자. 법무교육훈련

(1) 법무·검찰공무원등 교육운영 및 개선 사업

(가) 예산안 개요

○ 법무·검찰공무원등 교육운영 및 개선 사업(5131-301)은 법무·검찰공무원 및 타 기관 소속 공무원 대상 집합·사이버 교육을 위한 강사료, 교재인쇄비 등과 교육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2,800만원(1.7%) 감액한 15억 7,700만원임.

<2025년도 법무·검찰공무원등 교육운영 및 개선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법무·검찰공무원등 교육운영 및 개선	1,642	1,605	1,577	△28	△1.7

(나) 비상임연구위원 위촉 지연 해소방안 및 사업 필요성 검토 필요

○ 법무부는 외국법제에 대해 연구하거나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나라 법무·검찰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외국에 파견 중인 법무협력관(검사)등을 통해 한인검사협회(KPA) 소속 한인 법조인을 비상임연구위원으로 위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025년의 경우 비상임연구위원의 임금·고용부담금·임차료·항공료 등 총 7,408만원을 편성하였음.

<비상임연구위원 관련 예산안>

(단위: 천원)

예산비목	내역	산출근거	예산액
일용임금	비상임연구위원보수	5,000,000원*6월*2회=	60,000
임차료	비상임연구위원 주거 임차료	2명*3,500,000원=	7,000
국외업무여비	비상임연구위원 항공료 등	7,083,000원=	7,083
	총 계		**74,083**

자료:법무부

○ 비상임연구위원은 법무연수원 내에서 근무하면서 법무·검찰 행정 업무 및 법무연수원 교육시스템 등과 관련하여 자국 형사사법시스템과 비교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하거나 신임검사 교육 등 원내 강의 및 대검찰청 등에 세미나 참석 및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음.

<최근 3년간 비상임연구위원 위촉 현황>

이름	직책	위촉기간	주요 업무
□□ Kim (92.08)	베트남 하노이 인민검찰원 검사	2021. 11. 8. ~ 2022. 2. 7(3월)	베트남 인민검찰청 시스템 및 형사재판 심리
◇◇ Park (85.12)	미국 캘리포니아 벤투라카운티 검찰청 검사	2022. 8. 8. ~ 2023. 2. 7(6월)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와 수사관의 행위에 대한 검사의 책임
○○ Choi (91.02)	前호주 NSW주 검찰청 검사 영국 법무부 소송전담 변호사	2023. 4.17. ~ 2023. 7.31(3월)	호주NSW주 검찰의 형사사법체계에 관한 연구
조△△ (87.06)	前미국 캘리포니아 벤투라카운티 검찰청 검사	2023. 8.16. ~ 2024. 2.15(6월)	미국 형사절차에서 Criminal Defendant의 진술과 자백의 합법적인 수집 방법과 증거로서의 사용

자료:법무부

○ 그런데 비상임연구위원 위촉 예산은 6개월, 2명으로 편성하였는데, 위촉 실제 현황을 보면 2021년과 2023년의 경우 위촉 기간이 3개월로 종료되는 사례가 있는 등 위촉 기간이 연속되지 않고 있으며, 2024년의 경우 8월까지도 비상임위원이 위촉되지 않는 사례도 있는 등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여 불용액 발생 등 매년 집행실적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 3년간 비상임연구위원 관련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임금	고용부담금	임차료	항공료
2022년	예산액	60,000	4,560	7,200	7,000
	집행액	26,921	2,224	5,836	3,152
	집행률	44.9	48.8	81.1	45.0
2023년	예산액	60,000	4,560	7,200	7,083
	집행액	45,997	3,825	3,134	5,025
	집행률	76.7	83.9	43.5	70.9
2024년 8월	예산액	60,000	5,000	7,000	7,083
	집행액	7,586	850	-	-
	집행률	12.6	17.0	-*	-**

* 서울고검에서 법무부명의로 매입한 죽전소재 관사를 사용하여 2024년 임차료 집행액 발생하지 않음

** 2023년 입국 시 왕복항공권으로 항공료 집행되어 2024년 항공료 집행액 발생하지 않음

자료:법무부

○ 이에 대해 법무부는 비상임연구위원 위촉기한 종료 전부터 LA법무협력관을 통해 한인검사협회(KPA)에 모집안내문 등을 배포하였고, 2023년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형사법컨퍼런스에서도 법무연수원의 모집공고 안내문을 적극 홍보하였으나, 본국에서의 경력단절 우려 및 낮은 보수 지급으로 인해 지원 희망자가 줄어 발생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원활한 위촉을 위해 주한일본대사관의 법무협력관에게도 모집공고문을 전달하였으며, 향후 독일, 영국, 스위스 등 선진 유럽 희망자 모집을 위한 방안도 강구 중에 있다고 밝힘.

○ 법무부는 비상임연구위원 위촉 공백으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모집홍보 등 위촉활동을 계획하고 집행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2항[150]에 따르면, 비상임연구위원은 외국의 판사·검사·변호사 뿐만 아니라 교수·부교수·조교수도 위촉대상이 되므로 위촉대상 확대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외국의 한인 법조인 위촉이 어렵다면 국내 법조인 등의 위촉을 검토하거나, 비상임연구위원 위촉 예산의 집행 실적을 감안할 때 동 사업 예산 편성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15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연구위원) ① 연수원에 범죄의 근원적 예방 및 대처방안, 그 밖에 형사정책, 행형 등 중요한 법무정책과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국제형사사법협력증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12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
② 연구위원 중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5명은 검사로 보하고, 나머지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외국의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비상임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연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차. 법무 및 검찰행정지원

(1)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사업

(가) 예산안 개요

○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7032-303) 사업은 법무부 본부 및 각 소속기관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및 청년인턴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21억 1,400만원(11.7%) 증액된 201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행정서비스 지원인력경비	10,487	17,993	20,107	2,114	11.7

(나) 청년인턴 사업 개요 및 법무부 청년인턴 운용 현황

○ 청년인턴 사업은 국내·외 청년들에게 일 경험 및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의 다양한 시각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려는 목적으로 2023년 1월부터 범부처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음. 정부는 2023년 2,000명 채용을 시작으로 4년 간('23~'26년) 총 1만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채용 규모를 5,000명으로 확대하였음.[151]

○ 법무부는 2023년 4월 각급 소속기관별로 총 200명의 청년인턴을 채용·운영하였고, 2024년에는 운영규모를 300명으로 확대하였음.[152] 2023년에는 청년인턴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여[153] 타 세부사업으로부터 전용 및 내역변경 등을 통해 예산을 충당하였고, 2024년에는 인건비(일용임금), 활동지원비(일반수용비), 교통비(국내여비), 4대보험료(고용부담금) 등으로 39억 6,7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음.

2025년 법무부 청년인턴 운영 계획을 보면, 채용 규모는 2024년과 동일한 300명 규모이며, 활동지원비 확대 편성 및 교통비 절감 편성 등을 반영하여 2025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5,700만원 가량 증액된 41억 2,400만원이 편성됨.

<법무부 청년인턴 2024년 예산 및 2025년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

(단위: 천원)

항목	비목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인건비	일용임금(110-03)	3,338,700	3,396,000	57,300
활동지원비	일반수용비(210-01)	26,763	194,832	168,069
교통비	국내여비(220-01)	225,820	152,000	△73,820
4대보험료	고용부담금(320-09)	375,899	381,000	5,101
합 계		3,967,182	4,123,832	156,650

* 자료: 법무부

151) 2024년 6월말 기준 46개 중앙행정기관에 4,235명의 청년인턴이 활동 중임(일부는 활동 종료).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소식지 발행」, 2024. 7. 26.

152)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많은 수준임.

153) 범정부 청년인턴 운영계획은 2023년 예산이 확정된 이후인 2023년 1월에 수립되었음.

(다) 2025년 법무부 청년인턴의 효과적 충원·운영을 위한 배정 기준 등 개선 필요

○ 2024년 법무부는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많은 규모인 300명의 청년인턴을 선발하여 법무부 본부 및 지역별 소속기관 등 총 143개 기관에 배정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인턴 모집 및 채용 현황을 보면, 목표 인원을 원활하게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먼저, 2023년 및 2024년 청년인턴 채용 실적을 보면,

2023년의 경우 배정인원 200명 중 18%인 36명이 채용 후 근무를 포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계약만료까지 근무한 인원은 배정인원 대비 16명 부족한 184명이었음.

2024년의 경우 배정인원 303명 대비 9월말 기준 총 292명이 채용되었으나, 이 중 36명이 근무를 포기하였고, 10월 이후 추가 채용이 없다는 전제하에 최종 근무인원은 배정인원 대비 84.5%인 256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청년인턴 채용 실적>

(단위: 명)

연도	배정인원	총 채용인원	채용 후 근무포기	계약만료까지 근무인원
2023	200	220	36	184
2024. 9월말	303	292	36	256(예상)

* 자료: 법무부

○ 다음으로, 2024년 청년인턴 모집·지원 및 선발 현황을 보면, 첫 채용 절차(1차 공고)에서 목표한 충분한 청년들을 모집·선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1차 공고 기준 143개 전체 기관에 걸쳐 307명 모집에 420명이 지원하여, 경쟁률은 1.37대 1로 낮게 나타났고, 그 결과 최종 선발 인원은 155명으로 채용 목표의 절반(50.5%)을 달성하는데 그쳤음.

<법무부 2024년 청년인턴 모집·지원 및 선발 현황>

(단위: 개, 명, %)

연도	공고기관 수	모집인원 (a)	지원인원 (b)	경쟁률 (b/a :1)	선발인원 (c)	충원률 (c/a)
1차 공고	**143**	**307**	**420**	**1.37:1**	**155**	**50.5**
2차 공고	73	141	364	2.58:1	104	73.6
3차 공고	17	36	86	2.39:1	18	50.0
4차 공고	4	15	27	1.8:1	13	86.7
5차 공고	1	2	6	3:1	2	100.0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그 결과, 전체 채용기관의 절반 이상(73개)이 2차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17개 기관은 3차 공고, 4개 기관은 4차 공고까지 실시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사례를 보면, 6명의 청년인턴 배정인원을 선발하기 위해 5차 공고까지 진행한 것으로 나타남.

○ 청년인턴 선발이 원활하지 못하여 공고 횟수가 늘어나고 실제 채용시기가 지연될 경우, 당초 1인당 6개월로 계획한 근무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며,[154] 이 경우 인턴 인건비 및 운영비가 불용될 수 있음.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청년 인턴 1인당 실제 평균 근무월 수는 4.96개월로 목표 대비 1개월 가량 차이가 났음.

또한 소속기관 별로 청년인턴 채용 절차가 반복됨에 따라 채용 진행 및 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일상적 업무 수행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음.

○ 이처럼 청년인턴 지원 경쟁률이 높지 않고, 다수의 소속기관에서 채용 절차가 반복되는 등 법무부가 청년인턴의 원활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데에는, 정부 전체 차원의 채용 목표 인원을 먼저 정한 후, 각 중앙행정기관의 근무인원·조직규모에 비례하여 할당하는 '탑-다운 방식'의 인턴 배정으로 인한 법무부의 채용 목표와

154) 매년 4분기 기업 공채 시즌을 고려하면 연말로 갈수록 중도 퇴직 비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채용이 늦어지면 중도 근무포기자 비율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음. - 파이낸셜뉴스, 「"공부만 하다가 월급 받았어요"…세금이라고 막 쓴 '정부 청년인턴'」, 2024. 10. 14. 기사 참조

일선 소속기관의 인턴 채용 수요 간 괴리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타 부처들과 비교하였을 때 공안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비선호 현상, 교정시설·보호관찰소 등 일부 법무부 소속기관이 상대적으로 비도심 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등이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법무부는 소속기관별 청년인턴 채용 인원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 청년에게 균등한 기회 부여 차원에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였고, 이로 인해 비도심지역 및 기관에 수요보다 많은 인원을 배정하게 된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 지역별로 위치한 소속기관을 활용하여 비수도권 청년에게도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겠으나, 낮은 지원률, 반복된 채용으로 인한 일선 소속기관의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할 때, 효과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음.

즉, 지역별 안배에 대한 고려 외에도, 사업 시행 후 2년 간의 채용 실적, 소속기관별 모집·선발 현황, 소속기관의 실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청년인턴 수요’와 ‘기관별 채용인원’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기관별 배정 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실제 채용 진행 과정에서 미달된 기관의 배정인원을 지원률이 높은 기관에 재배정하는 등 청년인턴의 신속한 채용 및 탄력적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2024년 집행실적 및 2025년 집행계획을 고려한 청년인턴 운영 예산(활동지원비 및 교통비) 감액 조정 필요

○ 2025년 법무부 청년인턴 예산의 비목별 내역을 보면, 청년인턴 활동지원비 명목의 일반수용비(210-01)는 1억 9,483만원이 편성되어 2024년 대비 7배 이상 증액(628.0%)되었음. 반면, 교통비 명목의 국내여비(220-01)는 2024년 대비 7,382만원(△32.7%) 감액된 1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음.

종합하면,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제외한 청년인턴 운영 예산은 2024년 2억 5,258만원 대비 9,425만원이 증액(37.3%)된 3억 4,683만원이 편성되었음.

<법무부 청년인턴 운영 예산(활동지원비 및 교통비) 편성 내역>

(단위: 천원)

항목	비목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활동지원비	일반수용비(210-01)	26,763	194,832	168,069
교통비	국내여비(220-01)	225,820	152,000	△73,820
합 계		252,583	346,832	94,249

* 자료: 법무부

2025년 청년인턴 운영 예산의 증액 및 구성 변경에 대해 법무부는 2024년 사업 운영과정에서 활동지원비가 크게 부족(인턴 1인

당 9만원 수준)하여 인턴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추진이 어려웠던 반면, 인턴 업무 특성상 출장소요가 많지 않아 교통비(국내여비)는 상대적으로 집행 수요가 적었으므로, 2025년 예산안에는 여비를 감액하고 일반수용비를 증액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 2025년 대폭 증액 편성된 청년인턴 활동지원비의 상세 내역을 보면, 근무 예상인원 300명을 기준으로 물품구입(인당 10만원), 프로그램 및 교육(인당 34만원) 비용과 함께, '채용위원 위촉비' 명목으로 6,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2025년 법무부 청년인턴 활동지원비(일반수용비) 편성 상세 내역>

(단위: 천원)

세부항목	2025년 예산안	산출내역
인턴활동 물품구입비	30,000	300명 × 10만원
인턴활동 프로그램 및 교육	102,000	300명 × 34만원
채용위원 위촉비	64,350	3명 × 143개기관 × 15만원
단수조정	△1,518	
합 계	194,832	

* 자료: 법무부

그런데, 물품구입 인당 단가 10만원, 프로그램 및 교육 비용 인당 단가 34만원은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없고, 어떤 종류·유형의 인턴 프로그램 및 교육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등, 증액된 예산 항목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음.

또한, 채용위원 위촉비(6,435만원)의 경우 법무부 143개 소속기관별로 청년인턴 채용시 참여하는 외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155]으로, 실제 청년인턴 활동지원 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예산이며, 2024년의 경우 인턴 채용 외부위원 수당은 일반 공무원·공무직 채용과 마찬가지로 각 실국 기본경비에서 충당하고 있음.

○ 한편, 2024년 9월말 기준 청년인턴 운영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인건비(일용임금)와 달리 활동지원비(일반수용비)와 교통비(국내여비)는 집행 실적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확인됨. 활동지원비의 경우 전혀 집행되지 않았으며, 교통비의 경우 1.3% 집행에 그치고 있음.

2024년 법무부 청년인턴의 상당수가 3월~5월에 채용되어 근무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월 이후 운영예산 집행 실적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156]

155) 서류심사(1명), 면접심사(1명), 채용점검위원회(1명) 등 기관 당 3명의 외부위원 참여를 전제로 함.
* 채용점검위원회 : 채용 절차가 전반적으로 근거 규정에 부합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위원회

156) 법무부는 활동지원비의 경우, 2024년에는 편성 예산이 충분하지 못한 이유로 인턴 프로그램 등 실제 활동에 집행하지 않고 인턴 활동 종료 후 수료행사 등에 집행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충분한 활동지원비를 편성하여 적극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법무부 청년인턴 운영 예산(활동지원비 및 교통비) 편성 내역>

(단위: 천원, %)

항목	비목	2024년 예산	집행액 (2024. 9월말)	집행률
인건비	일용임금(110-03)	3,338,700	2,492,581	74.7
활동지원비	일반수용비(210-01)	26,763	0	0.0
교통비	국내여비(220-01)	225,820	2,875	1.3

* 자료: 법무부

○ 이상에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하면, 2025년 법무부 청년인턴 운영 예산 중 활동지원비(일반수용비)는 2024년 대비 7배 가량 증액되었음에도, 단가 산정근거 및 세부 집행 계획이 결여되어 있고, 기본경비로 충당할 수 있는 채용위원 심사료가 포함된 점을 감안하여, 인턴 프로그램 및 교육비 일부(50%, 5,100만원)와 채용위원 위촉비(6,435만원)는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교통비(국내여비)는 2024년 대비 감액 편성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2024년 인턴 활동 종료가 임박한 시점인 9월말 현재까지 1.3% 집행한 점을 고려하여 추가 감액 조정(전년 대비 50% 수준으로 편성, 3,900만원 감액)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법무행정정보화 사업

(가) 예산안 개요

○ 법무행정정보화(7034-500) 사업은 법무정보시스템, 형사사법시스템,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교정정보시스템 등 법무부 소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법무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및 법무부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산장비의 구입·유지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5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23억 6,800만원(6.1%) 증액된 414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법무행정정보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법무행정정보화	40,858	39,117	41,485	2,368	6.1

(나) 신규 도입된 전산장비의 실제 리스료를 반영한 예산 조정 필요

○ 법무부는 동 세부사업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전산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등)를 리스계약으로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안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도입한 기존 전산장비에 대한 당해연도 리스료, 2025년 신규 도입하는 전산장비 리스료를 포함하여 53억 8,636만원이 편성되었음.

<전산장비 도입 리스료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

(단위: 천원)

세부항목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비고
2019년 도입분	592,000	-	2024년 종료
2020년 도입분	1,128,511	577,658	2025년 종료(6개월분만 편성)
2020년 추가도입분	679,067	521,488	2025년 종료(9개월분만 편성)
2021년 도입분	1,140,132	1,160,400	리스료 갱신분 반영
2022년 도입분	1,194,512	1,194,512	
2023년 도입분	**1,126,000**	**567,373**	**실제 리스료 반영**
2024년 도입분	**377,322**	**754,644**	**2024년에는 6개월분만 편성**
2025년 도입분	-	610,281	2025년에는 6개월분만 편성
합 계	6,237,544	5,386,356	

* 자료: 법무부

○ 법무부는 전산장비 도입 리스계약을 관행적으로 연말에 체결해왔고, 이에 따라 차년도 예산안 편성시에 당해연도 신규 리스계약의 실제 리스료를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예를 들어, 2023년의 경우 당초 신규 리스 규모를 11억 2,600만원(1년 기준)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리스 규모는 5억 6,737만원(1년 기준) 수준에 그쳤음.[157] 그럼에도 2023년 리스 계약이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이후에 이루어지면서, 2024년 예산에도 실제 리스 규모가 아닌 11억 2,600만원이 반영된 것임.

157) 2023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기존 리스계약 갱신분 초과 지출액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2023년 신규 전산장비 도입 규모가 축소됨.

이에 우리 위원회는 법무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전산장비 도입을 위한 신규 리스계약 시점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전 시점으로 앞당기고, 예산안 제출 이후 체결되는 리스계약 등에 대해서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실제 소요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요구(주의)를 채택한바 있음.[158]

○ 결산 시정요구의 취지를 감안하면, 2024년 신규 도입 장비에 지급한 실제 리스료를 2025년 예산안에도 정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2024년 10월 29일 체결된 2024년도 신규 도입 전산장비 리스료는 3억 6,981만원으로 2024년 예산액 3억 7,732만원 대비 750만원 가량의 차이가 있음. 2024년 예산에는 6개월분만 편성되었고, 2025년부터는 1년치 리스료가 전액 반영되므로,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2025년 예산안에 편성된 2024년 도입분 리스료(7억 5,464만원) 중 1,500만원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다) 용도 추가된 '정보격차해소 정보화교육' 목적 자산취득비의 세부 편성내역 조정 필요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정보격차해소 정보화교육'은 보호관찰·치료감호 시설 내 보호소년, 치료감호자 등에 대한 정보서비스 접근 기

158) 2024년 8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시정요구 의결

회를 부여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기기를 활용한 정보화교육·전문교육을 통해 자격증 취득, 취업, 진학 등 성공적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임. 2025년 예산안에는 전년과 동일하게 일반수용비 3억 3,680만원, 자산취득비 1억 5,965만원 등 총 4억 9,645만원이 편성되었음.

<정보격차해소 정보화교육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

(단위: 천원)

비목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산출내역(2025년)	
일반수용비 (210-01)	336,800	336,800	• 정보화교육 강사료 • 자격시험 수수료 • 정보화교육 소모품 등 • 정보화교육 교재비 등 • 푸르미방송 촬영 및 자료관리 소모품 등	244,800 0 55,000 6,000 15,000 16,000
자산취득비 (430-01)	159,651	159,651	• 전산단말기(110만원×100대) • 노트북(123만원×4대) • 단말인쇄기(67만원×12대) • 비디오프로젝터(250만원×2대) • 노후 방송장비 등 교체	110,594 4,947 8,083 5,027 31,000
합 계	496,451	496,451		

* 자료: 법무부

○ 정보격차해소 정보화교육 대상인 10개 소년원과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국립법무병원 등 12개 기관의 전산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2025년 신규 도입 대상이 되는 내용연수 경과물량은 각각 전산단말기(PC) 46대, 단말인쇄기(프린터) 4대, 프로젝터 9대로, 각 기기별 예산편성 단가를 적용할 경우 필요한 자산취득비는 7,578

만원임.

따라서 정보격차해소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2025년 자산취득비 실소요액은 노후 방송장비 교체분(3,100만원) 포함 1억 678만원으로, 편성된 1억 5,965만원보다 5,287만원 가량 적음.

<정보격차해소 정보화교육 대상기관(12개소)이 보유한 전산기기 현황>

(단위 : 대, 천원)

구 분	`18년 이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기준 내용연수 경과물량	단가	교체 소요 예산
PC	16	10	20	106	122	53	50	109	46	110만원	5,060
노트북	0	0	0	0	0	0	0	1	0	120만원	-
프린터	3	1	0	3	6	5	2	2	4	67만원	2,680
프로젝터	9	1	1	2	2	0	5	2	9	250만원	2,250
2025년 총 교체 소요 예산											7,980

주) 각 전산장비별 내용연수는 PC(5년), 노트북(6년), 프린터(6년), 스캐너(6년), 프로젝터(8년)
* 자료: 법무부

○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25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이후 “SBC (Server-Based Computing) 시스템”[159] 운영체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을 추가로 확인하였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전산장비 구입 후 남은 자산취득비를 SBC 시스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에 집행하겠다고 설명함.

159) 컴퓨팅 자원과 애플리케이션을 중앙 집중화하여 관리하는 컴퓨팅 시스템으로, 소년원 내 정보화교육장 PC에서 사용되는 모든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개별 PC가 아닌 SBC 서버에 저장하여 관리함으로써, 보안·업데이트 및 유지보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 접속하든지 일관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

현재 SBC 시스템에 사용되는 윈도우10은 제조사(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기술 지원이 2025년 10월 종료될 예정인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윈도우11로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법무부가 제출한 SBC 시스템 업그레이드 견적서 상 소요 예산은 6,611만원으로, 전산장비 구입 잔액을 활용할 경우 예산이 부족할 우려가 있음(예산 편성액 대비 1,324만원 초과).

<용도 추가에 따른 2025년 정보격차해소 정보화교육 자산취득비 예산 소요 내역>

(단위: 천원)

2025년 예산안 기준		용도 추가 후 소요 내역	
항목	예산안	항목	소요액
• 전산단말기(110만원×**100대**)	110,594	• 전산단말기(110만원×**46대**)	50,600
• 노트북(123만원×**4대**)	4,947		
• 단말인쇄기(67만원×**12대**)	8,083	• 단말인쇄기(67만원×**4대**)	2,680
• 비디오프로젝터(250만원×**2대**)	5,027	• 비디오프로젝터(250만원×**9대**)	22,500
• 노후 방송장비 등 교체	31,000	• 노후 방송장비 등 교체	31,000
		• SBC 시스템 win11 업그레이드	**66,110**
합 계	**159,651**	**합 계**	**172,890**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 따라서 2025년 정보격차해소 정보화교육 자산취득비는 추가된 용도를 반영하여 세부 산출내역을 조정해야 하며, SBC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예산이 초과되는 부분은 전산장비 구매 수량 및 노후 방송장비 교체 물량 조정 등을 통해 당초 편성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3) 기관운영 기본경비

(가) 예산안 개요

○ 기관운영 기본경비(7011-250)는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 감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대변인실 등 법무부 본부 지원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중 총액인건비 비대상경비에 해당하며, 2025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3억 5,400만원(8.8%)이 증액된 43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기관운영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기관운영 기본경비	2,791	4,034	4,388	354	8.8

(나) 연합뉴스 구독료 신규 편성의 타당성 검토 필요

○ 법무부는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에서 제공하는 뉴스구독서비스 구독을 위해 2025년 2,5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연합뉴스 구독료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표하여 연합뉴스와 구독계약을 일괄 체결하고, 각 기관에 뉴스단말기 및 PC 웹서비스(연합뉴스 프리미엄 뉴스), 모바일 서비스(연합뉴스 모바일 뉴스리더) ID를 제공해왔으나,

2023년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공적 기능 수행(비인기 언어·국가의 뉴스 번역, 특파원 파견 등[160])에 대한 국비지원을 제외한 뉴스구독료 지원은 전면 폐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사업(사업코드 1431-300) 예산은 2024년부터 50억원으로 축소·편성되었음.

<문체부 국가기간통신사 지원사업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안)
예산액	32,800	32,800	27,860	5,000	5,0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에 법무부는 뉴스구독서비스에 대한 법무부 자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2025년 예산안에 모바일서비스(뉴스리더) 구독료로 2,57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임.

○ 정부가 연합뉴스 구독료 지원을 전면 폐지하게된 배경은 IT·인터넷 기술 및 미디어 산업의 급격한 발전 등 환경 변화로 인해 누구나 포털, SNS를 통해 쉽게 국내외 뉴스를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도 굳이 연합뉴스 서비스를 통하지 않아도 뉴스 검색 및 언론 모니터링 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임.

160) 일반 언론사에서 제공·파견하지 않는 비인기 언어 및 국가에 대한 해당 언어 뉴스번역 및 특파원 파견 등

그럼에도 법무부가 연합뉴스 구독료를 별도로 신규 편성한 것은 정부 차원의 뉴스구독 폐지 방침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바, 인터넷·SNS 발달 등 달라진 미디어 환경과 뉴스 접근성, 민간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뉴스구독서비스[161]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161) 뉴시스(프라임 뉴시스), 뉴스1(뉴스1 커넥트), 뉴스핌(통신 플러스)

2. 교도작업특별회계

가. 특별회계 개요

○ 교도작업특별회계는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함으로써, 근로정신 함양 및 기술교육과 습득이라는 교화목적을 달성하고, 자체수요품 충족과 생산제품의 염가 제공을 통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교도작업특별회계법」(1961년 제정)에 따라 1962년부터 운용되어 온 것임.[162]

교도작업특별회계는 교도작업에 의한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운영하는 한편, 교도작업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운영하는 독립채산제로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일평균 20,400여명의 수형자가 작업에 참여하고 있음.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1,236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1억 5,100만원(2.6%) 증액되었는바,

세입예산안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잡수입이 2억 6,900만원(72.9%) 감액되었고, 세계잉여금 28억 2,800만원(43.1%)과 예탁이자수입 9,200만원(3.5%)이 증액되었음.

---

162) 이후 「교도작업특별회계법」은 「교도작업관용법」과 통합되어 2008. 12. 11.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0. 1. 1. 시행됨.

<2025년도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예산안 (B)	증감 (B-A)	(B-A)/A
계	124,214	120,529	123,680	3,151	2.6
기타경상이전수입	106	103	103	-	-
교도소 수입	67,902	64,343	64,343	-	-
잡수입 등	2,264	369	100	△269	△72.9
전년도 세계잉여금	8,349	6,560	9,388	2,828	43.1
예탁원금 회수	44,000	46,500	47,000	500	1.1
예탁이자 수입	1,593	2,654	2,746	92	3.5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1,236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1억 5,100만원(2.6%) 증액되었음.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교도작업사업은 제품생산·판매를 위한 재료비 및 운송비 등 34억 5,400만원(5.9%)이 증액되었고, 시설보완 사업은 작업장 신·증축 공사비 등 건설비 조정으로 5억 7,800만원(12.9%) 감액되었음.

<2025년도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계	113,046	120,529	123,680	3,151	2.6
교도작업	55,899	58,651	62,105	3,454	5.9
직업훈련	3,920	4,164	4,399	235	5.6
시설보완	5,693	4,475	3,897	△578	△12.9
교특회계관리기본경비	382	404	444	40	9.9
소속기관기본경비	152	195	208	13	6.6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	47,000	52,640	52,627	△13	△0.0

나. 주요 검토사항

◈ 세 출 ◈

(1) 직업훈련 사업

(가) 예산안 개요

○ 직업훈련 사업(1535-301)은 수형자에게 취업에 유용한 기술을 습득시켜 출소 후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2억 3,500만원(5.6%) 증가한 43억 9,900만원임.

<2025년도 직업훈련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 (A)	2025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직업훈련	3,920	4,164	4,399	235	5.6

(나) 학점은행제 훈련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강의종류의 연관성 및 훈련기관 간의 형평성 유지 필요

○ 법무부는 산업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훈련 직종 도입 등

변화를 모색하고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기능인 양성을 위하여, 2024년부터 산업기사 이상 직업훈련과정에 학점은행제를 도입하였고, 2025년에 이를 확대 시행할 예정임.

< 학점은행제 소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 학위취득 기준 >

- 전문학사 80학점(전공 45학점, 교양 15학점, 일반선택 20학점)
- 학사 140학점(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 일반선택 50학점)

○ 이에 따라 수형자 직업훈련 과정에서 학점은행제 확대 시행을 위한 초빙강사료·교재비 등은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5년도 학점은행제 직업훈련 강사료 등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학점은행제 강사수당	-	227	227	100
학점은행제 교재구입비	-	23	23	100
총 계	-	250	250	100

* 자료: 법무부

○ 법무부는 2023년 12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9개기관, 14개 훈련과정, 59개 강의에 대해 교육기관 평가인정을 획득하였고, 향후 3개 기관, 5개 훈련과정, 13개 강의

에 대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을 확대 추진하여 총 12개 기관, 24개 훈련과정, 336개 강의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힘.

<학점은행제 훈련과정 현황>

구분	신청기관	훈련과정	강의종류	취득 학점
2024년 시행기관	화성직훈(교)	용접	용접공학, 용접구조설계	6
		한식조리	컴퓨터개론, 전기공학입문	6
		통신선로	정보통신개론, 전기공학입문	6
		건축	건축구조Ⅰ, 건축적산학	6
		자동차정비	자동차섀시, 자동차전기전자Ⅰ	6
	서울남부(교)	패션비즈니스	패션디자인론, 패션머친다이징, 패션제품생산관리	9
	원주(교)	건축일반시공	건축CADⅠ	3
	대구(교)	용접	용접공학, 용접구조설계, 전기용접실습Ⅰ	9
	전주(교)	건축시공관리	건축법규, 건축시공Ⅰ, 건축설계Ⅰ, 건축제도Ⅰ, 건축제도Ⅱ	15
	순천(교)	건축목공	건축계획Ⅰ, 건축구조Ⅰ, 건축제도Ⅰ, 건축제도실습Ⅰ	12
		식품조리	디자인론, 식품학, 제과제빵실습Ⅰ, 조리이론, 한식조리실습Ⅰ	15
소계	6개기관	11개 과정		
2025년 시행예정	포항(교)	용접	용접공학, 특수용접, 전기용접, 전기용접실습Ⅰ	12
	대전(교)	전산응용 기계설계	CAD실습Ⅰ, CNC공작법, 치공구, 기계공작법Ⅰ, 기계요소설계Ⅰ, 기계요소설계Ⅱ, 기계재료, 기계제도Ⅰ, 기계제도Ⅱ, 기계제도실습, 전산응용설계Ⅰ, 전산응용설계Ⅱ, 전산응용설계실습Ⅰ, 전산응용설계실습Ⅱ, 제도기초실습	48
	청주(교)	컴퓨터 응용기계	CAD실습Ⅰ, CAM실습Ⅱ, CNC공작법, 공작기계기초실습, 기계공작법Ⅰ, 기계요소설계Ⅰ, 기계재료, 기계제도Ⅰ,	24
총계	9개 기관	14개 훈련과정	59개 강의	93

* 자료: 법무부

○ 학점은행제 훈련과정 선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4조[163]에 따라 소장이 정하고 있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업훈련 중 양성(기능사 자격취득), 향상(산업기사 자격취득), 고급(기사 자격취득) 중에서 향상(산업기사) 이상 직업훈련 과정을 학점은행제 운영과정으로 선정하고, 학점인정 강의 1과목 이상을 우선 수강(1과목당 3학점)하도록 하여 출소 후 학업 연계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 것임.

<학점은행제 훈련과정 별 수강생 현황>

신청기관	훈련과정	수강생 현황	이수기간
화성직훈(교)	용접	30	24. 1월 ~ 25. 12월
	한식조리	4	24. 1월 ~ 25. 12월
	통신선로	10	24. 1월 ~ 25. 12월
	건축	5	24. 1월 ~ 25. 12월
	자동차정비	13	24. 1월 ~ 25. 12월
서울남부(교)	패션비즈니스	14	24. 1월 ~ 25. 12월
원주(교)	건축일반시공	17	24. 1월 ~ 25. 12월
대구(교)	용접	12	24. 1월 ~ 25. 12월
전주(교)	건축시공관리	13	24. 1월 ~ 25. 12월
순천(교)	건축목공	10	24. 1월 ~ 25. 12월
	식품조리	12	24. 1월 ~ 25. 12월

* 자료: 법무부

○ 학점은행제 운영에 있어 기관 별 훈련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6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제1072호)
제124조(직업훈련 직종 선정 등) ① 직업훈련 직종 선정 및 훈련과정별 인원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첫째, 훈련과정 중 학점은행제 강의종류 간의 연관성이 부족한 바, 훈련과정에 적합한 강의종류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직업훈련과정 중 “한식조리” 과정에 ‘컴퓨터개론’과 ‘전기공학입문’이라는 학점은행 강의가 개설되어 있어 훈련과정과 강의종류 간의 연관성이 떨어짐.[164] “한식조리” 훈련과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165] 과정에 따르면, 가정전문학사 중 식품조리전공, 관광전문학사 중 호텔조리전공의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바, 식품조리전공이나 호텔조리전공과 연관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훈련자의 학점 취득과 학업 성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둘째, 교도소별 학점운영제 개설 강의 수에 차이가 있는 바, 유사한 학점은행제 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자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학점은행제 훈련과정은 현재 운영 중인 직업훈련 과정에 학점인정 과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훈련과정 “용접”의 경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경우 6학점, 대구교도소의 경우 9학점, 포항교도소의 경우 12학점을 취득할 수 있어 동일한 훈련과정이 기관마다 강의종류와 학점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 또한, 2025년시행예정인 대전교도소의 “전산응용기계설계”는 48학점, 청주교도소의 “컴퓨터응용기계” 훈련과정의 경우 24학점을 취득할

164) 법무부는 취득 학점 중 교양과목 학점이 있으므로 해당 강의를 교양과목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힘.

165) https://www.cb.or.kr/creditbank/base/nMain.do

수 있도록 하여 타 훈련기관보다 월등히 많은 강의가 개설되어 있는 바, 동일한 훈련과정에서 또는 훈련기관 간 취득학점의 격차는 수용자의 집체훈련시 특정 훈련기관에만 집중 신청하거나 훈련자의 학점 취득 만족도를 떨어뜨릴 것으로 보임.

○ 법무부는 직업훈련의 학점은행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은행제 교육과정과 직업훈련내 훈련과정의 강의종류 간 연관성을 고려하여 훈련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의를 개설할 필요가 있고, 직업훈련기관 간 훈련과정 이수 형평성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법제처 소관】

(전문위원: 이화실)

Ⅱ. 검토의견

1. 기관운영기본경비(1011-250)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기관운영기본경비(1011-250)는 법제처의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와 각 관서의 일반적 업무수행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35억 700만원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2억 3,000만원(7%)이 증가하였음.

【 2025년도 기관운영기본경비 예산안 편성내역 】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기관운영기본경비	2,570	3,277	3,507	230	7.02
일반수용비	1,354	1,527	1,690	163	10.67
공공요금및제세	53	85	101	16	18.82
피복비	0.6	-	0.6	1	-
급식비	3	3	3	-	0.00
임차료	176	250	278	28	11.20
유류비	9	15	15	-	0.00
시설장비유지비	68	94	100	6	6.38
일반용역비	64	111	165	54	48.65
국내여비	151	186	228	42	22.58
국외업무여비	14	16	16	-	0.00
국외교육여비	20	-	-	-	-
관서업무추진비	142	149	179	30	20.13
손실보상금	-	-	-	-	-
포상금	-	0.1	0.1	-	0.00
공사비	251	75	160	85	113.33
자산취득비	265	315	521	206	65.40
무형자산	-	450	50	△400	△88.89

자료: 법제처

나. 법제조정정책관실 의원입법 관련 안내자료 발간 필요성 재검토 필요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신속히 검토하고 지원하며 의원입법 관련 범정부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2. 12. 27. 「법제처 직제」 개정[166]을 통해 법제정책국에 법제조정정책관이 신설됨.

❑ 이전에도 법제처는 의원입법 전담조직으로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과 3개 법제조정법제관실을 두고 의원입법에 대한 부처간 이견 해소를 위해 정부입법정책협의회[167]를 개최하고 있었으나, 이견 조정 업무를 수행할 국장급 전담 인력이 없어 본 협의회 대신 법제처 과장이 주재하고 부처 사무관 등이 참

---

166) 「법제처 직제」 제7조(법제정책국) ① 법제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조정정책관** 1명과 법제관 4명을 둔다.
② 국장 및 법제조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 · 조정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운영
3. 법령안 입법예고 및 입법의견 관리에 관한 사항
3의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에 따른 법제업무평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5.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6.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7. 정부제안 법률안의 총괄 · 조정
8. 법령 원본 및 대통령 훈령 원본의 관리
9. 규제개혁 등을 위한 법제개선 및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 · 조정
10. 삭제 <2017. 2. 28.>
11.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에 대한 검토 · 분석
12.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조정 · 지원 및 총괄

167)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① 제11조의4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 이견의 해소와 제12조에 따른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입법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제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4에서 같다)

2. 법령안 주관기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 및 관계 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⑥ 제2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안 주관기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 관계 기관, 국무조정실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석하는 실무협의회가 주로 개최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처간 이견 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된 바, 법제처는 결정권자로서 부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제조정정책관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함.

【 최근 5년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 내역 】

※ '조정'은 '일부조정'을 포함하며, 동일 안건에 대하여 조정이 한 번에 성립되지 않은 경우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9월
안건수	64	97	96	72	107	81
본협의회 개최 건수	0	0	1	1	5	7
조정건수	49	88	78	62	88	80
조정건수 중 입법완료건수	17	15	19	16	27	0
동일 안건(의안번호)을 1건으로 하여 계산한 개최건수	59	92	89	63	45	72

조정안을 달리하여 상정한 경우를 별도 건으로 포함함

자료: 법제처

❑ 2025년 기관운영기본경비에 편성된 법제조정정책관실 운영비-일반수용비(210-01목) 예산은 전년 대비 2,700만원(63.5%) 증가한 7,000만원임. 2024년 의원입법 업무편람 및 안내책자 등 발간 예산 1,250만원이 2025년에는 “의원입법 관련 안내자료” 발간 3,160만원으로 변경·확대된 것이 예산안 증액의 주요 사유임.

【 법제조정정책관실 운영비-일반수용비(210-01목) 예산 편성 내역 】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1) 법제조정정책관실 일반수용비 : 16,900천원	1) 법제조정정책관실 일반수용비 : 25,000천원
2) 의원입법 관련 정부-국회 협력 강화 연찬회 개최 : 7,343천원	2) 의원입법 관련 정부-국회 협력 강화 연찬회 개최 : 7,343천원
가) 교재발간 : 11,620원×150부 =1,743천원	가) 교재발간 : 11,620원×150부 =1,743천원
나) 발표자 원고료 및 참석수당 : 300,000원×8인=2,400천원	나) 발표자 원고료 및 참석수당 : 300,000원×8인=2,400천원
다) 기타 회의 물품구입 등 : 3,200,000원×1회=3,200천원	다) 기타 회의 물품구입 등 : 3,200,000원×1회=3,200천원
3) 법률안의 정부 내 이견 조정을 위한 자문 : 3,000,000원	3) 법률안의 정부 내 이견 조정을 위한 자문 : 3,000,000원
4) 학습회 발표사례비 등 운영비 200,000원×5회=1,000천원	4) 학습회 발표사례비 등 운영비 200,000원×5회=1,000천원
5) 법제조정지원 간담회 물품구입비 : 2,000천원	5) 법제조정지원 간담회 물품구입비 : 2,000천원
6) 의원입법 업무편람 및 안내 책자 등 발간 : 12,500천원	**6) 의원입법 관련 안내 자료 발간 : 31,560천원**
가) 업무편람 발간 : 20,000원 ×500부=10,000천원	**가) 편집 및 인쇄비 : 8,100원×300부 ×12회=29,160천원**
나) 안내책자 제작 : 500원×5,000부=2,500천원	**나) DM 및 발송 : 1,000원×200부 ×12회=2,400천원**
계 : 42,743천원	**계: 69,903천원**

❑ “의원입법 관련 안내자료”란 법제조정정책관실에서 발행하고 있는 “최신 입법 트렌드”를 말하는데, “최신 입법 트렌드”는 월별 발의법안, 공포법안의 통계 및 추세 분석 등 국회의 입법동향, 국민 생활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법안, 국정과제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을 소개하고 최신 법제 동향을 담은 월간 소식지임.

2024년 10월 현재 법제조정정책관실은 별도 예산 없이 매월 pdf 파일 형태로 “최신 입법 트렌드”를 제작하여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168]하고 있는데, 2025년부터는 이를 인쇄하고 우편 발송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임.

❑ 매월 국회의 입법동향을 분석하여 대응할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먼저, 법제처는 매월 제작비용으로 총 2,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법제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최신 입법 트렌드”의 구성과 내용이 다른 소식지 및 발간물과 차별성이 있어 별도 제작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신 입법 트렌드”는 Ⅰ. 최신 발의 법률안, Ⅱ. 최신 공포 법률, Ⅲ. 국회 동향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최신 공포 법률’의 경우 국회에서 매월 발간하는 「국회보」의 내용 중 본회의 의결 법률안을 소개하는 ‘새 법률 소개’와 거의 동일하고, 국회에서 개최된 공청회, 토론회를 소개하는 ‘국회 동향’의 경우 「국회보」의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현황’ 부분과 내용상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음.

168) https://www.moleg.go.kr/legtrn/legtrnList.mo?mid=a10407000000

또한, 법제처는 이미 월간 소식지인 “법나들이” 및 “새 법령 소개” 등을 통해 주요 시행법령을 소개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별도의 소식지를 추가로 제작하기보다는 기존 소식지에 “최신 입법 트렌드”의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최신 입법 트렌드”와 “국회보”의 비교 】

<table>
<tr><th>최신 입법 트렌드 7월호 11pg</th><th>국회보 8월호 39pg</th></tr>
<tr><td>
2024 최신 입법 트렌드 메뉴 바로가기
III 국회 동향
○ 2024년 7월에 국회에서 개최된 공청회, 토론회 등은 총 134건이다.
○ 세부적으로는 주요 쟁점 · 이슈 분야 21건, 일반행정 분야 25건, 경제 분야, 38건, 사회 분야에서 50건이 개최되었다.
1. 주요 쟁점·이슈 분야(AI · 의료개혁 · 저출산)
<table>
<tr><th>분야</th><th>관련 부처</th><th></th><th>행사개요</th><th>주최</th><th>장소</th><th>일시</th></tr>
<tr><td rowspan="3">AI 디지털</td><td rowspan="3">과학기술정보통신부</td><td>1</td><td>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입법 방향
  </td><td>김우영 의원실 등</td><td>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td><td>7.11.(목) 10:00</td></tr>
<tr><td>2</td><td>통일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 공청회</td><td>권칠승 의원실</td><td>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td><td>7.16.(화) 14:00</td></tr>
<tr><td>3</td><td>AI 디지털교과서 이대로 괜찮은가?</td><td>고민정 의원실 등</td><td>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td><td>7.23.(화) 14:00</td></tr>
</table>
</td><td>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현황
(149건, 7.1.~7.26.)
<table>
<tr><th>일시</th><th>세미나</th><th>주최</th><th>장소</th></tr>
<tr><td rowspan="8">7.1(월)</td><td>책무장 3원칙: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을 위한 계획</td><td>나경원 의원실</td><td>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td></tr>
<tr><td>여성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 정책 토론회</td><td>이인선, 김원이 의원실</td><td>의원회관 제1소회의실</td></tr>
<tr><td>타워크레인 종사자 원청 직접계약 정책 토론회</td><td>전용기, 윤종군, 김태선 의원실</td><td>의원회관 대회의실</td></tr>
<tr><td>2024 거버넌스의 날 기념식 및 세미나</td><td>김영배 의원실</td><td>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td></tr>
<tr><td>[2024 사회대전환 포럼] 우리는 대전환의 준비가 되어있는가</td><td>김주영, 박해철, 박홍배, 백승아, 어기구, 이수진, 한정애, 김위상, 김현동, 정이기, 김재원,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의원실</td><td>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td></tr>
<tr><td>[K-뷸류업을 위한 연속 세미나 #1]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td><td>박수영 의원실</td><td>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td></tr>
<tr><td>글로벌 보건의료 진단 형평성 개선과 한국의 역할</td><td>차지호, 한지아 의원실</td><td>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td></tr>
<tr><td>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td><td>김문, 남인순, 박정현, 백혜련, 서영교, 서왕진, 송재봉, 양태정, 윤혜인, 이광희, 이동선, 이학영, 이해식 의원실</td><td>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td></tr>
<tr><td rowspan="8">7.2(화)</td><td>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 발족식 및 세미나</td><td>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td><td>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td></tr>
<tr><td>기후위기와 노년층의 생명권 보호</td><td>이소영, 남인순 의원실</td><td>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td></tr>
<tr><td>수사기관 전자정보 보관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td><td>박주민 의원실</td><td>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td></tr>
<tr><td>국가형벌도 및 사회공정성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td><td>정성호, 조배숙, 권칠승, 이인선, 백종헌, 김한정 의원실</td><td>의원회관 제2소회의실</td></tr>
<tr><td>(노후계획도시 이슈와 극복 방안) 건설산업 성장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전략</td><td>한준호, 민홍철, 서영교, 손명수, 이재강, 조정식, 한정애, 황희 의원실</td><td>의원회관 제1소회의실</td></tr>
<tr><td>'2024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 자살유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td><td>국회자살예방포럼</td><td>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td></tr>
<tr><td>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td><td>한창민, 문진석, 김남근, 이연희, 황운하, 신장식, 윤종오, 한창민 의원실</td><td>의원회관 제12간담회의실</td></tr>
<tr><td>산재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산재보험 개선 과제</td><td>이용우, 이학영, 김주영, 김태선, 박해철, 박홍배, 정혜경 의원실</td><td>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td></tr>
<tr><td rowspan="3">7.3(수)</td><td>이동 삶의 질과 지역격차 대응방안 심포지엄</td><td>강훈식 의원실</td><td>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td></tr>
<tr><td>북한 해킹의 실체와 대응 방안 세미나</td><td>박충권 의원실</td><td>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td></tr>
<tr><td>대통령기록물법 개정 전문가 간담회</td><td>윤건영, 한창민 의원실</td><td>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td></tr>
</table>
</td></tr>
</table>

❑ 또한, 법제처는 “최신 입법 트렌드”를 제작하여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40명 및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150명에게 발송하기 위한 비용 2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국가행정법제위원회[169] 및 법령해석심의위원회[170]의 업무는

169)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4조(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과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법제처에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자문에 응한다.

법 제도 및 법 적용기준, 법령해석 등과 관련된 자문 또는 심의로 최신 입법 트렌드의 분석내용과 직접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별도의 비용을 들여 책자를 우편 발송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재검토가 요청된다고 할 것임.

다. 법령해석국 법령해석 세미나 개최 비용 절감 방안 마련 필요

❑ 2025년 법제처 기관운영기본경비 중 일반용역비(210-14목) 예산안은 2024년 대비 5,400만원 증가한 1억 6,500만원임. 가족 친화적 기관 조성을 위한 행사 위탁비 및 자체 청렴도 조사 관련 운영경비 등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나, “법령해석 세미나 개최” 예산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임.

---

1. 법령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의 도입·개선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실태 조사 및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법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70)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2(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령해석기관 중 **법제처에 요청된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명위원”이라 한다) 및 제5항에 따른 150명 내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기관운영기본경비-일반용역비(210-14목) 예산 편성 내역 】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 210-14(일반용역비) : 111,000천원 1. 가족 친화적 기관 조성을 위한 행사 위탁비 : 10,000,000원×1회=10,000천원 2. 자체 청렴도 조사 관련 운영경비 : 5,000천원 3. 기관 공통 용역비 : 80,000천원 4. 언론스크랩 대행 용역 : 16,000천원 가. 스크랩 및 긴급모니터링: 1,330,000원×12월=15,960천원 나. 조정계수: 40천원	○ 210-14(일반용역비) : 164,838천원 1. 가족 친화적 기관 조성을 위한 행사 위탁비 : 10,000,000원×1회=10,000천원 2. 자체 청렴도 조사 관련 운영경비 : 5,000천원 3. 기관 공통 용역비 : 80,000천원 4. 언론스크랩 대행 용역 : 19,838천원 가. 스크랩 및 긴급모니터링: 1,653,190원×12월=19,838천원 5. 법령해석 세미나 개최 : 50,000천원

자료: 법제처

❑ 법제처는 법령해석국이 20주년을 맞이하여, 법령해석제도 20주년 백서를 발간(일반수용비 19,600원*1,000부=19,600천원 편성)[171]하고, 이를 토대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설명함. 참고로, 법제처는 법령해석 10주년에도 유사한 책자를 발간하고, 관련 행사를 진행한 바 있음.

【 2015년 법령해석제도 발전 방안 세미나 행사 계획 】

시 간	내 용	
행 사 개 요	○ 행사명 : **법령해석제도 발전방안 세미나** ○ 일시/장소 : 2015. 7. 9.(목), 14:00 /대전 00호텔 ○ 참석대상 : 법제처장, 법제연구원장 등 내빈, 지자체 해석담당자, 법제처 직원	
14:30 ~ 15:00	개회	진행 : 법령해석총괄과장

171) ■ 중앙행정기관(59개) 및 지자체(246개), 시 · 도교육청(17개), 입법부(의원실,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등), 사법부 등 배포 예정

<table>
<tr><td>전체진행: 000과장

(법령해석총괄과)</td><td></td><td colspan="2">개회사 : 법제처 처장 인사말씀

축사 : 법사위원장, 법제연구원장</td></tr>
<tr><td rowspan="4">15:00 ~ 16:20(80′)

진행: 000 변호사

(법무법인 00)</td><td rowspan="4">제1세션</td><td colspan="2">주제 : 법령해석 10년의 성과와 발전방안</td></tr>
<tr><td>발제

(30′)</td><td>000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td></tr>
<tr><td>지정토론

(30′)</td><td>000 과장(행정법령해석과)

000 교수(고려대, 전 해석위원)

000 교수(단국대, 전 해석위원)</td></tr>
<tr><td>종합토론

(20′)</td><td></td></tr>
<tr><td rowspan="4">16:30 ~ 17:40(70′)

진행: 000과장

(경제법령해석과)</td><td rowspan="4">제2세션</td><td colspan="2">주제 : 법령해석을 통한 국민 권리 구제 강화 방안</td></tr>
<tr><td>발제

(20′)</td><td>000 과장(사회문화법령해석과)</td></tr>
<tr><td>지정토론

(30′)</td><td>000 교수(충남대, 현 해석위원)

000 변호사(00 법률사무소)

000 기장(0000항공)</td></tr>
<tr><td>종합토론

(20′)</td><td></td></tr>
<tr><td>17:40 ~ 18:00</td><td colspan="3">휴 식</td></tr>
<tr><td>18:00 ~ 19:30</td><td colspan="3">만 찬</td></tr>
</table>

❑ 법제처는 다음과 같이 행사 기획·홍보·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 전반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여 진행하기 위해 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172]하고 있음.

172) 예산 산출내역 50,000천원 = 법령해석제도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를 위한 위탁 용역비 50,000,000원 * 1회

【 세미나 행사 위탁 관련 주요내용 】

주요 내용	세부내용
① 행사 기획・연출・운영 등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 관리	■ 행사 전반의 기획 및 연출 ■ 행사 장소 및 출연자 섭외 ■ 행사운영계획 수립(행사인원 배치, 무대설비・물품 관리 등)
② 홍보에 관한 사항	■ 홍보 기획 및 소재 발굴 ■ 언론 및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행사 전・후 홍보 ■ 대국민 온라인 이벤트 등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홍보 전략 수립・실행
③ 제작물 등에 관한 사항	■ 법령해석국 설립 20주년 기념 영상 등 제작 ■ 오프닝, 축하 영상 등 제작 ■ 무대 연출, 영상 장비 및 음향 장비 준비 및 운영 ■ 아나운서, 자막, 수어통역, 동시통역 등 준비 및 운영
④ 프로그램 연출・운영에 관한 사항	■ 프로그램 구성 계획 제안 ■ 프로그램 출연진 구성, 섭외, 계약체결, 행사 진행 및 관리 ■ 행사장 무대구성 및 영상 기획 및 제작, 현장 연출 ■ 사회자, 출연자 섭외 및 비용 지급
⑤ 유인물, 인쇄물 및 홍보물 등(현수막, 초청장, 비표, 리플릿, 쇼핑백 등)의 디자인.제작.설치.배포.발송.게시 등에 관한 사항	
⑥ 참석자 모집 및 주요인사 참석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초청장 발송 및 참석여부 확인 ■ 안내데스크 운영, 주요인사 안내 계획 수립
⑦ 행사장 안전예방 및 방역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안전 및 방역 대책 수립 및 시행(①사전교육, 인력 배치 등, ②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안전사고 피해보상 계획 수립 등)
⑧ 행사 기록(사진, 동영상 촬영 포함) 및 행사 결과 보고	

자료: 법제처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일반용역비 편성 방침으로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 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대행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용역비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173].

그러나 동 세미나는 법제처에서 연례적으로 주최하는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입법체험행사(일반용역비 어린이법제관 1억 700만원 및 청소년법제관 3,400만원 편성) 또는 외빈을 초청하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일반용역비 1억 700만원 편성)와 다르게 법제처 및 법령해석 관계자들이 주로 참여하는 기념식 및 법령해석을 주제로 한 실무적 토론이 주된 행사 내용임.

이를 고려하면, 동 세미나 행사의 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대행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홍보물·영상물 제작 또는 원활한 행사를 위한 행사 장비 구비 등 위탁이 필수적인 부분만을 추려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행정법제 혁신(1032-302)” 사업으로 최근 4년간 5회 개최된 공청회·설명회의 경우 동 세미나와 유사한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일반용역비의 집행액이 980만원에서 2,200만원 정도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173)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g 232
□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 규모, 전문성 필요여부, 행사대행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용역비로 요구

【 행정법제 혁신(1032-302) 공청회 개최에 따른 일반용역비(210-14) 집행액 】

(단위: 천원)

연도	일시/장소	내용	참석대상	집행액
'20	3.12./정부세종 청사(세종)	행정기본법 제정안 충청권(온라인) 공청회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연구계·학계·법조계·공무원 등 공청회 참가 패널	22,421
'20	4.22./김대중 컨벤션센터(광주)	행정기본법 제정안 호남권 공청회	일반국민	15,588
'20	4.29./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부산)	행정기본법 제정안 영남권 공청회	일반국민	15,736
'22	9.2./세종 컨벤션센터(세종)	지방자치단체 대상 행정기본법 설명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9,790
'23	5.10./백범 김구기념관(서울)	행정기본법 개정안 대국민 공청회	일반국민	18,460
			평 균	**16,399**

【 2023년 행정기본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 행사 계획 】

시 간	내 용
행 사 개 요	○ 행사명 : 행정기본법 개정안 입법공청회 ○ 일시/장소 : 2023. 5. 10.(수), 14:00 /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 ○ 법제처 유튜브 채널 생중계
14:00 ~ 14:10	개회사 및 축사
14:10 ~ 14:40	주제발표: 행정기본법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
14:50 ~ 16:00	개정안 토론 000 서울대 교수(좌장)

	000 서울대 교수, 000 국회 행안위 수석전문위원 000 전경련 기업제도팀장, 000 중앙대 교수, 000 법률사무소 변호사
16:10 ~ 16:40	질의 응답 및 마무리

자료: 법제처

2. 법령정보제공(1031-300)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법령정보제공(1031-300)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주요 법령안이나 법제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사업으로, 다음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법제 및 법령 알리기)** 법제처의 주요정책 및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안의 제·개정 내용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입법과정의 민주성 도모 및 정책 효과성 제고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법에 대한 친숙도를 제고하고 준법정신을 함양하여 법치행정의 중요성을 심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4~6학년 및 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토론마당, 법안만들기 등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제도 운영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제공)**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사진·절차도 등 시각적 정보와 함께 제공

❑ 내년도 예산안에는 총 15억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억 6,600만원(△9.7%)이 감액되었음.

【 2025년도 법령정보제공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B-A)	(B-A)/A
법령정보제공	1,890	1,718	1,552	△166	△9.7
법제 및 법령 알리기	1,092	885	746	△139	△15.7
어린이·청소년법제관	388	372	353	△19	△5.1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제공	411	461	453	△8	△1.7

자료: 법제처

나. 어린이법제관 사업의 신청 및 수료율 제고를 위한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사업 중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법제관 사업은 어린이들의 법에 대한 친숙도를 제고하고 준법정신을 함양하여 법치행정의 중요성을 심어주기 위하여 전국에서 어린이법제관을 모집한 후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5.1%인 1,900만원이 감액되어 3억 5,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어린이법제관 사업은 초등학생들이 준법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어린이들에게 토론마당, 기본법제교육, 법기관 탐방, 법안 만들기, 독서대회 등의 입법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음.

【 어린이법제관 사업의 입법체험활동 세부 내용 】

입법체험활동명	입법체험활동 세부 내용
토론마당	어린이들이 관심을 갖는 법 주제에 대한 찬반토론 진행
기본법제교육 (1,2차)	소외계층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기본 법 교육 및 생활법령 퀴즈 등 진행
참여심사	법제관이 되어 모의 법안을 직접 심사해 보는 활동 실시
법기관 탐방	소외계층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법제처 등 법 관련 기관 탐방 기회 제공
법안 만들기	모의로 일상생활 관련 주제로 법안을 직접 작성하는 활동 실시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헌법, 입법과정 등과 관련된 법 관련 퀴즈를 풀어보는 대회 실시
독서대회	법 관련 도서를 읽고 독서 감상문 제출
어울림한마당	소외계층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법제처 법제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과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진로 탐색 기회 제공
한마당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우수 법제관 격려를 위한 수료 행사 진행

자료: 법제처

❑ 어린이법제관의 선발 및 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어린이법제관은 매년 3~4월 어린이 법제처 홈페이지[174]를 통해 신청을 받고, 선발된 어린이 법제관은 동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등록한 각자의 이메일과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의견쓰기 등 온라인 활동과 각종 오프라인 행사 참가신청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음.

❑ 그런데 최근 10년간 어린이법제관 사업에 대한 신청자 및 선발자 수를 살펴보면, 2024년 기준 1,591명 신청 중 1,300명을 선발하여 1.2: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는바, 최근 10년간 평균 경쟁률 역시 1.3:1의 경쟁률을 보여 비슷한 수준에 그치

174) https://www.moleg.go.kr/index.es?sid=a2

고 있음[175].

【 최근 10년간 어린이법제관 신청 및 선발 현황 】

(단위: 명)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청 인원	1,852	2,145	1,666	1,981	1,567
선발 인원	1,300	1,300	1,300	1,300	1,300
경쟁률	**1.4:1**	**1.7:1**	**1.3:1**	**1.5:1**	**1.2:1**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신청 인원	984	1,057	1,239	1,963	1,591
선발 인원	984	1,057	1,211	1,300	1,300
경쟁률	**1.0:1**	**1.0:1**	**1.0:1**	**1.5:1**	**1.2:1**

*참고로, 2022년~2022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청이 저조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자료: 법제처

❑ 한편, 어린이법제관으로 선발된 이후 수료 기준을 살펴보면, 선발 이후 1년간의 활동을 합산한 마일리지 총점이 50점 이상인 경우 어린이법제관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보아 수료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마일리지 총점 1,000점 이상인 경우 소정의 상품[176]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175)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수도권의 경우 신청율이 높아 조기 마감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방의 경우 신청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라고 밝힘.

176) 문구세트, 2023년 기준 92명에게 제공

【 어린이법제관 활동별 마일리지 부여 기준 】

활동 구분			어린이법제관 활동	마일리지 점수
오프라인 활동	입법체험 행사 참여		☞ 행사 참여 시	20점
	수상 시 (법령퀴즈 골든벨)		☞ 우수상 수상 시	30점
온라인 활동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어린이법제관 광장	독서감상문 게시판	☞ 게시글 작성 ※감상문은 한 번만 작성할 수 있음	20점
			☞ 우수상 수상 시	30점
		입법 체험 활동 소감문	☞ 게시글 작성 ※행사당 소감문은 한 번만 작성가능	5점 (1편당)
			☞ 우수 활동 소감문으로 채택	10점 (1편당)
		생활 속 법령 소개 (퀴즈 문제)	☞ 퀴즈 문제 정답 맞추는 경우	10점
			☞ 퀴즈 문제 정답 제출했으나 맞추지는 못한 경우	5점
		준법일기	☞ 게시글 작성 ※1일 1회에 한해 마일리지 적립 (게시글 작성 횟수는 제한 없음)	5점
			☞ 우수 준법일기로 채택	20점
			☞ 댓글 작성 ※1일 1회에 한해 마일리지 적립 (댓글 작성 횟수는 제한 없음)	3점
		자기소개 게시판	☞ 게시글 작성 ※1회에 한해 마일리지 적립	10점
	즐거운 토론마당	주제토론마당	☞ 음성 파일 제출 ※회별 1회에 한해 마일리지 적립	15점
			☞ 우수 의견 채택	30점
			☞ 댓글 작성 ※1일 1회에 한해 마일리지 적립	5점
		법제토론마당	☞ 법안 제출 시 ※회별 1회에 한해 마일리지 적립	15점
			☞ 법안 채택 시	30점
			☞ 댓글 작성 ※1일 1회에 한해 마일리지 적립 (댓글 작성 횟수는 제한 없음)	5점
		자유토론마당	☞ 게시글 작성 ※1일 1회에 한해 마일리지 적립 (게시글 작성 횟수는 제한 없음)	5점
			☞ 댓글 작성 ※1일 1회에 한해 마일리지 적립 (댓글 작성 횟수는 제한 없음)	3점
	온라인 법제교육	온라인 교육 과정	☞ 온라인 교육 과정 이수 ※총 5개 과정 - 5개 과정 전부 이수 시 100점	20점 (1/5 이수 시)

자료: 법제처

❑ 그런데 최근 5년간 어린이법제관 수료율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은 전체 선발 인원 984명 중 57.4%(565명)가 수료한 것으로 나타났고, 2021년 61.5%(651명), 2022년 61.5%(782명), 2023년 60.1%(782명)를 기록하여 약 60% 내외의 수료율을 보이고 있는바, 어린이법제관 활동별 마일리지 부여 기준에 비추어 수료기준(1년 활동 합산 마일리지 총점이 50점 이상)이 높지 않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낮은 수료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최근 5년간 어린이법제관 수료 현황 】

(단위: 명, %)

연도	신청자 수	선발자 수	수료자	
			수료자 수	수료율
2020년	984	984	565	**57.4**
2021년	1,057	1,057	651	**61.5**
2022년	1,239	1,211	745	**61.5**
2023년	1,963	1,300	782	**60.1**
2024년	1,591	1,300	- (진행중)*	**- (진행중)***

자료: 법제처
*2024년 선발된 어린이법제관은 2025. 2. 28. 수료 예정임.

❑ 이러한 어린이법제관의 신청 및 선발 인원 현황, 수료율 등에 비추어 법제처는 사업 홍보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2024년도 예산에 편성하였던 홍보예산(1,353만원)을 2025년도 예산안에서는 오히려 삭감하였음.

【 어린이법제관 사업 홍보 관련 2024년도 예산 및 2025년도 예산안 산출 내역 비교 】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71,939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89,341천원 가. 홍보포스터 제작 및 발송 등 (13,531천원) • 1,150원x11,766장=13,531천원 나. 활동책자 제작 및 발송 등 (8,250천원) • 5천원x1,650부=8,250천원 다. 수료증·위촉장 제작 및 발송 등 (4,500천원) • 5천원x900부=4,500천원 라. 상장 및 시상품 제작 및 발송 등 (8,700천원) • 30천원x290인=8,700천원 마. 독서대회 운영 비용 (22,500천원) • 15천원x1,500인=22,500천원 바. 온라인 입법 체험 운영 비용 (17,820천원) • 810천원x22회=17,820천원 사. 용역업체 선정 및 입법체험행사 대회 심사료 (1,800천원) • 200천원x3인x3회=1,800천원 아. 기타 사업 운영비 (12,150천원) • 450천원x27회=12,150천원 자. 조정계수 (90천원) • 90천원	352,619 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75,810천원 가. 활동책자 제작 및 발송 등 (8,250천원) • 5천원x1,650부=8,250천원 나. 수료증·위촉장 제작 및 발송 등 (4,500천원) • 5천원x900부=4,500천원 다. 상장 및 시상품 제작 및 발송 등 (8,700천원) • 30천원x290인=8,700천원 라. 독서대회 운영 비용 (22,500천원) • 15천원x1,500인=22,500천원 마. 온라인 입법 체험 운영 비용 (17,820천원) • 810천원x22회=17,820천원 바. 용역업체 선정 및 입법체험행사 대회 심사료 (1,800천원) • 200천원x3인x3회=1,800천원 사. 기타 사업 운영비 (12,150천원) • 450천원x27회=12,150천원 아. 조정계수 (90천원) • 90천원

자료: 법제처

❑ 법제처는 어린이법제관 사업의 홍보 비용 등 삭감이 이루어졌으나, 어린이법제관 모집 시 학교 알림장 앱, SNS, 홈페이지, 카페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학교 및 관계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겠다는 입장임.

❑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 홍보 방안 마련 없이 온라인 홍보 및 기관 협조 공문만으로는 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신청 및 수료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홍보 및 프로그램 다양화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어린이 · 청소년 법제관 사업 내 독서대회 운영 관련 사업의 운영방식 개선 필요

❑ 법제처는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사업의 입법체험 활동의 일환으로 법 관련 도서의 감상문을 모집·시상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법제관의 법 지식 향상 및 사고력 배양을 위해 독서대회를 운영하고 있는바, 2025년도 예산안에는 2,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2025년도 예산안 세부산출 내역 - 독서대회 운영 비용 】

자료: 법제처

어린이·청소년 법제관예산	세부 산출내역
352,619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75,810천원 가. 활동책자 제작 및 발송 등 (8,250천원) • 5천원x1,650부=8,250천원 나. 수료증 · 위촉장 제작 및 발송 등 (4,500천원) • 5천원x900부=4,500천원 다. 상장 및 시상품 제작 및 발송 등 (8,700천원) • 30천원x290인=8,700천원 라. 독서대회 운영 비용 (22,500천원) • 15천원x1,500인=22,500천원 마. 온라인 입법 체험 운영 비용 (17,820천원) • 810천원x22회=17,820천원 바. 용역업체 선정 및 입법체험행사 대회 심사료 (1,800천원) • 200천원x3인x3회=1,800천원 사. 기타 사업 운영비 (12,150천원) • 450천원x27회=12,150천원 아. 조정계수 (90천원) • 90천원

❑ 독서대회는 어린이·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법 관련 도서를 배포하고, 감상문을 모집·접수한 후 1·2차 심사를 거쳐 우수작품을 발표하고, 상품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177].

【 2023년도 및 2024년도 독서대회 운영 현황 】

구분		대상 도서	대상 인원	감상문 제출 인원
2023년도	어린이법 제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 이야기(지은이: 신주영)	885명	223명 (25%)
	청소년법 제관	헌법 다시 읽기(지은이: 양지열)	370명	96명 (26%)
2024년도	어린이법 제관	어린이를 위한 법이란 무엇인가(지은이: 예영)	(진행 중으로 미정)	
	청소년법 제관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법 이야기(지은이: 양지열)		

자료: 법제처

❑ 그런데 법제처는 독서대회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청소년법제관으로 선정된 사람 중 일정 마일리지 점수(30점) 이상인 사람 모두에게 도서를 배포하고, 감상문 제출은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였는바, 그로 인해 2023년 기준 감상문 제출 인원은 대상 인원 대비 약 25%에 불과하여 저조한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예산 대비 사업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178].

❑ 또한, 법제처는 현재 독서대회 도서 선정에 있어 대상별(어린이 법제관, 청소년법제관)로 각 1권의 도서만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참가자의 선택적 수요 반영이 어렵고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법제처는 어린이·청소년법제관의 법 지식 향상 및 사고력 배양이라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독서대회 참여를 원하는 참가자의 별도 모집과 더불어 참가 이후 감상문 제출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우수작품 시상자 수 확대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독서대회 참

177) 독서대회 운영 방식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대상 법 관련 도서 배포 → 감상문 모집・접수 → 1차 심사(10배수, 어린이・청소년 각 30편 선정) → 2차 심사(어린이・청소년 각 상위 3편 선정) → 우수작품 발표 및 상품(문화상품권 10만원, 2023년 기준 3명에게 제공) 수여

178)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2024년도 독서대회는 참여를 원하는 참가자를 별도로 모집(어린이 507명, 청소년 310명)하여 운영 중에 있는바, 감상물 제출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임.

가 대상 도서를 폭넓게 지정하여 도서 선정에 있어 다양성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세계법제정보서비스(1031-301)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세계법제정보서비스(1031-301)는 세계 각국의 법제정보를 제공하고 남북한 법제통합 방안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업으로, 다음의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세계법제 지원)** 세계 각국의 법제정보를 요약·번역하여 국가별·분야별로 체계화하여 제공하고, 국가법령 외국어 번역 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함.

- **(남북법제 연구)** 통일에 대비한 분야별 남북한 법제통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통일 과정에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혼란을 방지함.

❑ 내년도 예산안에는 총 17억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2.4%인 4,000만원이 증액되었음.

【 2025년도 세계법제정보서비스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A)	2025년 예산안(B)	증감(B-A)	(B-A)/A
세계법제정보서비스	1,085	1,662	1,702	40	2.4
세계법제 지원	955	1,553	1,591	38	2.4
남북법제 연구	130	109	111	2	1.8

자료: 법제처

나. 분야별 법령 외국어 번역본 정비 연구 사업 수행체계의 적정성 검토 및 계속 추진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세계법제 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인 ‘분야별 법령 외국어 번역본 정비 연구 사업’은 국내진출 외국기업 및 국내체류 외국인 증가, 국제분쟁 발생 등으로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본 수요가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각 부처와 협업하여 외국인 지원, 국제분쟁 등에 활용되는 국내법령 번역본에 대한 연구·정비를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2025년 분야별 법령 외국어 번역본 정비 연구 사업 예산안 및 세부 산출내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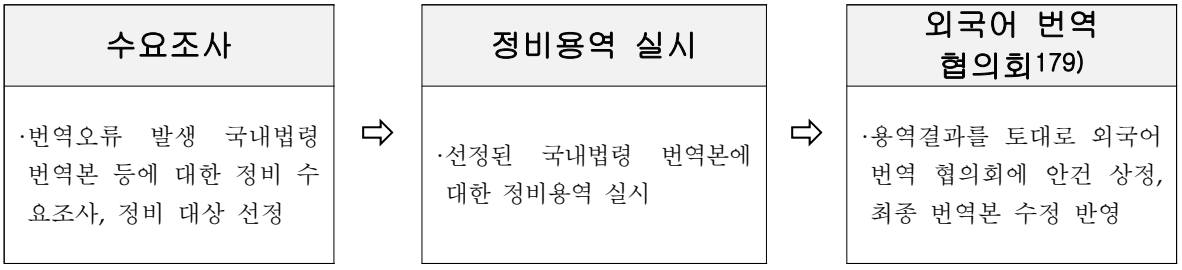
’25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1,591,155 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50,000천원 가. 분야별 법령 외국어 번역본 정비 연구 (50,000천원) · 50,000천원×1과제=50,000천원

자료: 법제처

❑ 법제처는 동 사업의 추진 방식과 관련하여, 향후 각 부처 국내법령 번역본 정비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국내법령 번역본 정비를 연구용역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법률 및 해당 전문 분야별 전문가, 외국어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정비를 실시하고, 법령 소관 부처, 한국법제연구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외국어 법령 번역본의 오류 등을 수정하겠다는 계획임.

【 국내법령의 외국어 번역본 정비 사업의 추진 방식(안) 】



자료: 법제처

❑ 현행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6조에 따르면 국내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업무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한국법제연구원의 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180], 실제 개별 부처의 수요 등에 따라 소관부처가 자체적으로 국내법령을 번역하거나 한국법제연구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법령에 대한 외국어 번역 수요 조사 및 계획을 수립한 후 한국법제연구원에 제공하여 외국어 번역을 실시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한 번역 결과물을 취합하여 한국법제연구원 또는

179)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9조(법령의 외국어 번역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의 외국어 번역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 수요를 반영한 번역 계획의 수립 및 수정에 관한 사항

2. 각 기관이 번역한 결과물의 공유·감수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 기준에 관한 사항

4.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 업무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80)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 제6조(법령의 외국어 번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법제연구원의 장 등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외국어 번역 계획을 고려하여 법령의 외국어 번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법제연구원의 장 등은 법령이 제정·개정되는 경우 그 내용이 신속하게 외국어 번역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하는 등 총괄 업무를 수행[181]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번역 결과물을 번역 기준에 따라 감수하여 제공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 번역된 국내법령 중 정비용역 대상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임.

❑ 그런데 현재 한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업무는 개별 부처가 필요한 경우 법제처가 그 수요를 취합하여 한국법제연구원에 번역을 의뢰함으로써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번역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번역 산출물에 대한 감수를 통한 고도화 및 적정성 관리 또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사업수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 적합하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함.

---

181)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 제3조(외국어 번역 수요의 조사) ①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법령에 대한 외국어 번역 수요를 계획 수립 연도의 전년도 12월 말까지 조사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법령에 대한 외국어 번역 수요를 계획 수립 연도의 전년도 12월 말까지 조사할 수 있다.

③ 법제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일반국민, 중소기업, 비영리법인이나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법령에 대한 외국어 번역 수요를 계획 수립 연도의 전년도 12월 말까지 조사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한국법제연구원(이하 "한국법제연구원"이라 한다)의 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의 장 등 국민이나 외국인의 법령에 대한 번역 수요를 파악하기 쉬운 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법령에 대한 외국어 번역 수요를 계획 수립 연도의 전년도 12월 말까지 조사할 수 있다.

제4조(외국어 번역 계획의 수립) ① 법제처장은 제3조에 따른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2월 말까지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법제연구원의 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 번역 추진 필요성 등을 사유로 번역 계획에서 소관 법령의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법제연구원의 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등에게 매년 3월 초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긴급한 번역 수요가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을 제9조제1항에 따른 법령의 외국어 번역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 국내법령의 외국어 번역 실시 현황 】

(단위: 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8월 현재)
한국법제연구원	175	180	124
중앙행정기관	5	4	3

자료: 법제처

❑ 또한, 번역본 감수를 정부 부처가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당 법령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과 번역 수요를 가진 소관 부처에서 목적에 맞게 수행하는 것이 더 적합한지, 법제처에서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법제처는 '분야별 법령 외국어 번역본 정비 연구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고 향후 계속 사업으로 동 사업을 수행할 계획인바, 동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에 대하여 2024년 법무부에서 국재중재 관련 분쟁에서 「중재법」, 「국제사법」에 대한 번역 오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번역본 감수를 위해 용역을 추진한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182]

그러나 2024년 9월 말 현재 2025년에 어떤 법령에 대하여 감수를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바, 세부 추진계획을 적시에 수립할 필요가 있고, 번역본 감수에 대한 수요가 단발성 수요인지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법제처는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별 법령 외국어 번역본 정비

182) 법제처는 외부 법무법인과 용역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3,000만원의 예산(기관운영기본경비-일반용역비)을 집행하였다고 밝힘.

연구 사업’에 있어 어떠한 방식이 사업수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더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동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1031-302)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1031-302)는 정부기관별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나열된 법령정보를 국민의 일상생활 분야별로 재분류하고, 이해하기 쉽게 가공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령 접근성 및 이해도를 제고하는 사업임.

❑ 내년도 예산안에는 총 13억 6,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3,400만원(2.6%)이 증액되었음. 생활법령정보 블로그 기자단 운영의 종료로 일반수용비 720만원이 감액된 반면, 민간위탁사업비가 12억 5,300만원에서 12억 9,800만원으로 4,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예산안 편성내역 】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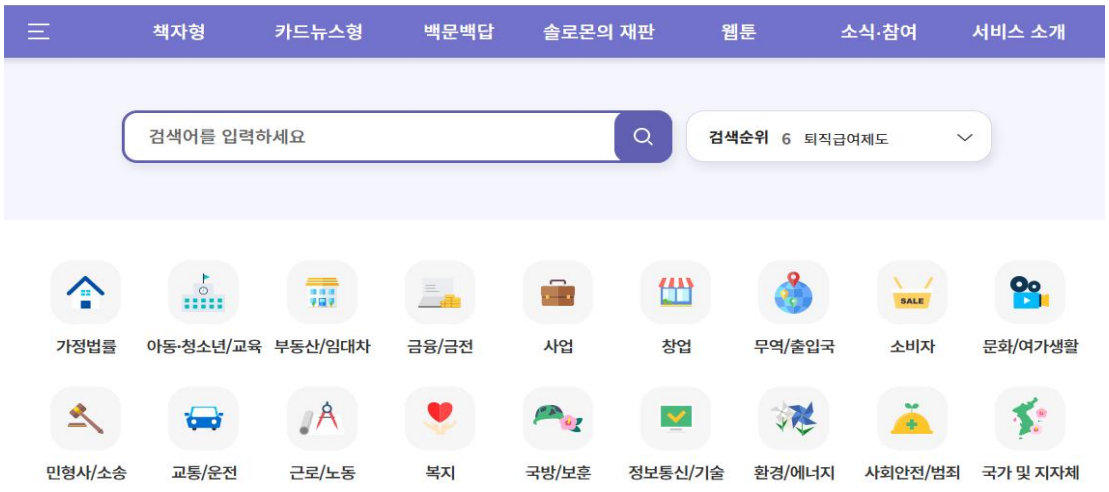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1,022	1,328	1,362	34	2.6
상용임금	28	29	30	1	3.4
일반수용비	16	17	10	-7	-41.2
공공요금 및 제세	4	5	-	-5	-100
특근매식비	4	-	-	-	-
임차료	5	6	6	0	-
복리후생비	1	1	1	0	-
국내여비	1	1	1	0	-
사업추진비	10	10	10	0	-
민간위탁사업비	948	1,253	1,298	45	3.6
고용부담금	5	6	6	0	-

자료: 법제처

나. 외국어 콘텐츠 개발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은 생활법령콘텐츠 개발 및 생활법령 시스템 운영·관리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는 법령 및 조례 등 국문콘텐츠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한 12개 국가 외국어 번역콘텐츠를 제공 중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 국문/외국어 사이트 】

<table>
<tr><th></th><th>찾기쉬운 생활법령 사이트</th></tr>
<tr><td>국문</td><td> 
</td></tr>
<tr><td>외국어</td><td> 
</td></tr>
</table>

❑ 2025년 한국법령정보원에 대한 민간위탁사업비는 12억 9,800만원으로 홍보비용 4,200만원을 제외한 12억 5,600만원이 콘텐츠 개발 및 업데이트 비용에 해당함.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의 경우 조례콘텐츠를 신규 개발하면서 7명의 별도 인원을 운용하였으나 2025년의 경우 국문콘텐츠와 조례콘텐츠를 통합하여 25명의 인원이 국문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고[183], 기존 12개 외국어콘텐츠 개발 및 업데이트와 번역 및 감수 예산에 더하여 신규로 “알기쉬운 외국어 콘텐츠 개발”을 위한 예산 4,400만원이 편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 예산 편성 내역 】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253,411천원 1. 국문 콘텐츠 개발 용역 : 721,482천원 • (2,335,800원 * 18명 * 12월)*1.3*1.1=721,482천원 2. 조례 콘텐츠 개발 용역: 280,576천원 • (2,335,800원 * 7명 * 12월)*1.3*1.1=280,576천원 3. 외국어 콘텐츠 개발 용역: 69,965천원 • (2,038,600원 * 2명 * 12월)*1.3*1.1=69,965천원 4. 외국어 콘텐츠 번역 및 업데이트 용역 : 140,000천원 • 5,000,000원 × 28개 = 140,000천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298,411천원 1. 생활법령정보 시스템 운영·관리 관련 경비 : 1,256,023천원 가. 국문콘텐츠 개발 및 업데이트: 1,002,058천원 • 2,335,800원*25명*12월*1.3*1.1= 1,002,058천원 나. 외국어콘텐츠 개발 및 업데이트: 69,965천원 • 2,038,600원*2명*12월*1.3*1.1= 69,965천원 다. 외국어콘텐츠 번역 및 감수= 140,000천원 • 5,000,000원*28개= 140,000천원 라. 알기쉬운 외국어 콘텐츠 개발 = 44,000천원

183) 민간위탁사업자인 한국법령정보원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사업 수행 인력 고용현황

구분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소계
국문	8	5	5	18
조례	2	-	5	7
외국어	-	1	1	2

5. 생활법령정보 홍보 : 42,184천원 • 온라인 홍보 : 1,880,000원*15회*1.1=31,020천원 • 오프라인 홍보(홍보리플릿 및 기념품) : 3,383,000원*3회*1.1=11,164천원 6. 조정계수: △796천원	• 1,000,000원*4개 언어*10건*1.1= 44,000천원 2. 생활법령정보 홍보 : 42,184원 가. 온라인홍보= 31,020천원 • 1,880,000원*15회*1.1= 31,020천원 나. 오프라인홍보(홍보리플릿 및 기념품) = 11,164천원 • 3,383,000원*3회*1.1= 11,164천원 3. 조정계수: △204천원

❑ 법제처는 기존 외국어콘텐츠 개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알기쉬운 외국어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유에 대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법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풍부하고 자세한 ‘책자형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 쉽고 빠른 이해를 위해 그림·영상 등으로 ‘시각화한 법령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함.

구체적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현황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활용성이 높은 4개 언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에 대해 기존 콘텐츠와 차별화된 노동·복지·사회안전·K창업 및 투자 관련 분야의 신규 콘텐츠를 집중·개발하겠다는 계획임.

❑ 그러나 현재도 국내 거주 외국인의 조기 정착을 목적으로 외국어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목적상 제공 중인 책자형 외국어 생활법령정보콘텐츠와의 내용 중복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또한, 법제처는 현재 추가적인 예산 없이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책자형 콘텐츠 일부를 시각적인 카드뉴스형 외국어콘텐츠의 내용으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다음 예시 콘텐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각화된 디자

인으로 인하여 책자형과 차별화되어 이해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일례로, 운전면허 콘텐츠에서 실제 외국운전면허로 국내 주행을 할 수 없는 예외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외국인에게 중요할 것으로 보임에도 자세한 내용은 책자형 콘텐츠를 참고하라는 안내 문구가 있는 등 시범사업의 결과물만으로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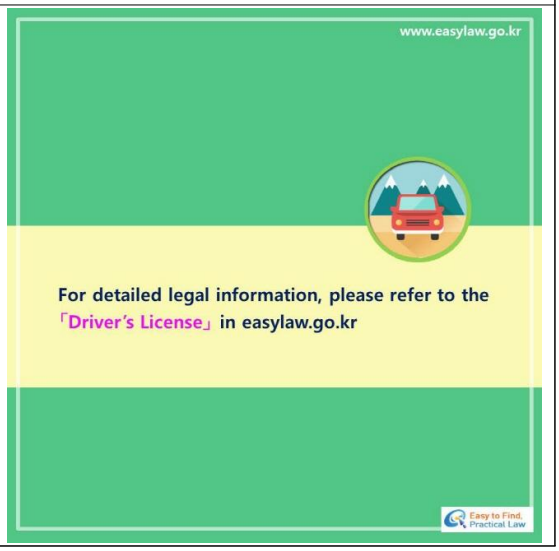
【 "알기쉬운 외국어콘텐츠 개발" 시범사업: 카드뉴스형 외국어 콘텐츠 】

찾기쉬운 생활법령 사이트









【 (참고) 시범사업 해당 부분의 기존 책자형 외국어 콘텐츠 】

찾기쉬운 생활법령 사이트

Driving with a Foreign-issued International Driver's Permit

▪ Countries That Issue International Driver's Permits You Can Use to Drive in Korea

- A holder of an international driver's permit issued overseas by an authority that is a party to the following convention, treaty or agreement can use said international driver's permit to drive in Korea for 1 year from the date of arrival. (Article 96-(1) of the Road Traffic Act)

√ 1949 Geneva Convention on Road Traffic

√ 1968 Vienna Convention on Road Traffic

√ Convention, treaty or agreement on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 recognized by Korea and a foreign country

▪ Types of Vehicles You Can Drive with an International Driver's Permit

- The holder of an international driver's permit can drive the types of vehicles specified on his or her international driver's permit. (Article 96 (1) of the Road Traffic Act)

- The holder of an international driver's permit cannot drive commercial vehicles defined by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or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96 (2) of the Road Traffic Act)

- The holder of an international driver's permit can drive vehicles rented in accordance with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96 (2) of the Road Traffic Act)

Restrictions on Driving with a Foreign-issued International Driver's Permit

▪ Example of Restrictions on Driving with a Foreign-issued International Driver's Permit

- In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n individual driving in Korea with a foreign-issued international driver's permit may be prohibited from driving with the international driver's permit by the commissioner of a district police agency for up to one year. (Article 97 (1) of the Road Traffic Act)

√ If the aptitude test is missed or failed.

√ If the individual is involved in a traffic accident, regardless of who is at fault.

√ If the individual is a Korean national with a canceled or suspended driver's license who is still in the disqualification period.

√ If the individual has violated a law, order, or disposition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motor vehicle

❑ 따라서 별도의 “알기쉬운 외국어콘텐츠 개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기존 책자형 외국어콘텐츠를 가독성 있게 편집하거나 삽화를 활용하는 등 실효성 있는 외국어 법령정보 제공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하여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방향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법제정비(1032-301)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법제정비 사업(1032-301)은 법제처가 법령의 품질제고 및 문제점 개선, 국민의 법령이해도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다음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법령정비)** 규제 정비 등 법제적 개선사항을 추진하고, 정부입법과정 및 법제개선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함.

-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지원)**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국가법령체계와의 조화를 위하여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를 지원함.

- **(알기 쉬운 법제 구축)**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의 용어 및 문장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함.

❑ 동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4,000만원(△10.6%)이 감액된 11억 8,4000만원임.

【 2025년도 법제정비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법제정비	1,211	1,324	1,184	△140	△10.6
법령정비	315	494	467	△27	△5.5
자치법규 입안 및 정비 지원	329	311	274	△37	△11.9
알기 쉬운 법제 구축	567	519	443	△76	△14.6

자료: 법제처

나. 미래법제 사업 차별화 방안 검토 필요

❑ 법제처는 선제적으로 신기술 법제를 마련하고 현행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미래신기술 도입을 위한 규제 법제 혁신 사업”(이하 “미래법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25년 전년과 동일하게 정책연구비(260-02목) 7,500만원과 설명회·공청회 등을 위한 일반용역비(210-14목) 7,500만원 등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함.

【 미래법제 사업 추진 프로세스 및 예산 산출내역 】

개선과제 발굴·선정	⇨	조사・연구 <연구용역>	⇨	공론화 및 의견 수렴 <미래법제 포럼>	⇨	법체계 개선
중요도, 시급성이 높은 신기술 등 개선과제 발굴 및 선정		신기술 도입에 따른 기존 법체계 개선안, 새로운 법체계 연구 (해외 사례 포함)		국내외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논의 (연 1회)		▲법률 제정안 ▲현행 법령 개선안 ▲입법가이드 등 제공 (필요시 일괄개정 추진)

자료: 법제처

❑ 2024년 법제처는 미래신기술 안착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법제 과제를 조사·연구하고 법체계 개선 및 필요시 법령 일괄 정비를 추진한다는 사업 계획에 따라 ① 전자문서만으로 원본의 제출·보관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② “자격·면허 업무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라는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을 통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함.

2025년 법제처는 2024년 발굴한 정비과제의 법제지원을 추진[184]하고, 산업용

184) 법제처는 자격 · 면허 업무영역에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법제 가이드라인 마련, 인력요건 대체를 위한 개별법령 정비 지원 / 전자화 등을 통한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 감축 법령정비

로봇 활용, 우주항공 분야 산업 활성화 관련 법제지원 방안 등 법제 연구[185]를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설명함.

【 2024년 미래법제 사업 법령정비 및 법제지원 추진내역 】

구 분	주요내용	추진현황
행정 디지털화 촉진	행정 디지털화 촉진 및 국민 편의를 위하여 전자문서만으로 원본의 제출·보관 등이 가능하도록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 포함	보관·대조 유형 정비(28개 법령) 추진 제출·반납 유형 정비안 입법절차 진행 중
인공지능 활용 법적 기반 마련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하여 자격·면허 보유자만 수행할 수 있는 직무 등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활용 입법모델 마련	연구용역 진행(~11. 2.), 미래법제 포럼 등 추가 논의를 거쳐 입법모델 마련 및 법제지원 등 추진

【 2024년 미래법제 사업 정책연구비 집행 내역 】

주 제	수행기관	계약기간	계약방식	계약금액
자격•면허업무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3.6~11.2.	제한경쟁	6,800만원

❑ 인공지능 등 미래 핵심 선도기술을 신속히 도입·확산시키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일은 시급하고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나, 신기술 도입에 따른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법제 정비는 매우 광범위한 주제로 해당 분야의 소관 부처가 아닌 법제처에서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설명함.

185) * (연구과제안) ▲인허가·등록 요건에 있어서의 물적 기준의 산업용 로봇 활용을 위한 법제지원 방안 연구, ▲우주항공 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지원 방안 연구, ▲스마트농업 등의 도입을 통한 농어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지원 방안 연구 등

- 예를 들어 2024년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격·면허 업무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의 법적 기반 마련에 대한 연구는 자격·면허의 성격, 기득권 인정 정도, 경쟁 상황 등에 따라 규제 법제 가능성이 매우 다양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제처에서 포괄적 연구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기술변화에 따른 법제 정비는 해당 산업의 구조, 기존 규제와의 관계 등 소관 부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인공지능의 경우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중심으로 하는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분과가 출범[186]하여 운영되고 있고, 한국법제연구원에서도 올해 미래법제본부[187] 내 AI법제팀이 신설되어 연구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있음.

【 2024년 한국법제연구원 AI 관련 보고서 발간 내역 】

일 자	보고서 주제
2024. 8. 12.	생성형 AI 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입법적 시사점
2024. 8. 9.	행정작용에서 인공지능 활용과 통제
2024. 8. 8	생성형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공정이용의 한계
2024. 6. 14.	인공지능 거버넌스 - EU, 영국, 미국의 거버넌스 분석
2024. 6. 11.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특성과 쟁점- 우리나라 인공지능 입법에 대한 시사

자료: 한국법제연구원

❑ 또한, 법제처는 2024년 예산 편성 당시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사회적 공론화 및 의견 수렴을 위해 "미래법제 포럼" 행사를 개최하기로 계획한 바 있음. 그런데 법제처는 예산 편성 당시와 다르게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

186) AI전략최고위협의회는 상호 연계되고 통합된 시각에서 국가 전체 AI 혁신의 방향을 이끌 거버넌스 차원에서 출범한 협의회로,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의 AI 분야 최고의 법제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됨.

187) 한국법제원의 미래법제본부는 AI법제팀, 기후변화법제팀, 글로벌법제전략팀, 통일법제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됨.

으로 포럼을 주최하기로 하고 현재 준비 중임.

【 2024년 예산 편성 당시 미래법제 포럼 개최 예산 산출내역 】

미래법제 포럼 개최 예산 산출내역
■ 미래법제 포럼(일반용역비) 75백만원 = 1회 X 75백만원 - 행사 운영인력 운용(통번역 등 포함) 30백만원만원 - 행사장소 및 장비(온라인 송출) 임차 22백만원 - 국내외 전문가 초청비 및 수당 15백만원 - 자료집 등 인쇄, 관련 콘텐츠 제작 등 8백만원

자료: 법제처

【 2024년 미래법제 국제포럼 개최 계획(안) 】

미래법제 포럼 행사 개요			
○ (목적) 미래기술로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 선제적인 입법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국내외 법제 동향과 개선방안을 논의 ○ (주제) 인공지능(AI)과 미래법제 ○ (주최) 법제처 • 한국법제연구원 ○ (일시/장소) '24. 11. 12.(화), 13:30 / 웨스틴 조선(서울 중구)			
구분	**시 간**		**내 용**
개회식	13:20~13:30	10분	■ VIP 환담
	13:30~14:20	50분	■ 개회식(개회사, 환영사, 축사, 기조연설, 기념촬영 등)
세션1	**14:20~17:00**	**160분**	■ **AI 혁신과 신뢰를 위한 법제(국내·외 동향)**
세션2	17:00~18:15	75분	■ AI 활용 지원을 위한 미래 법제

자료: 법제처

❑ 공동주최로 행사를 추진함에 따라 포럼에서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입법 미비 및 불합리한 법령 등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법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AI 혁신과 신뢰를 위한 법제”라는 포괄적인 주제와 국내외 법제 동향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임.

행사 경비 역시 2024년 일반용역비로 편성된 7,500만원을 넘어 총 1억원(법제처가 약 7,300만원, 한국법제연구원이 약 3천만원 분담)[188]이 될 예정임.

❑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함에 따라 유사 행사의 중복 개최 가능성을 줄인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것이나, 통합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개별법의 구체적인 정비안을 도출하려고 했던 사업 계획과는 다르게 양 기관의 관심사를 포괄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제를 다루게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음.

또한, 앞서 언급한 AI 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분과 역시 EU의 AI법을 개관하고 국내 AI 법제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행사를 이미 올해 4월 개최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차별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음.

【 2024년 AI 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분과 1차 회의 내용 】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 개요
○ 일 시: 2024년 04월 16일,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188) <출처: 법제처> ○ 국제포럼 행사는 조달청 일반용역으로 대행사를 선정해 진행 중으로, 법제처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분담하는 비용(해외연사 항공권, 발표자료집 제작, 국내외 강사료)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분담.
- 본 행사는 총액 계약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항목별 실제 집행내역은 행사 종료 및 정산 시 조정될 수 있으며, 한국법제연구원 분담 내역은, 구체적인 내역에 관하여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어 법제처에서 세부내역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으며, 정확한 금액은 행사 종료 후 정산 시에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주요내용 : EU AI법 주요내용 및 국내 AI법제 발전방향 논의 - 주최/주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발제 및 종합토론 (1) 법제도 분과 운영 방향 및 향후 계획 / 000 변호사(분과장, 법무법인 00) (2) [기조발제] EU AI법 개관 및 시사점 / 000 교수(연세대학교) (3) [발제1] 금지되는 AI 관행 / 000 변호사(000 법률사무소) (4) [발제2] 고위험 AI 대상과 의무 / 0000 교수(한양대학교) (5) [발제3] 투명성 의무와 범용 AI / 000 변호사(법무법인 000) (6) [종합토론] AI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 법제 발전방향 논의

자료: 법제처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법제처는 2024년 포럼 개최결과를 바탕으로 동 행사의 차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보완·모색해야할 것으로 보임.

6.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1033-500)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1033-500) 사업은 법령정보, 법령입안·심사자료, 법령해석사례, 훈령·예규 등을 전자적으로 구축·유지·관리하고,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시스템 및 세계법제정보서비스 등 법제처의 정보시스템을 유지·관리하며, 그 밖에 법제처 정보화 관련 일반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경상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업임.

❑ 내년도 예산안에는 총 80억 4,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8%인 6억 9,800만원이 감액되었음

【 2025년도 법제업무정보화추진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B-A)	(B-A)/A
법제업무정보화추진	8,687	8,744	8,046	△698	△8
국가법령정보 통합 구축 및 서비스	5,558	5,082	4,632	△450	△9
정부입법 지원사업	1,603	2,166	1,618	△540	△25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서비스	487	333	433	100	30
세계법제정보서비스	83	118	99	△19	△16
처내업무 행정정보화	387	435	459	24	6
PC등 전산장비 및 정보보안 관리	326	373	526	153	41
법제교육시스템 운영	-	-	40	40	100
상용임금 및 운영지원 등	243	237	239	2	0.8

자료: 법제처

나. 정보취약계층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 편의 증진 방안 마련 필요

❑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 사업 내 '국가법령정보 통합 구축 및 서비스' 사업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생산하는 법령정보를 지속적으로 통합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인공지능(AI)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 구축을 통한 법령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역사업은 ①민간 법령용어사전 업데이트, ②법령정보 전자점자문자 제공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③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④법령정보 관리 및 업데이트 위탁, ⑤국가법령정보시스템 유지보수, ⑥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ISP 수립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5년도 예산안에는 46억 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2025년 국가법령정보 통합 구축 및 서비스 사업 예산 편성 내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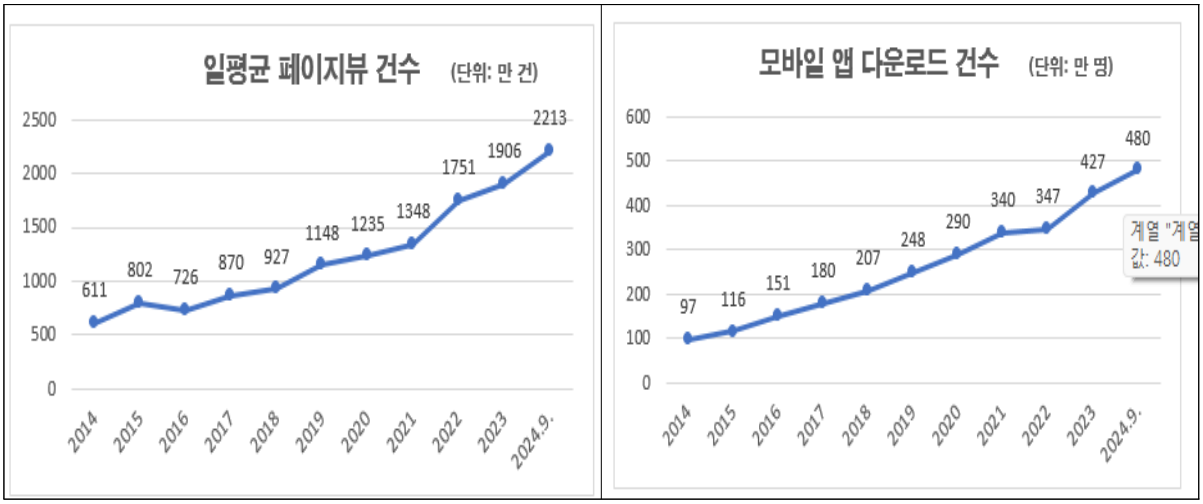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사업명		주요 내용	2025년 예산(안)
국가법령정보 통합 구축 및 서비스	민간 법령용어사전 업데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용어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의 법령용어사전 업데이트 데이터 및 라이센스 구매	5
	법령정보 전자점자문자 제공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점자법」 제12조의2에서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동일 내용의 점자분서 제공을 의무화함에 따라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의 본문 및 첨부파일을 전자점자문서 형태로도 제공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178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질문을 통해 법조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로의 전환 기반 마련	513
	법령정보 관리	관보에 공포되는 법령정보 업데이트 및 법령정보	2,044

	및 업데이트 위탁	간 연계정보 현행화 등을 관리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수행	1,704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ISP 수립	국내외 법제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해 법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환경 마련	188

❑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현행 헌법, 법령 및 조약 등 국민이 원하는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관리·제공하는 법령검색시스템으로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법령검색시스템 이용자 현황 】



자료: 법제처

❑ 그런데 일반 국민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률 증가 추이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위한 시스템 개편은 미흡한 상황이며, 2025년 예산안 중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법령정보 전자점자 문자 제공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1억 7,800만원)'이 유일함.

❑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고령층 등은 국민신문고(국

민제안 및 민원)를 통해 시스템 활용에 있어 불편 요소 등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한 국민제안 및 국민신문고의 주요 내용 】

일자	주요 내용	
2023. 5. 22	시각장애인 불편 요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등을 찾아볼 때 음성인식이 불편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불편 초래
2023. 8. 25.		시각장애인들이 법령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음성지원 서비스 지원 필요
2022. 5. 10.	고령층 등 불편 요소	법령 본문의 가독성이 좋지 않아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폰트 등 화면 개편 필요
2022. 6. 30.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법령정보에 대한 편집 정비 등을 통해 법령 본문의 가독성을 높일 필요
2022. 11. 14.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내 글자 크기가 너무 작고 기능을 한눈에 파악하기 불편함
2023. 5. 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웹(PC)을 스마트폰에서 볼 때 불편하므로, 스마트폰 기기에 맞추어 화면이 조정되는 반응형 웹으로의 개편이 필요

자료: 법제처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법령정보 이용에 불편이나 차별을 겪지 아니하도록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하여 효율적인 수단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189],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에서는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등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90].

189)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따라서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운영에 있어 시각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한 국민제안 및 민원 내용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시스템 개편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191].

- 우선,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불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키보드와 마우스를 함께 사용해야만 법령조문을 검색할 수 있는데, 마우스 사용이 불편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법령 검색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키보드만으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개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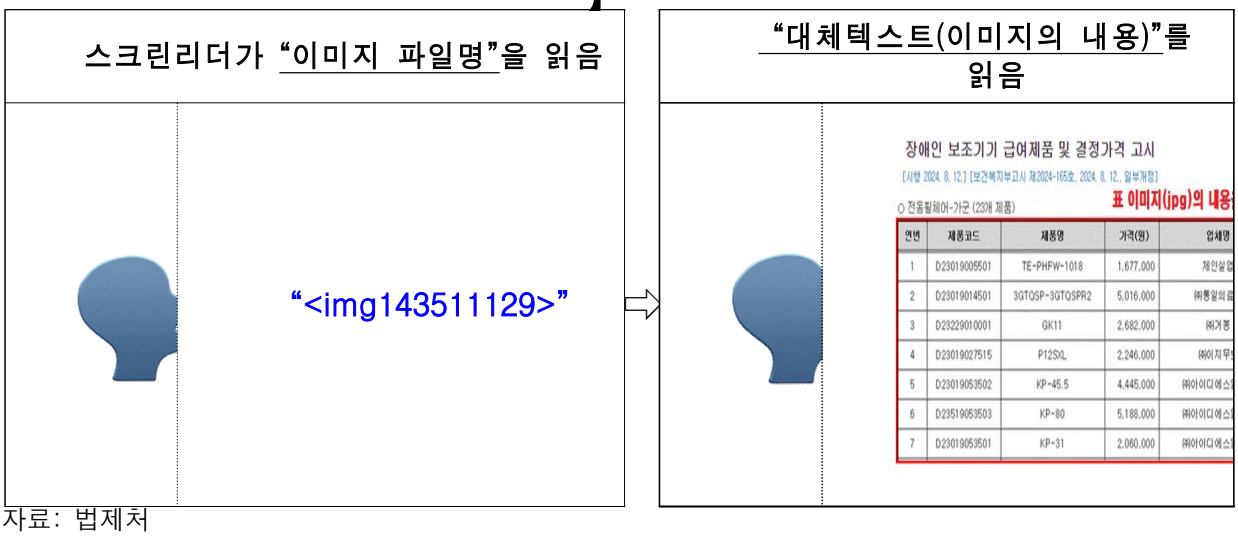
190)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91)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을 정보취약계층 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등을 합하여 총 7억 6,2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자료: 법제처

②현재는 법령정보 내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스크린리더로 읽는 경우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대체텍스트로 제공되고 있으나, 법령정보 상의 이미지를 확인하여 대체텍스트로 부여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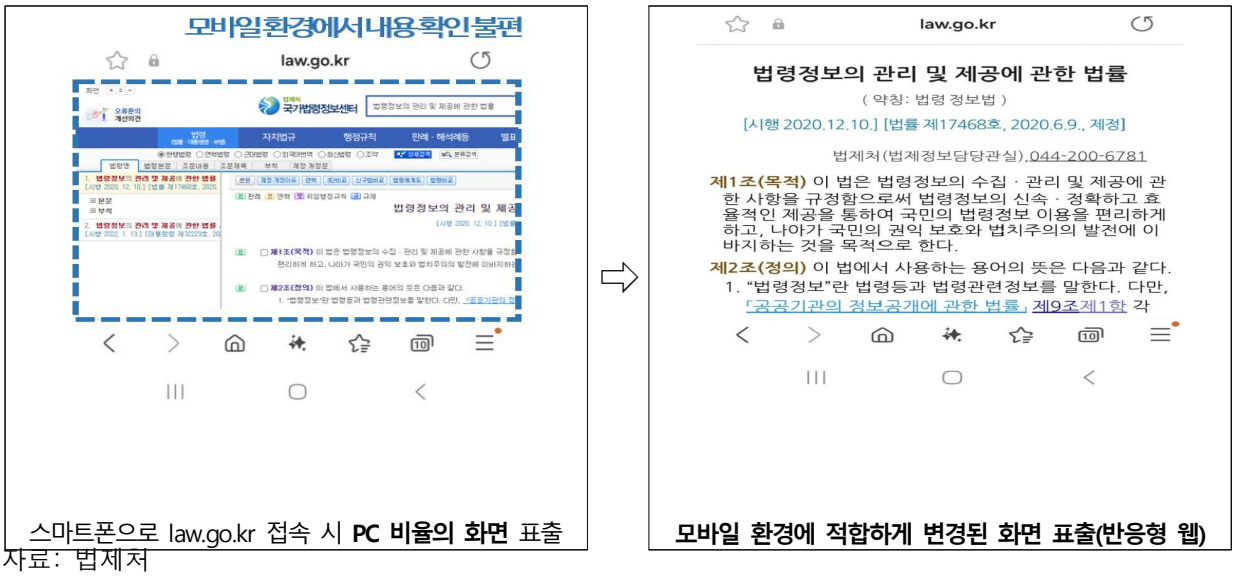
【 법령정보 내 이미지 정보를 스크린리더로 읽을 수 있도록 개편 】



자료: 법제처

- 다음, ①고령층을 위한 개편 방안으로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화면 비율로 인해 내용 확인이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 환경에 적합하게 변경된 화면이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 고령층을 위한 반응형 웹 개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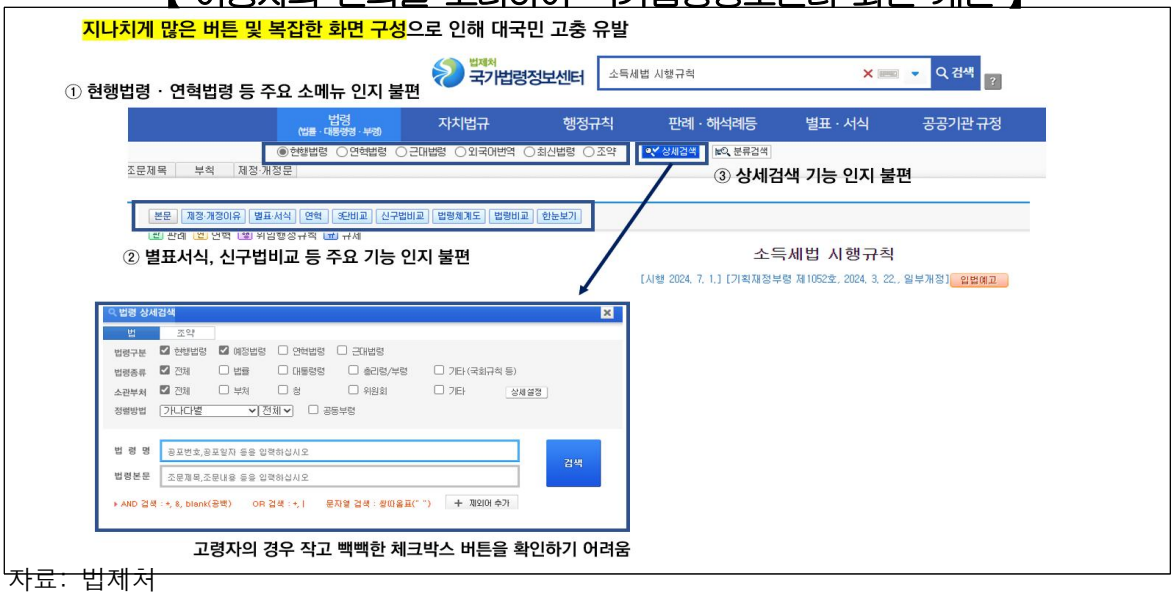
스마트폰으로 law.go.kr 접속 시 **PC 비율의 화면** 표출

모바일 환경에 적합하게 변경된 화면 표출(반응형 웹)

자료: 법제처

②현재는 법령정보 검색에 있어 주요 기능을 인지함에 있어 불편 요소가 있는 만큼 직관적으로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개편 】



자료: 법제처

다.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사업계획 내실화 필요

❑ 국가법령정보 통합 구축 및 서비스 사업 중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은 법제업무의 과학행정 구현을 위하여 국내·외 법제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해 법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환경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1억 8,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2025년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의 세부 산출내역 】

○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ISP 수립(188백만원)

- (요구) 법제업무의 과학행정 구현을 위해 국내외 법제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해 법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환경 마련, ‘24년 대비 신규 소요

- (산출)

업무		업무별 가중치	해당여부 (O, X)	총업무 가중치	업무 요소	난이도	해당 여부 (O, X)	난이도 계산
환경분석	경영환경 분석	3.5	X	32.2	업무규모 (단순)	0.7	O	0.49
	정보기술 환경분석	3.7	X		업무규모 (보통)	1.0	X	
	제도/규정 분석	2.0	O		업무규모 (복잡)	1.3	X	
현황분석	경영전략 분석	2.8	X		업무의특성 (단순)	0.6	X	
	업무분석	6.1	O		업무의특성 (보통)	1.0	O	
	정보시스템 분석	6.1	X		업무의특성 (복잡)	1.4	X	
	벤치마킹	2.5	O		기존시스템 (단순)	0.7	O	
	차이분석	2.0	O		기존시스템 (보통)	1.0	X	
목표	업무프로세스 설계	6.3	X		기존시스템 (복잡)	1.3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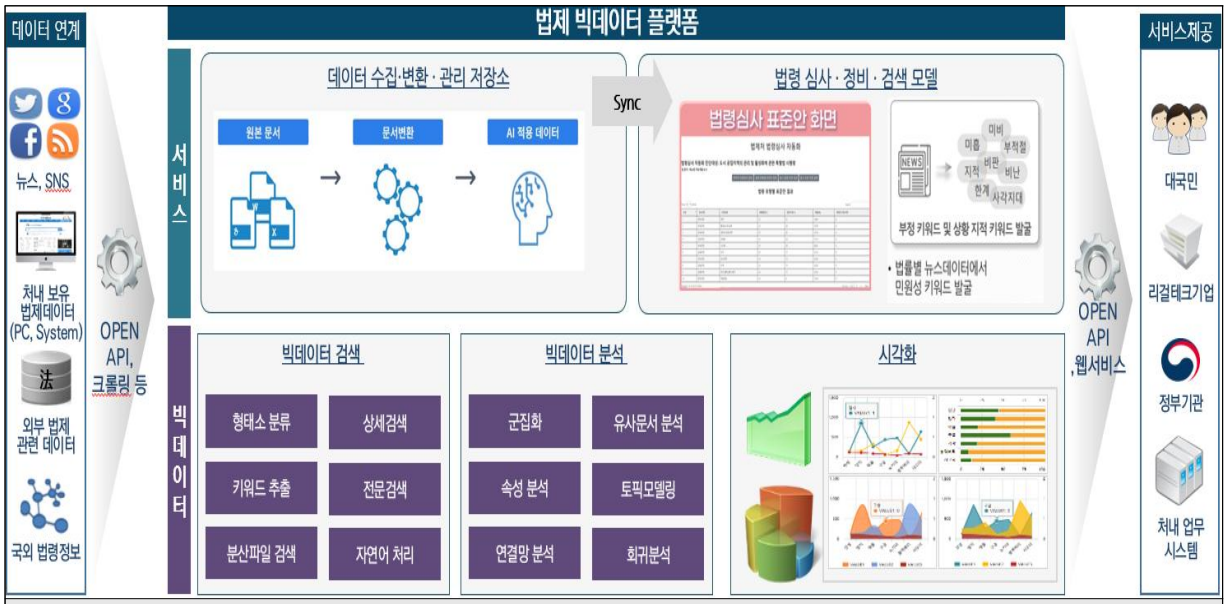
모델수립	정보화 전략 수립	3.3	O		ISP 유형 (보통)	1.0	O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	5.0	O		ISP 유형 (복잡)	1.4	X
	정보관리 체계수립	3.8	O		정보자원규모 (단순)	0.6	X
	제도/규정 개선안 수립	2.5	X		정보자원규모 (보통)	1.0	O
이행계획수립	업무프로세스 개선계획 수립	3.5	X		정보자원규모 (복잡)	1.4	X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3.8	X		BPR수행 (보통)	1.0	X
세부계획작성	소요예산 산출	3.5	O		BPR수행 (복잡)	1.3	X
	기대효과 산정	2.5	X				
	제안요청서 작성	4.0	O				
컨설팅업무량 계산 (가중치 x 난이도)						15.778	
ISP 단가(2024년)						10,835,831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부가세 별도)						170,967천원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부가세 포함)						188,065천원	

자료: 법제처

❑ 법제처는 다양한 형태의 국내·외 법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분석·활용하여 민간 및 정부기관 등에 공유·제공하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①외부 법제 관련 데이터(국회 심사보고서, 발의 법률안, 법원·헌재 판례평석), ②해외 법제 데이터(각국의 법령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또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사업을 통한 외국의 원본 법령정보 수집), ③뉴스, SNS 데이터(국민이 불편·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법령정비 수요 의견 데이터 등) 등을 수집·분석하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임.

【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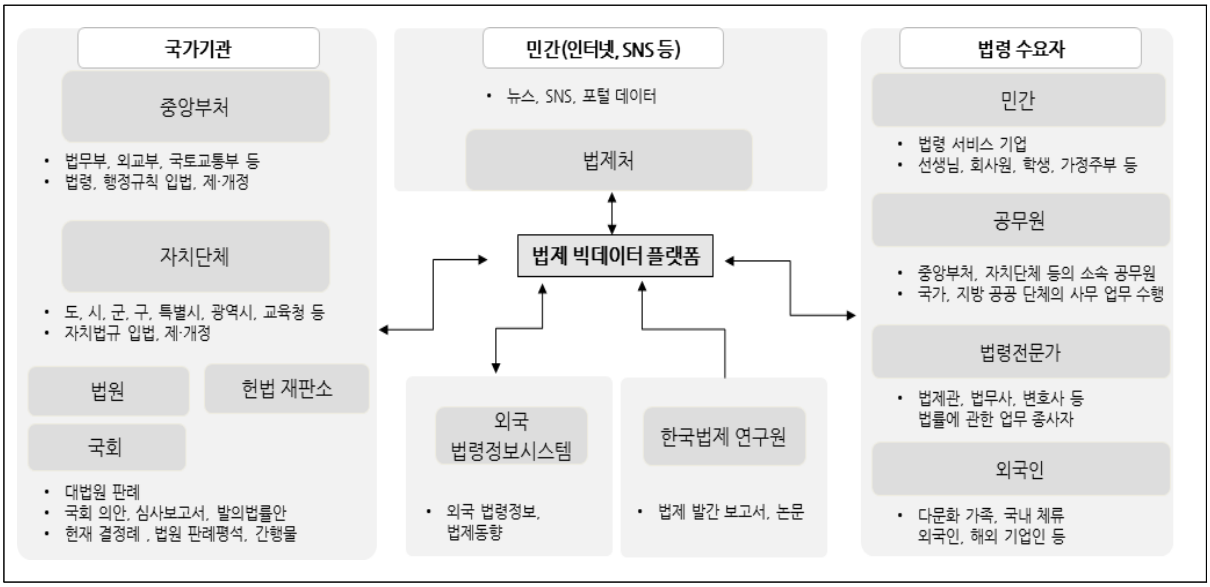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의 주요 수집·분석 데이터

- 외부 법제 관련 데이터: 국회 심사보고서, 발의법률안, 법원·헌재 판례 평석
- 해외 법제 데이터: 각국의 법령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또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ODA 사업을 통한 수원국의 원본 법령정보 수집(예시: 베트남, 인니 법령 등)
- 뉴스, SNS 데이터: 국민이 불편·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법령정비 수요 의견 데이터 등

자료: 법제처

【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수집·제공 흐름도 】



자료: 법제처

❑ 또한, 향후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된 이후에는 동 플랫폼을 이용하여 ①데이터 기반 법령심사를 수행하고, ②데이터 분석을 통한 불공정·불합리한 법조문 발굴 및 법령정비를 추진하며, ③국민, 기업 및 정부부처에 관련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제공하여 법제 관련 데이터에 대한 검색·공유·활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임.

【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의 활용 방안 】

활용 방안	주요 내용
법령심사	법령입안·심사기준 반영과 법령심사 의뢰안과 심사 결과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①반복적 오류 탐지, ②표준안 비교, ③참고 법령 및 조문 조회 기능 제공을 통해 데이터 기반 법령심사 추진
법령정비	민원성 뉴스, SNS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공정·불합리한 법조문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국민수요에 최적화된 법령정비 추진
공동활용	플랫폼에서의 공공데이터(국민, 기업), 공동활용데이터(정부부처) 제공을 통한 데이터 활용의 편의성 및 조회의 신뢰성 확보

자료: 법제처

❑ 그런데 신규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192] 절차를 거치도록 한 이유는 계획수립 단계를 내실화하고 기존에 구축되어 운영 중인 정보화 시스템간 중복을 방지하는 한편, 국가정보화 관련 주요정책 지침에 따라 정보화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

192) 조직, 기관,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보기술을 연계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짜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

법제처는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우선, 법제처는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의 목적을 다양한 형태의 국내·외 법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창구를 마련하기 위함임을 고려하여 수집하고자 하는 데이터(외부 법제 관련 데이터, 해외 법제 데이터 및 뉴스, SNS 데이터)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질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바, 정보공개의 범위, 개인정보, 저작권 이슈 등을 이유로 활용가치가 높은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데이터의 오류 또는 정확성 확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된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193].

- 예를 들어,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수집하고자 하는 데이터 중 법원·헌법재판소 판례 평석 등은 저작물 사용 동의 등이 필요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고, 뉴스, SNS 데이터의 경우 해당 정보의 진실성 여부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 정보의 활용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음,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법제 관련 정보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다른 국가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원활히 됨을 전제로 하

193) 오윤경, 차남준, 「공공분야 데이터플랫폼 활용성 제고방안 연구」, 2024.1. 66면.

는바, 정보 공유 및 수집에 관한 법적 근거 보완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주요 수집·분석 데이터 중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등은 국회에, 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는 각각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해당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음.

- 그런데 현행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194]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등록된 데이터 등의 수집·활용(제8조), 데이터의 제공 요청(제10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데이터 제공의 대상 및 요청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외에 다른

19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제8조(데이터의 등록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분야와 관련하여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를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이라 한다)에 등록할 수 있다.

제9조(등록된 데이터 등의 수집·활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하여 수집·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의 수집 방법 및 활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데이터의 제공 요청)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의 이용 목적, 분석 방법 및 이용 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요청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헌법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또한, 현행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195]은 법제처가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집·관리할 수 있는 법령정보 중 법령관련정보의 범위에 ①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중 해당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제공하는 정보, ②「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한 입법안,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비용에 관한 추계서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 판례,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등은 제외되어 있음[196].

---

195)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정보"란 법령등과 법령관련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3. "법령관련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중 해당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제공하는 정보

나.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한 입법안,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비용에 관한 추계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서 해당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제공하는 정보

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의견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시례

제5조(법령정보의 수집) ①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법령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1. 관보를 이용하여 수집하는 방법

2. 제8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과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법령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196) 참고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505호)에서는 법령관련정보의 범위에 법원 판례를 추가함으로써 법령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법원 판례를 수집·제공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따라서 법제처는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법적 근거 보완을 검토하고,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1034-300)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1034-300)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법제전문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제처 내 직원들에게 교육훈련을 하는 사업으로, 내역사업으로는 다음의 사업이 있음.

- **(법제교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법제전문교육을 실시함.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법제전문성 향상)**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입법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법제실무인력의 자발적 연구 및 전문가와의 교류를 활성화함.

- **(청년인턴 제도 운영)**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에 따라 청년들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국정 참여 및 실무경험 등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

❑ 동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7억 2,600만원(46.7%) 증액된 22억 8,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주요 증액 사유는 법제교육 운영 관련 임차료 증액, 청년인턴 제도 운영 관련 증액 등임.

【 2025년도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1,412	1,555	2,281	726	46.7
법제교육	1,239	1,318	2,017	699	53.0
행정효율성 증진 및 법제전문성 향상	173	156	130	△26	16.7
청년인턴 제도 운영	-	81	134	53	65.4

자료: 법제처

나.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 계획 변경에 따른 임차료 감액 필요

❑ 법제처 법제교육은 ① 양재동 법제교육센터, ② 시·도 순회교육, ③ 맞춤형 교육의 3개 유형의 집합교육과 온라인 이러닝 교육으로 분류해볼 수 있음.

그러나 행정법령의 증가, 자치법규의 제·개정 빈도 증가 등으로 법령 입안 및 집행 등을 담당하는 직원의 법제 역량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현재의 법제교육 방식과 내용만으로는 법제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따라 법제처는 5일 이상 장기과정 운영 등 법제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4년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 완공된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에서 법제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은 11월 개원 예정으로, 법제처는 강의실 및 분임토의실 등 시설을 임차하여 법제교육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설명함. 법제처는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에서 매주 2~3개 과정을 개설하고 일 60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며 안면도 내 위치한 점을 고려하여 오송-태안 및 서울-태안간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임.

【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 개원 추진 경과 】

추진 경과 및 개원 일정
<추진경과> ㅇ '15년 1월 법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시설 설치 필요성 보고 ㅇ '15년 12월 기재부, 교육기관 현황조사 등을 거쳐 세종시 이전 부처 공동 활용을 위한 통합 태안정책연수원 건립 추진(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위탁개발 방식) - 법제처는 법제교육원 개원을 목표로 태안정책연수원 입주수요 제출 ㅇ '19년 4월 교육수요 재조사 및 공사비 단가 재검토 거쳐 기금개발방식으로 사업계획 변경 후 재추진 ㅇ '21년 9월 태안정책연수원 공사 발주 ㅇ '24년 9월 완공 ㅇ '24년 11월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 개원 <개원 일정> ㅇ (개원일) 11월 초 예정 ㅇ (위치)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꽃지해안로 134번지 ㅇ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 시설) 교육동(1~3층), 숙소동[B1~8층, 220명(2인실 18개, 2인실(커넥팅 48개, 4인실 22개) 수용 숙소, 식당, 매점], 대강당(1~2층) 등 3개동 구성 * 이 중 법제처는 중강의실 1개, 소강의실 1개, 분임토의실, 회의실 및 강사대기실 사용

자료: 법제처

❑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활용하여 개발·취득되는 국유재산으로, 국유재산 기금 개발 사업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사용료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법제처는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기 위하여 2024년에 이어 2025년 법제교육 운영 관련 강의실 및

사무공간 임차료를 예산에 반영하였음.

2024년의 경우 예산편성 당시 9월 입주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필요한 임차료만 반영하여 강의실 임차료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은 1년간 필요한 강의실 임차료 4억 7,85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 2024~2025년 법제교육원 관련 임차료 예산 편성 내역 】

구분	2024년	2025년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 육성 (1034-300)	**220,400천원**	**478,500천원**
강의실 임차료(210-07목)	(29,000원×7,600명)	(29,000원×1,650명×10월)
기관운영 기본경비 (1011-250)	4,598천원	9,195천원
사무공간 임차료(210-07목)	(695,594원×6월×1.1)	(695,594원×12월×1.1)

자료: 법제처

❑ 그런데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기획재정부는 수요부처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 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여[197], 법제처가 법제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경우에는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법제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법제처간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 사용협약 시 무상 사용 방침이 명시적으로 반영될 예정인 것으로 설명함.

❑ 동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2024년 임차료 예산은 전액 불용될 예정이며, 2025

197) <출처: 법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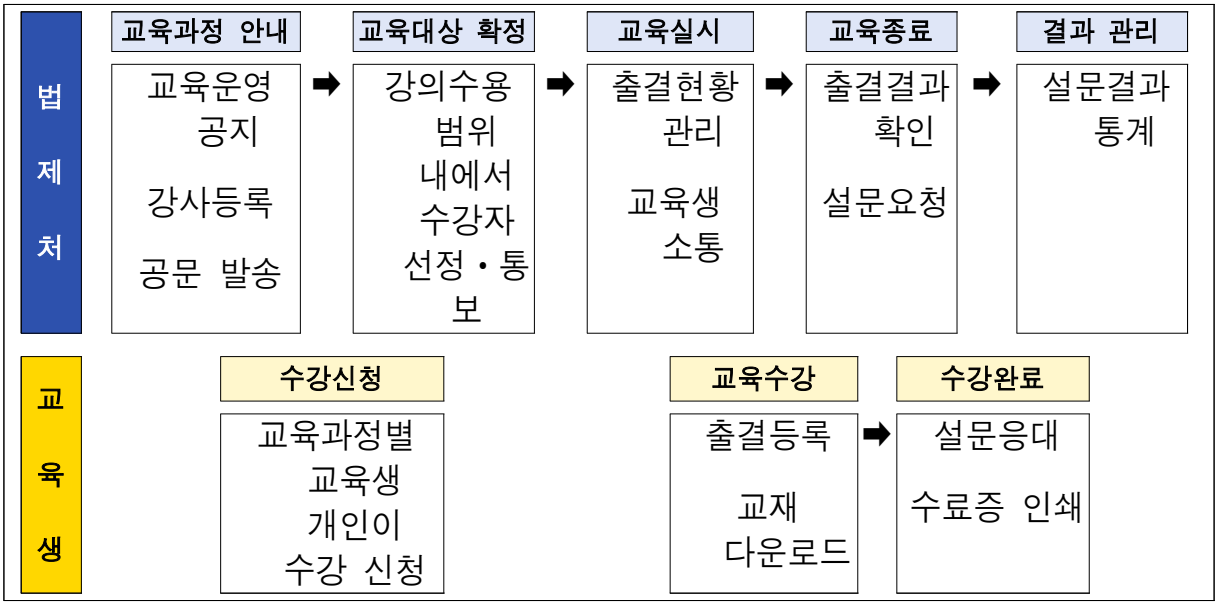
년 임차료 예산의 경우에도 편성이 필요하지 않아 현재 예산안에 계상된 금액인 강의실 임차료 4억 7,850만원 및 사무공간 임차료 920만원 전액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다. 법제교육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법제처는 2023년 2억 5,300만원의 예산[198]으로 법제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2024. 2월부터 운영 중임. 법제교육시스템(edu.moleg.go.kr)은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수강신청, 교육생 선정, 출결 확인 및 수료증 발급 등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임. 법제교육시스템 개통 이후 현재까지 약 9,515명이 회원가입 하였고, 동 시스템을 통하여 4,401명이 법제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확인됨.

198) 일반연구비(260-01목) 법제교육운영시스템 구축 632,000원×354.7FP= 224,170천원
자산취득비(430-01목) 법제교육 운영시스템 지원용 상용SW 도입: 29,000천원

【 법제교육시스템 개요 】



자료: 법제처

❑ 법제처는 법제교육시스템을 통하여 교육생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성별, 소속 기관 및 주소 등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 기술을 적용하여 관리[199]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법제교육시스템은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으로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망 분리를 실현하지 못한 바, 개인정보 보안을 위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은 각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취급

199)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유출·위조 등이 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을 적용해 권한 관리, 암호화 조치 및 접속 기록 보관 등의 안전조치를 하고 있음.

하는 경우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하고[200] 개인정보는 내부망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법제교육시스템은 인터넷망에만 구축되어 개인정보를 인터넷망에 보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외부 해킹 또는 관리자의 실수 등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임.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르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제교육시스템을 내부망과 인터넷망으로 분리하고, 인터넷망 DB에는 법제교육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을 선별·저장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등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망분리 등 법제교육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약 2억 9,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 법제교육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예산 산출내역 】

내 용	관련 비목	산출내역	
가. 시스템 내부망/외부망 분리	260-01 (연구용역비)	205백만원 × 1식	205백만원
나. (망)복제 솔루션 구입	430-01 (자산취득비)	14.67백만원 × 6개	88백만원

자료: 법제처

200)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40조(내부망 · 인터넷망 분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 · 운영하여야 한다.

8. 정책연구비 관련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정책연구비(260-02)는 각 부처에서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 관련 비용으로, 학술, 기술, 평가, 정책개발 등의 업무에 대한 용역비임.

❑ 내년도 예산안에는 총 9억 7,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억 7,300만원(△15.1%)이 감액되었음.

【 2025년도 법제처 정책연구비 예산안 편성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B-A)	(B-A)/A
세계법제정보서비스 (1031-301)	64	40	90	50	125.0
법제정비 (1032-301)	407	496	371	△125	△25.0
행정법제 혁신 (1032-302)	566	440	410	△30	△6.8
외국법제기관교류 (1034-301)	45	100	50	△50	△50.0
법제정책연구개발 (1035-300)	74	68	50	△18	△26.5

자료: 법제처

나.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공정성 담보 및 연구수행기관 다변화 방안 마련 필요

❑ 정책연구용역 사업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임.

❑ 법제처가 최근 3년간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사업 및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은 10억 3,700만원, 2023년은 12억 2,400만원, 2024년은 11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24년에는 법제정비(1032-301) 사업에 4억 9,600만원이 배정되어 가장 많은 비중(43.3%)을 차지하였음.

【 최근 3년간 각 사업별 정책연구용역 수행 사업 및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년
세계법제정보서비스 (1031-301)	28	69	40
법령심사지원 (1032-300)	40	-	-
법제정비 (1032-301)	501	421	496
행정법제 혁신 (1032-302)	344	610	440
외국법제기관교류 (1034-301)	50	50	100
법제정책연구개발 (1035-300)	74	74	68

자료: 법제처

❑ 그런데 법제처가 최근 3년간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수행 사업 15건 중 11건(73%)을 수의계약으로, 나머지 4건(27%)은 제한경쟁으로 수행하였고, 2023년은 22건 중 14건(64%)은

수의계약, 8건(36%)은 제한경쟁으로 수행하였으며, 2024년은 20건 중 9건(45%)을 수의계약, 11건(55%)은 제한경쟁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3년간 수행한 총 57건의 정책연구용역 계약 중 수의계약 체결 비중[총 34건(59.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법제처 수행 정책연구용역과제 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주제	수행자	계약기간	계약방식	계약금액
세계법제정보서비스(1031-301)	행정·안전, 국토·환경, 교통·운수, 농업·수산 분야 남북한 법령 용어 비교 분석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3.24.~10.31.	**수의**	25
법령심사지원(1032-300)	지정제도의 입법 현황 분석을 통한 심사 기준 및 입법모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5.12.~11.12.	**수의**	36
법제정비(1032-301)	법령상 “협의”의 의미 명확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연구	미래문화제도정책연구원	4.13.~10.12.	**수의**	44
	소상공인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한 법령정비 방안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6.1.~9.15.	**수의**	90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연구(해수부)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3.8~9.5.	제한경쟁	59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연구(행안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3.30~9.26.	제한경쟁	60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연구(외교부)	한국법제연구원	3.30~9.26.	제한경쟁	54

	2022년도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 연구	안양대학교산학협력단	5.26.~11.22.	제한경쟁	49
행정법제 혁신 (1032-302)	2022년도 입법영향분석	**한국법제연구원**	3.18. ~ 9.14.	**수의**	106
	2022년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령정비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3.14. ~ 9.10.	**수의**	134
	「행정기본법」의 보완·발전을 위한 신규의제 입안 방안 연구 1	한국공법학회	3.11. ~ 9.8.	**수의**	36
	「행정기본법」의 보완·발전을 위한 신규의제 입안 방안 연구 2	한국행정법학회	3.08. ~ 9.5.	**수의**	36
외국법제기관교류 (1034-301)	아시아 법제 현안에 기반한 외국법제기관 법제 역량강화 및 교류협력 추진전략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5.17.~11.30.	**수의**	45
법제정책연구개발 (1035-300)	입법과정에서의 정부 내 협의절차 제도화 방안 연구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4.26.~10.26.	**수의**	40
	영미법계 입법례 검토를 통한 규제 입법 방식 전환 연구	사단법인 정책법령연구소	8.19.~12.19.	**수의**	34

자료: 법제처

【 2023년 법제처 수행 정책연구용역과제 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주제	수행자	계약기간	계약방식	계약금액
세계법제정보서비스 (1031-301)	북한의 환경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3.24.~10.31.	제한경쟁	37
	과학기술·지적재산권 및 보건·사회복지 분야의 남북한 법령용어 비교·분석 연구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3.29.~10.31.	**수의**	27

법제정비 (1032-301)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자격시험 응시자 등 부담완화 법령 정비방안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5.17.~11.15.	제한경쟁	47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금전납부의무 부담완화 법령정비 방안 연구	아이앤아이리서치	5.15.~11.13.	**수의**	48
	주택·건축·도로·교통 분야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를 위한 연구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4.28.~11.14.	**수의**	59
	보건·의료 분야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를 위한 연구 (1)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5.2.~10.30.	제한경쟁	60
	보건·의료 분야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를 위한 연구 (2)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4.28.~10.24.	제한경쟁	58
	서울특별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을 위한 법령·조례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사단법인 자치법연구원	6.7.~11.24.	제한경쟁	68
	경기도 등 8개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을 위한 법령·조례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6.2.~11.24.	제한경쟁	70
행정법제 혁신 (1032-302)	이의신청 제도의 운영실태·국민인식 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갤럽조사연구소	4.18.~11.17.	**수의**	143
	부관의 독립 취소·쟁송에 관한 입안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3.29.~7.21.	**수의**	15
	의제된 인허가 취소·철회와 그 효력에 관한 입안 방안 연구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3.24.~7.21.	**수의**	15
	행정규칙의 효력 및 한계에 관한 입안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글로컬산학협력단	3.24.~7.21.	**수의**	15

	외국인의 행정법 적용 일반기준에 관한 입안 방안 연구	한국법제발전연구소	3.29.~7.21.	수의	15
	제재처분의 일반적 감경기준에 관한 입안 방안 연구	한국행정법학회	5.2.~8.31.	수의	9
	대행 제도에 관한 입안 방안 연구	한국행정법학회	4.24.~8.21.	수의	9
	2023년 입법영향분석: 어린이 안전 관리 제도	**한국법제연구원**	3.30.~10.13.	수의	82
	2023년 입법영향분석: 위생용품 관리 제도	**한국법제연구원**	3.30.~9.25.	수의	52
	2023년 입법영향분석: 장애인 등록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14.~10.06.	수의	64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방안 연구	한국공법학회	3.15.~8.12.	제한경쟁	145
외국법제기관교류(1034-301)	주요 권역별 법제 현안 공동대응 사례 연구 및 아시아 권역 적용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6.20.~11.30.	수의	45
법제정책연구개발(1035-300)	중소기업 인·허가 규제 유연화 정비방안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5.30.~11.30.	제한경쟁	74

자료: 법제처

【 2024년 법제처 수행 정책연구용역과제 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주제	수행자	계약기간	계약방식	계약금액
세계법제정보서비스(1031-301)	북한의 보건·의료분야 법제 연구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3.22.~10.31.	제한경쟁	39
법제정비(1032-301)	사업단계별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정비방안 연구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6.17~12.16.	수의	48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방안 연구	㈜한국정책능력진	5.31.~11.30.	수의	43

		흥원			
	자격•면허업무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3.6~11.2.	제한경쟁	68
	시・군・구 소관 조례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한국입법학회	5.30.~10.31.	제한경쟁	18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분석 및 쟁점 연구	행정법과법치주의학회	6.3.~12.3.	제한경쟁	50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6.4.~12.4.	**수의**	63
	알기 쉬운 약관・계약서 만들기	(재)한국법령정보원	2.27.~11.27.	제한경쟁	40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경제・금융 분야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를 위한 연구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3.4.~10.28.	제한경쟁	68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재산・가족관계 분야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를 위한 연구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3.4.~10.28.	제한경쟁	68
행정법제 혁신 (1032-302)	2024년 입법영향분석: 민간자격증 제도	**한국법제연구원**	3.18.~10.04.	**수의**	90
	2024년 입법영향분석: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한국법제연구원**	3.18.~10.09.	**수의**	90
	2024년 입법영향분석: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6.~10.11.	제한경쟁	82
	자동적 처분 도입 촉진 및 입법 가이드라인 수립 방안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자치법연구원	3.04.~6.30.	**수의**	39
	신기술 적용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법제 혁신 방안 연구	사단법인 기술과법연구소	3.26.~9.13.	**수의**	76
	행정기본법상 국민권리구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	한국행정법학회	7.26.~10.23.	제한경쟁	27
외국법제기관교류 (1034-301)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구성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3.14.~11.30.	**수의**	45
	아시아 지역 리걸테크 발전 현황 및 상호 협력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4.19.~11.30.	제한경쟁	45

법제정책연구개발(1035-300)	여러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을 위한 현황 분석 및 심사기준 · 입법모델 연구	(사)한국행정법학회	4.25.~11.13.	제한경쟁	48
	과징금 합리화 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9.13.~12.13.	**수의**	20

자료: 법제처

❑ 특히, 최근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한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수행기관을 살펴보면, 34건의 수의계약 체결 건 중 12건(35.3%)을 한국법제연구원과 체결하였고, 제한경쟁으로 계약을 체결한 건수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법제분야 연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특정 기관에 연구용역이 편중되는 것은 다양한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함에 한계적 요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정책연구용역 사업에 있어 특정 기관과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전문법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가 제한적이고, 정책연구용역의 건당 단가가 낮아 경쟁입찰 시 입찰자가 없어 재공고를 통해 부득이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경우가 대다수였다는 입장임.

❑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체결 시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수의계약은 특정인 또는 특정기관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연구기관 간 공정한 경쟁을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함으로써 특정 연구기관의 편중현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2022년 예산안 심사 시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제처로 하여금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4항[201]을 개정하여 입법영향분석의 모든 연구과제를 '한국법제연구원'과의 수의계약에 의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법제처는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개정[202]한 바 있음에도 여전히 관련 문제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법제처는 향후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의계약 비중을 낮춰 경쟁입찰 원칙을 강화하고[203], 국회에서 입법영향분석 등 용역에 있어 다양한 전문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한 바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정책연구용역 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다변화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201) 구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7조(입법영향분석의 실시) ④ 법제처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한국법제연구원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02) 개정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7조(입법영향분석의 실시) ⑥ 법제처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입법영향분석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03)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연구용역비(260목) 집행기준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통한 정책연구과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진하되,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감사원 소관】

(전문위원: 박동찬)

제2장 세부사업별 검토의견

1. 인건비 : 집행 실적을 고려한 감액 조정 필요

가. 편성 현황

□ ‘인건비(1101-151)’는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개별 법령에 따라 공무원에게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경비로서, 예산 규모는 총 989억 9,400만원임. 보수 및 연가보상비로 구성되어 있고, 전년 대비 48억 1,200만원(5.1%)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액 사유는 정원 증가(48명 증원) 및 공무원 보수 인상률(3.0%) 등임.

<2025년도 인건비 예산안>

(단위: 백만 원, %)

사 업 명	2023년 예산		2024년 예산		2025 예산안	증감 (B-A)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현액	집행액 (8월말 기준)			(B-A)/A
인건비	92,533	89,022	94,182	61,924	98,994	4,812	5.1
· 보수(110-01)	91,815	88,284	93,453	61,912	98,202	4,749	5.1
· 연가보상비(110-05)	718	718	729	12	792	63	8.1

* 자료 : 감사원

나. 집행 실적을 고려한 감액 조정 필요

□ 최근 3년간 감사원의 인건비 집행률은 2021년 97.8%, 2022년 96.8%, 2023년 96.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불용액 규모 면에서도 2021년도 19억 8,700만원, 2022년도는 28억 7,000만원, 2023년도 35억 3,100만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최근 4년간 감사원 인건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 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8월말기준) (C)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89,716	-	89,716	-	-	89,716	87,729	97.8	-	1,987
2022	90,715	△143	90,572	-	-	90,572	87,702	96.8	-	2,870
2023	92,533	-	92,533	-	-	92,533	89,002	96.2	-	3,531
2024	94,182	-	94,182	-	-	94,182	61,912	65.7	-	-

* 각 연도 집행액은 연도말 기준, 2024년도 집행액은 8월말 기준
** 자료 : 감사원

□ 2024년 8월 말 현재까지 집행액은 619억 2,400만원으로, 집행률은 65.7%임.

□ 2022년도 및 2023년도 감사원의 세출예산의 성질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도 전체 예산 1,354억 4,400만원, 2023년도 1,389억 4,900만원 중 약 70%가 (인건비성 경비와 물건비성 경비로 구분한

것으로 본 예산 외에 개별 사업에 편성된 인건비가 포함됨) 인건비성 경비에 해당하는데, 불용액은 각각 30억 6,700만원, 36억 9,700만원으로 해당 회계연도 불용액의 46%, 74%를 차지하고 있음.

<2022년 및 2023년도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 내역>

(단위: 백만 원, %)

구 분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인건비	94,368 (69.7)	96,412 (69.4)	91,031 (71.8)	92,715 (69.8)	- -	- -	3,067 (46.0)	3,697 (73.7)
물건비	37,016 (27.4)	35,823 (25.8)	32,374 (25.5)	34,435 (25.9)	1,249 (79.7)	239 (20.4)	3,424 (51.3)	1,149 (22.9)
이전지출	935 (0.7)	1,023 (0.7)	929 (0.7)	1,017 (0.8)	- -	- -	6 (0.1)	7 (0.1)
자산취득	3,095 (2.3)	5,691 (4.1)	2,600 (2.0)	4,595 (3.5)	319 (20.3)	930 (79.6)	176 (2.6)	166 (3.3)
계	135,444 (100.0)	138,949 (100.0)	127,204 (100.0)	132,762 (100.0)	1,568 (100.0)	1,168 (100.0)	6,672 (100.0)	5,019 (100.0)

* 자료 : 감사원

□ 최근 감사원 인력의 정원 대비 현원을 살펴보면, 2021년과 2022년 말 기준 각각 43명과 75명의 결원이 발생하였고, 2023년도 말에도 결원이 63명이었음. 감사원은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59명을 충원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8월 말 현재 정원 대비 84명이 부족한 실정임[204].

204) 감사원은 2024년도 1월 직제 개정으로 48명을 증원하여 2024년도 정원은 1,128명임.

< 최근 4년간 감사원 정원 및 현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말
정원	1,080	1,080	1,080	1,128
현원	1,037	1,005	1,017	1,044

* 자료 : 감사원

□ 한편, 감사원의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률 문제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대폭 증액한 2018년 예산안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2018년도 인건비 예산안 편성 시 결원율 하향 조정 및 공무원 보수 인상률[205]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2%를 증액하였으나, 인건비 불용액은 43억 1,6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집행율은 95% 수준으로 예년 대비 감소하였음. 이는 당초 계획과 달리 결원율이 축소되지 않음에 따른 것으로 보임.

<2017년-2020년(4년간) 인건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7	81,434	81,434		81,434	80,147	98.4	98.4	1,287
2018	86,500	86,500		86,500	82,184	95.0	95.0	4,316
2019	87,071	87,071	△325	86,746	83,943	96.4	96.8	2,813
2020	87,671	86,573		86,573	85,047	98.2	98.2	1,526

* 자료 : 감사원

205)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6%이었음.

<2017년-2020년(4년 간) 감사원 정원 및 현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정원	1,080	1,080	1,080	1,080
현원	1,051	1,032	1,068	1,067

* 자료 : 감사원

□ 2019년도에는 정원 1,080명과 현원 1,068명으로 그 격차가 12명으로 상당히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96.4%로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 이는 2018년도 당시 6.2% 수준의 인건비 인상이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결국, 2018년도에 인건비를 6.2% 증액 후 2년 만인 2020년도에야 비로소 집행률이 98%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나, 실제로는 2020년도 추경 예산에서 인건비를 18년도 수준인 865억 7,3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기 때문이었음.

< 2017년-2020년(4년 간) 감사원 인건비 집행액 증가율 및 공무원처우개선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집행액	80,147	82,184	83,943	85,047
집행액 증가율	-	2.5	2.1	1.3
공무원 처우개선율206)	3.5	2.6	1.8	2.8

* 자료 : 감사원

206)

공무원처우개선율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3.8	3.0	3.5	2.6	1.8	2.8	0.9	1.4	1.7	2.5

출처: 인사혁신처『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결과 편집,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21

□ 인건비는 의무지출성 경비로서 신규 증원 없이 종전의 인원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경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전체 예산의 모수(母數)를 키워 다음 연도 예산증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타 비목으로 전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인건비[207]를 과다 편성할 경우 불용액을 그 회계연도 중 필요한 다른 곳에 활용하지 못하게 되어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초래하게 됨. 인건비 비중이 큰 감사원의 경우 그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음.

□ 참고로, 2022년도 결산 심사 시에도 “정원 대비 결원 인원의 증가는 최근 3년간 인건비 집행률의 감소(2020년 98.2% → 2022년 96.8%) 및 불용액 증가 추세로 이어지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따라서 감사원은 정원과 현원의 격차에 따른 불용액 증가 및 집행률 감소 등 과거 집행 실적과 내년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건비 인상률 수준의 축소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7)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 인건비의 지급근거
가) 인건비의 집행은 반드시 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인건비와 타 비목간 전용 최소화

2. 감사활동경비-일반수용비 : 공공기관 회계감리 전문가 자문 등 자문료 감액 조정 필요 등

가. 편성 현황

○ ‘감사활동경비(1111-251)’ 중 일반수용비(210-01)는 감사백서 등 발간비, 정책자문위원회 등 회의경비, 자체감사기구 지원·개선 등, 감사활동의 전문성 및 신뢰성 강화, 현지출장 감사반 운영비, 감사지원 정부청사연락사무소 운영비, 감사활동 관련 홍보비, 명예민원상담관 활동비로 구성되고,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액 17억 5,000만원보다 2억 9,100만원이 증액(16.6%)된 20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내역사업 ‘감사활동의 전문성 및 신뢰성 강화’의 경우 전문가 자문료, 정보이용, 시험·검사, 통계분석 등 감사자료 취득 관련 비용, 감사능력개발 및 감사전문지휘역량 강화 지원, 회계감사 수행능력 강화 지원, 법률지원시스템 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액 6억 600만원원 대비 3억 5,100만원 증액(57.9%)된 9억 5,700만원임.

- 내역사업 ‘감사활동 관련 홍보비’는 ‘감사활동 관련 대외 광고 홍보비’와 ‘감사원 SNS, 블로그 운영 및 홍보 책자 발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한 1억 4,900만원임.

<2025년도 감사활동경비-일반수용비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A)	추경		금액(B-A)	비율(%)
○일반수용비(210-01)	1,750	1,750	2,041	291	16.6
- 감사백서 등 발간비	243	243	233	10	△4.1
- 정책자문위원회 등 회의경비	103	103	103	0	0
- 자체감사활동 지원·개선 등	160	160	160	0	0
- 감사활동의 전문성 및 신뢰성 강화	606	606	957	351	57.9
- 현지출장 감사반 운영비	351	351	301	△50	△14.2
- 감사지원 정부청사 연락사무소 운영비	43	43	43	0	0
- 감사활동 관련 홍보비	149	149	149	0	0
- 명예민원상담관 활동비	95	95	95	0	0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나. 공공기관 회계감리 전문가 자문 등 자문료 감액 조정 필요

○ 공공기관 회계기관 자문 등은 기 작성된 공공기관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감사원이 수행하는 결산검사의 전문성 보강 및 사각지대 방지를 위하여 민간 회계전문가를 회계감리(監理)[208] 전 과정에 참여시키고 자문료를 지급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3억 3,0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음.

<2025년도 공공기관 회계감리 전문가 자문 등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A)	추경		금액(B-A)	비율(%)
○ 감사활동의 전문성 및 신뢰성 강화	606	606	957	351	57.9
- 공공기관 회계감리 전문가 자문 등	-	-	330	330	순증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3조[209]에 따

208) 회사의 경영진이 작성한 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조사·확인하는 업무

209) 제43조(결산서의 제출)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②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각각 제출하고, 4월 10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결산을 의결·확정한다.

른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부 내부 결산 절차를 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회계감사인에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3월 15일까지 결산서를 제출하여 4월 10일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5월 15일까지 확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등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결산서 등을 제출받은 감사원은 그 중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210]에 따른 법인과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7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211]

○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감사원은 매년 25개 내외의 공기업·준정부기관[212]의 결산서 등에 대한 회계감리를 실시하여 왔으나,

---

1. 재무제표(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매년 5월 15일까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결산서등을 제출받은 감사원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과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7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회계법인과 감사반의 선정 기준 및 회계감사의 절차,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원의 결산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210)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211) 감사원의 결산서등의 검사 행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검토하고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조사·확인하는 회계감리라고 할 수 있음.

212)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주무부처의 낮은 관심과 공공기관의 회계에 관한 감사원의 전문성과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결산 검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213]이 있음.

○ 이에 감사원은 2025년부터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회계 감리 등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4년 1월 감사원사무처 직제를 개정하여 제1사무차장 소관으로 공공재정회계감사국을 신설하였고, 2024년 5월 상시적인 회계감리 체계를 준비하고 공공기관 회계 통제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회계감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였음.

○ 감사원은 부족한 회계전문성과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회계감리 전 과정에서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기로 하고, 2025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였음. 구체적인 산정 내역을 보면, 민간 회계전문가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되, 기존에 진행하던 '상반기 결산 검사'에는 7명의 회계전문가를 28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당 10일간 투입하고, 2025년부터 수행할 예정인 '하반기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214]에는 약 12명의 회계전문가를 59개의 기관을

---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여야 하나, 그 외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관하여 공운법 및 감사원규칙 등에서는 감사원의 회계감리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감사원은 2023년에는 25개의 기관(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 대상기관 22개, 감사원 자체 지정기관 3개), 2024년에는 28개의 기관(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 대상기관 19개, 감사원 자체 지정기관 9개)을 대상으로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음.

213) 이연법인세 부채 과소인식 등으로 3,943억원 당기순이익과대계상('18, 철도공사), 이연법인세 자산 과다인식 등으로 698억원 당기순손실 과소계상('19, 석유공사) 등 회계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감사원의 회계감리 대상이 아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 감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대상으로 기관당 5일간 투입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고 설명[215] 하고 있음.

<2025년도 공공기관 회계감리 전문가 자문 등 예산 산정내역>

○ **총 자문료: 575일 × 8시간 × 72,000원 = 330,000,000원**
(= 7명 × 4개 × 10일 × 8시간 × 72,000원 + 11.8명 × 5개 × 5일 × 8시간 × 72,000원)

- 8시간: 회계전문가 인원 1일 당 근무시간
- 72,000원: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계약 시간당 단가 평균 106,120원의 70%로 시급 산정

구 분	합 계	결산검사 대상 (상반기)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대상 (하반기)
전문가 투입 인원	18.8명	7명(1명당 4개)	11.8명(1명당 5개)
공기업·준정부기관	87개	28개	59개
기관당 투입 일수	-	10일	5일
전체 투입 일수	575일	280일	295일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먼저, 감사원은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상시적인 회계 감리 등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 대한 회계 감리 품질 확보와 기존의 사업 실적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이

214) 하반기에 실시될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회계감리를 실시하는 업무로서 상반기 결산검사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나, 상반기 결산검사의 경우 공운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감사원이 결산검사의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반면 하반기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의 경우 감사원의 결산검사의 결과를 외부 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215) 이에 따르면, 자문계약을 체결한 민간회계전문가는 상반기 결산검사의 경우 1인당 평균 4개 기관에 대하여 약 40일을, 하반기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의 경우 1인당 평균 5개 기관에 대하여 약 25일을 근무하게 됨.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공운법 및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등에서는 감리대상 선정, 감리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216]. 따라서 그간에 공공기관의 회계 감리에 대해서는 감사원 내부의 관심이 적은 상태에서, 표준적인 업무절차 없이 소수 직원이 개인 역량에 의존하여 해당 기관을 개략적으로 점검하는 수준으로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추진·관리되지 못하고 있었음.

- 또한, 공공기관의 회계감리를 전담하는 부서는 신설된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산하의 재정회계3과인데, 소속 인력의 정원은 9명에 불과하여 추후 확대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민간 회계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임. 이 경우 민간 회계전문가가 부적절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책임성 확보와 나아가 회계 감리의 품질을 담보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기존 25개 내외의 기관에 대해서도 결산검사가 충실하게 실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87개 전체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추진 가능한 수준으로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16) 공운법에서는 감사원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도록 하면서, 회계감사, 결산검사와 관련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에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원의 검토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 다음으로, 본 사업 예산안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시적·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속기, 자문 등에 대한 수수료 및 사례금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수용비로 편성되었는바, 동 사업은 비교적 장기간이고 감사원이 수행하는 감리업무에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예산 항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대다수의 우수한 회계사들이 현재 회계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감사원에 중복해서 고용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선택한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향후 활용 계획에 따르면 민간 회계전문가는 기관별 재무제표 사전 분석·검토와 감리현장에서의 자료분석, 회계감사 조서 분석 등[217] 실질적인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자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인지 그 판단이 불분명할 수 있다는 점, 편성지침은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는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17) 회계감리 전문가 활용 개요, 감사원 제출 자료

다. 연례적 집행 부진 등이 발생하는 ‘감사원 SNS, 블로그 운영 등’ 감액 조정 필요

○ ‘감사원 SNS, 블로그 운영 및 홍보책자 발간 등’은 ‘감사활동 관련 홍보비’의 내내역사업으로, 감사원이 대외 홍보를 위하여 SNS, 블로그 운영 및 감사원 소개책자 발간 등에 사용되며 2025년도 예산안에는 2,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 ‘감사원 SNS, 블로그 운영 및 홍보책자 발간 등’ 예산 산출근거 >

《표-18》 예산액	《표-19》 산출근거
《표-20》 26,000천원	○ 블로그 운영비 4,000천원 ○ 감사원 소개자료 9,500천원 ○ 출생미신고 아동 관련 감사홍보를 위한 홍보영상 편집(영문 등) 5,500천원 ○ 기타 운영비 7,000천원

* 자료: 감사원

○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도에는 예산액 2,250만원 중 1,459만원을 집행하였고(집행률 약 64.8%) 2023년도에는 예산액 2,640만원 중 1,303만원을 집행(집행률 약 49.4%)하였으며 2024년도 10월1일 기준 예산액 2,600만원 중 1,294만원 집행(집행률 약 49.8%)하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보임.

<최근 3년간 감사활동경비 중 ‘감사원 SNS, 블로그 운영 및 홍보책자 발간 등’ 집행내역>

(단위: 천원)

《표-2 도	《표-22》 산액	《표-23》 집 행액	《표-24》 홍보내용
《표-25》2 022년	《표-26》 2 2,500	14,586	○ 블로그 운영비(글꼴 및 이미지 구매 등) 3,960천원 ○ 감사원 소개책자(2,000부) 10,626천원 ○ 집행 잔액 7,914천원은 감사지 등에 사용
《표-27》2 023년	《표-28》 2 6,400	13,028	○ 블로그 운영비(글꼴 및 이미지 구매 등) 3,993천원 ○ 감사원 소개책자 수정 2,200천원 ○ 홍보노트(800개) 6,835천원 ○ 집행 잔액 13,372천원은 대외광고홍보비와 감사지 등에 사용
《표-29》2 024년	《표-30》 2 6,000	12,936	○ 블로그 운영비 1,386천원 ○ 출생미신고 아동 관련 감사홍보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 선금 11,550천원

주) 2024. 10. 1. 기준
* 자료: 감사원 제출자료

○ 한편, 감사원의 홍보예산은 그동안 예산집행 과정에서 당초 편성과 다르게 집행되는 등의 문제로 국회 예산·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받은 바 있음.

2015년에는 사업의 예산 전액을 당초 편성되지 않은 ‘홈페이지 개선사업’으로 집행하였고, 2016년에도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소명제도 홍보동영상 제작’에 2,0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최근에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2022년, 2023년에는 2년

연속으로 집행 잔액을 감사지 제작에 사용[218]하였고, 2024년도에는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출생미신고 아동 관련 감사홍보를 위한 홍보영상제작’의 선금으로 전체 예산액의 약 44%인 1,156만원을 집행하였음.

○ 따라서 당해 예산안은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집행 수준이 저조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18) ‘감사’지는 감사인들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감사 전문지로서, 감사지 발간비는 2022년, 2023년에 각각 1억 170만원, 9,666만원이 감사활동경비의 일반수용비(210-01) 중 ‘감사백서 등 발간비’의 내내역사업으로 이미 편성되어 있는 상태였음.

3. 감사활동경비 - 일반연구용역비 : 연구용역사업 예산 일부 비목 조정 필요

가. 편성 현황

○ ‘일반연구용역비(260-01)’는 감사활동과 관련된 연구용역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16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1억원(△5.9%) 감액 편성된 것임.

<2025년도 일반연구용역비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B)	증 감	
	본예산(A)	추경		금액(B-A)	비율(%)
○ 일반연구용역비(260-01)	1,700	1,700	1,600	△100	△5.9
-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업무 관련 연구용역	500	500	500	0	0
-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보조업무 용역	1,200	1,100	1,100	△100	△8.3

* 자료: 감사원 제출 자료

○ 일반연구비(260-01) 중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업무 관련 연구용역’ 내역사업에 5억원, ‘국가재무제표 결산검사 보조업무 용역’ 내역사업에 11억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음.

나. 연구용역사업 예산 일부 비목 조정 필요

○ 감사원의 과거 ‘감사활동경비-일반연구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정책연구용역의 성격을 가진 연구용역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감사원이 최근 3년간 일반연구비로 수행한 연구용역사업 중 약 15건이 감사원의 구성·운영이나 감사활동 개선 방안 등에 관한 연구로 볼 수 있고 집행액은 총 4억 5,300만원임.

<최근 3년간 일반연구비로 집행한 정책연구 성격의 연구용역>

(단위: 백만원)

연번	연도	구 분	금액
1	2022	院-자체감사기구간 역할분담 방안 연구	85
2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책임 감면제도 연구	34
3		재심의 제도개선 관련 연구	27
4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감사원의 대응전략 연구	29
5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국민참여 감사제도 운영방안 연구	29
6		내부통제 관련 심사지표 측정 방안 연구	20
7		감사수요 발굴을 위한 외부 비정형 데이터 분석 방법 연구	44
10	2023	공공부문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40
11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자격 확대 필요성 분석 연구	20
12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간 협력 연계 방안 및 사례 연구	50
13	2024	신산업 분야 인력수급전망 및 정책개선 기초자료 연구	35
14		인공지능의 자연어처리 기능을 활용한 감사접근방법 및 해외 감사사례 연구	20
15		공공기관 회계감사 품질 제고 방안 연구	20
계			453

주) 2024. 10. 1. 기준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이하 ‘예산 편성지침’)에 따르면, 연구용역비(260목)는 일반연구비(260-01)와 정책연구비(260-02)로 구분하고,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 연구용역 관련 비용은 정책연구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 구분>

연구용역비(260목)	
일반연구비(260-01목)	**정책연구비(260-02목)**
○ 국가로부터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 비용 - 기술용역 :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산업관리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 - 전산용역 :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관련한 Data 입력, Software 개발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 - 임상연구용역 : 국립병원, 교도소 등 국가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임상연구 - 기타 연구용역 : 실태조사, 자료제작 등 일상적인 조사·연구 관련 제반 용역	○ 각 부처에서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학술연구 포함) 관련 비용 - 과학기술·생산기술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협의회(세미나, 간담회 등) 개최 등의 제반 용역과 계약직 연구원(in-house think-tank)의 보수 등 관련 경비 포함

○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국회 심사시 ‘감사활동경비’ 연구용역 사업 중 일반연구비로 집행할 연구과제와 정책연구비로 집행할 연구과제를 정확히 분류하여 적정한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한다는 시정요구가 있었음.[219]

2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1회계연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22. 8.

○ 그러나 2023년도 예산안에는 정책연구비 비목 없이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의 일반연구비가 편성되었고,

이에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시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업무 관련 연구용역’ 내역사업에 편성된 일반연구비 중 정책연구 성격의 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정책연구비로 비목을 조정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220]

-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감사원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시 일반연구비 일부를 정책연구비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음.[221]

○ 그러나 감사원은 2024년도 예산 편성시 ‘감사활동경비’의 연구용역비는 전액 일반연구비로만 편성하였고, 2025년에도 동일하게 전액 일반연구비로 편성하였음.

○ 한편, 현재 감사연구원의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는 연구과제·연구자 등을 선정할 때 감사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과제담당관이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연구결과를 평가하며 결과의 활용상황을 점검하여 감사연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내부적 검증 및 환류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반면, 감사활동경비의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이러한 내부적 검증 및 환류 과정이 제도화되어있지 않는바 정책연구용역이 보다

2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3년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2. 10.
221) 「감사원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p.42, 2024. 8.

용이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어 보임.

○ 한편, 최근 일반연구비로 집행한 정책연구 성격의 연구용역 중에서는 유사한 연구주제에 대해서 연도를 달리하여 수의계약을 통하여 진행되는 사례가 있었음.

<최근 유사한 연구주제에 대하여 두 차례 실시한 연구용역 사례>

연구주제	연구기간	계약명	집행액 (단위: 천원)	계약상대자	계약방식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간 역할분담 및 협력 방안	2022. 4. 25.~ 2022. 11. 25.	院-자체감사기구 간 역할분담 방안 연구	85,000	○○○○ 학회	수의계약
	2023. 7. 26.~ 2023. 12. 26.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간 협력 연계 방안 및 사례 연구	50,000	○○○○ 학회	수의계약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2022. 9. 28.~ 2022. 11. 28.	내부통제 관련 심사지표 측정 방안 연구	20,000	한국내부통제 학회	수의계약
	2023. 4. 5.~ 2023. 8. 4.	공공부문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39,700	한국내부통제 학회	수의계약

○ 따라서 감사원은 국회의 시정요구와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동 사업에 편성된 일반연구비 중 정책연구 성격의 사업은 정책연구비로 비목을 조정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4. 적극행정 지원 : 증액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 필요

가. 편성 현황

○ ‘적극행정 지원(1131-304)’ 사업은 적극행정면책, 사전컨설팅, 모범사례 발굴 등의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유도하고 수감자의 권익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액 2억 6,300만원보다 7,200만원이 증액(27.4%)된 3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적극행정 지원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3년도 결산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안		증 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적극행정 지원	316	263	263	459	335	72	27.4

사 업 명	2023회계연도 결산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안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 비목별 분류	341	316	25	263	335
- 일반수용비(210-01)	123	123	-	115	138
- 일반용역비(210-04)	54	54	-	60	60
- 국내여비(220-01)	71	49	22	57	106
- 국외여비(220-02)	62	61	1	-	-
- 관서업무추진비(240-02)	6	6	-	6	6
- 포상금(310-03)	25	24	1	25	25

* 자료 : 감사원

나. 증액 취지에 맞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 필요

○ 2025년도 예산액의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수용비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전컨설팅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여비 5,100만원 증액되었음.[222)]

○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의 구체적인 증액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일반수용비는 ① 면책신청 건수 증가로 인하여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223)] 개최 횟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② 모범공직자 등 선발을 위한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기관 선발심사위원회[224)] 개최 횟수도 연간 2회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므로 증액이 필요함.

2024년도 예산 산출내역	2025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25백만원** 가. 회의경비 등(1백만원) · 10회x10만원=1백만원 나. 자문료(20백만원) · 10회x40만원x5명=20백만원 다. 감사권익보호관 지원 경비(1백만원) · 10회x10만원=1백만원 라.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기관 선발심사위원회 심사비(3백만원) · 1회x50만원x6인=3백만원	○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48백만원** 가. 회의경비 등(1.5백만원) · **15회**x10만원=1.5백만원 나. 자문료(37.5백만원) · **15회**x50만원x5명=37.5백만원 다. 감사권익보호관 지원 경비(3백만원) · **15회**x20만원=3백만원 라.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기관 선발심사위원회 심사비(6백만원) · **2회**x50만원x6인=6백만원

222) 모범사례 발굴 및 추진실태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원 감액되어 2025년 예산액은 총 7,200만원 증액

223)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한 사항이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6조에 따른 면책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자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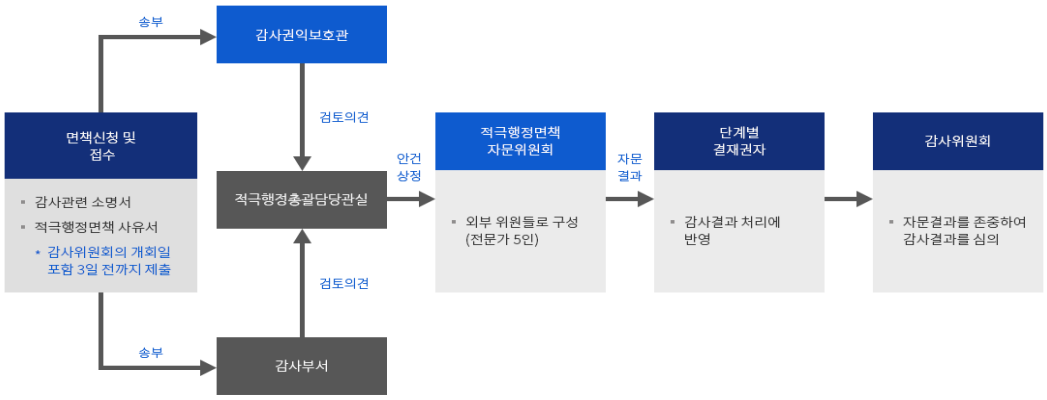
224)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 · 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3조(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기관 선발의 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1. 표창 대상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기관의 공적조서에 의한 공적

- 국내여비는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적시지원 및 컨설팅 활성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기존 연간 3회에서 6회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므로 증액이 필요함.

2024년도 예산 산출내역	2025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 모범사례 발굴 및 사전컨설팅처리: 57백만원	○ 모범사례 발굴 및 추진실태 점검: 55백만원 · 서울 11인×15일×2만원= 3.3백만원 · 수도권 11인×16일×7만원= 12.2백만원 · 지방 11인×33일×11만원= 40백만원 ○ 사전컨설팅 처리 : 51백만원 · 서울 12인×3일×6회×2만원= 4백만원 · 수도권 12인×3일×6회×7만원= 15백만원 · 지방 12인×4일×6회×11만원= 32백만원

○ 우선 일반수용비 증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개최 횟수는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의 기능(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한 사항이 면책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자문)을 고려할 때 면책신청 건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 할 것임.

<신청에 의한 면책 심의·검토 절차>



2.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기관 추천 규모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런데 최근 4년간 신청면책(신청에 의한 면책) 처리 실적과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2025년 실적이 예년 실적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2025년 면책신청 건수 증가로 인하여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개최 증가가 예측된다는 예산 증액 사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최근 4년간 신청면책 처리는 매년 20건을 넘지 않는 수준이고, 2024년 8월 현재 실적도 7건이라는 점에서 2025년 실적이 예년 실적을 크게 상회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225]

- 최근 4년간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운영 실적 역시 신청면책 처리 건수가 20건으로 제일 많았던 2023년에 8회를 개최한 것이 최고실적으로, 매년 10회를 넘지 않는 수준이고(4년 평균 6.5회 개최), 2024년 8월 현재 역시 3회가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2025년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를 최근 4년 평균 개최 횟수의 2배가 넘는 수준(2025년 15회 개최 예정)으로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25) 면책신청 접수 건수의 경우 2021년 28건, 2022년 21건, 2023년 28건, 2024년 10월 말 현재 24건임(자료: 감사원).

<최근 4년간 신청면책 처리 및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운영 실적>

연도	신청면책 건수	회의개최 횟수	자문결과	최종감사결과
2020년	13건	6회	인정 1건, 불인정 11건, 인정/불인정 동수 1건	- 인정 1건 → 불인정 1건 - 인정/불인정 동수 → 불인정 ※ 나머지는 자문결과와 동일
2021년	13건	7회	인정 2건, 일부인정 5건, 불인정 6건	- 인정 2건 → 불인정 1건, 일부인정 1건 ※ 나머지는 자문결과와 동일
2022년	8건	5회	인정 1건, 일부인정 2건, 불인정 5건	- 인정 1건 → 불인정 1건 - 일부인정 1건 → 불인정 1건 ※ 나머지는 자문결과와 동일
2023년	20건	8회	인정 2건, 일부인정 3건, 불인정 15건	- 인정 1건 → 일부인정 1건 - 일부인정 1건 → 불인정 - 불인정 2건 → 종결 1건, 미시행 1건 ※ 나머지는 자문결과와 동일
2024년 8월	7건	3회	인정 0건, 일부인정 1건, 불인정 6건	- 불인정 3건 → 일부인정 2, 미시행 1건 ※ 나머지는 자문결과와 동일

* 자료 : 감사원

○ 다음으로 국내여비 증액과 관련하여,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확대 실시를 증액 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확대 실시가 사전컨설팅 활성화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최근 4년간 사전컨설팅 실적과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실시 횟수를 살펴보면, 2020년 ~ 2022년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매년 1회 실시한 결과 50건 ~ 84건의 사전컨설팅이 접수되었으나 2023년 3회 실시로 접수된 사전컨설팅은 76건, 2024년 8월 현재 4회 실시로 접수된 사전컨설팅은 40건이라는 점에서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확대 실시로 인하여 사전컨설팅 실적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사전컨설팅 실적 및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실시 횟수>

연도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실시 횟수	총 접수	완 료					검토 중
			인용	기각	반려	취하	의견제시	
2020년	1회	84건	46	6	26	6	-	-
2021년	1회	74건	40	5	6	18	5	-
2022년	1회	50건	27	3	10	10	-	-
2023년	3회	76건	42	2	11	12	9	-
2024년 8월	4회	40건	13	-	5	4	2	16

* 자료 : 감사원

○ 다만, 복잡다변화되는 행정환경 속에서 업무 결과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에 따라 공직자들이 부담하는 위험이 역시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극행정 지원사업 예산의 선제적 증액을 통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감사원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통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이 사업 예산의 증액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 공사비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편성 현황

□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1133-309)’ 사업은 청사 및 노후시설물의 정비를 통하여 감사활동에 적합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32억 4,000만원 대비 12억 2,800만원(△37.9%) 감액된 20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내역은 24년도 완료 예정인 ‘감사인력 운용 개선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사업’ 예산(21억 4,000만원) 순감소 및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 등 본원 노후시설 성능개선에 6억 1,500만원 증액 등임.

<2025년도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1133-309)	3,411	3,240	2,012	△1,228	△37.9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나.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 공사 사업 관리 철저 필요

□ 감사원은 2025년도에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 등 본원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1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 사업에는 7억 3,300만원을 계상되었음. 에너지 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는 생산된 전기를 저장장치(배터리)에 저장 후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여 전력사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설비로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11조 제5항 및 부칙 제3조[226]는 공공기관 중 계약전력이 1,000㎾ 이상의 기존 건축물은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2025. 12. 31.까지 설치를 완료하도

226)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의 실내 조명기기를 별표 6의 연도별 보급목표에 따라 LED 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방침에 의거 기관의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제외하며, 초·중·고교, 도서관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 시에는 제1항에 의한 조명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신축, 증축, 개축 시 신규 설치하는 지하 주차장의 조명기기는 모두 제1항에 의한 LED 또는 스마트 LED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2,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 칙 <제2023-161호, 2023.08.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 ESS 설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이 2023.8.1. 이후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고, 건축허가 신청일이 2023.7.31. 이전인 건축물은 2025.12.31.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기관 ESS 설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 1,000kW 이상 2,000kW 미만의 기존 건축물(건축허가 신청일이 2023.7.31. 이전인 건축물)은 2025.12.31.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여야 한다.

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감사원은 2025년도 예산안에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를 위한 경비를 반영하였음.

□ 참고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른 공공기관의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 의무에 관하여 살펴보면, 2013년도 도입 당시에는 설치를 권고하는 수준이었으나, 2016년도부터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설치 완료 기한을 20년도 말까지로 설정하였음. 이후 설치 완료 기한이 23년 말, 25년 말로 2차례 연장되었음.

<공공기관의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 의무 제도 개요>

시행일자	내 용	
'13.6.28.	권고	○ 계약전력 1MW 이상 공공건물에 100kW 이상 ESS 설치
'15.7.30.		○ 계약전력 1MW 이상 공공건물에 계약전력 5% 이상 ESS 설치
'16.5.27.	의무	○ 계약전력 1MW 이상 공공건물에 계약전력 5% 이상 ESS 설치 - (기존 건축물) 계약전력 규모별 단계적으로 설치(~'20년말) - (신축 건축물) '17년 이후 공공건물, 준공시 설치
'20.8.20.		○ 기존 건축물의 ESS 설치완료 기한을 '23.12.31.까지 연장
'23.8.1.		○ 계약전력 2MW 이상 공공건물에 계약전력 5% 이상 ESS 설치 - (기존 건축물) '23.7월 이전 공공건물로 '25.12.31.까지 설치 - (신축 건축물) '23.8월 이후 공공건물로, 준공시 설치 ○ 1MW 이상 2MW 미만 기존 건축물의 ESS 설치완료 기한을 '25.12.31.까지 연장 ○ 면제대상 건축물 구체적으로 명시, 면제 필요시설 추가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의무화제도 가이드 라인 1p.

□ 감사원의 경우 본관 및 제4별관(제1별관 포함)은 계약전력이 각각 1,000㎾ 이상이므로 대상이 되고,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 공사에 필요한 예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감사원 시설물 중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의무 대상 내역>

구 분	본 관	제2별관	제3별관	제4별관 (제1별관포함)
계약전력(㎾)	1,500	100	618	1,900
설치의무	○	×	×	○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2025년 예산안 중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 공사' 세부 내역>

(단위: 천원)

비 목	산 출 근 거	예산액
실시설계비 (420-02)	654,575(공사비)×3.83%(전기부문 설계비 요율)=25,070	25,070
공사비 (420-03)	관급자재비: (256,013×1대)+(208,273×1대)=464,286(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공사비: 190,289×1식(견적서)	654,575
감리비 (420-04)	285,820원/일(고급감리원)×22일×7.79인×월(전기부문 감리비 요율)×1월 = 48,984(감리비 요율에 직접 인건비 등을 계산하여 원가계산)	48,984
시설부대비 (420-05)	654,575(공사비)×0.69%(시설부대비 요율)=4,517	4,517
합 계		733,000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 그런데 감사원은 2019년도 예산안에는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 공사 비용을 이미 편성한 바 있음.

<2019년도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ESS) 예산내역>

세사업 명	예 산
·감사교육원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	- 설계비 202백만 원, 공사비 617백만 원, 감리비 11백만 원, 시설부대비 4백만 원, 자산취득비 26백만 원
·감사원 어린이집 설치	- 설계비 44백만 원
·기타 노후시설 개보수 등	- 수변전설비 교체공사(공사비) 368백만 원 **-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공사(공사비) 318백만 원** - LED 교체공사(공사비) 135백만 원 - 민원동 옥상 방수공사(공사비) 153백만 원 - 식당 분전반 등 교체공사(공사비) 44백만 원 - 교육원 대형버스 교체(자산취득비) 184백만 원 -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교체(자산취득비) 20백만 원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 그러나 2019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감사원은 실제로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 공사 목적으로 편성되었던 예산 3억 1,800만원 전액을 감사활동비의 일반연구비로 전용하였음.

○ 감사원은 그 사유에 대하여 감사활동 관련 연구용역비 예산이 부족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공사비를 사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2019년도 결산 중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전용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정비 (1133-309)**	**공사비 (420-03)**	**318**	**감사활동경비 (1131-303)**	**일반 연구비 (260-01)**	**감사활동 관련 연구용역 예산이 부족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 공사비를 전용**
전용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1133-309)	공사비 (420-03)	80	기본경비 (1111-251)	관리 용역비 (210-15)	최저임금 등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감사교육원 청사관리용역비 예산이 부족하여 전용
조정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1133-309)	공사비 (420-03)	5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1133-309)	감리비 (420-04)	수변전설비 교체공사 관련 감리비 예산이 부족하여 공사비를 감리비로 조정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 한편, 감사원의 2022년도 「합리적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의무 설치기준 운영 필요」 감사결과보고서는 “ESS 설치가 곤란하거나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에서 의무 설치 규정에 의해 ESS를 무리하게 설치한 후 미가동하거나, 2023년 예산에 반영하여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음.

□ 그런데 감사원은 ESS 설치 완료 기한이 2025년 말로 다가옴에 따라 ESS 설치 사업을 재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바, 2025년도에는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다. 공사비 예산 적정규모 산정 필요

□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1133-309)’는 본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 교육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비목별로는 일반수용비, 관리용역비, 공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 중 공사비 예산은 2023년도에는 전체 사업비 45억 4,600만원 중 22억 5,900만원으로 50%, 2024년도에는 32억 4,000만원 중 20억 3,100만원으로 63%, 2025년도는 20억 1,200만원 중 15억 400만원으로 75%를 점유하고 있음.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1133-309)’ 편성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3 예산	2024 예산	2025 예산안
○ 비목별 분류(합계)	4,546	3,240	2,012
· 일반수용비(210-01)	217	158	-
· 임차료(220-07)	1,096	-	-
· 관리용역비(210-15)	272	308	316
· 실시설계비(420-02)	121	120	53
· 공사비(420-03)	2,259	2,031	1,504
· 감리비(420-04)	17	30	49
· 시설부대비(420-05)	14	12	7
· 자산취득비(430-01)	549	581	83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1133-309) 사업의 2023년 결산 및 2024년도 7월말 현재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023년도 및 2024년도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1133-309)' 집행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3 결산					2024('24.7월말)					2025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예산 현액	집행액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1133-309)	4,546	4,514	3,411	930	173	3,240	4,170	1,836	3,240	940	2,012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 2023년도에는 전체 사업비 45억 4,600만원 중 34억 1,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75% 수준이었고, 2024년도는 7월 말 현재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 32억 4,000만원 중 9억 4,0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29%에 불과함.

□ 이는 본 사업 예산 중 비중이 큰 공사비의 집행이 저조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2023년도 및 2024년도 공사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3 결산					2024('24.7월말) 집행현황					2025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예산 현액	집행액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1133-309)	4,546	4,514	3,411	930	173	3,240	4,170	1,836	3,240	940	2,012
·공사비(420-03)	2,259	1,540	778	703	59	2,031	2,634	904	2,031	231	1,504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 2023년도에 공사비는 22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32%에 해당하는 7억 1,900만원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하였고, 31%에 해당하는 7억 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실제 집행액은 7억 7,800만원으로 집행률이 34%이었음.

□ 그런데 낮은 집행률은 2024년도에도 확인됨.

□ 2024년도에 공사비는 20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7월 현재 공사비 집행액은 9억 4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7억 300만원을 제외하면 예산현액 20억 3,100만원 중 2억 3,1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11% 수준에 그침.

<2023년도 및 2024년도 중 공사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

연도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2023	전용 ('23.7.7.)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1133-309)	공사비 (420-03)	430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1133-309)	자산취득비 (430-01)	새롭게 형성될 국별 통합 사무공간에 기존 가구는 노후화 및 규격이 상이하여 재배치시 한계. 그런데 현재 사무용 가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전용
	전용 ('23.10.30.)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1133-309)	공사비 (420-03)	289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1133-309)	임차료 (210-07)	제1별관 재건축 준공일에 맞춰 '23년 10월까지 사무실 임차료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레미콘 수급 불안정 등 공사 지연으로 준공일이 '24년 3월로 연기됨에 따라 임차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여 임차료 예산이 부족
2024	전용 ('24.5.22.)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1133-309)	공사비 (420-03)	100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1133-309)	자산취득비 (430-01)	2024년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증원)된 공공재정 회계감사국의 사무용가구 구매를 위한 재원 마련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 2025년도에 공사비는 15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20억 3,100만원 대비 5억 2,7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나, 실제로 2024년도에 편성되었던 '감사인력 운용 개선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종료됨에 따른 공사비 15억 700만원의 순감소를 감안한다면 2024년도 대비 10억 1,200만원이 증액된 것임.

<2025년 예산안 공사비 편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예산	2024 예산	2025 예산안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정비(1133-309)	4,546	3,240	2,012
・공사비(420-03)	2,259	2,031	1,504
・제1별관 재건축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등 공사비(420-03)	602	- -	- -
・본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 - 공사비(420-03)	323	320	1,046
・교육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 공사비(420-03)	420	204	458
・감사인력 운용 개선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사업 공사비(420-03)	913	1,507	- -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 2025년도에 편성된 공사비는 15억 400만원은 전액 ‘본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 및 ‘교육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 공사를 목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세부내역은 냉온수기, 전등 등 설비의 교체공사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공사 등 감사원 본원 및 교육원의 시설공사를 계획하고 있음.

<본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 및 교육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 공사비 편성 세부내역>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안)
1. 본원 노후시설물 성능개선공사 가. 제1별관 재건축에 따른 본원 내 기존시설 원상복구 및 보수 ・ 303,000,000원*1= 303,000천원 **2. 교육원 노후시설물 성능개선공사** 가. 기계실 MCC판넬 교체 ・ 62,942,000원*1= 62,942천원 나. 공기조화기 등 교체 및 자동제어 공사 ・ 217,768,000원*1= 217,768천원 다. 감사교육원 남녀 공동욕실 환경개선 공사 ・ 139,070,000원*1= 139,070천원	**1. 본원 노후시설물 성능개선공사** 가. 위험수목 제거 및 대체수목 식재 공사 ・ 174,900,000원*1= 174,900천원 나. 제3별관 ALTS 및 고압케이블 교체 공사 ・ 40,986,000원*1= 40,986천원 다. 제3별관 야외주차장 및 진입로 바닥 보수공사 ・ 104,336원/㎡*1,000㎡= 104,336천원 **2. 교육원 노후시설물 성능개선공사** 가. 노후 차단기 교체공사 ・ 26,940,000원*1식=26,940천원 나. 본관동 등 옥상방수 ・ 94,882,000원*1식=94,882천원 다. UPS배터리 교체 등 ・ 15,180,000원*1식=15,180천원 라. 구내식당 조리실 바닥 개선 ・ 11,697,000원*1식=11,697천원 마. 본관동 온실 누수 개선 ・ 55,000,000원*1식=55,000천원	**1. 본원 노후시설물 성능개선공사** 가. 제2별관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 ・ 243,000,000원*1식=243,000천원 나. 본관 터보냉동기 분해점검 ・ 54,153,000원*1식=54,153천원 다. 본관 5~8층 LED 전등 교체공사 ・ 209,904원*450개=94,457천원 라.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공사 ・ 3,740,429원*175kw=654,575천원 **2. 교육원 노후시설물 성능개선공사** 가. 빌딩자동제어 설치공사 ・ 179,000,000원*1식=179,000천원 나. 피트내 오배수 배관 교체 ・ 272,000,000원*1식=272,000천원 다. 대강당옆 복도 바닥교체 ・ 6,655,000원*1식=6,655천원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 그런데 2023년도 ‘본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 공사비의 이월액은 공사비 예산 3억 2,300만원 중 48%에 해당하는 1억 5,600만원이고, ‘교육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 공사비의 이월액은 4억 2,000만원 중 55%에 해당하는 2억 3,200만원임.

2024년도의 경우 7월말 현재 ‘본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 공사비는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 3억 2,000만원 중 6,5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20%, ‘교육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 공사비는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 2억 400만원 중 7,0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34%로 낮은 수준임.

□ 따라서 이월액의 발생 및 집행 실적이 저조한 점과 내년도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023년 및 2024년 ‘본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 및 교육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 공사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3				2024(‘24.7월말)					2025 예산안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예산현액	집행액	
· 본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 공사비 (420-03)	323	142	156	25	320	476	188	320	65	1,046
· 교육원 노후시설 등 성능개선 공사비 (420-03)	420	160	232	28	204	436	305	204	70	458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6. 전산운영경비(정보화) :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OASYS) 구축 관련 예산의 면밀한 관리 필요

가. 편성 현황

□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134-309)’는 감사자료분석시스템, 업무포털시스템(OASYS),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및 사이버보안센터를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사무용 전산기기를 최적의 가동상태로 유지하여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 2025년도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134-309)’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158억 6,500만원 대비 2억 4,600만원(1.6%) 증액된 161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구체적인 내역은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OASYS) 시스템 구축’ 2차년도 예산 128억 5,400만원, ‘감사자료 분석시스템’ 운영 17억 8,100만원, ‘공공감사 정보시스템’ 운영 5억 3,900만원, ‘사이버보안센터’ 운영 9억 3,600만원 등임.

<2024년도 ‘전산운영경비(정보화)’ 편성내역>

(단위: 백만 원, %)

사 업 명	2023년 결산	2024년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전산운영경비	8,757	15,865	24,414	16,111	246	1.6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2024년도 '전산운영경비(정보화)' 편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결산			2024 본예산	2025 예산안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	8,985	8,757	173	15,865	16,111
· 감사자료분석시스템 구축 · 운영	1,803	1,768	35	1,810	1,781
· OASYS 구축 · 운영	2,411	2,323	88	12,822	12,854
· 공공감사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3,828	3,760	13	297	540
· 사이버보안센터 구축 · 운영	943	906	37	936	936

구 분	2023 결산					2024 본예산	2025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	이월액	불용액		
· OASYS 구축 · 운영	2,290	2,411	2,323	-	88	12,822	12,854
- 일반수용비(210-01)	235	233	213	-	20	234	213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43	143	121	-	22	133	121
- 임차료(210-07)	-	-	-	-	-	-	115
- 시설장비유지비(210-09)	373	373	328	-	45	374	-
- 관리용역비(210-15)	1,288	1,288	1,288	-	-	1,288	1,548
- 일반연구비(260-01)	-	123	123	-	-	429	7,067
- 공사비(420-03)	-	-	-	-	-	88	-
- 자산취득비(430-01)	251	251	250	-	1	10,276	3,790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나.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OASYS) 구축 관련 예산의 면밀한 관리 필요

□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OASYS) 구축·운영은 전자감사관리시스템, 실적관리시스템, 성과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의 안정적인 구축·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내역사업임.

○ 감사원은 2014년부터 활용해오고 있는 OASYS 운영서버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변화된 IT 환경에 따라 업무 방식을 혁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차세대 OASYS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2023년도에 수립하였고, 이 계획을 근거로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OASYS) 구축'을 위한 예산을 2024년도부터 편성한 바 있음.

□ 감사원은 2024년에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OASYS) 구축'과 관련하여 당초에는 단년도 사업으로 계획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정부 예산심의 단계에서 2024년(1차년도)에는 인프라 구축, 2025년(2차년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조정되었음.

□ 이에 감사원은 2024년(1차년도)에는 자료유출 가능성을 전면 차단하고, 비대면 업무환경 대응 및 전자감사시스템 오류와 속도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차세대 원격 업무환경(VDI)[227]을 조성하는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경비로 총 105억 2,400만원[228]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기로 하였고,

2025년(2차년도) 예산안에는 비정형 자료(문서형태)의 분석·활용

227) 데스크톱 가상화, 어느 PC에서나 중앙서버의 개인 가상 데스크톱에 바로 접속해 업무처리(자료 저장, OASYS 이용 등) 가능

228) 일반연구비: 감리비(3억 8,200만원), 개인정보영향평가(4,600만원)
공사비: 전산센터 구축(8,800만원),
자산취득비: 하드웨어 구입(80억 2,7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12억 700만원), 전산센터 구축(7억 2,900만원) 조달수수료: 4,500만원임.

기능을 마련하고, 축적된 감사보고서 등을 감사기획 및 보고서 작성 등에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며, 맞춤형 포털 등의 편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비용 등을 위한 경비로 106억 8,800만원[229]을 산정하였음.

229) 일반연구비: 차세대 OASYS 개발비(64억 9,800만원), 감리비(4억 8,600만원), 개인정보영향평가(8,300만원)
자산취득비: 하드웨어 구입(3억 5,200만원), 소프트웨어 구입(31억 1,600만원)
조달수수료: 3,800만원임.

<2024년 예산 및 및 2025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기존 시스템 대비 변경 내역	2024 요구	예산		
				'24년	'25년 (안)	비목
디지털 감사시스템 구축		· 기존 전자감사시스템의 한글문서 작성 및 결재 기능에서 벗어나 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	4,841	-	4,349	자산취득비, 일반연구비
원내 행정시스템 재구축		· 기존에 분산·혼재되어 있는 고유업무/업무지원 기능을 재분류 및 개편	4,657	-	4,505	자산취득비, 일반연구비
사용자 맞춤형 포털 구축		· 업무별/직급별로 맞춤형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재구축 등	3,824	-	760	자산취득비, 일반연구비
사무실 임대료		· 사무실 임대료	300	-	115	임차료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클라우드 전환	· 노후 장비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면 교체	2,565	-	-*	자산취득비
	데스크톱 가상화(VDI)	· 언제 어디서나 가상 업무망 PC에 접속할 수 있는 차세대 원격 업무환경 구축	4,298	4,298	-	자산취득비
	네트워크 재구축	· VDI 도입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해 속도 개선	4,826	4,645	-	자산취득비
전산센터 구축		· 노후화된 서버실 통합, 설비 보완	1,393	1,020	352	자산취득비
			88	88	-	공사비
기타		· 감리비, 개인정보영향평가 비용	945	428	569	일반연구비
		· 조달수수료	96	44	38	자산취득비
합 계			27,833	10,524	10,688	
				21,212		

- '클라우드 전환' 비용(ISP 산출 2,565백만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 설치되는 감사원 전산장비 도입 관련 비용으로 국정자원에서 '25년 예산으로 요구하였으며 위 표에는 미포함

* 감사원은 당초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국정자원은 장비 '임차료'로 예산에 반영하였고, 임차료는 국정자원에서 만 5년에 걸쳐 분기별로 집행(총 20회, 1,300백만원)할 예정이며 '25년에는 1회차(4/4분기)에 해당하는 65백만원이 국정자원 예산에 반영되어 있음)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2025년 차세대 OASYS 구축 예산안 편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비 목	내 역	예산액 (백만원)	산출근거
임차료 (210-07)	시스템 구축 사무실 임차료	115	- 월 임차료(11,500천원) 및 사업기간(10개월) 적용
일반연구비 (260-01)	차세대 OASYS 개발비	6,498	- FP 방식 개발비 5,858백만원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적용해 산출한 기능점수 및 단가를 적용해 산출 - MM 방식 개발비 640백만원 : 홈페이지 구축(디자인 등 콘텐츠 관련)과 같이 FP방식 개발비 산정이 곤란한 개발은 투입인력 및 기간을 고려해 산출
	감리비	486	- 개발비, HW/SW 구입비를 기초로 '정보시스템 감리대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출
	개인정보 영향평가	83	- 정보보호 컨설턴트 임금, ISP 수립시 산출된 컨설팅 업무량을 기초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가산정 기준'을 적용해 산출
자산취득비 (430-01)	HW 구입	352	WEB/WAS/DB 서버
	SW 구입	3,116	- 감사보고서 분석시스템 374백만원 - 법령정보 수집/분석 172백만원 - 전자문서 관리 1,881백만원 - 공통 SW 670백만원 - 전자팩스 솔루션 19백만원
	조달수수료	38	- 당초 요구한 총사업비에 조달수수료율을 적용해 산출
합계		10,688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 2024년도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OASYS) 구축 인프라 구축 예산 105억 2,400만원 중 2024년 10월 현재 집행액은 440만원이며, 이는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OASYS) 구축사업 과업심의위원회[230] 외부위원 수당을 지급한 것임.

□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집행액이 저조하나, 2024년 8월 말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OASYS)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에 따른 구축 사업 기간은 '24. 8. 29. ~ '25. 4. 26. 이고, 사업비는 70억 2,400만원임.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OASYS)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사업 계약 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계약일	예산액	계약 금액	집행액	이월 예상액	계약 기간	계약 업체	계약 방식
차세대 OASYS 구축을 위한 '감사원 네트워크 고도화 및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 사업	'24.8.29.	10,524	7,024	4	2,107	'24.8.29. ~'25.4.26.	KT 컨소시엄	경쟁 입찰

* 자료 : 감사원 제출 자료

230)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수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 밖에 동 사업 예산으로 10월 말 중에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함. 그러나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OASYS) 네트워크 및 인프라 사업은 8월 말에 체결됨에 따라 사업비의 30%인 21억 700만 원의 이월이 예상되는 등 사업 지연이 예상되고 있음.

□ 따라서 2025년도(2차년도) 예산안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업계획과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대해 감사원은 관계 기관과 협의 지연 등으로 2024년도 사업은 착수가 늦어졌으나 2025년도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은 인프라 구축 사업과 병행이 가능하여 2025년도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그간 감사원의 전산운영경비(정보화) 사업이 차년도로 이월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법사위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시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왔음.231)

---

231) * 2023회계연도 법사위 예산검토보고서에서는 공공감사정보시스템의 재구축을 위해 편성한 2022년(1차 연도분) 과다한 이월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사업의 지연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2023년도(2차 연도) 구축예산의 적정성 및 적기 집행 가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2022회계연도 법제사법위원회 결산 예비심사보고서에서는 2022년에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OASYS)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용역계약의 연도 말 체결 및 이월 발생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계약 발주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전산운영경비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된 감사자료분석시스템 사업에 대해 연례적인 이월액 발생으로 인한 집행률 저조 등을 사유로 국회는 결산 심사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한 바 있음.

- 2015, 2016 및 2019회계연도 법제사법위원회 결산 예비심사보고서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 시정요구 유형 중 '주의' 조치가 주어졌고, 2017회계연도 법제사법위원회 검토의견에서도 해당 사업의 연례적인 이월이 지적되었음. 또한 2018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의견에서도 해당 사업의 연례적 이월 발생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계약 발주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또한, 2025년도 상반기에는 2024년에서 이월된 사업이 추진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로 인해 2025년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7. 국제교류협력강화 : 국제기구 외부감사인 진출 추진 관련 국외업무여비 감액조정 필요

가. 편성 현황

○ ‘국제교류협력강화(1135-322)’ 사업은 각종 국제회의의 개최·참석 및 외국 감사원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감사원의 국제적 위상 및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액 8억 5,400만원보다 2억 800만원이 증액(24.4%)된 10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주요 내역은 국제기구 외부감사인 진출 추진 관련 국외업무여비 1억 2,500만원 증액, ASOSAI WGCMA 회의개최 관련 일반용역비 1억 3,400만원 증액 등임.

<2025년도 국제교류협력강화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도 결산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안		증 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국제교류협력강화	988	854	854	1,554	1,062	208	24.4

사 업 명	2023회계연도 결산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안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 비목별 분류	1,001	988	13	854	1,062
- 일반수용비(210-01)	131	129	2	115	107
- 공공요금및제세(210-02)	5	5	-	7	10
- 임차료(210-07)	53	53	-	47	73
- 시설장치유지비(210-09)	2	2	-	3	3
- 일반용역비(210-14)	170	169	1	136	134
- 국내여비(220-01)	17	15	2	-	-
- 국외업무여비(220-02)	467	460	7	354	553
- 사업추진비(240-01)	18	18	-	20	14
- 관서업무추진비(240-02)	30	29	1	50	50
- 국제부담금(340-02)	108	108	-	122	118

* 자료 : 감사원

나. 국제기구 외부감사인 진출 추진 관련 국외업무여비 감액조정 필요

○ ‘국제기구 외부감사인 진출 추진’ 사업[232]은 감사원이 현재 수행 중인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외부감사인 임기가 2025년에 종료됨에 따라 타 국제기구의 외부감사인 선임을 새롭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으로 일반수용비 400만원, 국외업무여비 1억 2,500만원, 총 1억 2,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국제기구 외부감사인 진출 추진 사업 세부 편성내역>

(단위: 천원)

비 목	내 역	예산액
일반수용비(210-10)	회의자료 및 발간물 제작 등	4,000
국외업무여비(220-02)	국제기구 외부감사인 진출 추진**(캐나다)**	51,340
	국제기구 외부감사인 진출 추진**(이탈리아)**	36,831
	국제기구 외부감사인 진출 추진**(오스트리아)**	36,829
	소 계	125,000
합 계		129,000

* 자료 : 감사원 제출자료 재구성

○ 이 중 국외업무여비는 국제기구별 외부감사인 선거 참석 등을 위한 경비로, 감사원은 국제기구 내 우리나라의 영향력과 조직 규모, 필요 감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3개 국제기구(ICAO, FAO, UNIDO)를 선정하고 외부감사인 선거에 각각 입후보할 예정으로서

232) 국제교류협력강화(1135-322) 사업의 내내역 사업으로서, 내역 사업인 “기타 국제교류” 사업 내에 편성되어 있음.

해당 국제기구가 위치한 3개 국가(캐나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의 국외출장을 계획하고 동 예산을 편성한 것임.

<외부감사인 선거 추진 관련 국제기구 개요>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영향력) 국제민간항공 국제기준 제정 및 정책 결정, UN에서 가장 권한이 강한 기관 중 하나

○ (우리나라 위상) ICAO 내 전체 7위의 분담금 부담국(3.16%), 이사국 8연임

○ (조직규모·예산) 700여 명, 약 1,165억원

○ (본부위치) 캐나다 몬트리올

○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 (선거일정) 스위스의 후임('20년부터 연임)으로 '25년 선출 예정(임기 3년)

○ (선정절차) 기술제안서 심사 결과 총점 3위 내 후보국들의 구두 발표('25년 초 예상) → ICAO 이사회에서 외부감사인 수임 의결('25년 6월 예정) → ICAO 총회에서 외부감사인 수임 승인('25년 10월 예정)

□ 세계식량기구(FAO)

○ (영향력) 전 세계 식량 문제 해결과 농촌 개발 역할 담당

○ (우리나라 위상) '89년 이래 13회 연속 이사국으로 활동, 전체 8위 분담금 부담(3.534%)

○ (조직규모·예산) 3,258명(본부, 사무소), 40억 달러(약 5조원)

○ (본부위치) 이탈리아 로마

○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선거일정) 인도의 후임으로 '25. 5월 선거 예정(임기: '26~'32년)이며 구체적 일정 및 상세절차는 미정

□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 (영향력) 공업개발 관련 정책 수립, 개도국에 대한 기술협력 제공 등

○ (우리나라 위상) '88년 이래 10회 연속 이사국, 전체 7위 분담금 부담(3.731%)

○ (조직규모·예산) 680여명, 1,200억 여원

○ (본부위치) 오스트리아 빈

○ (선거일정) 이집트 후임으로 '25. 12월 선거 예정(임기 2년, '26. 7월~'28. 6월)이며 구체적 일정 및 상세 절차는 미정

* 자료 : 감사원

○ 일반적으로 국제기구 외부감사인 선정방식은 대부분 선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233], 이 경우 입후보국의 자질과 능력도 중요하나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하는 국제기구 선거 특성상 회원국 간 관계가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국가 차원에서의 집중적이고 전방위적인 외교교섭을 통한 지지표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국제기구 선거를 총괄하는 외교부는 매년 연말 국제기구 선거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전 부처가 계획 중인 차년도 국제기구 선거를 대상으로 우선순위(중점선거, 주요선거, 일반선거)를 정하고 교섭수준의 차등[234]을 두고 있는바, 실질적으로는 국가

233) 감사원은 국제기구 외부감사인 선거방식은 대부분 선거방식이고 ICAO는 이번에 후임 외부감사인 수임 방식으로 제안서(기술・재정) 평가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설명함.

234)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

제6조(선거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 선거조정회의에서는 상정된 선거 현황을 확인하고, 선거별 중요도, 진출 필요성, 국가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 당선 가능성, 경합 정도, 여타 선거 입후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각 호와 같이 교섭 수준을 결정한다.

1. 중점 선거 : 국가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큰 선거로 진출 필요성이 가장 높은 소수의 선거
2. 주요 선거 : 국가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비교적 큰 선거로 진출 필요성이 있으며 경합이 예상되는 선거
3. 일반 선거 : 진출 필요성이 주요 선거에 비해 낮거나, 중요도가 낮으면서 무경합이 유지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선거

제7조(우선순위별 교섭수준 결정) 원칙적으로 동일 선거 내 상호지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제6조에 따른 선거의 우선순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섭수준을 결정한다.

1. 중점선거 : 거점공관 및 전체 회원국 소재 재외공관을 통해 지지 교섭하며, 주요・일반선거보다 상호 및 교환지지를 우선적으로 추진
2. 주요선거 : 거점공관을 통한 교섭을 우선 실시하되, 중점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시 전체 회원국 소재 재외공관을 통한 교섭 및 상호・교환지지 추진 검토
3. 일반선거: 가급적 무경합 상황을 유지하는데 주력하되, 여건을 보아가며 필요시 거점공관을 통한 교섭

이익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소수의 중점 또는 주요선거를 선별하고 이에 교섭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임.

- 즉, 국제기구 선거는 입후보 국가간 상호지지, 교환지지가 필수적이므로 우리나라가 국제기구 선거에 과다 입후보할 경우 지지표 분산으로 오히려 중요한 선거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바,[235] 각 부처의 입후보 난립에 따른 교섭력 분산을 방지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체계적인 교섭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

○ 이에 따라 감사원은 올해 연말 3개 국제기구에 대한 선거계획을 외교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해당 선거가 2025년 주요선거로 분류될 수 있도록 외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 그런데 매년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우리나라의 차년도 국제기구 전체 선거 수는 통상적으로 약 10회～15회[236]이라는 점에서 감사원 단독으로 2025년 한해 동안 3개 선거를 추진하는 것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제기구 선거 전략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보여짐.

및 상호지지 추진 검토, 교환지지는 최소화

235) 실제로 한국은 2022년 10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탈락한 바 있는데, 이는 2006년 인권이사회가 신설된 후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이사국 진출에 실패한 사례임. 당시 한국은 지나치게 많은 국제기구 선거에 출마하면서 외교력이 분산돼 유엔 인권이사국 선거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탈락 원인으로 지적되었음. 즉, 국제기구 선거 특성상 입후보 국가간 상호지지, 교환지지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과도한 선거 입후보로 인해 상호 지지 가용표를 조기에 소진한 것이라는 지적임.

236)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서 결정하는 우리나라 국제기구 입후보 선거 수는 2020년 11개, 2021년 10개(중점 1개, 주요 3개, 일반 6개), 2022년 14개(중점 4개, 주요 6개, 일반 4개)로 언론에 보도되었고 외교부는 2023년 및 2024년도 선거 수를 정확히 밝힐 수 없으나 전체 약 10~15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함.

- 특히 국제기구 외부감사인 선거는 타 국가간 경합이 예상되므로 국제기구 진출 추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해당 선거가 중점 또는 주요선거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성이 있는바,

  교섭력 분산 방지를 위해 중점 및 주요선거의 수는 매해 줄어드는 추세[237]라는 점을 고려하면 감사원이 추진하는 3개의 국제기구 선거 모두 중점 또는 주요선거에 포함될 수 있을지 의문임.

○ 또한 ICAO의 경우 2025년 하반기 총회에서 이사국(국토교통부 소관)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교섭활동이 중복될 우려가 있고, 현재 국제기구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1개과(국제기구감사과) 11명이라는 점을 고려[238]하면 3개 선거에 동시에 선임되더라도 감사인력 등의 문제로 모든 국제기구의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바,

- 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3개 국제기구 선거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소요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239]」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보여짐.

---

237) 외교부 설명에 따르면 2022년 10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탈락 이후 교섭력 분산 방지를 위해 중점 및 주요선거는 최소한으로 정하는 기조로 가고 있으며 그 수가 매해 줄어드는 추세라고 함. .

238) 국제기구 감사는 국제기구감사기준에 대한 지식과 영어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고 현지에서 직접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장기간 소요되는바, 실제적으로 현재 감사원은 국제기구감사과 내 직원(11명)이 ICC 외부감사인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임.

239)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5

○ 따라서 감사원이 2025년 연간 3개 국제기구의 외부감사인 선거 입후보를 계획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전제로 편성한 국외업무여비를 일부 감액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감사기구 역량강화(ODA) : 면밀한 산출을 통한 일반용역비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편성 현황

○ ‘감사기구 역량강화(ODA)(1135-323)’ 사업은 개발도상국 내 감사원의 관리자급 직원을 초청하여 우리나라가 구축한 감사 시스템 및 감사기법을 전파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2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감사기구 역량강화(ODA)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도 결산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안		증 감	
		본예산	추경(A)	요구	조정(B)	(B-A)	%
감사기구 역량강화(ODA)	294	292	292	301	292	-	-

사업명	2023회계연도 결산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안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 비목별 분류	297	294	3	292	292
- 일반수용비(210-01)	51	49	2	46	46
- 일반용역비(210-14)	242	242	-	242	242
- 사업추진비(240-01)	4	3	1	4	4

* 자료 : 감사원

나. 면밀한 산출을 통한 일반용역비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 감사원은 2025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다국가(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를 연수대상 국가로 선정하고 1개국당 12인씩 총 36명을 초청하여 13박 14일 일정으로 연수를 추진할 계획으로, 교육과 관련된 주요 업무 이외의 각종 부대 업무[240]를 외부업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일반용역비 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세부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일반용역비 세부 산출내역>

(단위: 천원)

대상국	산 출 근 거	예산액
말레이시아	• **항공료: 1,665,000원*12명=**	**19,980**
	• 숙박비: 150,000원*12명*10박=	18,000
	• 식비: 50,000원*12명*14일=	8,400
	• 강의실 임차: 1,00,000원*6일=	6,000
	• 차량 및 장비등 임차: 400,000원*6일=	2,400
	• 보조인력 운영: 160,000*2명*12일=	3,840
	• 보험 등 기타경비: 200,000원*12명=	2,400
	소 계	61,020
방글라데시	• **항공료: 3,850,000원*12명=**	**46,200**
	• 숙박비: 150,000원*12명*10박=	18,000
	• 식비: 50,000원*12명*14일=	8,400
	• 강의실 임차: 1,000,000원*6일=	6,000

240) 출입국지원, 연수장소 및 식사제공, 연수과정 설계지원, 연수생 관리, 콘텐츠 제작 지원, 외부활동 운영 등

대상국	산 출 근 거	예산액
	· 차량 및 장비등 임차: 400,000원*6일=	2,400
	· 보조인력 운영: 160,000*2명*12일=	3,840
	· 보험 등 기타경비: 200,000원*12명=	2,400
	소 계	87,240
다국가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 항공료: 4,400,000원*12명=**	**52,800**
	· 숙박비: 150,000원*12명*10박=	18,000
	· 식비: 50,000원*12명*14일=	8,400
	· 강의실 임차: 1,000,000원*6일=	6,000
	· 차량 및 장비등 임차: 400,000원*6일=	2,400
	· 보조인력 운영: 160,000*2명*12일=	3,840
	· 보험 등 기타경비: 200,000원*12명=	2,400
	소 계	93,840
총 합		242,000

* 자료 : 감사원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241]에 따르면 일반용역비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 동 기준에 따르면 일반용역비 예산 항목은 인건비, 경비(여비, 임차료, 회의비 등),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242]되고 통상

241)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232

242)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②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제24조(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23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27조(경비)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1. ~ 8. (생 략)

적으로 인건비 및 경비가 많이 산정될수록 용역업체에 지급되는 이윤 등도 커져 전체 일반용역비 예산의 규모가 확대[243]되는 구조임.

○ 특히 동 사업은 초청연수라는 특성상 경비 중 “국가별 연수생 초청을 위한 항공료”가 1억 1,900만원으로 일반용역비 예산액 중 많은 비중(49.2%)을 차지하고 있는바, 일반용역비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예산 산출을 통해 해당 경비가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감사원은 항공료 단가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따른 단가 대비 높게 책정함으로써 일반용역비 전체 예산액이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은 항공료를 책정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일부 국가의 항공료 단가를 명시[244]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동 지침상 해당 국가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경우 가장 근접한 국가의 항공료 단가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243) 용역업체에 지급되는 이윤 등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를 합친 금액의 일정비율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산출된 필요경비가 커질수록 이윤 등 부대비용도 커지고, 이에 따라 전체 예산의 규모도 확대됨.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8조(일반관리비 등) ① 일반관리비는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이윤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44)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311

- 그러나 동 사업의 일반용역비 산출내역 중 항공료 부분을 살펴보면 3개 국가에 대한 항공료 단가 모두 지침상에 명시된 해당 국가 또는 근접 국가의 항공료 단가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됨으로써 전체 인원에 대한 항공료가 과다 산정된 것으로 보임.

- 다만, 항공료는 그 특성상 실시간 금액이 변동되므로 단가를 일률적으로 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나, 그럼에도 지침상 항공료 단가보다 2배 이상 차이나는 금액으로 책정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음.

<편성단가 및 지침상 단가 적용 항공료 비교>

(단위: 천원)

구 분	편성 단가 적용(A)		지침상 단가 적용(B)		편차 (A-B)	비 고
	산출내역	금액	산출내역	금액		
말레이시아	1,665 *12명	19,980	1,513 *12명	18,156	1,824	
방글라데시	3,850 *12명	46,200	1,531 *12명	18,372	27,828	미얀마 적용
다국가 (아제르바이잔, 키즈기르스탄)	4,400 *12명	52,800	2,913 *12명	34,956	17,844	튀르키예 및 우즈베키스탄 245) 중간값 적용
합 계		118,980	합 계	71,484	47,496	

* 인천(ICN), 왕복운임, ECONOMY CLASS[246] 기준

245) 튀르키예: 3,764,700원, 우즈베키스탄: 2,061,200원

246)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p.240)에 따르면 「실무인력 초청연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외여비 2등정액 항공임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일반용역비 산출내역 중 항공료에 해당하는 경비가 다소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면밀한 산출을 통해 일반용역비 예산액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 총괄적 검토 ◈

1. 수사 및 공소 관련 위원회 운영 예산의 적정성 검토

가. 예산안 개요

○ 공수처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각종 심의·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그 중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① 수사심의위원회, ② 영장심의위원회, ③ 공보심의위원회, ④ 감찰위원회, ⑤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를, 공소와 관련하여서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공수처 산하 수사·공소 관련 위원회 현황>

구 분	법적 근거	위원 수 (외부위원)	소집요건	심의대상
수사심의 위원회	「공수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공수처예규)」	20명 이상	처장의 요청	① 직접수사 개시 여부, ②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의 수사방향, ③ 구속영장 청구 여부, ④ 처장의 이첩요청 여부
영장심의 위원회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247] (「공수처법」 제47조에 따	9명	사법경찰관의 심의 신청	① 체포·구속영장, ② 압수·수색·검증 영장, ③ 통신제한조치 허가 청구

구 분	법적 근거	위원 수 (외부위원)	소집요건	심의대상
	라 준용)			
공보심의 위원회	「공수처 사건 공보 준칙(공수처훈령)」	15인 이하 (과반 이상)	–	① 공소제기한 사건, ② 공소제기요구한 사건, ③ 불기소 등 사건, ④ 수사 종결 전 사건 등에 대한 공보 심의
감찰위원회	「공수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공수처훈령)」	5~9명 (3~9명)	위원장 요청 또는 처장이 나 재적위원 1/3 이상 요청	① 감찰업무의 기본방향·계획, ② 인권감찰관이 회부한 중요 감찰사건에 필요한 조치, ③ 비위행위 조치기준 및 처리절차
내부고발자 구조심의 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5명 (3명)	위원장 요청	①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②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공소심의 위원회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공수처예규)」	10명 이상	처장의 요청	① 공소제기 여부 또는 공소제기요구 여부, ② 기소 여부 판단의 토대가 되는 법률·사실적 쟁점, ③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④ 무죄판결 등에 대한 상소 여부

2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공수처는 수사 및 공소 관련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있음. 2025년도 예산안은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11-301)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에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및 회의 자료 인쇄 등 경비(이하 “수당등”) 예산으로 전년대비 3,082만원 감액한 2,905만원을, 공판활동지원(1033-301)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에 전년도와 동일한 1,0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음.

<2025년도 수사 및 공소 관련 위원회 수당등 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감	
			B−A	(B−A)/A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32-301)	1,719,500	1,430,000	△289,500	△16.8
・수사 관련 위원회 운영	59,865	29,050	△30,815	△51.5
○공판활동지원(1033-301)	29,600	30,000	400	1.4
・공소심의위원회 운영	10,600	10,600	-	-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또한, 공수처는 위원회 회의 개최를 위한 외부 회의장 임차료로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11-301) 사업의 임차료(210-07)에 전년과 동일한 300만원을, 공판활동지원(1033-301) 사업의 임차료(210-07)에 전년대비 100만원 감액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음.

나. 과다편성된 위원회 예산 감액 검토 필요

○ 2025년도 공수처 소속 위원회 운영 예산은 다음 측면에서 감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실제 소요 대비 과다산정된 위원회 참석등 예산을 적정 규모로 감액할 필요가 있음.

공수처는 2025년도 예산안에 수사심의위원회, 영장심의위원회 등 수사와 관련한 5개 위원회 경비를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11-301)” 사업에, 공소심의위원회 경비를 “공판활동지원(1012-301)” 사업에 각각 계상하고 있음.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수사 관련 위원회는 15회 개최를 기준으로 총 2,905만원, 공소심의위원회는 6회 개최를 기준으로 총 1,060만원이 계상됨.

그런데 수사 관련 위원회의 경우, 2023년 예산액 2억 3,400만원 중 2,307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9%이고, 2024년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예산이 70% 이상 감액되었음에도 9월말 기준 예산액 5,987만원 중 775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12.9%임. 또한, 공소심의위원회의 경우 2024년 9월말 기준 집행이 한 건도 없는 등,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함.

<공수처 운영 각 위원회의 수당등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위원회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9.**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11-301)	수사심의위원회	편성액	81,600	49,500	49,500	-
		집행액	-	5,400	7,966	1,800
		집행률(%)	-	10.9	16.1	-
	수사자문단***	편성액	82,500	67,500	67,500	-
		집행액	-	6,000	7,600	-
		집행률(%)	0	9.2	11.3	-
	영장심의위원회	편성액	-	40.500	40,500	-
		집행액	-	-	-	1,350
		집행률(%)	-	-	-	-
	공보심의위원회	편성액	-	66,000	66,000	-
		집행액	6,567	4,966	5,300	2,800
		집행률(%)	-	7.5	8.0	-
	감찰위원회	편성액	-	4,200	4,200	-
		집행액	-	2,800	2,200	1,000
		집행률(%)	-	66.7	52.4	-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편성액	-	6,300	6,300	-
		집행액	595	1,500	-	-
		집행률(%)	-	23.8	-	-
	합계	편성액	164,100	234,000	234,000	59,865
		집행액	7,162	20,666	23,066	7,750
		집행률	4.4	8.8	9.9	12.9
공판활동 지원 (1012-301)	공소심의위원회	편성액	81,600	48,000	47,925	10,600
		집행액	1,400	4,365	2,550	-
		집행률(%)	1.7	9.1	5.3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4년 예산부터 위원회별 구분 없이 총계로 계상
***2024. 1. 25. 수사심의위원회로 통합

2024년 9월말까지의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수사 관련 위원회 수당 등의 연말 예상 집행액을 산정하면 1,033만원이며, 이는 2025년 예산편성액 2,905만원 대비 35%에 불과하여 2025년에도 집행 부진이 예상됨.

특히, 수사 관련 위원회의 개최횟수를 살펴보면, 2022년도에는 17회였으나 2023년에는 14회, 2024년은 연말까지 예상개최횟수가 8회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고, 이는 공소심의위원회도 동일함.[248]

<수사·공소 관련 위원회 개최실적>

(단위: 회)

구분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영장심의위원회	공보심의위원회	감찰위원회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	공소심의위원회
구성 시기		'21.6.	'21.6.	'21.6.	'21.9.	'22.9.	'21.7.	'21.6.
2022년	예산	15	15	15	20	2	7	16
	실적	5	4	–	5	2	1	3
2023년	예산	15	15	15	20	2	7	14
	실적	3	3	1	5	2	–	2
2024년 9월말	예산	30***						6
	실적	1	–	1	3	1	–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4. 1. 25. 수사심의위원회로 통합
***2024년 예산부터 위원회별 구분 없이 총계로 계상

또한, 공수처의 최근 4년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2021년에 총 3,025건이 접수된 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2025년에

248) 2022년 3회, 2023년 2회, 2024년 0회

도 수사 및 공소 관련 위원회의 개최횟수가 급증할 사정은 없을 것으로 보임.

<최근 4년간 공수처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말
사건 접수	3,025	2,457	2,401	1,149
직접 처리	405	1,776	1,977	907
공소 제기	2	1	-	1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따라서, 수사 및 공소 관련 위원회 수당등은 실제 집행가능한 규모로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외부회의장 임차료 편성의 필요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공수처는 수사 및 공소 관련 위원회 개최를 위한 외부회의장 임차료 예산으로 각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 계상하였음.

해당 예산은 장소적 여건을 고려하여 외부위원의 회의참석을 독려하고 각 위원회 개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에 위치한 외부 회의장을 임차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공수처는 수도권 소재 정부과천종합청사에 위치하여 공수

처 내 회의장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공수처 소관 각 위원회의 개최횟수가 많지 않아 공수처 청사 내 회의장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실제로 2024년 수사 및 공소 관련 위원회의 회의개최내역을 보면, 모두 공수처 중회의실 또는 서면회의로 이루어졌고 외부회의장에서 개최된 내역은 없음.

<2024년도 수사 및 공소 관련 위원회 개최일자 및 장소 현황>

(단위 : 천원)

위원회명	개최일자	장소	참석위원 수 (외부위원 수)	수당 집행내역
수사심의위원회	2024. 05. 08.	공수처 중회의실	9명	참석수당 1,800
영장심의위원회	2024. 09. 24.	공수처 중회의실	9명	참석수당 1,350
공보심의위원회	2024. 04. 15.	서면	10명	참석수당 1,000
	2024. 04. 19.	서면	10명	참석수당 1,000
	2024. 07. 29.	서면	8명	참석수당 800
감찰위원회	2024. 06. 21.	공수처 중회의실	5명	참석수당 1,000
검사징계위원회	2024. 07. 01.	공수처 중회의실	4명	참석수당 800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한, 2023년도 기준 실제 민간위원의 계획인원 대비 참석인원 비율을 보면, 공수처 내 회의실에서 개최한 회의에는 평균 69%, 외부 회의장에서 개최한 회의에는 평균 58%로 공수처 내 회의의 참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249] 따라서, 외부회의장을 활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수처 내 회의장을 활용하는 것이

249) 다만, 공수처는 외부회의장 회의개최 당일 악천후로 인하여 참석율이 낮았다는 입장임.

그동안의 실적 및 예산절감 취지 등에 비추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2023년 공수처 소관 위원회 개최 실적>

(단위: 명, %)

위원회명	일자	장소	참석계획 (A)		참석실적 (B)		참석률 (B/A)	
			민간	정부	민간	정부	민간	정부
수사심의위원회	3.21.	공수처 대회의실	20	-	10	-	50	-
	4.26.	P호텔 강남점	20	-	12	-	60	-
	7. 3.	공수처 중회의실	20	-	15	-	75	-
수사자문단	4. 6.	P호텔 강남점	20	-	11	-	55	-
	6.26.	공수처 중회의실	21	-	16	-	76	-
	9.25.	공수처 중회의실	21	-	10	-	48	-
자문위원회	4.21.	공수처 대회의실	20	-	13	-	65	-
	7.11.	AT센터	26	-	15	-	58	-
	9. 7.	공수처 중회의실	6	-	6	-	100	-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및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결과 공수처의 외부회의장 임차에 대하여 2차례 주의 요구한바 있음.

<공수처 외부 회의장 임차 관련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회계연도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유형	조치대상기관
'22 결산	외부 회의장 임차를 통한 회의 개최 지양 필요	관련 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	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적사항	○ 공수처는 외부 회의장을 임차하여 수사자문단 및 자문위원회 회의(각 1회, 약 200만원 집행, 기본경비 내 임차료 활용)를 개최하였는데, 수도권에 소재한 공수처 내 회의장에 대한 장소적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예산집행지침은 회의장으로 각급 공공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외부 회의장 임차를 위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집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집행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공수처는 소관 위원회 회의를 외부 회의장에서 개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 회의장을 임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3 결산	외부 회의장 임차를 통한 회의 개최 지양 필요	관련 사업명	일반회계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11-301), 공판활동지원(1012-301)	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적사항	○ 공수처는 외부 회의장을 임차하여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자문위원회 회의를 각 1회 개최하였음. - 외부 호텔 등의 장소를 임차하여 회의를 개최할 경우 장소대여료 뿐만 아니라 음식료품 등이 임차료에 포함되어 집행되는 등 방만한 집행 우려		
		시정요구사항	○ 공수처는 불요불급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위원회 회의를 외부회의장에서 개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자료: 2022·2023회계연도 결산 법제사법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따라서, 공수처는 **외부회의장 임차료 예산의 편성 필요성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음.

◈ 개별사업별 검토 ◈

2.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32-301)

가. 예산안 개요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32-301)은 공수처의 전문 수사역량 강화 및 직접수사 활동을 간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2억 9,000만원(16.9%) 감액 편성된 17억 2,000만원임.

<2025년도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비율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344	1,720	1,430	△290	△16.9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나. 정책홍보비를 활용한 내부고발자 제도 실질화 노력 필요

○ 「공수처법」 제46조제2항은 공수처가 각 기관 등의 내부고발자[250]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대통령령인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제6조에서 신변안전조치, 제8조에서 포상금, 제9조에서 구조금 지급의 근거를 규정하고, 공수처 고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은 신변안전조치, 구조금, 포상금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지급기준을 규정[251]하고 있음.

---

250) 내부고발자의 정의는 「공수처법」이나 대통령령인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공수처 고시인 「공수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함.

「공수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부고발자"란 고위공직자범죄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는 등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법인·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나.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약·계약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다.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법인·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사람으로서 내부고발로 인하여 해당 기관·법인·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고위공직자범죄등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내부고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자

251) **「공수처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사무 운영지침」**
제3장 신변안전조치 : 제15조(신변안전조치 신청의 접수), 제16조(신변안전조치 신청 처리 등)
제5장 포상금: 제20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제21조(포상금의 신청), 제22조(의견청취)
제6장 구조금: 제23조(구조금의 지급 항목), 제24조(구조금의 신청), 제25조(구조대상가액 등), 제26조(구조금의 산정기준 등)

<공수처의 내부고발자 보호·지원 관련 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정보제공자의 보호) ② 수사처는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신변안전조치) ① 수사처검사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청에 따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과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수사처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지체 없이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수사처검사와의 협의를 거쳐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신변안전조치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수사처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를 한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안전조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처검사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수사처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한 사람과 보호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가 취해진 사실
2. 제4항에 따라 신변안전조치가 해제된 사실
3.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이 종료된 사실

제8조(포상금) ①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내부고발로 인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을 받으면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제9조에 따른 구조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조사·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사항과 관련하여 내부고발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 5. (생 략)
③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구조금) ① 처장은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내부고발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되,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때
2. 이사·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했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③ 처장은 보복의 위험성, 지급대상자의 직업·신분·생활수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지출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④ 처장은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 신청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고,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위 규정에 따라 공수처는 2025년 예산안에서 동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에 특정범죄신고자, 증인, 내부고발자 등 신변보호 관련 업무 위탁비로 200만원을, 포상금(310-03)에 내부고발자 포상금 500만원, 기타보전금(310-04)에 내부고발자 치료비, 이사비 등으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음.

<2025년 공수처 내부고발자 지원 관련 예산 편성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세목	편성내역	세부산출근거	편성액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32-301)	일반수용비 (210-01목)	특정범죄신고자, 증인, 내부고발자 등 신변보호 관련 업무 위탁비	200,000원*10회	2,000
	포상금 (310-03목)	내부고발자 포상금	5,000,000원	5,000

	기타보전금 (310-04목)	내부고발자 치료비, 이사비 등	3건*1,000,000원=	3,000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런데 2023년 및 2024년에는 내부고발자 지원 관련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고,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도 개최되지 않는 등 제도 활용이 없었음.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수 자체가 적기 때문으로, 공수처에 따르면 출범 이후 이루어진 내부고발 건 수는 2건이었고, 이 중 구조금 지원신청은 1건으로 나타났음.

<최근 3년간 공수처 내부고발자 지원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9월말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신변보호 관련 업무 위탁비	6,000	-	6,000	-	4,000	-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6,300	1,500	6,300	-	-	-
내부고발자 포상금, 치료비, 이사비 등	55,000	-	55,000	-	22,500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범죄는 고위공직자에 의한 증거인멸 또는 내부통제가 용이하여 수사의 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부고발자로부터 수사 단서를 얻어야 할 필요성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다고 할 것임. 따라서,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내부고발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과 노력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공수처는 공직사회 내부고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22년 7월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하여 주요 정부·공공기관에 배포하였고, 2024년에도 내부고발자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광고·홍보영상을 제작하여 11월경 광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음.

고위공직자범죄의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는 지속적인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 제도에 대한 인식에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공수처는 홍보·교육·고발자보호 등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공수처는 동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에 매년 정책홍보비를 편성·집행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안도 동일하게 1,000만원을 계상함.

<2025년도 예산안 중 공수처 정책홍보비 편성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세목	편성내역	세부산출근거	편성액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32-301)	일반수용비(210-01목)	정책홍보비	10,000,000	10,000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해당 예산으로 공수처는 검사 등 채용 공고료 또는 기관 홍보영상 광고료 등을 집행하고 있음. 다만, 직원 신규채용 공고료 등은 2024년도부터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에 별도로 편성·집행 중임.

<공수처 출범 후 정책홍보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일자	집행액	집행내역	비고
1	2021-07-23	2,420	검사 채용 광고	
2	2021-07-23	605	인권감찰관 채용 광고	
3	2022-06-17	1,815	수사관 채용 광고	
4	2022-06-17	605	수사관 채용 광고	
5	2022-07-06	1,815	검사 채용 광고	
6	2022-10-11	22,000	공수처 CI 홍보영상 제작	
7	2022-11-03	1,452	검사 채용 광고	
8	2022-11-03	1,705	검사 채용 광고	
9	2022-12-12	2,420	학술대회 개최 광고	
10	2022-12-27	2,420	검사 채용 광고	
11	2023-02-20	7,000	기관 홍보영상 제작	※ 22년 예산
12	2023-03-15	2,420	검사 채용 광고	
13	2023-03-23	2,420	수사관 채용 광고	
14	2023-05-12	2,420	검사 채용 광고	
15	2023-06-05	2,420	검사 채용 광고	
16	2023-08-24	2,420	검사 채용 광고	
17	2023-10-25	18,150	기관 홍보영상 광고(서울역사 전광판)	
18	2023-10-25	12,000	기관 홍보영상 광고(유튜브 온라인)	
19	2024-06-05	1,210	수사관 채용 광고	
20	2024-06-05	1,210	수사관 채용 광고	
21	2024-06-28	2,200	공수처장 취임식 영상 제작	
22	2024-07-25	2,420	검사 채용 광고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5년도 예산안 중 공수처 직원 신규채용 신문 공고료 등 편성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세목	편성내역	세부산출근거	편성액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 (비총액) (7011-250)	일반수용비 (210-01목)	직원 신규채용 신문 공고료 등	5회*2,400,000원=	12,000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와 유사하게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조치를 두고 있는 법무부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지원 관련 홍보 및 교육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수처는 정책홍보비를 활용하여 내부고발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 강화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법무부 예산안 중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 지원 관련 홍보 예산내역>

사업명	내역	예산액(천원)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1335-30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 지원 관련 홍보 동영상 등 제작	44,500

*자료: 법무부

<202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예산안 중 공익신고제도 교육 예산내역>

사업명	내역	예산액(천원)
공익신고제도운영 (1136-365)	공공, 민간기업 대상 교육자료 제작	10,000
	업무매뉴얼, 안내책자, 리플릿 등 제작	5,000
	합계	15,00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다. 전문수사자문위원회 예산 편성의 필요성 논의 필요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252] 및 제245조의3[253]은 전문수사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음. 전문수사자문위원이란 검사가 수사를 함에 있어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전문가가 수사에 참여하여 자문하는 제도임. 이는 검사가 의료, 첨단산업분야,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안전사고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나 공소제기와 관련된 사실관계 판단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임.[25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제7조에서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수처는 2023년 5월 2

---

25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5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②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54) 박일환·김희옥, 「주석 형사소송법 (Ⅱ)」, 2017, 456.p 이하

일 공수처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위원 운영규칙」을 제정·시행하였고, 2024년 예산부터 동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에 전문수사자문위원 자문료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예산안에도 동일하게 240만원을 계상함.

<2025년도 예산안 중 전문수사자문위원 자문료 편성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세목	편성내역	세부산출근거	편성액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32-301)	일반수용비(210-01목)	전문수사자문위원 자문료	1명*12회*200,000원=	2,400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그런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말까지도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를 선정하지 않는 등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2조(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관리)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한다.

② 처장은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를 명단에 추가하거나 그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제3조(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① 검사는 수사 진행, 구속영장 청구, 사건(항고사건을 포함한다)의 처리 등 수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구두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결정서로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관련 서류를 검토하거나, 피의자·피해자 또는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자리에 동석하는 등 수사절차에 참여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사실을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을 위한 공수처훈령이 제정되고 약 1년 5개월동안 전문수사자문위원 후보자 선정을 하지 않은 것은 제도 운영의 필요성이 낮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예산의 필요성 여부를 재고할 필요가 있음.[255]

255) 이와 관련하여 공수처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의 수사과정에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수처 수사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2024. 11. 전문수사자문위원이 필요한 수사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사부서 요청 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천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3.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7011-250)

가. 예산안 개요

○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사업(7011-250)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업무 수행, 기관 유지 등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2,200만원(0.9%) 증액된 25억 7,300만원임.

<2025년도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비율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2,089	2,551	2,573	22	△0.9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나. 대용량 보안USB 구입비 탄력적 조정 필요

○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써 수사 관련 자료의 유통 시 내부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USB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 관련 자료가 점점 대용량화 되고 있음에도 공수처가 운용 중인 보안USB는 적은 용량(16G)으로 인하여 대용량 수사자료(녹취, 이미지, 영상 등)에 대한 백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보임.

이에 공수처는 2025년 예산안에 동 사업의 일반수용비(210-01)로 대용량(256G) 보안USB 90개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 총 2,520만원을 계상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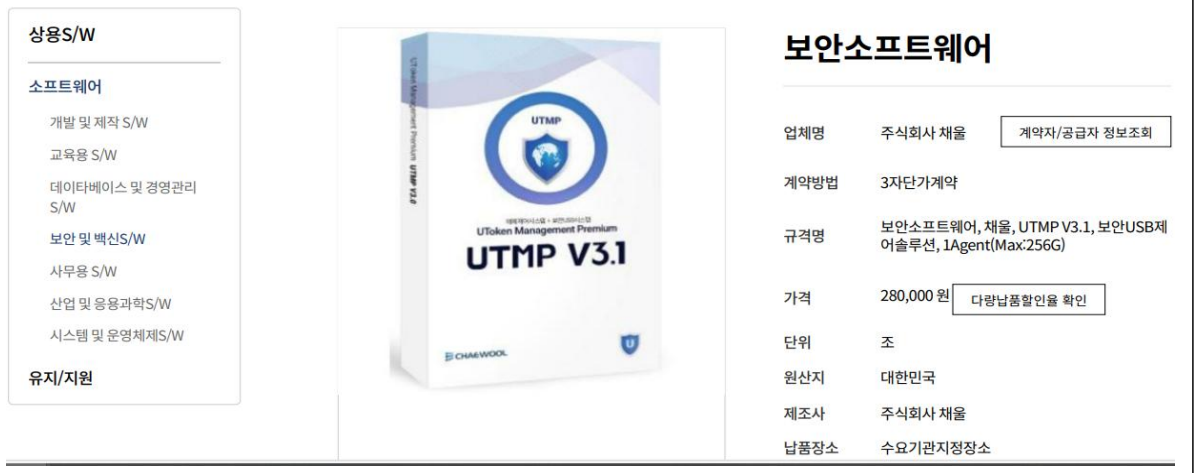
<2025년도 예산안 중 대용량 보안USB 자문료 편성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세목	편성내역	세부산출근거	편성액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 (비총액) (7011-250)	일반수용비 (210-01목)	보안USB 구입	90대*280,000원 =	25,200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용량 보안USB 개요>



○ 가격 : 조달청 쇼핑몰 기준 280,000원(세부물품번호 : 4323320501)
○ 기능
- 보안USB 내 데이터 반출·입 통제
- 외부 저장 매체 및 통신 매체 등 장치 접근 통제
- 보안USB 정보 관리 및 정책 설정 등 보안USB 관리
- PC 에이전트 관리 및 사용자 관리 등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런데 현재 공수처 정원 85명 중 검사 및 수사관은 총 65명이고, 수사 관련 부서의 정원은 58명, 현원은 52명인바, 수사 관련 부서에 근무하지 않는 인원은 대용량 수사자료의 저장·전송 등을 위한 대용량USB를 지급할 필요성은 낮다고 보임.

<공수처 검사·수사관·행정직원 정·현원 현황>

('24. 9월말 기준)

구 분	정 원	현 원
계	85	75
검 사	25	19
수 사 관	40	36
행 정 직 원	20	20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부서별 직원 현황>

(2024.10.25. 기준, 단위: 명)

부서	정원	현원			
		검사	수사관	행정직	계
처장실	2	1	–	1	2
차장실	1	1	–	–	1
대변인실	3	–	1	1	2
인권감찰관실	4	–	–	1	1
기획조정관실	1	–	–	1	1
기획재정담당관실	6	–	1	6	7
운영지원담당관실	10	–	–	8	8
사건관리담당관실	58	16	34	2	52
수사기획관실					
인권수사정책관실					
수사과					
수사1부					
수사2부					
수사3부					
공소부					
계	85	18	36	20	74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따라서, 공수처가 대용량 보안USB의 소요량을 단순히 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과다계상으로 보이므로, 각 부서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한 실제 소요량에 맞추어 예산 역시 적정 규모로 감액·조정할 필요가 있음.

【헌법재판소 소관】

(전문위원: 이화실)

Ⅱ. 검토의견

1.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 간행물 발간

가. 헌법재판소 간행물 발간사업 예산 검토

(1) 헌법재판소 간행물[256]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업무 지원 등을 위한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에서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를 발간하고,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재판자료확충 사업'에서 영문헌법재판소 판례집, 헌법재판소판례요지집 추록,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헌법재판소판례집, 헌법재판소공보, 헌법논총, 헌법재판소장 연설문집, 헌법재판자료 등 번역물 등을 발간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 간행물 및 발간 목적 >

예산사업	간행물	발간 목적
재판활동 운영지원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	역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주요 인사의 구술기록을 책자로 발간
재판자료 확충	영문헌법재판소 판례집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을 번역하여 해외에 널리 알리고, 외국 유관기관 등과의 상호협력·교환자료로 활용

256) 헌법실무연구회에서 발간하는 헌법실무연구 및 연구용역보고서 등 제외

	·헌법재판소판례요지집 추록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헌법재판소판례집	헌법재판소 창설 이후 축적된 판례의 분석·정리·발간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 이해 도모
	헌법재판소공보	헌법재판소의 주요 행정사항 및 판결에 대한 대국민 공개
	헌법논총	헌법·헌법재판 관련 논문의 공모 및 논문집 발간을 통해 헌법재판 연구 활성화 및 연구성과 헌법재판에 활용
	헌법재판소장 연설문집	헌법재판소장 재임 중 발표한 각종 연설문 등 발간을 통해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나아갈 방향의 길잡이로 활용
	헌법재판자료 등 번역물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외국판례, 학술자료 등을 번역·발간함으로써 헌법재판 지원 강화 및 국제교류자료 확충

(2) 헌법재판소 간행물 발간사업 예산

①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 발간 예산

❑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 발간사업은 역대 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주요인사(22명)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한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채록(구술기록 수집) 사업[257]'의 결과물을 책자로 발간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수행하고 있음.

동 사업은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에 포함된 내역사업[258]으로 2025

257)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동 사업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1기 ~ 4기 재판부) 수행한 후 잠정 보류하였으며, 구술자의 퇴직 기간 및 건강 등을 고려하여 2027년부터 사업을 재개할 예정임.

258)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구술총서 발간 사업'은 재판활동 운영지원과 관련된 기록물 연관 사업이므로 '기록물 관리 및 보존' 내역사업이 편성된 '재판활동운영지원사업'에 함께 편성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장의 재임기간 동안의 연설기록을 모아 편찬한 자료인 헌법재판소장 연설문집은 '재판자료확충사업'으로, 역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주요인사의 연설기록과 함께 헌법재판활동 경험 등을 면담형식으로 풀어낸 구술기록인 구술총서는 '재판활동

년 예산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동 사업을 시작한 2023년부터 동일한 금액임.

<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 발간 예산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3		2024.9[259]		2025	
재판활동운영지원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 총서 발간)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안	집행
	30	30	30	-	30	-

자료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채록 사업의 결과물 중 공개에 동의한 구술자의 녹취문과 구술 동영상은 헌법재판소 사이버역사관[260] 구술기록관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구어체로 되어있는 녹취문을 구술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한 것이 구술총서라고 볼 수 있음[261].

< 사이버역사관 서비스 현황 >

재판부 등 구분	사이버역사관 서비스 현황
1기 재판부	김진우, 한병채, 이시윤, 최광률, 김양균 재판관
2기 재판부	김용준 재판소장, 황도연, 정경식 재판관

운영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59) 10월말 발간 예정임

260) http://history.ccourt.go.kr

261) 구술총서와 사이버역사관 서비스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사이버역사관의 경우 구술기록 수집 사업의 결과물인 녹취문과 관련 동영상 등을 서비스하는 것이고, 구술총서의 경우 구어체로 되어있는 녹취문을 윤문하는 과정에서 구술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주 표시, 동일 주제별로 구성 및 관련 콘텐츠(사진, 기록 등)를 추가·구성하여 편집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3기 재판부	윤영철 재판소장, 김영일, 송인준 재판관
4기 재판부	이강국 재판소장, 이공현, 김희옥, 이동흡, 민형기,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
사무처	변정일 사무처장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 발간 현황[262] >

자료: 헌법재판소

회계연도	발간 현황
2023	총 2권, 각 300부 발간 - (제1권)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장 - (제2권) 헌법재판소 1기 재판부 및 변정일 초대 사무처장
2024	총 2권, 각 600부 발간 예정 - (제1권) 김용준 제2대 헌법재판소장 - (제2권) 헌법재판소 2기 재판부
2025	총 2권, 각 600부 발간 예정 - (제1권) 윤영철 제3대 헌법재판소장 - (제2권) 헌법재판소 3기 재판부

② 재판자료 확충사업 간행물 발간 예산

❑ 헌법재판소는 재판자료확충 세부사업에서 영문헌법재판소판례집, 헌법재판소판례요지집 추록 등 각종 간행물에 대한 발간(헌법재판자료 등 번역물의 경우 번역료 포함) 예산으로 2025년에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예산(1억 8,900만원) 대비 2,900만원(15.3%)이 감

262)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3회계연도 예산요구 시, 1권 1,000부 기준이었으나 발간 계획 단계에서 2권으로 권수가 늘어남에 따라, 발간 기획 및 편집 등의 비용이 고려되어 발간부수를 600부(각 300부)로 조정하였으며, '24년부터는 초기 발간 기획 및 디자인 구성 등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절감되어 2권 총 1,200부(각 600부)로 발간 예정임.

액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해당 사업의 2023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한 예산으로서 해당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다기 보다는 실집행을 기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임.

- 헌법재판소는 연례적으로 재판자료확충 사업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집행 부진으로 인한 예산 불용 문제 등에 대하여 국회의 지적을 받아 왔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음.

< 2025년도 재판자료 확충사업 중 간행물 발간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2023			2024 예산	2025 예산안
	예산	집행액	불용액		
▷ 재판자료확충	420	402	18	470	386
간행물 발간 예산(일반수용비)	204	186	18	189	160
①~⑦합계[263]	176	158	18	176	156
①~⑧합계[264]	176	158	18	189	160
① 영문 헌법재판소 판례집 발간	7	8	△1	7	7
② 헌법재판소판례 요지집 추록 발간	14	11	3	14	12
③ 헌법재판소결정 해설집 발간	9	6	3	9	9
④ 헌법재판소판례집 발간	37	38	△1	37	37
⑤ 헌법재판소공보 발간	32	36	△4	32	32
⑥ 헌법논총 발간	27	17	10	27	17
⑦ 헌법재판자료 등 번역[265]	50	42	8	50	42
⑧ 헌법재판소장 연설문집 발간	-	-	-	13	4
⑨ 헌법재판실무제요 발간	28	28	-	-	-
·도서관자료 구입	216	216	-	266	226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오디오북서비스 제공	-	-	-	15	

출처;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263)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적으로 발간(계획)된 간행물 발간 예산 합계

264) 2025년 발간 계획된 간행물 기준 발간 예산 합계

265) '헌법재판자료 등 번역'은 외국판례나 학술자료 등을 번역·발간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일부 발간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번역료가 주된 예산임

(3) 헌법재판소 간행물 발간사업에 대한 검토; 간행물 발간수량 조정 및 예산 감액 필요

❑ 헌법재판소는 2020년 이후 거의 동일한 수량의 간행물을 발간하여 동일한 배부처에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266], 2025년에도 판례요지집 추록을 350부에서 300부로 발간수량을 조정한 것 외에는 동일한 수량의 간행물을 동일한 배부처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전자 기기를 통한 정보 소비 형태가 보편화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해당 간행물들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PDF파일 형태로 다운로드하여 열람·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267]을 고려할 때 예산 절감 및 환경보호를 위해 헌법재판소 간행물의 적정 배부수량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를 통한 발간수량 축소가 필요해 보임.

특히 간행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헌법재판소 내부 배부 및 재고 수량 확충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66)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019년 말에 배부처를 대상으로 발간물 활용실태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재고량을 축소하여 발간예산 및 발간수량을 대폭 감축한바 있음

267) 판례요지집의 경우 PDF 파일 형식이 아닌 텍스트 형식으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 헌법재판소 간행물 배부처('24년 기준) >

(단위: 권)

배부처		영문 판례집	판례 요지집	결정 해설집	판례집 (x2회)	공보 (x12회)	헌법 논총	주요인사 구술총서
내부	각 부서, 연구관, 도서관 등 (재고)	139 (120)	92 (88)	131 (55)	137 (60)	132 (62)	133 (53)	123 (31)
외부	국회	30	3	5	31	30	30	23
	법원·검찰	2	16	37	37	34	24	112
	정부기관	3	44	69	52	59	60	30
	대학 도서관	30	89	107	99	99	106	126 법전원 50
	법조계	1	15	25	20	19	20	17
	언론사	-	3	4	4	4	4	-
	전직 주요인사	12	-	67	61	61	70	78
	대사관, 외국기관	463	-	-	-	-	-	-
	기타							10
총 발행수		800	350	500	500	500	500	600

자료: 헌법재판소

❑ 첫째, 헌법재판소는 주요인사 구술총서를 600부 발간하고 있고 2025년에도 동일한 수량을 발간·배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헌법재판소장 연설문집[268]은 300부('25년 예산상 계획), 판례요지집은 300부('25년 예산상 계획, '24년 350부 발간), 그 외 판례집, 결정해설집 등은 대부분 500부 발간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발간수량 축소가 필요해 보임.

268) '헌법재판소장 연설문집'은 헌법재판소장의 재임기간 동안의 연설기록 등을 모아 편찬한 자료이고,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는 역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주요인사의 연설기록과 함께 헌법재판활동 경험 등을 면담형식으로 풀어낸 구술기록임.

특히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는 이미 헌법재판소 사이버역사관 구술기록관에서 대부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발간물의 목적이 기록 보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발간물 보다 더 많은 부수를 발행하여 배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둘째, 헌법재판소는 영문 헌법재판소 판례집을 800부 발간하면서 내부에 139부 배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 발간물 중 내부 배부수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영문 헌법재판소 판례집 발간(내역사업)은 외국에 알릴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결정문을 엄선하여 영문으로 발간함으로써 우리나라 헌법재판 제도의 운영 성과를 외국에 적극 홍보하고, 관련 기관과의 상호 교류·협력 및 정보교환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동 판례집을 내부에 139부 배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해당 보고서의 내부 배부 수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헌법재판소는 총 발행수량의 5%에서 25%[269]까지 재고수량(추가 요청시 배부를 위한 자체 보관용)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그 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보이며 과도한 재고수량은 비용과 공간의 낭비를 초래하는바 재고에 대한 수요 부서 및 수량을 조사하여 적정 재고수량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69) 2024년 기준으로 판례요지집의 경우 350부를 발행하면서 88부(25%)를 재고수량으로 확보하고 있음

❑ 넷째, 향후 130부 이상 내부에 배부되고 있는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헌법재판소판례집 등의 경우에도 판례요지집이 92부 배부되는 것을 참고하여 헌법재판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에 배부하도록 조정하는 등 실소요를 감안하여 발간 수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예산 절감 뿐만 아니라 종이 사용량 감소로 인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 및 영문 헌법재판소 판례집의 발간수량 축소와 전반적인 간행물 재고수량 조정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270].

뿐만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 불필요한 콘텐츠 축소 등을 통한 비용 절감 방안과 디자인 단계, 편집 구성 단계, 인쇄 및 제작 단계 등에서의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임.

270)각 간행물의 기본 발간수량은 500부에서 450부로 축소(내부 배부수량 100부, 재고수량 총 발행수량의 10%),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 600부에서 450부로 축소, 영문판례집 800부에서 650부로 150부 감소(내부배부 수량 100부(재고포함)로 축소)할 경우 약 950만원 가량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발간부수 조정 시 감액 예산 추계>

(단위 : 천원)

사업	발간물 명	예산			산출내역 (단가×페이지×부수)
		예산안	조정안	증감	
재판자료 확충	영문판례집	7,000	6,490	△510	52.55원 × 190 × 650
	결정해설집	6,000	4,037	△1,963	15.31원 × 586 × 450
	판례집	36,400	32,274	△4,126	35.86원 × 1,000 × 450 × 2회
	공보	32,126	32,076	△50	38.57원 × 154 × 450 × 12개월
	헌법논총	3,000	2,871	△129	25.52원 × 250 × 450
재판활동 운영지원	주요인사 구술총서	30,000	27,300	△2,700	(30,333원 × 2세트) × 450
	합계			△9,478	

* 헌법재판소 제출자료 참고하여 재구성

나. 헌법재판연구원 간행물 발간사업 예산 검토

❑ 헌법재판연구원은 2025년에 헌법재판연구원 연구보고서,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헌법재판연구 학술지, 비교헌법연구 총서 등 4종의 간행물을 발간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271], 발간을 위한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2025년에 1억 480만원의 예산[272]이 편성됨.

-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헌법재판연구활동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

< 헌법재판연구원 간행물 종류 및 발간 목적 >

간행물	발간 목적
헌법재판연구원 연구보고서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의 연구성과 공유 및 확산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각국의 최신 헌법재판결정과 헌법쟁점이 포함된 사법부 판결을 정확·신속하게 번역 및 분석하여 한국학계 등에 공유
헌법재판연구 학술지	헌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석을 전문으로 하는 학술지 발간을 통해 연구성과 공유 및 확산
비교헌법연구 총서	·비교헌법학에 대한 다각적·지속적인 연구 및 성과를 공유·확산하여 헌법재판 실무에 공헌 ·주요 쟁점에 대한 한국학계 논의를 고도화하고 실무에 체계적 헌법재판 심사기준과 시사점 제시

* 학술대회 자료집, 교육교재 등 제외

자료: 헌법재판연구원

271) 2024년까지는 헌법재판연구원 연구보고서,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헌법재판연구 학술지 등 3종 발간

272) 국외통신원 운영 360만원 제외

< 2025년도 간행물 발간 예산 및 배부수량(계획) >

(단위 : 만원, 권)

연번	간행물	2025년 예산	배부수량			배부 시기
			내부	외부	합계	
1	세계헌법재판조사 연구보고서	1,080	헌법재판연구원 30 헌법재판소 130	99	259	격월
2	헌법재판연구원 연구보고서	3,100	헌법재판연구원 30 헌법재판소 130	489	649	3, 9월
3	헌법재판연구 학술지	3,400				6, 12월
4	비교헌법연구 총서	1,500				연 1회
합계		10,480				

자료: 헌법재판연구원

< 헌법재판연구원 간행물 배부처 및 평균 1회당 배부수량(2023년 기준) >

배부처		헌법재판연구원 연구보고서 (연2회 발간)	헌법재판연구 학술지 (연2회 발간)	세계헌법재판 조사 연구보고서 (연6회 발간)
내부	헌법재판소	124	124	124
	헌법재판연구원	28	28	28
	(재고)	41	22	18
외부	국회(도서관 포함)	35	44	51
	법원·검찰	75	78	-
	정부기관	54	51	-
	대학, 도서관	77	113	-
	법조계(학회, 연구원 등)	21	21	7
	전직 주요인사, 재판소 소관 위원회 외부 위원 등	150	219	28
	외국기관 등	15	-	-
회당 평균 발행수		620 (반기별 1회당 9~11종)	700	256

자료: 헌법재판연구원

❑ 헌법재판연구원의 간행물 또한 헌법재판소 간행물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PDF파일 형태로 다운로드하여 열람·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간행물의 발간 및 배부수량의 적정성 및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273].

- 첫째, 2023년 기준으로 헌법재판연구원 간행물의 발간·배부 현황 중 내부 배부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간행물을 헌법재판연구원에 28부 배부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연구원 현원이 2023년 기준 28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직원에게 간행물을 배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실소요를 감안하여 필요 최소한도내에서 배부되도록 발간 총량을 줄일 필요가 있을 것임.

- 둘째, 간행물의 외부 배부 계획(1회 배부, 2025년 기준)을 살펴보면,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의 경우에는 99부, 헌법재판연구원 연구보고서 등의 경우 489부를 배부(계획)하고 있는데[274], 배부 기관 등에 대한 수요조사 및 전직 인사 등에 대한 배부 필요성 검토 등을 통해 배부수량을 조정함으로써 발간 수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헌법재판소 간행물의 경우 대부분 내부 외부 포함하여 총 500부 발간·배부되고 있으므로 발간부수를 축소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임.

---

273) 헌법재판연구원에 따르면 간행물 관련 대내외 여건에 따라 일회성으로 발간 부수를 조정한 적은 있으나, 일괄적으로 수량을 조정한 적은 없음.

274)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와 그 외 보고서 등의 발간수량 차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연구원은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의 경우 최신 세계헌법판례, 세계헌법재판기관 소개, 관련 법령 등을 조사(번역) 및 연구하여 국내학계 또는 실무에 리포트 형태로 공유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해당 보고서의 활용도가 높은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포함) 직원과 국회, 유관 연구기관 위주로 배부하고 있고, 그 외에 보고서 및 학술지의 경우 국내학계 및 헌법재판실무에서 필요한 전문성이 수반된 연구성과물이므로, 해당 연구내용에 직·간접적으로 유관되는 내부직원, 행정기관·국회·법원·검찰 등에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셋째, 헌법재판연구원의 간행물에 대한 재고수량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재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부서의 수요와 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적정 재고 수량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헌법재판연구원도 예산 절감 및 환경 보호를 위해 간행물의 발간·배부 수량의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275]. 또한 기획 단계, 디자인 단계, 편집 구성 단계, 인쇄 및 제작 단계 등에서의 비용 절감 방안 또한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275) 헌법재판연구원에 따르면 연구보고서 또는 헌법재판 학술지의 경우, 편수/논문분량 등에 따라 인쇄비가 상이하므로, 발간 회차별로 지출예산이 다르고 연구보고서 및 헌법재판 학술지의 발간부수를 500부로 조정할 경우 발간예산의 10 ~ 14%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2025년 헌법재판연구원 간행물 발간사업 예산의 10% 감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인건비(1001-150)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인건비’ 사업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헌법재판소 공무원[276]에게 매월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2억 5,900만원(3.8%) 증액된 347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인건비 사업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B-A)	(B-A)/A
인건비	30,995	33,533	34,792	1,259	3.8%
보수(110-01)	29,389	31,760	32,893	1,113	3.6%
기타직보수(110-02)	1,431	1,539	1,661	121	7.9%
연가보상비(110-05)	175	234	238	5	2.0%

자료: 헌법재판소

276) 직제상 정원 352명, 별도정원 11명, 기타직 22명(청원경찰 5명, 전문임기제 17명)

나.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연구인력의 전문임기제 운영 관행 적절성 검토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및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 따라[277]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연구 또는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7명을 전문임기제로 두고 기타직 보수로 운영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12명, 특수분야인 통번역(4명) 및 노무(1명)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5명의 전문임기제를 두고 있으며 직급별로 살펴보면, 시간선택제를 포함하여 전문임기제 가급 7명, 전문임기제 나급 5명, 전문임기제 다급 5명임.

❑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연구 인력 12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헌법재판을 위한 법제연구 및 조세연구를 하는 법제연구관 및 조세연구관 각 1명, 헌법재판을 위한 외국 입법례 등의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헌법연구원 6명[278],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헌법연구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연구원에 헌법연구위원 1명이 소속된 것을 제외하고 11명의 연구인력은 모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심리

---

277)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3(헌법연구위원)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헌법연구위원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② 헌법연구위원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

③ 헌법연구위원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4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종류 등) ③ 전문임기제공무원은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연구나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을 말하며, 그 직군별 업무내용 및 등급구분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15조의3(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근무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78) 독어 2명, 영어 3명, 일어 1명

를 지원하는 헌법재판소 연구부에 소속되어 있음.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법제연구관[279] 및 조세연구관[280]의 경우 법제처 및 국세청 직원으로 법제처 및 국세청 고용휴직 후 헌법재판소 전문임기제로 채용되어 1년(임기) 근무 후 원 소속 부서인 법제처 및 국세청으로 복귀하며[281][282], 헌법연구위원은 헌법 등 다양한 분야(노동법, 행정법, 사회학, 법철학 등)의 대학 교수로 주 2일 8시간씩 16시간 근무함[283].

< 헌법재판소 전문임기제 현황 >

직급	인원	업무내용	소속/부서	비 고
전문임기제 가급	1명	조세 연구업무	연구부	조세연구관

279) 헌법재판 관련 법령 해석의견 제시, 관련 법제자료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함

280) 조세 관련 심판사건에 대한 조사, 조세 법령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함

281)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공무원 임용규칙 [인사혁신처예규]

제81조(연구기관 등에의 채용을 위한 휴직) ① 제5절의 규정은 법 제71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고용휴직(이하 "연구기관 등 고용휴직"이라 한다) 및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제기구 고용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등 고용휴직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다른 국가기관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행정부 이외의 기관

282) 실질은 법제처 및 국세청 파견으로 볼 수 있음

283) 공고 및 시험 등의 채용절차는 생략되며, 채용의사 확인 및 소속대학 협의를 통해 임용함. 임기 1년이며 연장가능함(헌법재판소 제출자료)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5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임용)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제3장 시험의 규정의 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헌법연구위원,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을 채용하는 경우

제70조(시험의 공고) ④ 사무처장은 임기제공무원을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헌법연구위원,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을 채용하는 경우

전문임기제 가급	1명	법제 연구업무		법제연구관
전문임기제 가급	1명	헌법재판을 위한 외국 입법례 조사·연구		헌법연구원
전문임기제 나급	5명			
시간제전문임기제 가급	4명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연구부3 헌법재판연구원1	헌법연구위원
전문임기제 다급	3명	통번역	사무처 (국제과1 AACC지원과1 자료편찬과1)	조사관
전문임기제 다급	1명	노사협력 및 근로자 관리(공인노무사)	사무처 (인사과)	조사관
시간제전문임기제 다급	1명	통번역	사무처 (AACC지원과)	조사관
계	17명			

자료 : 헌법재판소

❑ 한편 같은 법 제19조 등에 따라 연구부 소속으로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특정직국가공무원인 헌법연구관[284]은 정원 기준으로 66명[285]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위한 조사·연구인력의 약 17%(연구부 소속 전문임기제 11명)를 헌법재판소의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전문임기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 직제상 정원(352명)의 4.8%에 해당함.

-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원,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 헌법연구위원

284) **헌법재판소법**
제19조(헌법연구관) ② 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③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審理)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제19조의2(헌법연구관보) ① 헌법연구관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헌법연구관보(憲法硏究官補)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한 후 그 근무성적을 고려하여 헌법연구관으로 임용한다. 다만, 경력 및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85) 헌법재판연구원 근무 9명 제외

은 사건의 심리·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연구관과 직무범위가 다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전문임기제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서, 특정한 기간 동안 고도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무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정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일반임기제와 달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되는 인력임[286].

❑ 그러나 헌법재판소 전문임기제 중 특히 헌법연구원은 헌법재판의 중요 쟁점에 관한 조사·연구, 헌법재판을 위한 외국 입법례, 판례 및 학설 등의 조사·연구와 외국 주요결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등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그 업무는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임.

❑ 생각건대 헌법재판소가 상시적으로 필요한 자리인 헌법연구원을 전문임기제로 두는 것은 정원 제한, 유연한 인력 운용 등의 이유일 수 있으나, 조직의 필수 인력을 정원에 포함하지 않고 계속 전문임기제로 운영하는 관행은 업무의 연속성 유지의 어려움, 우수 인재 유치와 유지의 어려움 및 조직 운영의 안정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을 위한 필수 인력은 직제 외로 운영하지 않고 정원 범위 내에 포함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286)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2. 전문임기제공무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5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할 것으로 보임.

다. 헌법재판소의 인건비 불용 예상 규모 감액조정 필요

❑ 헌법재판소 2025년도 인건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335억 3,300만원) 대비 12억 5,900만원(3.8%) 증액된 347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해당 증액분은 인력 증원과 공무원보수 처우개선에 따른 소요액 등이 반영된 것임.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025년의 경우 2024년 대비 인력 증원 및 직급조정(직제상 정원 4명, 직급조정 4명, 기타직 2명)이 예정되어 있어 이로 인한 예산 소요분 3억 321만원과 공무원보수 처우개선에 따른 보수인상률 3% 인상 등의 증액 소요가 있음.

❑ 헌법재판소는 인건비 예산과 관련하여 연례적으로 과도한 인건비 불용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의 인건비 불용률을 살펴보면, 2020년도 7.3%, 2021년도 6.7%, 2022년도 4.6%, 2023년도 2.7%로 불용률이 낮아졌는데, 이는 인건비의 연례적인 과다 불용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를 반영하여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인건비 예산액을 2022년 동결하였고, 2023년도 또한 2022년도 보다 1.9%만 증액하여 편성한 바에 따른 것으로 보임.

- 또한 2023년도 정부 전체 일반회계 인건비 불용률은 1.6%이고[287], 대법원의 경우에는 일반 인건비 불용률은 0.1%, 소속기관 인건비 불용률은 0.6%[288] 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인건비 불용률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음.

❑ 2024년도의 경우에는 2023년 대비 인건비 예산이 6.2% 증액된 바 있는데,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사무차장 공석으로 1억 3,000만원, 휴직·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등으로 7억 2,900만원 등 8억 5,900만원의 불용액이 추정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하반기 휴직·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추가 및 연가보상비 불용 등으로 인하여 실제 불용액은 8억 5,900만원을 넘을 것으로 보임[289].

< 2024년 인건비 불용 예상액 >

(단위: 백만원)

세부내역	금액
사무차장 공석	130
휴직·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등	729
계	859

자료 : 헌법재판소

287)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I, 2024.7., 12p

288) 법제사법위원회, 2023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결산 검토보고, 2024.8., 8p

289) 2021년 예산안의 경우에도 예산안 심사 당시 헌법재판소는 17억 4,500만원의 불용액을 예상했으나('21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참고) 실제 불용액은 21억 1,300만원으로 3억 6,800만원 차이가 있었음.

< 최근 5년간 인건비 불용 사유 및 불용액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합계	헌법연구관 겸임	휴직·퇴직 등 결원	명퇴수당 집행잔액	고위직 보수동결	기타	
2019	27,905	26,403	1,502	**240**	**1,020**	-	194	48 (연가보상비)	5.4
2020	29,578	27,377	2,201	**250**	**1,409**	67	285	190 (국외연수 과다편성)	7.3
2021	31,280	29,535	2,113	**274**	**1,664**	17	100	58 (연가보상비)	6.7
2022	31,280	29,813	1,424	**257**	**957**	-	153	57 (연가보상비)	4.6
2023	31,860	30,995	865	**257**	**566**	-	-	42 (연가보상비)	2.7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의 인건비 불용은 휴직·퇴직 등에 따른 정원 미달 운영, 헌법연구관의 겸임 등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됨[290]. 일부 결원은 당해 연도 헌법재판소의 소극적인 인사운용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헌법연구관의 휴직·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에 따른 불용액은 헌법재판소의 휴직·퇴직 현황 및 채용절차 등을 고려할 때 2025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임.

특히 2025년은 2023년도 대비 10.2%(2024년 대비 3.8%) 예산액이 증가되었으므로 상당한 인건비 불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음.

290) 2023년 기준, 불용액의 91.7%에 해당함

< 최근 5년간 휴직 및 퇴직 현황 >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9.
휴직	20	29	35	42	34
퇴직	18	23	26	38	24

자료: 헌법재판소

- 먼저, 헌법연구관의 휴직·퇴직 등에 의한 결원 운영과 이로 인한 인건비 불용이 예상됨.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관의 육아휴직 등 사유 발생 시 일반직과 달리 결원 보충을 하지 않아 2023년 및 2024년 휴직한 헌법연구관 모두 충원하지 않았으며, 퇴직한 헌법연구관의 경우에도 모두 퇴직 직후 바로 결원을 보충하지 않고 매년 1회 정규 채용절차[291]를 거쳐 다음연도에 해당 결원을 보충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매년 일정기간 결원이 발생하고 있음[292].

따라서 2025년에도 헌법연구관 휴직·퇴직 등에 의한 결원 운영과 이로 인한 인건비 불용이 예상되는데, 최근 5년간 헌법연구관 휴직 및 퇴직 등 결원 미보충으로 인한 인건비 불용액을 살펴보면, 2023년은 4억 7,100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2024년은 3억 6,700만원으로 추정됨.

291) 임용 계획 공고(9월), 원서 접수(9월), 서류심사(10월), 인성검사(10월), 집단토의면접(11월), 개별면접(11월), 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 심의, 재판관회의 상정·의결 및 최종합격자 발표, 다음해 2월 1일 임용(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알림·소식-채용안내 참고)

292) 매년 1회 정규 채용절차를 거쳐 충원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 업무의 계속성·전문성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 충원이 곤란하고, 아울러 지원자들에게 채용시기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2023년도 휴직(6개월 이상)·퇴직 결원 보충 내역 >

(단위: 명)

구분		2023년	
		휴직(6개월 이상[293]) 인원	보충인원
헌법연구관	휴직	4	0
	퇴직	6	6 (2024년 정규채용시 충원)
일반직 등	휴직	18	15
	퇴직	29	28

주 1) 정무직 제외

자료; 헌법재판소

< 최근 5년간 헌법연구관 휴직 및 퇴직 등 결원 미보충으로 인한 인건비 불용액 >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추정)
연구관	퇴직	356	465	189	151	83
	휴직	226	301	216	320	284
	합계	582	766	405	471	367

293) **국가공무원법**

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① 공무원이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면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직위 또는 상당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휴직자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병가와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2. 출산휴가와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제71조(휴직)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 7. (생략)

자료 : 헌법재판소

-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사무차장은 2024년 1월 이후 현재까지 공석으로, 사무차장 직위의 장기 공석은 헌법재판소의 행정, 재정, 인사 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해당 사유는 2025년에는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인 것으로 보임.

- 끝으로, 헌법연구관의 겸임 즉 비서실장 겸임과 공보관 겸임[294]은 각각 2007년, 2008년부터 지속되어온 인사 관행이나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겸임 해제를 고려한 채용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휴직·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에 대한 감액조정[295]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헌법재판소는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59.4%(2025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전용 또한 엄격히 제한되는 예산이므로 인건비를 과다 편성하는 것은 한정된 재정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것인 바,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에 대한 감액조정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94) 헌법연구관 겸임으로 인한 불용액 2023년 기준 2억 5,700만원, 2024년 기준 2억 6,500만원

295) 일반직 결원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충원할 것을 전제로, 2024년 헌법연구관 휴직·퇴직 등에 따른 결원으로 인한 불용액 약 3억 6,700만원(추정)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1억 8,000만원은 감액이 가능할 것임.
참고로 최근 5년간 헌법연구관 휴직·퇴직 등에 따른 결원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약 25억 9,100만원으로 추정되며, 연평균 약 5억 1,820만원에 달함.

3. 본부기본경비(1011-250)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본부기본경비’ 사업은 본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연례·반복적인 소규모 운영 경비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3,400만원(0.5%) 감액된 69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본부기본경비 사업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부기본경비	6,270	6,991	6,957	△34	△0.5

* 자료: 헌법재판소

나. 국외여비;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석 예산 국제교류 사업 예산으로 편성 및 적정 금액으로 조정 필요

❑ 헌법재판소는 2025년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될 예정인 세계도서관정보대회(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WLIC)에 도서심의관 1명을 포함하여 3명이 참석할 것을 기준으로 1,300만원의 대회 참석 여비를 본부기본경비 사업에 편성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예산 편성 내역 및 집행 현황을 살

펴보면 대회 참석 여비로 2020년 및 2021년은 각각 890만원, 801만원 예산이 본부기본경비에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대회 미개최 또는 대회 온라인 참석으로 운영방식이 변경되어 전액 불용되었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

- 2020년 및 2021년 예산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2명이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 참석할 비용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음.

<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개최 현황 및 헌법재판소 예산 편성 내역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회차	미개최	86회	87회	88회	미개최	89회
날짜		8.17~8.19	7.26~7.29	8.21~8.25		8.18~8.22
국가		온라인	아일랜드	네덜란드		카자흐스탄
도시			더블린	로테르담		아스타나
예산 (집행)	890만원 (불용)	801만원 (불용)	-	-	-	1,300만원

* 등록비 제외 예산액

자료: 헌법재판소

< 2020년·2021년 및 2025년 예산 편성 근거 >

연도	사업내역	세부 산출내역
2020	■ 대회 참석 여비(220-02)	○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참석:890만원 · 항공료 2인 4,300천원 · 일비, 숙박비 등 2인 4,600천원
2021	■ 대회 참석 여비(220-02)	○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참석:801만원 · 항공료 2인 3,870천원 · 일비, 숙박비 등 4,140천원
2025	■ 대회 참석 여비(220-02)	○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참석:1,300만원 · 일반직(2~3급, 1인) 5,734천원 · 일반직(4~7급, 2인) 7,013천원

자료: 헌법재판소 및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

❑ 헌법재판소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참석 예산과 관련해서는 본부기본경비 편성의 적절성 및 예산 규모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는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296]에서 매년 개최하는 세계 도서관계의 최대 국제회의로서 각국의 도서관 전문가들이 모여 각종 현안 및 성과물 등을 공유하는 자리이므로, 국가 간의 교류 촉진을 위한 목적의 국제교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행사 목적과 예산 사용 목적에 부합할 것임.

- 헌법재판소 기본경비 예산은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운영, 인력, 시설 유지 등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이므로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와 같은 국제 행사를 기본경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헌법재판소는 2025년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에 도서심의관(3급) 등 3명이 참석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는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므로 정원 16명인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규모[297], 참석자 수 2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과거의 사례[298], 헌법재판소 다른 국제행사 참석자 수[299] 등을 감안하

296)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은 도서관 및 정보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국제 기구로 도서관의 활동 전반에 걸친 국제적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 조사, 연구 개발을 진흥시키기 위해 1927년에 설립되었음.

297) 헌법재판소 도서관 정원 및 현원(2024.9.)

면 3명이 동 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참석자 수를 2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 참석 국제행사를 제외하고 최근 3년간 헌법재판소 공무원 3명 이상이 참석한 국제행사는 헌법재판관,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알제리 헌법재판소 창립 1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 1건 뿐임.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예산을 본부기본경비 예산이 아니라 국제교류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참석자 수 조정 등을 통해 일부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300].

구분	계	3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16	1	2	2	2	3	2	2	2
현원	16	1	2	2	2	2	4	1	2

298) 2020년 및 2021년 사례이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전액 삭감된 바 있음

299) 헌법재판소장 참석 국제행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명 이하의 인원이 국제행사에 참석하고 있음.

300) 헌법재판소 제출자료에 따르면 239만원 감액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예산안 (3인, 유럽 기준 계수(0.6) 조정 금액)	조정안 (2인, 카자흐스탄 기준 실소요 금액)	비고
ㅇ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석:1,300만원 · 일반직(2~3급, 1인) 573만원 · 일반직(4~7급, 2인) 701만원	ㅇ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석: 1,061만원 · 일반직(2~3급, 1인) 599만원 · 일반직(4~7급, 1인) 462만원	일반직 1인 예산 239만원 감액 가능

자료; 헌법재판소

4. 재판활동운영지원(1031-301)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은 헌법재판 사건처리의 적시성 제고를 위해 연구부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재판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비및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며, 기록물을 관리·보존하고,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의 사업으로 다음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음.

- **(헌법재판업무지원)** 헌법재판 사건처리의 적시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부 부별 토론, 연구회 활동 등 지원
- **(헌법재판 판례심사활동비 등 특정업무경비)** 국내·외 판례에 대한 검토·분석 및 헌법재판 관련 대내·외 업무협의 등을 위한 판례심사활동비 등 특정업무경비 지급
- **(기록물 관리 및 보존)** 기록물 탈산처리 및 정리, 기록물보존서고의 온도·습도 유지 등 기록물 관리 및 보존을 통한 재판활동 지원
-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등 관련 연구주제의 조사·연구 수행을 위한 위원회 운영
-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 발간)** 역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주요인사의 구술기록을 책자로 발간

❑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예산 대비 7,700만원(10.3%) 감액된 6억 7,100만원이 편성됨.

〈 2024년도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재판활동운영지원	584	748	671	△77	△10.3
헌법재판업무지원	216	247	267	20	8.1
헌법재판 판례심사활동비 등 운영지원 경비	246	221	221	-	-
기록물 관리 및 보존	85	54	143	89	164.8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7	10	10	-	-
헌법재판소 주요인사 구술총서 발간	30	30	30	-	-
기록물보존서고 RFID 설비 구축	-	186	-	△186	△100.0

자료: 헌법재판소

나. 헌법재판업무지원; 연구회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전년 수준으로 조정 필요

❑ 헌법재판업무지원은 헌법재판 사건처리의 적시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부 부별 토론, 연구회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번역료·사례금 및 각종 발간비용을 지원하는 일반수용비와 사업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수용비의 경우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3,960만원) 대비 50%(1,992만원) 가량 증액된 5,95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 일반수용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번역료 및 사례금[301] 4,000만원, ② 헌법실무연구 발간비 800만원, ③ 인쇄 및 제본비 등 1,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헌법재판업무지원 사업 `24년 및 `25년 예산안 산출내역 >

(단위 : 천원)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일반수용비 (210-01)	**연구회 운영**		
	· 번역료 및 사례금	26,000	40,000
	· 헌법실무연구 발간	6,000	8,000
	· 인쇄 및 제본비	8,000	11,000
	· 단수조정	△400	523
	합계	39,600	59,523
사업추진비 (240-01)	공동부·전속부 연구토론 및 운영지원경비 등	194,531	194,531
	연구회 활동지원비	13,000	13,000
	합계	207,531	207,531
합계		247,131	267,054

출처;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헌법재판소의 연구회는 헌법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분야별 연구모임으로서 헌법실무연구회, 법사상연구회, 통일헌법재판실무연구회, 비교헌법연구회가 있으며, 「헌법재판소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내규」에 따라 연구회 대표자가 연구회의 명칭과 임원 등 중요사항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등록하고, 연구회에 필요한 경

301) 외부 발표 50만원, 토론 20만원 지급

비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음[302].

- 헌법실무연구회는 헌법판례와 헌법재판 관련 이론 및 실무 연구, 법사상연구회는 법사상에 관한 기본지식 습득 및 실천적 연구, 통일헌법재판실무연구회는 통일 대비 헌법재판 실무연구, 비교헌법연구회는 헌법이론·제도 및 중요판례의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구성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음.

< 헌법재판소 연구회 구성 현황 >

구 분		헌법실무연구회	법사상연구회	통일헌법재판 실무연구회	비교헌법연구회
등록일		2001. 1. 17.	2001. 1. 2.	2016. 7. 1.	2018. 5. 2.
설립 목적		헌법판례와 헌법재판 관련 이론 및 실무 연구	법사상에 관한 기본지식 습득 및 실천적 연구	통일 대비 헌법재판 실무연구	헌법이론·제도 및 중요판례의 비교법적 연구
회장		-[303]	이미선 재판관 (2022. 5. 12. ~)	문형배 재판관 (2021. 10. 8. ~)	-[304]
간사		선임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	선임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	선임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
임원 임기		2년, 연임 가능	회장: 2년, 연임 가능 간사: 1년, 연임 가능	2년, 연임 가능	2년, 연임 가능
회원 수	계	620명	78명	23명	91명
	내부	106명	55명	23명	91명
	외부	514명	23명	-	-

자료 : 헌법재판소

302) **헌법재판소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분야별 연구모임(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 ① 연구회를 구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가 연구회의 명칭과 임원 등 중요사항을 별지 서식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사무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실적 등 제출) 연구회는 당해연도의 연구회의 회원현황, 운영실적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예산의 집행내역을 익년도 1월말까지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03)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은애 재판관이 동 연구회 회장이었으나 9월 퇴임에 따라 현재 공석인 상황임

304)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김기영 재판관이 동 연구회 회장이었으나 10월 퇴임에 따라 현재 공석인 상황임

❑ 헌법재판소는 2025년 예산 증액에 대하여 2025년에는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횟수 증가, 외국판례 번역 확대 등 헌법재판소 연구회의 활발한 활동이 예정되어 있는바, 관련 예산 증액을 통해 재판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헌법실무연구는 헌법실무연구회의 발표문을 싣는 발간물로, 헌법실무연구회 발표회 개최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정되어 헌법실무연구 발간비도 증액한 것으로 설명함.

❑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구회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60%대에 머물고 있고 매년 집행액이 감소하는 추세로 2023년에는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549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쳐 집행률이 64%에 불과함.

- 2024년에는 2024년 9월말 기준으로 3,960만원 예산에 대해 2,497만원의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63% 가량 집행한 것으로 확인됨.

< 연구회 운영실적 및 예산 현황(2020~2023) >

(단위: 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일반수용비	3,552	2,609	4,000	2,668	3,801	2,567	4,000	2,549
헌법실무연구회	발표회 4회, 헌법실무연구 제20권 발간(350부/660면)		발표회 7회, 헌법실무연구 제21권 발간(400부/272면)		발표회 8회, 헌법실무연구 제22권 발간(400부/622면)		발표회 5회, 헌법실무연구 제23권 발간(400부/700면)	
법사상	세미나 2회, 강독		세미나 1회, 강독회		세미나 1회, 강독회		세미나 1회, 강독회	

연구회	회 7회	3회	4회	5회
통일헌법 재판실무 연구회	발표회 3회	-	세미나 2회	세미나 4회
비교헌법 연구회	세미나 4회,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번역집 발간	세미나 7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판례번역집 발간	세미나 4회, 베니스 위원회 보고서 번역집(2건) 발간	세미나 5회, 베니스 위원회 보고서 번역집(2건), 영국항소법원 판례번역집(1건) 발간

자료 : 헌법재판소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2025년 연구회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예산을 50% 증액할 것이 아니라 2024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되 예산 집행률 제고에 힘쓰는 한편, 각 연구회 성과 평가를 통한 적정 운영 예산을 각 연구회에 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 기록물 소독장비의 적절한 교체 필요 등

❑ 헌법재판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및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305]에 따라 기록물보존서고에 기록물 소독장비 2대를 설치하여 기록물의 서고 입고 전 소독을 실시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의 현재 기록물 소독장비는 2009년에 구입한 장비로써 해당 장비의 내용연수[306]를 이미 초과하였으며 최근 장비 이상 및 잦은 고장

305)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시행내규」 제27조(기록물의 보존처리)** ①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은 미생물과 해충에 의하여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고에 입고하기 전에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06) 내용연수, 조달청 고시 제2021-41호(2021. 12. 28.)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337	46182497	책소독기	7

이 발생하여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의 자산취득비에 기록물 소독장비 구입을 편성하여 노후화된 기록물 소독장비를 교체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2025년 기록물 소독장비 구입 예산안 내역>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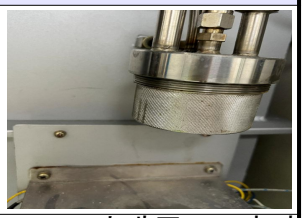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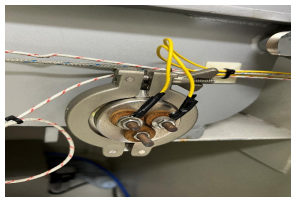
총액	산출내역	비목
85,000	85,000 x 1대	자산취득비 (430-01)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현재의 소독장비는 산소 차단(질소 주입) 및 소독약제를 통하여 멸균 및 살충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나 노후화로 인하여 장비 내부의 밀폐도가 떨어져 소독효과가 떨어지며, 해당 장비의 단종으로 인하여 주요 부품 구입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함.

<기록물 소독장비 사진>

<table>
<tr><th>소독장비(앞면)</th><th>소독장비 내부(앞면)</th><th colspan="2">소독장비 내부 (뒷면) 세부사진</th></tr>
<tr><td rowspan="4"> 
</td><td rowspan="4"> 

-</td><td>  </td><td>  </td></tr>
<tr><td>- 진공 배관 부식</td><td>- 약제통 연결 배관 부식</td></tr>
<tr><td>  </td><td>  </td></tr>
<tr><td>- 챔버 온도 조절 히터 삽입부 부품 부식</td><td>- 온도센서 부식</td></tr>
</table>

자료: 헌법재판소

❑ 기록물보존서고로 반입되는 헌법재판 관련 주요 사건기록물 등은 중요한 기록물로 장기간 안전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으므로 노후화된 기록물 소독장비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사건기록물에는 심판사건과 관련된 심판청구서, 의견서, 증인신문조서,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서, 송달현황목록 등이 있음.

- 신규 기록물 소독장비는 2025년 2월 중 제작을 시작하여 4월에 기록물보존서고에 설치할 계획임.

기록물 소독장비 구입 세부일정(안)
○ 구입 계획보고 및 조달계약 발주: 2025. 1.
○ 장비제작 및 테스트: 2025. 2.～4.
* 장비 제작 소요기간: 3개월
○ 소독장비 반입 및 설치: 2025. 4.

자료: 헌법재판소

❑ 또한, 헌법재판에 대한 전자접수가 도입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전자접수율은 높지 않은[307] 상황이며 헌법재판소는 매년 접수되는 심판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보존될 기록물의 양이 줄지 않았다고 설명하므로, 2025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기존 1대의 기록물 소독장비도 빠른 시기에 교체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헌법재판사건은 2013년 1,480건이 접수되었으나, 10년 후인 2023년에는 2,591건이 접수되었음.

307) 2024년 9월 말 기준 2024년 전자접수율은 47.5%임.

❑ 다만, 신규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1년간 이에 대한 무상 보증 및 점검이 가능하므로 소독장비 유지보수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최근 5년 소독장비 유지보수비 집행 내역>

연도	유지보수 기간	유지보수 주요 과업 내용	예산액	집행내역	기타
2020	20. 1. 1. ~ 20. 12. 31.	- 정기적으로 월 1회 점검 - 정기점검 이외에 긴급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응해야 함 - 기계이상 통보를 받을 경우 현장에 도착하여 점검에 착수해야 하며, 장비를 정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복구하여야 함 - 장비에 관련된 부품(주요부품)에 이상 발생 시 즉시 교체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유지보수 시행사"가 부담	4,290천원	4,290천원	
2021	21. 1. 1. ~ 21. 12. 31.		4,500천원	4,488천원	
2022	22. 1. 1. ~ 22. 12. 31.		4,500천원	4,488천원	
2023	23. 1. 1. ~ 23. 12. 31.		4,713천원	4,700천원	
2024	24. 1. 1. ~ 24. 12. 31.		4,713천원	상반기 집행액*: 2,355천원	계약금액: 4,710천원
2025	25. 1. 1. ~ 25. 12. 31.	-	5,038천원 308)	-	

자료: 헌법재판소

- 소독장비 유지보수비의 경우, 신규 장비가 들어온 4월 이후에는 기존 1대의 장비에 대해서만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올해와 유사한 금액에 계약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신규 장비 설치 전까지의 유지보수비만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08) 소독장비 유지보수비는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 중 기록물 관리 및 보존 내역사업의 시설장비 유지비(210-09)에 편성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여 2024년 예산 대비 2025년 예산안은 32.5만원을 증액하였다 함.

5.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1033-303)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헌법재판연구원[309] 운영지원사업은 헌법, 헌법재판제도의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연구수행,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헌법재판 경연대회 개최,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개최,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임차, 해외 헌법재판기관 초청 연수 등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00만원이 감액된 18억 6,5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1,837	1,878	1,865	△13	△0.7
헌법재판 연구활동	125	137	146	9	6.6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12	16	16	-	-
헌법재판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60	72	72	-	-
헌법재판 경연대회 개최	44	43	43	-	-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임차	1,488	1,488	1,488	-	-
정보자료실 운영	65	55	55	-	-
해외 헌법재판기관 초청 연수	19	21	21	-	-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개최	19	19	19	-	-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보안	4	5	5	-	-
사이버 강좌 재개발	-	22	-	△22	△100.0
헌법재판제도 방문강의	-	-	-	-	-

자료: 헌법재판소

309)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4(헌법재판연구원) ①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 등의 교육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연구원을 둔다.

나. 헌법재판연구활동; 비교헌법연구 총서 발간의 필요성 및 예산 검토

❑ 헌법재판연구원의 헌법재판연구활동(내역사업)을 위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1억 3,700만원) 대비 900만원 증액된 1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된 증액 사유는 신규 발간물인 비교헌법연구 총서 발간을 위해 1,500만원이 순증되었기 때문임.

< 2025년도 헌법재판연구활동 사업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1,837	1,878	1,865	△13	△0.7
헌법재판연구활동	125	137	146	9	6.6
-비교헌법연구총서 발간	-	-	15	15	100

자료: 헌법재판소

❑ 비교헌법연구 총서 발간사업은 비교헌법학 관련 세부주제에 대하여 내부인력과 외부전문가가 연구팀을 구성하여 연 1권 단행본을 발간하는 사업으로 발간비용 600만원, 원고료 800만원, 주제선정 회의수당 1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음.

- 헌법재판연구원에 따르면 비교헌법학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중심 연구분야임에 따라, 이에 대한 단행본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연구내용과 형태를 다변화하고 공동연구 및 기획연구, 중점연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비교헌법총서 발간 예산 추계 근거 >

구분	소 계	원고료	선정회의	발간비용
비교헌법총서 발간	1,500만원	800만원 - 8인× 1,000천원	100만원 -5인×200천원 (주제선정 수당)	600만원

자료: 헌법재판연구원

❑ 비교헌법연구총서 발간사업과 관련해서는 발간의 필요성, 총서 작성자 및 발간 예산의 적정성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기존에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하고 있는 연구보고서 및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등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헌법재판연구원의 중심 연구분야인 비교헌법학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를 외부 전문가와 함께 작성하려는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헌법재판연구원 발간물 종류(2024년 기준) >

연번	제 목	비 고(발행일 기준)
1	헌법재판연구원 연구보고서	20종
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격월
3	헌법재판연구 학술지	연2회

* 학술대회 자료집, 교육교재 등 제외

❑ 첫째, 헌법재판연구원은 매년 상당수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2024년에는 비교헌법연구 보고서로 『1946년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 전문에 관한 연구보고』[310]및 『캐나다의 인권법에 관한 연구[311]』 등을 발간한 바 있음. 또한 격월로 최신 세계헌법판례 등을 소개하는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2025년부터 신규로 발간하려는 비교헌법연구총서가 기존에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들과 특별히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참고로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하는 헌법재판연구원 연구보고서는 비교헌법연구, 사회변화와 헌법, 헌법원리와 국가권력, 법령 및 제도연구, 헌법재판연구, 통일헌법연구, 헌법이론과 실무 등 7종의 분류체계를 갖고 있음.

< 헌법재판연구원 연구보고서 발간 목록(2024년) >

분류체계	발간물 제목	수행부서
비교헌법연구 (5)	1946년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 전문에 관한 연구	비교헌법연구팀
	적절한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판지연에 대한 국가책임	비교헌법연구팀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팬데믹 상황에서의 의료우선순위(Triage)와 장애인 차별 금지	비교헌법연구팀
	캐나다의 인권법에 관한 연구	기본권연구팀
	디지털 전환의 기본권적 문제상황과 대응체계	비교헌법연구팀

310) 비교헌법연구팀 책임연구관 수행, 참고문헌 제외 97p

311) 기본권연구팀 책임연구관 수행, 참고문헌 제외 54p

사회변화와 헌법(2)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에 관한 헌법적 검토	제도연구팀
	기업의 기후공시에 관한 헌법적 연구	제도연구팀
헌법원리와 국가권력(2)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	비교헌법연구팀
	무죄추정원칙의 헌법적 검토	제도연구팀
법령 및 제도연구(3)	민감정보인 보건의료데이터의 2차 활용과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제도연구팀
	인체유래물연구에서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연구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연구윤리센터) 제도연구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에 대한 헌법적 검토	기본권연구팀
헌법재판연구(1)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기본권연구팀
통일헌법연구(1)	북한주민의 헌법적 보호	제도연구팀
헌법이론과 실무(6)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제도연구팀
	다문화 시대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헌법적 연구	기본권연구팀
	외국인의 정치활동 제한에 대한 헌법적 검토	제도연구팀
	「행정기본법」에 관한 헌법적 고찰	기본권연구팀
	인공지능 법관 관련 헌법적 쟁점의 검토	제도연구팀
	결혼이주여성 관련 법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제도연구팀

❑ 둘째, 비교헌법총서가 기존의 보고서와 연구범위, 심층성 등의 차이가 있어 별도 발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비교헌법학[312]은 헌법재판연구원의 핵심 업무이며,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 또한 제도연구팀, 기본권연구팀, 비교헌법연구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연구원 내부 인력이 외부 인력과 함께 연구원이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

312) 자국과 타국의 헌법전을 기초로 하여 주로 헌법현상을 역사적 · 기능적 방법으로 검토하는 복수국가간 헌법의 비교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국가들의 헌법과 제도 및 헌법재판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헌법재판에 필요한 비교법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려운 측면이 있음.

-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연구원은 연구원의 연구인력만으로는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이론적 분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의 헌법 쟁점 혹은 특정 국가의 헌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외부인력을 집필진으로 섭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헌법재판연구원은 연구기관인 만큼 내부 인력 활용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313], 외부 전문가 활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단순한 협업 수준을 넘어 신속한 재판 사건 처리를 위한 중요 쟁점 사전 연구라는 명확한 연구목적을 수립하고, 외부 집필진의 뚜렷한 역할 분담과 차별화된 쟁점 선정 등이 전제되어야 하며,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단계별로 지속적인 점검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따라서 헌법재판연구원이 비교헌법연구 총서 발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보고서와 명확히 구별되는 차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내부 인력 활용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외부 전문가 활용이 필요하다면 내부인력과 외부 전문가간 역할을

313) 참고로 헌법재판연구원과 같은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의 경우 해외장기연수 경험이 있는 법관들을 주축으로 한 외국사법제도연구회에서 「외국사법제도연구」 보고서 등을 매년 발행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연구원도 해외 연수 중이거나 해외 연수 경험이 있는 헌법연구관 등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헌법재판소 내부 연구모임으로 비교헌법연구회 등도 운영되고 있으므로 내부 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명확히 분담하며 차별화된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부터 보고서 발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6. 국제교류(1034-305)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국제교류 사업은 헌법재판 관련 국제회의 참석과 개최 및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활동 등을 통하여 각국 헌법재판소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예산(5억 8,700만원) 대비 2,700만원(4.6%)이 증액된 6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국제교류 사업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국제교류	501	587	614	27	4.6
베니스위원회 참석	70	74	74	-	-
세계헌법재판회의 등 참석	3	30	79	49	163.3
외국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세미나 등 참석	56	55	55	-	-
주요헌법재판기관 등 초청 세미나 개최	20	42	42	-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정례회의 등 참석	24	42	24	△18	△42.9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운영	122	121	117	△4	△3.3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 컨퍼런스	182	186	186	-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연구·조사	24	37	37	-	-

자료 : 헌법재판소

나. 세계헌법재판회의 등 참석; 세계선거재판회의 참석 국외업무여비 검토

❑ 세계헌법재판회의 등 참석사업(내역사업)은 세계헌법재판회의, 세계선거재판회의 등 헌법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헌법재판소와 교류·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3,000만원) 대비 4,900만원 증액된 7,9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세계헌법재판회의 및 세계선거재판회의 참석을 위한 국외업무여비(각 4,883만원 및 2,448만원) 등임[314].

< 2025년도 세계헌법재판회의 등 참석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본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세계헌법재판회의 등 참석	3	30	79	49	163.3

자료: 헌법재판소

❑ 세계헌법재판회의는 베니스위원회(Venice Commission)[315]가 주도해 출범한 연합체로, 헌법재판 분야 최고위급 국제적인 회의체이며, 120개 모든 회원이 참석하는 정기 총회를 3년에 한 번 개최하고 있음. 2025년은 제6차 세계헌

314) 그 외 국외자료집 제작을 위한 예산 50만원, 사업추진비 230만원, 국제부담금(세계헌법재판회의 분담금) 380만원 편성됨

315) 베니스위원회의 정식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로서 1990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산하기구로 출범하여 오늘날 세계적이고, 독립적인 법률자문기구이자 분쟁해결의 조정을 담당하는 기구로 성장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9년 옵서버로, 2006년 6월 정회원국으로 가입함

법재판회의 정기 총회가 스페인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관례에 따라 헌법재판소장(동부인), 재판관 1인, 헌법연구관 2인, 사무처 1인, 총 6인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를 기준으로 4,883만원의 국외업무여비 예산이 편성됨.

❑ 세계선거재판회의는 전 세계 63개 선거 관련 국가기관 및 국제기구 등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 회의체로서, 2017년 설립되었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7년 제1차 총회부터 매 회의에 참석하고 있음.

2025년 예산안은 헌법재판소장(동부인)과 헌법연구관 총 3인 참석을 기준으로 2,448만원의 국외업무여비 예산이 편성됨.

- 헌법재판소는 연례적으로 헌법재판소장(동부인) 참석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최근 4년간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에만 당초 편성된 예산(2,400만원) 중 약 29%(700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며(당시 개최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숙박비 일부 부담), 3개년은 총회 미개최, 온라인 개최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거나 불용될 예정임.

< 세계선거재판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비고
2021년도	24	불용	COVID-19로 인해 세계선거재판회의 총회 온라인 개최 (도미니카공화국)
2022년도	24	7	재판관1인, 헌법연구관1인 참석(인도네시아) * 일부비용(숙박) 주최 측 부담
2023년도	18	불용	세계선거재판회의 총회 미개최(인도네시아)
2024년도	24	불용(예상)	세계선거재판회의 총회 미개최(콜롬비아)
2025년도	24	-	콜롬비아(예정)

자료: 헌법재판소

❑ 2017년부터 현재까지 세계선거재판회의에 참석한 명단을 살펴보면 헌법재판관 1인 및 헌법연구관 1인 총 2인이 참석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장(동부인)이 세계선거재판회의에 참석한 전례가 없음.

< 세계선거재판회의 참석자 명단 >

개최년월	개최장소	참석자
2017년 11월	멕시코 산미겔데아옌데	재판관 1인, 헌법연구관 1인
2018년 12월	멕시코 칸쿤	재판관 1인, 헌법연구관 1인
2019년 11월	멕시코 로스카보스	재판관 1인, 헌법연구관 1인
2020년	미개최	
2021년 10월	도미니카공화국 푼타카나(온라인)	재판관 1인
2022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	재판관 1인, 헌법연구관 1인
2023년 및 2024년	미개최	

자료: 헌법재판소

-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재판부의 재판일정 및 타 국제회의 참석 일정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재판관이 총회에 대리 참석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2022년은 비슷한 시기에 세계헌법재판회의가 개최되어 헌법재판소장은 세계헌법재판회의에, 헌법재판관은 세계선거재판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2025년은 세계헌법재판회의가 개최되는 해이고, 세계선거재판회의 의장국인 콜롬비아의 내부 사정으로 2024년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으며, 2025년도 회의 또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개최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2025년 세계선거재판회의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헌법재판소장(동부인) 참석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참석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기획재정부 심의단계에서 이미 실제 소요액(예산요구액) 대비 상당 수준으로 감액(약 40%) 편성되어 최소 소요만이 반영된 상황으로 헌법재판관 참석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필요 최소인원(2인)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재 수준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316].

향후 헌법재판소는 국제회의 성격, 참석자의 역할, 전례 등을 고려

316)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및 연구관 참석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2,764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일비, 숙박비, 식비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4: 국외여비지급표]에 근거하여 산출, 항공료는 국적사 요금기준, 편성기준 환율 1,380원/$).

하여 연례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실 집행될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다.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예산 검토

(1) 회원국 간 분담금 통한 운영 방안 모색 필요

❑ 헌법재판소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 AACC) 운영 등과 관련하여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정례회의 등 참석,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운영,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 컨퍼런스 및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연구·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3억 6,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전체 국제교류사업 예산(6억 1,400만원)의 59% 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 2025년도 AACC 관련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2025년 예산안
AACC 정례회의 등 참석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총회, 이사회 등 정례회의 참석 · AACC 행정사무국(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에서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참석 · AACC 연수 및 인적자원개발센터(튀르키예 헌법재판소)에서 주최하는 하계연수 참석	24
AACC 연구사무국 운영	· 연구사무국 연구·조사, 국제회의 개최 등 핵심 사업의 지원 및 내실 있는 사무실 운영	117
AACC 연구 컨퍼런스	· 재판관 국제회의 및 연구관 국제회의를 교차로 개최하여 당해년도 연구·조사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회원기	186

	관의 최신 헌법재판 실무·판례를 공유하고 연구 주제에 대한 논의를 심화	
AACC 연구사무국 연구·조사	· 연구사무국 고유 기능으로서 아시아지역 비교헌법 연구·조사 및 자료집 발간을 통한 연구·조사 성과 공유	37
합 계		364

자료: 헌법재판소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은 아시아의 민주주의, 법치주의 및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2010년 7월 창설된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 간의 협의체로서, 2024년 10월 현재 21개 헌법재판기관[317]이 가입되어 있음.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의 목표, 기능, 조직,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규약」에 따르면, 이사회 및 총회와 심포지엄, 워크숍 및 세미나 등 행사의 일반 개최비용은 주로 회원들의 동등한 분담에 의하여 충당되도록 하는 등 재정원칙으로 분담금을 규정하고 있으나[318] 창설된 지 1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분담금을 도입한 바 없음.

317) 회원기관 현황(가입연도):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10년) / 러시아, 타지키스탄, 튀르키예(’ 11년) / 파키스탄(’ 12년) /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13년) / 아제르바이잔(’ 14년) / 키르기즈, 미얀마(’ 16년) / 인도, 몰디브(’ 19년) / 방글라데시(’ 20년) / 요르단(’ 21년) / 팔레스타인(’ 22년)

318)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규약
제23조 재정의 원칙
1. 이사회 및 총회와 심포지엄, 워크숍 및 세미나 등 행사의 일반 개최비용은 주로 회원들의 동등한 분담에 의하여 충당된다. 단, 각 분담금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회원의 개별 역량에 따라 차등화될 수 있다.
제24조 회원의 재정기여
1. 회원은 각자의 항공료 및 숙박비를 부담한다.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024년 9월 태국에서 개최된 AACC 제6차 총회 및 이사회에서도 분담금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되는 등 회원기관 간 지속적인 논의가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하기로 결론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은 회원국간의 경제적 격차, 정치적 상황 등 다양한 현실적 이유로 인하여 분담금이 아니라 특정 국가의 부담[319]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분담금을 통한 운영이 필요함.

특히, 재정적 기여는 회원국들의 연합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회원국 간의 공정성과 책임감을 높이며, 연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제기구의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통상 회원국들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320]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운영 비용이 헌법재판소 예산이 아니라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원국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319)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3개의 상설사무국(대한민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및 1개의 총회사무국(총회 개최기관)에서 그 운영비용을 각각 부담하고 있고, 그간 6회의 총회 등 개최비용을 각 개최기관에서 부담함.

<AACC 상설사무국 설치 현황>

○ 행정사무국(Secretariat for Planning and Coordination):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연구사무국(Secretaria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한국, 서울
○ 연수및인적자원개발센터(Center for Training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터키, 앙카라

320) 유사기관인 베니스위원회나 세계헌법재판회의의 경우 기관 운영이나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회원국 또는 회원기관의 분담금을 통해 마련하고 있음.

(2)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 컨퍼런스(내역사업) 검토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 컨퍼런스 사업은 헌법재판소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으로서 서울에서 재판관 국제회의 및 연구관 국제회의를 교차로 개최하여[321] 당해 년도 연구·조사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억 8,550만원임.

- 해당 예산안은 자료 발간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530만원 및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국제회의 일반용역비 1억 8,02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일반용역비는 항공료, 숙박비, 회의장 조성 및 회의 진행 등 비용(임차료, 식음료비 등), 인건비 및 기업이윤 등으로 구성됨.

<AACC 연구 컨퍼런스 2025년도 예산안(일반용역비) 편성내역>

(단위:천원)

구 분	2025년도 예산안(일반용역비)
항공료	7,000
숙박비(2인 기준, 3박)	31,500
회의장 조성 및 회의 진행 등	86,700
인건비 및 기업이윤 등	55,000
합 계	180,200

자료: 헌법재판소

---

321) < AACC 연구 컨퍼런스 '23년 및 '24년 개최현황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홈페이지 참고>
· 2023.05.29.-2023.06.01. AACC 연구사무국 제4차 재판관 국제회의 개최(참가자; AACC 회원기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게스트: 알제리 헌법재판소장, 뉴질랜드 대법관/ 주제; 사법에의 접근: 헌법재판에 대한 접근을 중심으로(Access to Justice: Constitutional Perspectives))
· 2024.05.27.-2024.05.30. AACC 연구사무국 제4차 연구관 국제회의 개최(참가자; AACC 대표단(15개 기관), 게스트: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주제; 헌법상 환경권의 보장(Constitutional Rights and the Environment))

< AACC 연구 컨퍼런스 '25년 개최계획 >
· 2025. AACC 연구사무국 제5차 재판관 국제회의 개최 예정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항공권은 지원하지 않으나, UN 저개발국가(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322]에 해당하는 회원기관 및 게스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고, 관례상 참가기관의 숙박비는 개최기관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규약」에 따르면 회원은 각자의 항공료 및 숙박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게스트 또한 기본적으로 각자의 항공료 및 숙박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323].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규약」에서 정한대로 컨퍼런스 참가기관 즉 회원국 등이 기본적으로 각자의 항공료뿐만 아니라 숙박비도 부담할 수 있도록 AACC 이사회 등을 통한 회원국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322) 2024년 기준 회원국 중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가 해당됨.

323)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규약
제23조 재정의 원칙

1. 이사회 및 총회와 심포지엄 워크숍 및 세미나 등 행사의 일반 개최비용은 주로 회원들의 동등한 분담에 의하여 충당된다. 단 각 분담금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회원의 개별 역량에 따라 차등화될 수 있다.

제24조 회원의 재정기여

1. 회원은 각자의 항공료 및 숙박비를 부담한다.

제26조 게스트의 재정기여

1. 게스트는 기본적으로 각자의 항공료 및 숙박비를 부담한다.

7. 헌법재판정보화(정보화)(1035-500)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헌법재판정보화 사업은 헌법재판 정보화의 지속적 추진, 전자헌법재판센터 및 심판사건처리시스템 등 내외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정보보호활동 강화 등을 하는 사업으로, 다음의 내역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사이버안전센터 관제 운영, 보안취약점 점검 컨설팅 및 재해복구센터 시설 임차 등을 통해 중요 디지털 정보보호를 강화

- (정보시스템 확충) 지능형 헌법재판센터시스템 구축 5단계 사업 추진, 서증 관리시스템 구축, 노후장비 교체와 인프라 확충,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정보화 환경을 고도화

-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전자헌법재판센터 등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유지보수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억 5,600만원(16.4%)이 증액된 74억 9,9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헌법재판정보화(정보화) 사업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B-A)	(B-A)/A
헌법재판정보화 (정보화)	8,163	6,443	7,499	1,056	16.4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보호	834	896	925	29	3.2
정보시스템 확충	3,785	1,670	2,494	824	49.3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1,706	2,004	2,191	187	9.3
기구축정보시스템 임차	1,623	1,637	1,677	40	2.4
일반운영 등	214	236	212	△24	△10.2

자료: 헌법재판소

나. 서증 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정보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정보시스템 확충 사업에 서증[324] 관리시스템 구축을 2025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 동 사업의 예산안은 총 11억 500만원으로 일반연구비(260-01) 7억 500만원, 자산취득비(430-01) 4억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서증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안 내역[325] >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	□ 합계 : 11억 500만원 ○ 일반연구비 (개발비) : 7억 500만원 ○ 자산취득비 (상용SW) : 4억

자료: 헌법재판소

324) 서증이란 헌법재판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하는 문서를 말함.

325) 헌법재판소는 서증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라 산정된 1억 5,900만원의 감리비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감리

❑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당사자 등이 제출하는 서증을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326]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변론[327] 등에서 증거자료를 신속하게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 법원과 같이 서증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함.

- 헌법재판소는 현재 작성문서, 관계기관 제출자료, 서증, 기타 탄원서 등을 별도 분류 없이 내부시스템에 접수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등록[328]하고 있으며, 변론 등 필요시에는 사건별 증거서류 검색 및 조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유파일서버를 활용[329]하여 증거목록을 관리하고 있으나, 권한쟁의심판 등 필요적 변론사건[330]의 접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어 서증 및 증인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졌고, 전자기록

비와 조달수수료에 대하여 낙찰차액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음. 헌법재판정보화 사업에 있는 대부분의 사업은 감리비가 반영되지 않았는데, 정보시스템 감리사업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5억원 이상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수반되는 필수사업이며 조달수수료와 달리 고액인 점을 고려할 때, 낙찰차액이 적게 발생함에 따라 감리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소한의 감리비 예산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326) 법원의 경우 서증 및 증인 등의 관리기능을 하는 사건기록뷰어 시스템을 기 구축하고 있음.

327) 서증은 모든 사건에서 제출 가능하며,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특히 변론이 열리는 사건은 즉각적인 서증 확인이 필요하다고 함.

328) 2002년에 구축되어 사건의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업무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심판사건포털시스템 내 등록되어 있음.

329) 변론 시 공유파일서버에 ‘변론사건문건’ 폴더를 생성하고, 하부 폴더에 ‘사건번호 + 사건명’으로 각 사건별 폴더를 생성하여 관리함,
- 변론서면: 사건 관련 모든 문건을 심판사건포털시스템에 등록된 일자순으로 업로드
- 갑호증: 청구인 측이 제출하는 증거서류 업로드
- 을호증: 피청구인 측이 제출하는 증거서류 업로드

330)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은 필요적 변론사건이고,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은 임의적 변론사건임.
「헌법재판소법」 제30조(심리의 방식) 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②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중심으로 재판이 이루어짐에 따라 별도의 서증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함.

< 최근 10년 유형별 헌법재판사건 접수 현황 >

연 도	탄핵심판(A)	정당해산 심판(B)	권한쟁의 심판(C)	합계 (A+B+C)	위헌법률 심판(D)	헌법소원 심판(E)	합계 (D+E)	총 합계 (A+B+C+D+E)
2015	-	1	8	9	37	1,813	1,850	1,859
2016	1	-	9	10	20	1,921	1,941	1,951
2017	-	-	2	2	35	2,589	2,624	2,626
2018	-	-	2	2	17	2,408	2,425	2,427
2019	-	-	6	6	31	2,693	2,724	2,730
2020	-	-	5	5	20	3,216	3,236	3,241
2021	1	-	2	3	38	2,786	2,824	2,827
2022	-	-	5	5	43	2,781	2,824	2,829
2023	4	-	10	14	25	2,552	2,577	2,591
2024. 9.	1	-	4	5	15	1,805	1,820	1,825

자료: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법원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서증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모델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과 다른 점이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서증 관리시스템 구축(안)
○ (서증관리) 심판사건 중 서증 관리가 필요한 사건(헌나, 헌다, 헌라,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중 주요사건)에 대하여 서증을 관리(등록, 병합, 삭제 등)하고 서증기록을 열람하는 전용 뷰어 제공
○ (증인 및 기일 관리) 청구인, 이해관계기관 측으로부터 신청받은 증인, 참고인을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신청 증인, 참고인에 대한 채택 및 기일관리 기능 제공
○ (추진 계획) 2025년 4월∽5월: 계약추진, 6월∽11월: 사업추진, 12월: 사업종료

자료: 헌법재판소

❑ 먼저, 서증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서증을 관리하려는 헌법재판사건의 범위 및 관리 대상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헌법재판소는 서증 관리시스템을 통해 권한쟁의심판 등 필요적 변론사건 전체와 위헌법률사건·헌법소원사건 중 중요사건에 대하여 서증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필요적 변론사건의 경우 양 당사자가 존재하여 양 당사자가 증거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등 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아 증거자료의 관리 필요성이 높으나 매년 접수건수가 연 2∽14건에 불과함.

- 이에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중 주요사건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어떤 사건을 주요사건으로 볼지는 재판부가 심의를 진행하기 전에는 판단하기 어렵고, 사건의 성격상 양 당사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양 당사자 구조로 심판이 진행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증거자료 등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도 많음.

- 서증 관리시스템 이용 필요성, 심판청구 현황 및 심판진행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스템에서 관리할 헌법재판사건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헌법재판소는 현재 서증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서증이 어느 정도 제출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 관리 대상 문건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으나, 신규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문건을 서증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청구인, 이해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의견서 등 심

판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는 문건들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증인 및 기일 관리 기능 포함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연간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변론의 실시 횟수와 증인, 참고인 수를 고려하였을 때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여져 해당 기능을 서증 관리시스템의 구축에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최근 10년 변론 실시 횟수* 및 증인·참고인 수 >

연 도	변론 실시 횟수	증인 수	참고인 수	연도	변론 실시 횟수	증인 수	참고인 수
2015	7 (6)	-	14	2020	11 (5)	-	11
2016	9 (6)	-	19	2021	8 (2)	-	4
2017	20 (2)	26	6	2022	8 (6)	-	19
2018	4 (3)	-	8	2023	8 (2)	4	4
2019	7 (2)	2	4	2024. 9	10 (2)	-	4

* 괄호 안의 숫자는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을 열 수 있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서의 변론 실시 횟수임.

자료: 헌법재판소의 자료를 편집

❑ 헌법재판소는 증거관리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11억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만큼, 해당 시스템을 직접 사용하게 될 재판관 및 연구관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대법원 소관】

(전문위원: 김성완)

Ⅱ. 검토의견

1. 총 괄

(1) 본부 기본경비에 편성된 소속기관 기본경비 분리 편성 필요

○ 본부기본경비(7011-250), 도서관기본경비(7018-271), 연수원기본경비(7018-281), 교육원기본경비(7018-291)의 4개 기본경비 사업과 본부운영지원(7031-303), 도서관운영지원(7031-303), 연수원운영지원(7031-308), 교육원운영지원(7031-309)의 4개 운영지원 사업은 각각 본부(대법원 및 각급 법원 등), 법원도서관,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의 통상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를 반영한 사업임.

<일반회계 기본경비 및 운영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결산	2024 예산 (A)	2025 예산안 (B)	증 감	
				(B-A)	%
사법운영 기본경비	**82,476**	**84,834**	**90,168**	**5,334**	**6.3**
본부기본경비 (7011-250)	77,342	80,254	84,964	4,710	5.9
도서관기본경비(7018-271)	787	795	832	37	4.7
연수원기본경비(7018-281)	2,661	2,170	2,717	547	25.2
교육원기본경비(7018-291)	1,686	1,615	1,655	40	2.5
사법운영지원	**115,244**	**123,963**	**129,199**	**5,236**	**4.2**
본부운영지원(7031-303)	102,229	109,178	116,911	7,733	7.1
도서관운영지원(7031-307)	2,577	2,825	2,668	△157	△5.6
연수원운영지원(7031-308)	6,511	8,003	6,179	△1,824	△22.8
교육원운영지원(7031-309)	3,927	3,957	3,441	△516	△13.0

자료: 대법원,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 그런데 대법원의 본부기본경비(7011-250)와 본부운영지원(7031-303) 사업의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본부(대법원 및 각급 법원 등)뿐만 아니라 법원도서관,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도 예산의 일부를 직접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본부기본경비(7011-250) 사업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사법연수원은 2억 3,823만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은 8,332만원, 법원도서관은 6,955만원을 해당 사업 예산에서 직접 집행하였으며, 지출세목에는 일반수용비, 피복비, 복리후생비, 일반용역비, 기타운영비, 국내여비, 관서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포상금 등이 포함됨.

○ 2023년 본부운영지원(7031-303) 사업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사법연수원은 8,316만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은 6,186만원, 법원도서관은 1억 7,290만원을 해당 사업 예산에서 직접 집행하였으며, 지출세목에는 상용임금,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급식비, 기타운영비, 국내여비, 배상금, 고용부담금, 자산취득비 등이 포함됨.

○ 각 기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를 본부, 법원도서관,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등 기관별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는 것은 각 기관의 기관운영 경비의 한도를 명확히 하고, 그 집행현황을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가 있음.

<본부기본경비 사업 중 소속기관 직접 집행액 세부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소속 기관명	세목 (000-00)	소속기관 직접 집행액		
			2022년	2023년	2024년 (8.31.기준)
본부 기본경비 (7011-250)	사법 연수원	일반수용비(210-01)	25,737	26,140	726
		피복비(210-03)	-	4,270	-
		복리후생비(210-12)	6,424	2,790	8,336
		일반용역비(210-14)	3,870	9,662	-
		기타운영비(210-16)	5,850	4,400	3,600
		국내여비(220-01)	2,836	2,985	17,144
		관서업무추진비(240-02)	-	10,000	10,000
		특정업무경비(250-03)	229,085	177,684	179,991
		포상금(310-03)	-	300	-
		합계	**273,802**	**238,231**	**219,797**
	법원 공무원 교육원	일반수용비(210-01)	2,588	3,143	-
		피복비(210-03)	-	1,724	-
		복리후생비(210-12)	4,594	2,010	5,416
		일반운영비(210-14)	-	3,976	-
		기타운영비(210-16)	28,450	3,600	3,600
		국내여비(220-01)	3,040	4,074	2,799
		관서업무추진비(240-02)	4,220	4,435	4,449
		특정업무경비(250-03)	57,966	60,060	57,060
		포상금(310-03)	300	300	-
		합계	**101,158**	**83,322**	**73,324**
	법원 도서관	일반수용비(210-01)	6,793	8,028	1,186
		복리후생비(210-12)	2,904	2,820	8,004
		기타운영비(210-16)	10,100	8,200	8,600
		국내여비(220-01)	-	4,071	2,104
		특정업무경비(250-03)	52,981	39,733	39,735
		포상금(310-03)	7,000	6,700	6,400
		합계	**79,778**	**69,552**	**66,029**

자료: 대법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

<본부운영지원 사업 중 소속기관 직접 집행액 세부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소속기관명	세목(000-00)	소속기관 직접 집행액		
			2022년	2023년	2024년(8.31.기준)
본부 운영지원 (7031-303)	사법 연수원	상용임금(110-03)	54,428	61,624	41,185
		공공요금및제세(210-02)	48,000	3,000	-
		피복비(210-03)	394	606	202
		급식비(210-04)	10,951	9,674	5,187
		기타운영비(210-16)	3,150	4,200	3,150
		국내여비(220-01)	4,599	4,057	2,149
		자산취득비(430-01)	22,440	-	-
		합계	**143,962**	**83,161**	**51,873**
	법원 공무원 교육원	상용임금(110-03)	32,937	45,051	27,332
		피복비(210-03)	892	305	916
		급식비(210-04)	6,447	6,202	3,717
		기타운영비(210-16)	10,650	5,227	3,150
		국내여비(220-01)	2,656	2,435	1,552
		배상금(310-02)	608	-	-
		자산취득비(430-01)	3,818	2,641	-
		합계	**58,008**	**61,861**	**36,667**
	법원 도서관	상용임금(110-03)	113,099	143,191	120,785
		일반수용비(210-01)	-	1,660	-
		피복비(210-03)	1,542	356	1,424
		급식비(210-04)	7,952	10,507	6,146
		기타운영비(210-16)	3,150	4,200	3,150
		국내여비(220-01)	3,468	4,539	2,643
		고용부담금(320-09)	7,500	8,446	8,127
		합계	**136,711**	**172,899**	**142,275**

자료: 대법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

○ 각 소속기관은 소관 기본경비 및 운영지원 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계연도 중에 불가피하게 예산의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이나 전용 또는 내역변경 등 예산 변경의 절차를 거쳐 소관 기본경비 및 운영지원 사업의 예산현액을 증액한 후에 해당 예산현액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여야 함.

○ 그런데 대법원의 각 소속기관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행적으로 본부기본경비(7011-250) 및 본부운영지원(7031-303) 사업 예산의 일부를 소관 기관의 경비로 직접 지출하고 있음.

이러한 부적절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각 소속기관의 기본경비 및 운영지원 사업 예산에 필요한 경비가 충분한 수준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 일부가 매번 본부기본경비(7011-250) 및 본부운영지원(7031-303) 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탓도 있다고 보임.

○ 따라서 대법원은 소속기관의 기본경비 및 운영지원 사업의 2025년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다시 추계하여, 향후 본부기본경비(7011-250) 및 본부운영지원(7031-303) 사업에서 추가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각 소속기관의 기본경비 및 운영지원 사업 예산으로 미리 조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용도에 맞지 않는 복리후생비 예산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

○ 복리후생비(210-12목)는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에 대한 후생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는 항목으로, 2025년도 대법원 소관 복리후생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6억 1,100만원이 증액된 217억 4,100만원으로 편성됨.

○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는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청사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음.

<복리후생비(210-12목)의 용도>

목번호	목	세목(내역)
210	운영비	
		210-12 복리후생비 1. 기업특별회계 등의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3.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4.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5. 청사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그런데 대법원 소관 복리후생비 예산의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복리후생비를 이와 같은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편성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25년도 복리후생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2023		2024 예산액 (A)	2025 예산안 (B)	증감 (B-A)
		예산액	집행액			
일반회계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1142-401)	371	369	5	5	-
	재판일반경비지원 (1143-404)	1,269	1,266	1,269	2,736	1,467
	사법정책연구개선 (1143-405)	403	395	397	302	△95
	국선변호료지원 (1143-409)	*76*	*72*	*76*	*76*	-
	전문재판운영 (1144-407)	1,217	1,199	1,034	-	△1,034
	가족등록업무전산화(정보화) (1332-303)	5	1	5	2	△3
	본부 기본경비 (7011-250)	13,286	13,159	15,101	15,479	378
	도서관 기본경비 (7018-271)	78	83	78	78	-
	연수원 기본경비 (7018-281)	89	65	89	89	-
	교육원 기본경비 (7018-291)	44	43	44	44	-
	본부운영지원 (7031-303)	675	663	681	681	-
	연수원운영지원 (7031-308)	63	52	63	63	-
	교육원운영지원 (7031-309)	12	12	12	12	-
등기 특별회계	등특 기본경비 (7011-271)	1,803	1,774	1,992	1,992	-
	등기업무 운영지원 (7032-311)	75	75	76	76	-
사법 서비스 진흥기금	조정제도 지원 (1161-302)	14	13	14	14	-
	소년보호 등 지원 (1161-304)	*29*	*29*	*29*	*21*	*△8*
	민원서비스 개선 (1161-305)	105	96	64	64	-
	사법서비스 향상 (1161-306)	*101*	*100*	*101*	*7*	*△94*
계(복리후생비)		19,715	19,466	21,130	21,741	611

자료: 대법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

<국선변호료지원 사업의 복리후생비 예산 산출근거>

(단위: 천원)

(일반회계) [1143-409] 국선변호료 지원		
2025년 예산안		
[210-12] 복리후생비		76,000
1. 국선변호사 세미나 및 간담회	76,000,000원=	76,000

자료: 대법원, 「2025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국선변호료지원 사업 부분

<소년보호 등 지원 사업의 복리후생비 예산 산출근거>

(단위: 천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161-304] 소년보호 등 지원		
2025년 예산안		
[210-12] 복리후생비		21,000
1. 소년 등 집행감독 활성화에 따른 전문가진단 등 비용지원		21,000
가. 유관기관 간담회, 협의회, 워크숍 등 실시	21,000,000원=	21,000

자료: 대법원, 「2025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소년보호 등 지원 사업 부분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의 복리후생비 예산 산출근거>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161-306] 사법서비스 향상		
2025년 예산안		
[210-12] 복리후생비		7,000
1.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7,000
가. 가사민원상담관 도입		7,000
1)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7,000,000원=	7,000

자료: 대법원, 「2025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 부분

○ 특히, 국선변호료 지원 사업(1143-409)의 ‘국선변호사 세미나 및 간담회’, 소년보호 등 지원 사업(1161-304)의 ‘유관기관 간담회, 협의회, 워크숍 등 실시’ 또는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1161-306)의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와 같이, 복리후생비 예산을 세미나나 간담회, 워크숍 행사 개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예정해 놓은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이와 같이 복리후생비의 본래 용도에 부합하지 않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참고로, 지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지적이 있었으며,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으로 하여금 각 세부사업에 편성된 복리후생비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복리후생비가 용도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한 바 있음.

<2023회계연도 결산 법사위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복리후생비 예산의 용도에 맞는 편성 및 집행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총괄 - 복리후생비	주의
	지적사항	○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 따르면, 복리후생비(210-12목)는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등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대법원은 이를 직원 워크숍, 세미나, 체육행사 등 다른 용도로 집행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다른 기관의 경우 대개 기본경비 사업에 한정적으로 편성·집행되는 복리후생비 예산이 국선변호료 지원, 가족등록업무전산화(정보화), 소년보호 등 지원 등과 같은 일반사업에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편성·집행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복리후생비가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 명시된 용도에 맞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각 세부사업에 편성된 복리후생비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복리후생비가 용도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것	

자료: 법제사법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3) 판결문 등 점역서비스 제공 사업의 집행률 제고 필요

○ 판결문 등 점역서비스 제공 사업은 시각장애인 점자사용 권리 신장을 위한 공공기관 등의 의무 강화로 대법원이 발급하는 각종 서류에 대해 점자로 변환환 문서를 제공하는 사업임.

○ 판결문 등의 증명서는 '민원서비스 개선(1161-305)',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사무(1136-351)', 등기사항별 증명서는 '등기업무 운영지원(7032-311)' 사업 예산으로 편성함. 2025년도 예산안으로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점역서비스와 점자판결문 제공 등 서비스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지만, 등기사항증명서 점역서비스는 집행 실적으로 고려하여 2,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2025년도 각종 점역서비스 제공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점자판결문 제공 등 서비스	3.5	10	10	-	-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점역서비스	-	4	4	-	-
등기사항증명서 점역서비스	-	31	5	△26	△83.8

○ 대법원 점역서비스 사업의 집행 실적이 전체적으로 저조함.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와 등기사항증명서 점역서비스는 2022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시행 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점역

서비스 제공 건수가 각각 0건, 1건으로 거의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판결문 등 재판 관련 서류의 점자서비스 제공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대법원 제공 점역서비스 사업의 예상 집행 건수 및 실제 집행 건수>

(단위: 건)

	예상 집행 건수 (예산액 산정 근거)	2023년	2024년 (9월까지)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200	0	0
등기사항증명서	90	1	0
판결문 등	63	5	3

○ 대법원은 점역서비스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①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나 등기사항증명서의 용도가 대부분 관공서 및 금융기관 제출용이고 본인 확인 또는 보관용으로써 쓰임이 많지 않고, ② 점자해독이 가능한 시각장애인 비율 자체가 전체 시각장애인의 5%~10%로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다만, 홍보가 다소 미진하여 점역서비스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도 다수 있을 수 있음. 제도의 지속적 홍보 및 법원이나 시·읍·면 서류 발급 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점역서비스 제도를 충분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대법원 점역서비스 사업 홍보 내역>

매체 종류	홍보(공문) 시점
법원 홈페이지 공지	2022. 8. 9.
보도자료 배포	2022. 8. 9.
시·읍·면 등록관서에 대한 공문	2022. 8. 9.
브레일타임즈(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월간 소식지) 게재	2024. 2. 10.
넓은마을(시각장애인 온라인 커뮤티니) 게재	2024. 8. 20.

○ 또한, 점역서비스 신청은 직접 법원이나 시·읍·면 등록관서를 방문해야만 가능한데, 가족관계증명서나 등기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신청 절차의 편의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시각장애인 점역서비스는 「점자법」[331]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시각장애인의 실질적인 사법 권리 신장을 위해 중요하고 필요한 제도이지만, 앞으로도 집행 실적이 지금과 같이 저조할 경우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추가 예산 감액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대법원은 시각장애인 점역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331) 「점자법」 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①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일반회계

《세 입》

(1) 징계부과금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징계부과금(56-564)은 법령에 따라 수납하여야 할 징계부가금[332] 등을 수납하는 수입항목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편성되어 있지 않음.

<2025년도 징계부과금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항목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징계부과금 (56-564)	-	-	-	-	-

(나) 징계부과금 세입 예산안 편성 및 적극적인 수납 노력 필요

○ 징계부가금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범위에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함.

---

33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등에서는 '징계부가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등에 명시된 수입항목의 명칭은 '징계부과금'임.

○ 최근 5개년 징계부과금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매년 징계부과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매년 일정 규모의 징수결정액은 발생하고 있음. 다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19년 8.4%, 2020년 0.6%, 2021년 0.9%, 2022년 4.4%로 매우 낮은 편이며, 2023년의 경우 징수결정액 10억 6,000만원 전액이 미수납되었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최근 5개년 징계부과금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 액	불납 결손액
2019	-	739	62	-	8.4	677	-
2020	-	2,375	15	-	0.6	2,361	-
2021	-	1,110	10	-	0.9	1,100	-
2022	-	1,109	49	-	4.4	1,060	-
2023	-	1,060	-	-	0.0	1,060	-

○ 2023년도 징수결정액 10억 6,000만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들로, 그 금액은 550만원에서 3억원 사이임.

<2023회계연도 징계부과금 징수결정액 세부내역>

납부의무자	소속	직위	징계부가금 결정일	징수결정액 (원)	미수납액 (원)
김OO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법원주사	2016.02.23.	7,000,000	7,000,000
김OO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법원서기	2016.03.31.	39,749,800	39,749,800
윤OO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법원주사보	2016.06.01.	9,537,200	9,537,200
강OO	대구지방법원	행정주사보	2016.06.27.	18,000,000	18,000,000
강OO	법원행정처	전산서기관	2019.06.25.	283,190,000	283,190,000
손OO	법원행정처	전산서기관	2019.06.25.	297,580,000	297,580,000
이OO	법원행정처	전산주사	2019.06.25.	5,500,000	5,500,000
박OO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법원서기보	2020.02.26.	69,730,190	69,730,190
김OO	광주지방법원	법원서기	2020.08.11.	30,000,000	30,000,000
최OO	부산지방법원	법원주사보	2021.06.21.	300,000,000	300,000,000
합 계				**1,060,287,190**	**1,060,287,190**

자료: 대법원 제출

○ 대법원은 납부의무자의 재력 부족 및 거소 불명으로 징수가 부진하였으며, 향후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미수납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관할 세무서에 징수요청을 의뢰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나, 매년 징계부과금 세입 예산이 수납 예상액 규모 예측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편성되고 있지 않아 적극적인 수납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징계부가금 제도는 금품비리 특히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소액 금품비리의 경우에는 징계만으로는 적절한 제재가 될 수 없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333]이므로, 대법원은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징수를 철저히 하고, 장기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대법원은 단순히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체납관리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징계부과금 세입이 예산안 심사과정에도 보다 명확하게 인지 및 검토될 수 있도록 수납 목표액 또는 수납 예상액 등에 기초하여 일정 규모를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333) 인사혁신처, 「징계업무편람 2022」, 60p.

《세 출》

(2) 본부 기본경비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본부 기본경비(7011-250) 사업은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계상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47억 1,000만원(5.9%)이 증액된 849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본부 기본경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부 기본경비 (7011-250)	77,342	80,254	84,964	4,710	5.9

(나) 법원사람들 문학상 포상금 예산 감액 검토 필요

○ 포상금(310-03목)은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한 공무원 및 민간인(또는 기관)을 격려·포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상금 및 격려금 등을 말함[334].

○ 대법원의 본부 기본경비(7011-250) 사업에는 대법원 및 각급 법원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포상금(310-03) 예산은 총 9,400

334)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500만원(5.3%)이 증액되었음.

<본부 기본경비 사업 중 포상금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부 기본경비(7011-250)	77,342	80,254	84,964	4,710	5.9
포상금(310-03)	87	89	94	5	5.3

○ 2025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따르면, 이는 일반 포상금 예산 9,010만원과 '법원사람들 문학상 입상자'를 위한 포상금 예산 340만원을 합한 것인데,

지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포상금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법령상 그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데, 본부 기본경비를 통해 집행되는 '법원사람들 문예상 포상금'의 경우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새로운 포상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문예상 시상식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그 일환으로 2024년에는 시상식 행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별도로 이와 관련한 포상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음.

<2025년도 본부 기본경비 중 포상금 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2025년 예산안		
[310-03] 포상금		93,500
1. 포상		90,100
가. 우수제안자 포상	22,000,000원=	22,000
나. 재판사무처리 모범직원 포상	5,700,000원=	5,700
다. 감사우수직원 포상	3,600,000원=	3,600
라. 우수공무원 포상	30,300,000원=	30,300
마. 우수가족관계등록공무원 포상	6,000,000원=	6,000
바. 위조 가족관계등록사건 발견 공무원 포상	3,000,000원=	3,000
사. 부패방지시책 우수법원	6,000,000원=	6,000
아. 법원의날 포상	2,500,000원=	2,500
자. 예산집행 및 회계관리 등 우수 포상	6,000,000원=	6,000
차. 우수 공무직 포상	5,000,000원=	5,000
2. 법원사람들 문학상 입상자	3,400,000원=	3,400

자료: 대법원, 「2025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본부 기본경비 부분

<최근 3개년 법원사람들 문학상 포상금 집행내역>

연도	예산액	집행액	비고
2022년	340만원	340만원	
2023년	350만원	350만원	
2024년	340만원	-	시상식 행사 미시행

자료: 대법원 제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유형	조치결과	조치상황(`24.4.30)
(9) 포상금 지급에 대한 법령 근거 마련 필요	○ [지적사항] 포상금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에 따라 법령상 그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데, 본부 기본경비를 통해 집행되는 '법원사람들 문예상 포상금'의 경우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 ○ [시정요구사항] 대법원은 법원사람들 문예상 시상과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을 위한 법령상 근거 등을 마련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할 것	제도개선	○ 법원사람들 문예상을 주관하는 공보관실에 문의결과 국회지적사항과 같이 법원사람들 문예상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2023년도 법원사람들 문예상 시상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향후 법원사람들 문예상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사법부 포상 담당부서인 인사운영심의관실에 법령상 근거를 요청 후 그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답변함 ○ 이에 향후 공보관실에서 법원사람들 문예상에 대한 포상금 지급 타당성에 대한 검토 자료가 올 경우, 이를 반영하여 「법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내규」에 법원사람들 문예상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조치예정일 : '23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2022회계연도 결산,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 이상에 비추어 보면,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포상금 예산 9,400만원 중 ‘법원사람들 문학상 입상자’ 포상을 위한 예산 340만원은 집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 직책수행경비 지급단가 및 지급인원 정보 예산 각목명세서 명시 필요

○ 직책수행경비(250-02목)는 각급 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함[335].

○ 대법원의 본부 기본경비(7011-250) 사업에는 대법원 및 각급 법원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가 편성되어 있는데[336],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직책수행경비(250-02목) 예산은 총 293억 5,800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 대비 12억원(4.3%)이 증액되었음.

<본부 기본경비 사업 중 직책수행경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부 기본경비(7011-250)	77,342	80,254	84,964	4,710	5.9
직책수행경비(250-02목)	27,451	28,158	29,358	1,200	4.3

○ 2025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따르면, 이는 법관 지급분 270억 4,391만원, 일반직 지급분 1억 795만원, 법원사무직 지급분 21억 8,167만원과 양형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지급분 2,456만원을 합한 것임.

335)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336) 참고로, 사법연수원 등 소속기관 소속 법원공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는 각 소속 기관 기본경비에 별도로 편성·집행되고 있음.

<2025년도 대법원 소관 직책수행경비 예산안 산출근거>

(단위: 천원)

2025년 예산안		
[250-02]직책수행경비		29,358,104
1. 직책수행경비		29,358,104
가. 기존분		29,333,537
1)법관		27,043,912
가)대법원장	76,930,000원=	76,930
나)대법관	399,227,000원=	399,227
다)법원장, 고법부장, 지법부장	26,567,755,000원=	26,567,755
2)일반직		107,951
가)2급보조기관(갑)	7,906,000원=	7,906
나)2급보조기관(을)	7,267,000원=	7,267
다)3급보조기관(갑)	7,906,000원=	7,906
라)4급보조기관(갑)	8,139,000원=	8,139
마)4급보조기관(을)	76,733,000원=	76,733
3)법원사무직		2,181,674
가)1급	9,243,000원=	9,243
나)2급보조기관(갑)	86,965,000원=	86,965
다)3급보조기관(갑)	195,643,000원=	195,643
라)3급 복수직(갑)	127,889,000원=	127,889
마)4급보조기관(갑)	1,761,934,000원=	1,761,934
나.양형위원회		24,567
1)양형위원장	16,130,000원=	16,130
2)양형위원회 상임위원	8,437,000원=	8,437

자료: 대법원, 「2025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본부 기본경비 부분

○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하 “예산안 편성지침”)」 Ⅲ. 목별지침에 따르면 직책수행경비 예산은 동 지침의 기준단가[337]를 적용하여 편성하여야 하고, 국장급 이상의 경우 기준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338].

337) 다만, 기획재정부는 차관급 이상의 직위 보유자나 검사, 경찰 등 일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행경비의 기준단가는 위 지침에 기재하지 않고 각 부처 예산편성 실무자에게 별도로 제공하고 있음

<직책수행경비 지급단가(2025년)>

유 형	월 액	비 고
1급, 고공단 가등급 중앙기관장	750	
1급, 고공단 가등급 보조기관	700	※갑·을 구분 기준
2·3 급, 고공단 나등급 기관장	650	
2·3 급 고공단 나등급 보조기관“갑”	600	· 갑 : 현원 6명이상
2·3 급 고공단 나등급 보조기관“을”	550	· 을 : 현원 5명이하
복 수 직 3 급 “갑”	500	
복 수 직 3 급 “을”	450	
4 급 기 관 장	400	
4 급 보 조 기 관 “갑”	350	
4 급 보 조 기 관 “을”	300	
4 급 복 수 직	150	
5 급 기 관 장	150	
5 급 보 조 기 관	80	
6·7 급 기 관 장	80	
6·7 급 보 조 기 관	50	

※ 국장급(월55만원 이상 수령자)이상은 기관장이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 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균등 또는 차등하여 편성

※ 현원 산정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파견자와 사무보조원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293

338) 감사원 감사보고서(기관정기감사), 「대검찰청 등 2개 기관 정기감사」. 2021. 3., 53p.

○ 그런데 대법원은 법무부(검찰청 포함) 등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과 달리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직책수행경비의 지급대상 유형별 총액만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산출근거, 다시 말해 직위별 지급인원 및 지급단가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직책수행경비 예산이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감사원의 다른 기관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직책수행경비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직책수행경비를 지급하거나, 국장급 등 고위직에 대하여 직책수행경비를 예산안 편성지침 상의 기준단가보다 높게 설정·지급한 사례들이 상당수 발견[339]되고 있음.

반면, 2020년의 경우 법원행정처는 신규 법관 증원, 10년 이상 경력 법관 증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해외연수 대상자들이 해외연수를 떠나지 못하고 재판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등의 사유로 직책수행경비 지급대상자가 예상보다 증가하자 연말 법관들에게 지급하는 직책수행경비를 일부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공지를 하기도 하였음[340].

○ 2025년 예산안에 편성된 대법원과 각급 법원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책수행경비 예산의 지급단가가 예산안 편성지침의 기준단가 범위 내에 있는지, 그리고 지급 대상인원이 적정한 수준으로 반영되어

339) 대검찰청 등 2개 기관 정기감사(202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관운영감사(2019년), 기획재정부 기관운영감사(2017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관운영(2016년) 등

340) 법률신문, 「법관 직책수행경비 '삭감'...“액수보다 절차에 서운”」, 2020. 11. 12.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직책수행경비 예산의 지급대상별 지급단가와 지급인원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임.

○ 따라서 대법원은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지급대상별 지급단가와 지급인원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축소 노력 및 예산안 반영 필요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33조 및 제79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비공무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일정 비율(2019~2021년: 3.4%, 2022~2023년: 3.6%, 2024년 이후: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국가 및 지자체의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법적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 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 한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 정원의 일정 비율(2019~2021년: 3.4%, 2022~2023년: 3.6%, 2024년 이후: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법적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 최근 5개년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2021년 2억 2,900만원, 2024년 3억 8,500만원, 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2021년 13억 7,400만원, 2024년 24억 5,700만원으로 나타남.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합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에는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4억 7,100만원, 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31억 6,000만원을 합하여 총 36억 3,100만원을 공공요금및제세(220-02목) 예산으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5개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연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비고
	비공무원	공무원	계	
2020	267,314,610원	-	267,314,610원	2019년도분
2021	229,438,710원	1,374,385,320원	1,603,824,030원	2020년도분
2022	155,993,460원	1,454,276,080원	1,610,269,540원	2021년도분
2023	264,634,000원	2,054,078,790원	2,318,712,790원	2022년도분
2024	384,721,590원	2,457,254,050원	2,841,975,640원	2023년도분
2025	471,682,120원	3,160,040,200원	3,631,722,320원	2024년도분 예상액

* 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제도는 2020. 1. 1.부터 시행
자료: 대법원 제출 자료 재정리

<최근 5개년 장애인 비공무원 근로자 고용 현황>

연도	상시근로자 수	장애인 비공무원 근로자		
		의무고용인원(A)	채용인원(B)	고용률(B/A)
2019	-	31명	15명	48.4%
2020	-	58명	42명	72.4%
2021	-	57명	46명	80.7%
2022	-	62명	43명	69.4%
2023	-	63명	36명	57.1%
2024. 8.	1,812명	68명	35명	51.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채용인원 산정 시 2배수 적용
자료: 대법원 제출

<최근 5개년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

연도	소속 공무원 정원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인원(A)	채용인원(B)	고용률(B/A)
2019	19,398명	660명	485(중증:56, 경증:373)명	73.5%
2020	17,498명	595명	480(중증:49, 경증:382)명	80.7%
2021	17,565명	598명	477(중증:51, 경증:375)명	79.8%
2022	17,674명	637명	474(중증:45, 경증:384)명	74.4%
2023	17,674명	637명	471(중증:46, 경증:379)명	73.9%
2024. 8.	17,702명	673명	472(중증:49, 경증:374)명	70.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채용인원 산정 시 2배수 적용
자료: 대법원 제출

○ 대법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2024년 공무원 2.67%, 비공무원 1.93%)은 다른 중앙행정기관(2022년 공무원 3.66%, 비공무원 3.13%)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축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22.12월 기준)>

(단위: 개소, 명, %)

구 분			사업체수	상 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고용률(%)
합 계			31,455	8,936,761	278,823	3.12
정부부문	공무원	소계	317	954,759	27,998	2.93
		중앙행정기관	53	202,342	7,402	3.66
		헌법기관	4	24,988	719	2.88
		지방자치단체	243	309,179	11,858	3.84
		교육청	17	418,250	8,019	1.92
	비공무원	소계	306	403,286	24,852	6.16
		중앙행정기관	42	72,905	2,281	3.13
		헌법기관	4	3,103	106	3.42
		지방자치단체	243	138,674	15,129	10.91
		교육청	17	188,604	7,336	3.89
공공기관		소계	790	594,568	22,835	3.84
		공기업	36	151,800	5,834	3.84
		준정부기관	94	130,714	5,785	4.43
		기타공공기관	208	176,586	6,183	3.5
		지방공기업	152	81,159	3,256	4.01
		출자·출연기관	300	54,309	1,777	3.27
민간기업		소계	30,042	6,984,148	203,138	2.91
		100인 미만	16,054	1,114,072	25,518	2.29
		100~299인	10,223	1,680,980	53,745	3.20
		300~499인	1,758	667,817	21,713	3.25
		500~999인	1,163	799,322	26,794	3.35
		1,000인 이상	844	2,721,957	75,368	2.77
		대기업집단	954	1,440,404	33,889	2.35

자료: 고용노동부,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23~2027)」, 2023. 5.

○ 또한, 대법원은 매년 공공요금및제세(220-02목) 예산으로 20~30억 규모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 소요예산이 과소하게 추정되고, 결과적으로 회계연도 중 공공요금및제세(220-02목)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한 이.전용 등을 유발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보다 명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사법업무전산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사법업무전산화(1331-300) 사업은 재판사무와 사법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판사무시스템 및 사법행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237억 6,000만원(48.5%) 증액[341]된 727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대법원은 2025년 예산안에서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법부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산 과목 구조를 개편[342]함과 동시에, 사법부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 편성하였음.

<2025년도 사법업무전산화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사법업무전산화 (1331-300)	41,981	48,980	72,740	23,760	48.5

341) 증액분 237억 6,000만원 중 통합된 전자소송 사업 예산 87억 9,000만원을 제외하면 사법업무전산화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149억 7,000만원(25.9%)이 증액됨.

342) 세부사업인 전자소송(1331-302) 내역사업을 사법업무전산화(1331-300)에 통합하는 한편, 각 시스템별로 분산 편성된 내역사업을 기능상 유사한 것끼리 통합함.

(예시)

과목 구조 개편 전		과목 구조 개편 후
재판사무시스템 유지관리	→	사법업무시스템 유지관리
사법행정시스템 유지관리		
전자소송시스템 유지관리		

(나) 신규 편성된 AI플랫폼 구축 사업의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 대법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사의 재판 업무를 돕는 AI플랫폼 개발하고자 '법원 AI 플랫폼 구축 및 법률자료 지능형 검색 모델 개발 사업(이하 'AI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 함)'을 신규 추진할 예정임. 동 사업에 대한 2025년 예산안은 47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AI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사법업무전산화 (1331-300)	41,981	48,980	72,740	23,760	48.5
AI플랫폼 구축 사업	-	-	4,706	4,706	-

<AI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산출 근거>

4,706백만원 = 1,155백만원(SW개발) + 3,270백만원(장비도입) + 281백만원(감리)

- SW개발 : 1,155백만원 × 1식
- 장비도입: 3,270백만원 × 1식
- 감리 : 281백만원 × 1식

○ AI플랫폼 구축 사업은 앞으로 4년간 약 190억원이 투입되는 다년도 사업으로, 2025년에는 생성형AI 기반 플랫폼 구축과 함께 초기 단계로 2개의 AI모델을 개발할 예정이고, 2026년에서 2028년까지 3년 동안 추가적인 목표모델을 개발하여 필요한 정보자원(서버, GPU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임.

<AI플랫폼 구축 사업 총 사업비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2025	2026	2027	2028	합계
사업비		4,706	5,249	5,287	3,792	19,001
	SW개발비	1,162	2,105	3,115	1,601	
	장비비	3,270	2,875	1,910	1,972	
	감리비	241	268	263	219	

○ 대법원은 재정당국에 2025년 AI플랫폼 구축 사업의 예산으로 54억 6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장비도입 비용 중 7억원이 요구안보다 적게 받아들여져서 47억 600만원으로 편성함. 대법원은 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서는 당초 요구안인 54억 600만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초기에 필수장비가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예산의 추가반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AI플랫폼 구축 사업 이행과제별 예산 요구안 및 조정안>

(단위: 백만원)

이행과제	유형	1차년(2025년)	
		요구안	조정안
이행과제1. 법률자료 지능형 검색 · 리서치 서비스 구축	개발비	70	70
이행과제2. 재판업무지원 AI학습용데이터 구축	개발비	545	545
이행과제3. 재판업무지원 AI플랫폼 구축	개발비	540	540
	장비비	864	864
이행과제4. 재판업무지원 AI플랫폼 인프라 구축	장비비	3,106	2,406
재판업무지원 AI이행과제 감리대가 산정	감리비	281	281
합계		5,406	4,706

○ 한편, 대법원은 2025년 AI플랫폼 구축 사업의 개발에 약 9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2024년 11월 말까지 제안요청서 작성 등 사업 준비를 완료하고, 3월 말까지 발주, 입찰, 계약 등 절차를 완료하여, 연내 예산을 전액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함.

○ 그런데 최근 실시된 대법원 주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사업 개시연도에 행정절차 및 입찰 과정에서 사업지연이 자주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당해연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였음.

<주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개시연도 예결산 현황 및 사업추진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	집행액	이월액	사업추진 내역 (사업준비~계약체결)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2020년)	13,130	8,935	3,882	2019. 10. 대기업 참여제한 심의결과 통보 2020. 1. 입찰 공고 2020. 3. 입찰 공고 취소 2020. 4.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2020. 4. 재입찰 공고 **2020. 7. 계약 체결**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2020년)	7,247	2,827	4,313	2019.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및 통과 2020. 5. 사업자 선정 의뢰 2020. 6. 조달청 공고(단일응찰로 유찰) 2020. 9. 조달청 공고 **2020. 9. 계약 체결**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2023년)	3,829	1,387	2,389	2022. 11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2022. 12. 사업계획 보고, 사업자 선정의뢰 요청 2023. 1. 제1차 사업설명회, 일상감사 2023. 2. 제2차 사업설명회 2023. 3. 21. 1차 공고 마감 무응찰 유찰 2023. 5. 10. 2차 공고 마감 단일 응찰 2023. 5. 31. 단일 응찰에 따른 저격성 평가 2023. 6. ~ 7. 사업자 계약 여부 미결정 **2023. 7. 31. 계약 체결**

AI플랫폼 구축 사업의 경우에도 2025년 사업비 약 46억원, 총 사업비 약 19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준비 및 입찰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계약 체결이 3월 말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생성형AI는 아직 과도기적인 기술이므로 도입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발생할 수 있음. 예컨대, ① 오답변 발생 가능성 및 이에 근거한 재판시 책임 소재[343], ② 소송기록에 남지 않는 재판 참여자의 비언어적 행위는 인공지능 판단에 반영할 수 없는 점[344], ③ AI플랫폼에 대한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345], ④ 생성형 AI의 도입의 법률적 문제[346] 등 재판업무에 인공지능시스템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다양한 지적들이 SW개발 과정에서 적절히 반영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SW개발 기간이 당초 예상한 9개월보다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동 사업은 사업준비와 SW개발 기간의 지연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예산 이월 가능성, 대법원 정보화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고려하여 2025년 내 집행될 수 있는지 확인될 필요가 있으며, 대법원은 재판지연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위해 AI플랫폼 구축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연내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343) 사법정책연구원,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 p300, 2024
344) ‘AI와 양형’을 주제로 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심포지엄. 2024년 6월 26일
345) 산업일보, “기업 해킹 열쇠 된 AI, LLM 취약점 인지 후 보안 대책 세워야”, https://kidd.co.kr/news/238168, 2024.9.
346) 김일우, 『재판업무 지원 AI 도입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헌법학회, 2024

(다) 신규 · 증액 편성된 정보보안 강화 관련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대법원은 2022년 북한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의 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347]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정보보안 강화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대법원 업무환경과 정보보안시스템 현황을 분석하여 차세대 지능형 보안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ISP 사업 예산을 신규 편성함.

<사법부 보안역량 강화 관련 신규 · 증액 편성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사법업무전산화	48,980	72,740	23,760	48.5
노후 보안장비/전산장비 교체	4,309	6,346	2,037	47.3
신규 보안장비/전산장비 확충	1,451	2,879	1,428	98.4
보안관제 운영[348]	1,482	1493	11	0.7
망분리 운영	167	419	252	150.8
정보보안 컨설팅	155	257	102	65.8
사법부 지능형 보안운영체계 구축 ISP	-	232	232	-

347) 북한의 해킹조직 라자루스는 약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법원 전산망을 해킹하여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나타남. 경찰청 수사결과에 따르면, 공격자는 21. 1. 7. 이전부터 23. 2. 9.까지의 기간 동안 법원 전산망에 침입하여 국내외 서버로 1,014GB 분량의 자료를 전송하였고, 유출 자료 중 0.5%인 4.7GB의 자료(5,171개)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인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모두 개인회생과 관련된 문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진단서 등이 포함되어 있음.

348) 2025년에 기존 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 중지 및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의 개통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양 사업에 각각 편성된 보안관제 운영 예산을 더하여 산정

○ 해킹/디도스 등 외부 공격에 대비하여 민간의 전문 보안업체에 보안관제 운영을 위탁하는 '보안관제 운영 사업'은 사법부 보안관제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임에도 증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시 이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법원이 보유한 자료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재산 상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자료가 유출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 대법원은 예산이 신규·증액 편성된 보안관제 관련 사업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 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임.

(라) 신축법원 전산망 구축의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 감액 검토 필요

○ 사법업무전산화 사업의 세부사업 중 하나인 ‘신축법원 전산망 구축 사업’은 2025년 준공되는 법원 신축 건물에 네트워크 및 전자법정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9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신축법원 전산망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사법업무전산화	41,981	48,980	72,740	23,760	48.5
신축법원 전산망 구축	505	481	908	427	88.7

신축법원 전산망 구축: 908백만원 = 425백만원 + 339백만원 + 101백만원 + 43백만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별관 신축: 425백만원

- 전자법정시스템 구축: 117백만원
- 네트워크 장비 도입: 23백만원
- 전자법정시스템 설치공사: 35백만원
- 네트워크 공사: 245백만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별관 신축: 339백만원

- 전자법정시스템 구축: 138백만원
- 네트워크 장비 도입: 20백만원
- 전자법정시스템 설치공사: 47백만원
- 네트워크 공사: 134백만원

울산지방법원 별관 신축: 101백만원

- 전자법정시스템 구축: 28백만원
- 네트워크 장비 도입: 10백만원
- 전자법정시스템 설치공사: 10백만원
- 네트워크 공사: 53백만원

제주지방법원 별관 신축: 43백만원

- 네트워크 장비 도입: 5백만원
- 네트워크 공사: 38백만원

○ 전산망 구축 사업은 건물의 구성 부분에 대한 공사가 아니라, 완성된 건물에 추가 설비를 구축하는 공사이므로 보통 준공이 완료된 이후에 실시됨. 예컨대, 최근 실시된 속초지원과 광주지방법원 별관의 전자법정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내역을 보면, 사업이 주로 건물 준공에 임박한 시점이나 준공 이후에 완료되었음.

〈속초지원 및 광주지방법원 별관 전산망 구축 사업 추진 경과〉

속초지원 신축	청사 준공일	22. 7. 15.
전자법정 구축	계약일	22. 6. 8.
	장비납품일	22. 7. 29.
네트워크 장비 도입	계약일	22. 5. 23.
	장비설치일	22. 8. 4.
전자법정 설치 공사	계약일	22. 6. 8.
	착공일	22. 6. 13.
	준공일	22. 8. 19.
네트워크 공사	계약일	22. 5. 30.
	착공일	22. 6. 2.
	준공일	22. 8. 29.
광주지방법원 별관 신축	**청사 준공일**	**23. 10. 20.**
전자법정 구축	계약일	23. 8. 7.
	장비납품일	23. 10. 10.
네트워크 장비 도입	계약일	23. 7. 31.
	장비설치일	23. 10. 22.
전자법정 설치 공사	계약일	23. 8. 21.
	착공일	23. 9. 4.
	준공일	23. 12. 2.
네트워크 공사	계약일	23. 9. 11.
	착공일	23. 9. 21.
	준공일	23. 12. 8.

공사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 기간이 종료된 후 검사·검수를 거쳐 대금청구와 대급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전산망 구축 예산의 집행은 전산망 구축 공사 완료 이후 시점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25년 전산망 구축 대상인 각 청사별 준공 시점을 보면, 울산지방법원 별관의 경우 2025년 2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별관은 2025년 10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별관은 2025년 12월, 제주지방법원 별관은 2026년 3월에 준공 예정임.

즉 울산지방법원 별관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별관은 전산망 구축 예산의 연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별관과 제주지방법원 별관은 연내 집행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전산망 구축 대상 청사별 준공 예정일>

구분	준공 예정일
울산지방법원 별관 신축	2025.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별관 신축	2025.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별관 신축	2025. 12. 27.
제주지방법원 별관 신축	2026. 3. 19.

○ 따라서, 예산의 이월·불용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축법원 전산망 구축 예산 중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정 부분을 감액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신축법원 전산망 구축은 필연적으로 신축법원의 준공 시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최근 진행되고 있는 울산지방법원 별관과 제주지방법원 별관의 전산망 구축 사업의 경우, 신축공사 지연으로 인해 예산 불용이 반복되고 있음.

〈별관 신축공사 사업기간 변경 내역〉

울산지방법원 별관 신축공사 기간	제주지방법원 별관 신축공사 기간
당초계획: 2021년~2023년 1차 변경: 2021년~**2024년** 2차 변경: 2021년~**2025년**	당초계획: 2020년~2022년 1차 변경: 2020년~**2024년** 2차 변경: 2020년~**2025년** 3차 변경: 2020년~**2026년**

〈전산망 구축 예산 집행 여부〉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안)
울산지방법원 별관 전산망 구축	편성	불용	편성	불용	편성
제주지방법원 별관 전산망 구축	-	-	편성	불용	편성

○ 대법원은 소관부서[349]가 긴밀히 소통하여 신축법원 공사의 진행 상황 및 준공일에 대한 예측이 예산 편성에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향후 신축법원 전산망 구축 사업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349) 대법원 청사시설 취득 사업: 기획조정실 시설담당관실
신축법원 전산망 구축 사업: 사법정보화실 정보화심의관실

(4)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1333-304) 사업은 법원의 재판업무지원과 대국민 법률정보 서비스를 목표로 판례, 법령, 규칙, 예규, 선례 및 법률문헌 등의 원문 DB를 구축하고 디지털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39억 7,100만원(160%) 증액된 64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1333-304)	2,332	2,482	6,453	3,971	160

(나) 종합법률정보와 온라인 법고을의 통합 운영 필요성 검토 등

○ 온라인 법고을 사업은, 법고을 LX[350]의 고유기능을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해 서비스하고자 온라인 법고을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 9월 홈페이지를 오픈하였음.

350) 법고을 LX 사업은 1998년 시작되어 주요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 등 판결 정보, 법원도서관 소장 도서 및 논문 등 문헌 정보, 각종 법령정보를 컴퓨터 프로그램 형태로 제작해 CD, DVD 및 USB로 보급한 사업임.

대법원은 온라인 법고을 개발을 위해 2억 5,200만원을 집행 또는 집행할 예정이고, 온라인 법고을 고도화 시스템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2026년부터는 고도화가 완료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351]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온라인 법고을 개발 비용>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예산액
2022	온라인 법고을 LX 제작	102,000
2024	온라인 법고을 고도화 사업	150,000
	합계	252,000

○ 그런데 대법원은 이미 법률정보 제공 서비스로 '종합법률정보'를 운영하고,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검색 기능을 통해 판례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이트들과 온라인 법고을 운영에 관련하여 다음의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종합법률정보와 법원도서관 및 온라인 법고을은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인지도 측면에서는 종합법률정보가 법원도서관이나 온라인 법고을보다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음. 2023년 기준으로 법원전자도서관 접속자는 약 111만명인데 반해, 종합법률

[법고을 연혁]
1993: 강봉수 변호사(전 법원도서관장) 법고을 개발
1997 ~ 2003: 윈도우용 프로그램 개발/ 법고을LX CD사업
2004 ~ 2014: 법고을LX DVD사업/ 시각장애인용 TTS버전 제작
2015 ~ 2018: 법고을LX USB사업/ 특허법원 판결문 PDF제공
2024 현재: 온라인 법고을 개발

351) 대법원은 보통 시스템 구축 비용의 약 10%가 유지보수 비용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함.

정보 홈페이지 접속자수는 약 3,860만명임(법원도서관이 전자도서관 이외 별도로 구축한 온라인 법고을은 2024년 9월 서비스 시작).

따라서. 온라인 법고을이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하급심 판례나 특허법원 판례 등 판례정보는 이미 운용 중인 종합법률정보를 개선하는 방식이 법조인이나 일반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 측면에서 더 적절할 수 있음.

<대법원 법률정보 검색 사이트 비교>

	종합법률정보		법원전자도서관		온라인 법고을
운영 주체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법률정보 DB 구축은 법원도서관이 담당)		법원도서관 (법률정보 DB 구축은 법원도서관이 담당)		법원도서관 (법률정보 DB 구축은 법원도서관이 담당)
운영 취지	법률 종사자 및 일반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정보 온라인 무료 제공		법률 종사자 및 일반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정보 온라인 무료 제공		법률 종사자 및 일반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정보 온라인 무료 제공
2025년도 예산안 (*운영 비용)	2,620만원 사법업무전산화 ㄴ사법업무시스템 유지관리 ㄴ사법행정시스템 유지관리 ㄴ종합법률정보 유지관리비		2,349만원 전자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 ㄴ위탁사업비 ㄴ법원도서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ㄴ법원전자도서관 유지관리비		560만원 전자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 ㄴ위탁사업비 ㄴ법원도서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ㄴ온라인 법고을 유지관리비
검색 자료	판례 법령 조약 규칙/예규/선례		판례 소장자료 법원간행물/컬렉션 사이트		판례(특허법원○, 하급심△[352]) 법령 문헌(저작권 회원만 이용 可[353]) 규칙/예규/선례
홈페이지 접속자수	**2019년**	27,651,738	**2019년**	1,135,158	2024년 9월 23일 서비스 시작으로 홈페이지 접속자 수 미파악
	2020년	25,505,931	**2020년**	1,157,794	
	2021년	28,569,276	**2021년**	1,130,587	
	2022년	48,319,879	**2022년**	1,135,124	
	2023년	38,601,234	**2023년**	1,116,462	

* 각 시스템 운영비용은 유지관리요율을 반영한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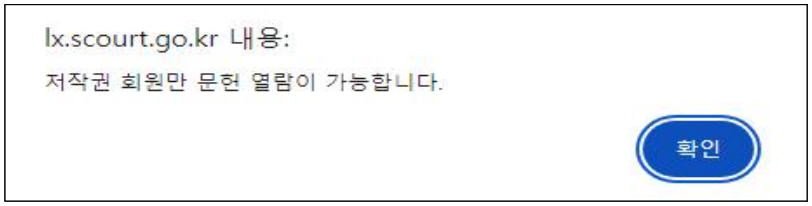
둘째, 온라인 법고을이 제공하는 ① 판례, ② 특허법원 판례, ③ 헌법재판소 판례, ④ 문헌, ⑤ 법령, ⑥ 규칙/예규/선례 등의 법률정보는 이미 일반 국민에게 충분히 상용화가 된 다른 기관의 법률정보 홈페이지[354]를 통해서도 검색이 가능함.

셋째, 종합법률정보와 법원전자도서관 및 온라인 법고을이 보유한 법률정보가 일정 부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정보시스템을 병렬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업의 비효율성과 예산의 중복을 초래할 수 있음. 또한 법률정보가 다수 홈페이지에 분산되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이용 편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대법원은 종합법률정보 외에 온라인 법고을 등 법률정보제공 시스템을 별도 운영할 필요성에 대해 재고하고, 향후 양 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법률정보 DB 구축은 법원도서관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시스템 운영 주체도 정보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법원도서관으로 일원화

352) '온라인 법고을 고도화 사업'을 통해 하급심 판례 검색 기능 추가 예정
353) ' 온라인 법고을 고도화 사업 '을 통해 저작권 공개 동의 기능 추가 예정. 2024년 10월 현재, 온라인 법고을에서 저작권 회원이 아닌 일반 국민은 문헌을 검색할 수 없음.



354)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대법원 특허법원 홈페이지 : https://patent.scourt.go.kr/main/new/Main.work
헌법재판소 지능형 통합검색 홈페이지 : https://isearch.ccourt.go.kr/main.do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 https://www.nanet.go.kr/main.do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main.html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법원도서관은 ‘2024년 온라인 법고을 고도화 사업’으로 ① 종합법률정보에서 검색할 수 없는 하급심 판례 자료 보강 및 ② 법률문헌의 저작권자가 저작권 공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 국민이 법률문헌을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을 통해 온라인 법고을만의 고유한 강점을 추진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355].

○ 다만, 오랜 기간 저작권 공개 동의를 통해 각종 학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356] 등 사이트에서도 여전히 많은 논문·문헌이 비공개인 점을 고려할 때, 얼마나 많은 저작권 공개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저작권 공개 동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저작권자가 일반 대중에 대한 저작권 공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자들 사이에만 문헌을 공유하게 되는데, 민간의 법률정보 검색 업체에서는 일반인과 유료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차등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지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법률정보 검색 사이트에서 일반인과 회원(저작권 회원) 사이에 개방되는 법률정보에 차등을 두는 사례는 찾기 어려우므로, 문헌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355) 추가로 법원도서관은 온라인 법고을이 종합법류정보가 제공하지 않는 특허법원 판례를 제공하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특허법원 판례는 변호사, 변리사, 기업 등 특정 집단이 주로 이용하는 판례정보이므로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용성이 낮음.

356) 한국학술지인용색인 홈페이지: https://www.kci.go.kr/kciportal/main.kci

(5)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1140-361) 사업은 사법부 구성원의 전문화 및 국제화, 외국과의 사법외교기능강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억 700만원(1.4%) 증액된 76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1140-361)	7,626	7,586	7,693	107	1.4

(나) 일반수용비 증액분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내역사업인 '장단기 해외연수' 사업은 법관의 외국의 대학,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교육훈련[357] 및 연구활동 참가를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억 700만원(2%) 증액된 53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음.

357) 연수기간은 6개월, 1년, 1년 6개월(기출국 해외연수법관 등에 대하여 연수성과에 따라 연수기간 6개월 연장)로 구분하여 시행됨.

<2025년도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사업 기능별·세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2025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8,142	7,934	7,626	-	308	7,586	7,693
장단기 해외연수	5,514	5,296	5,172	-	124	5,224	5,331
법원공무원 단기국외훈련	168	168	124	-	44	168	168
법관 단기국외훈련	209	209	154	-	55	209	208
연임법관 연수	1,406	1,406	1,406	-	-	1,200	1,200
국제회의 참가 등	438	438	394	-	44	438	438
개발도상국 사법역량 강화	200	209	168	-	41	155	155
외국사법부와의 정기교류	80	80	80	-	-	65	65
전문법률분야 국제 심포지엄 및 재외 한인법조인 초청	128	128	128	-	-	128	128
□ 비목별 분류(합계)	8,142	7,934	7,626	-	308	7,586	7,693
일반수용비(210-01)	1,984	1,767	1,612	-	155	1,634	1,744
임차료(210-07)	37	46	45	-	1	37	37
일반용역비(210-14)	30	30	30	-	-	30	30
국외업무여비(220-02)	943	943	804	-	139	943	940
국외교육여비(220-03)	5,139	5,139	5,126	-	14	4,933	4,933
관서업무추진비(240-02)	9	9	9	-	-	9	9

자료: 대법원,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장단기 해외연수’ 사업은 크게 국외교육여비(220-03)(37억 3,400만원)과 일반수용비(210-01)(15억 9,700만원) 등 두 비목으로 편성되었는데, 대법원에 따르면 국외교육여비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및 「법원 공무원 여비 규칙」에 따라 항공료, 체재비,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 의료보험료(의료보조비), 자료수집비 등을 지급하고 있고,[358] 일반수용비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제8조제4항에 의한 학자금 지급에 사용된다고 설명함.

<2025년도‘장단기 해외연수’사업 세부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내 역	금 액	비 목	산출근거
장기해외연수	3,734	220-03	93명 ·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및 법원공무원여비규칙에 따라 산정
	1,597	210-01	
합 계	5,331		

자료: 대법원 제출

○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별표 1]의 해외연수 비용 지급기준표에 따르면, 학자금(일반수용비)을 제외한 항공료[359], 체재비[360], 생활준비금[361], 귀국이전비[362], 의료보험료(의료보

358)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제8조 (비용의 지급) ① 국비 해외연수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체재비,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 가족항공료, 의료보험료(의료보조비) 및 자료수집비는 연수의 종류, 연수기간 및 예산의 범위에 따라 일부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59) [항공료]

조비)[363] 등의 국외교육여비는 단가 및 지급기준이 명확하여 소요되는 예상 예산액의 산출이 용이한 반면,

'학자금'은 '연수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용이 명확한 입학금, 등록금, 연구자료수집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로 정의하고 있는데, 내규상 별도의 지급기준 또는 단가 등이 정해진 바가 없음.

○ 국외교육여비는 단가 및 지급기준이 명확한 특성상 사업 수혜 대상 인원을 비교적 명확하게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학자금 또한 국외교육여비에 비례하여 적정 규모로 편성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그러나 2025년도 동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국외교육여비의 경우에는 전년과 동일한 금액인 37억 3,400만원이 편성된 반면, '학자금'에 해당하는 일반수용비만 전년도 대비 1억 700만원(7.2%)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증액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됨.

가. 본인 :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에 따른 왕복항공료

나. 가족항공료(배우자 및 미혼의 자녀)

<가족항공료 지급기준>

구분	지급액
본인과 동시 출입국시	본인과 동일 등급 항공료
본인과 별도 출입국시	2등 정액(Economy Class)등급 항공료

360) [참고1] 국가별체재비단가표 참조
361) 500미합중국달러
362) 아시아주 300미합중국달러, 기타 지역 600미합중국달러
363) [참고2] 의료보험료 국가별단가표 참조

<2021~2025년도 '장단기 해외연수' 사업 예산 편성 내역>

비목별 분류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국외훈련 예산 (단위: 백만원)	합계액	5,763	5,598 추경:5,268	5,514	5,224	5,331
	국외교육여비 (국제화여비)	3,920	3,404	3,734	3,734	3,734
	일반수용비 (학자금)	1,843	1,864	1,780	1,490	**1,597**

자료: 대법원 제출

○ 위 연도별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단가 및 지급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된 '국외교육여비(220-03)'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37억 3,400만원으로 동액 편성된 반면, '일반수용비(210-01)'는 각각 17억 8,000만원(2023년도), 14억 9000만원(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에는 15억 9,700만원으로 증감 추이가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대법원은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재정당국에 학위과정 비중을 높이기 위한(5명 증원) 국외업무여비(국제화여비) 2억 5,600만원, 일반수용비(학자금) 3억 9,200만원 등 총 6억 4,800만원의 증액 편성을 요구하였으나, 일반수용비(학자금) 1억 700만원만 반영되었다고 설명함.

국외교육여비의 단가 및 지급기준이 명확하고, 연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에 해당하는 여비가 전년도와 동액 편성되어 사실상 학위과정 5명 증원을 할 수 없음에도, 별도의 지급기준 또는 단가 등이 정해진 바가 없는 학자금만 증액 편성되는 경우, 학위과정 비중 확대

라는 본래의 증액 요구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뿐더러 명확한 근거 없이 증액 편성된 학자금만 임의적·자의적으로 해석되어 사용될 여지가 있음.

실제로 동 사업에 대한 2023년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동 사업 수혜 대상인 교육훈련자와 연구자 중 일부(총 14명)에게 어학연수를 명목으로 총 14명에게 4,300만원 가량이 '학자금'으로 지출되었는데, 어학연수비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규칙 등에 교육훈련자 등에게 교육여비 이외에 어학연수비까지 혜택을 부여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고, 연수 대상자들이 각각의 언어 숙련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선택적·추가적으로 지출하는 성격의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364] 일반적으로 영미권 국가는 우수한 영어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기 때문에 어학연수 비용지급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음에도 임의적으로 지급된 문제가 있었음.[365][366]

<2023년도 결산 중 어학연수 지출 관련 세부 내역>

연번	소 속	직위	연수국가/기관	어학연수 기관	과정	청구내역	원화환산액 (원)
1	대전지법	판사	미국 (골든게이트)	JC Education	방문	$5,400	₩7,054,560
2	서울행정	판사	독일	Fokus Sprachen	연구	€ 1,161	₩1,645,845

364) 해당 어학연수는 각 대학에서 연수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한 프로그램이 아님.
365) 각 인원별로 균등한 금액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1인당 적게는 15만원, 많게는 846만원에 이를 정도로 개인별 지원액 또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366)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어학연수비를 연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석하여 지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제417회 국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4. 8. 26.) 회의록 p.93 이하 참조

연번	소 속	직위	연수국가/기관	어학연수 기관	과정	청구내역	원화환산액 (원)
			(프라이부르크)	Seminare (2023.9.19.~2023.10.) Language Training for Global Communication(LTGC) (2023.11.~2024.1.31.)			
3	남양주지원	판사	미국 (UC데이비스)	인터네셔널 하우스 (I-HOUSE) 비영리단체	연구	$120	₩156,768
4	의정부지법	판사	오스트리아 (빈)	ALEKSANDRA COSIC STUDY POINT	연구	€ 1,800	₩2,551,698
5	인천지법	판사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Alliance francaise strasbourg(6개월 과정, 2023.10. ~ 2024.3.)	연구	€ 1,123.4	₩1,592,543
6	울산지법	판사	독일 (하이델베르크)	하이델베르크대학 WELCOME CENTRE Heidelberger Pädagogium	연구	€ 690	₩978,151
7	서울중앙	판사	독일 (베를린자유)	Sprachenfreunde	연구	€ 558	₩791,026
8	인천지법	판사	프랑스 (파리제2)	ACCORD ECOLEDE LANGUES·PARIS	연구	€ 3,740	₩5,301,861
9	대구지법	판사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UBC English Language Institute	연구	CAD 3,750	₩3,558,188
10	성남지원	판사	스페인 (마드리드국립)	Internacional de Lenguas de Madrid	연구	€ 5,970	₩8,463,132
11	서울남부	판사	독일 (뮌헨)	Carl Duisberg Centren	연구	€ 2,180	₩3,090,390
12	영덕지원	판사	스페인 (마드리드국립)	UNIVERSIDSAD COMPLUTENSE DE MADRID ih International House Madrid	연구	€ 4,200	₩5,953,962
13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스페인 (바르셀로나자치)	Dinamo Language	연구	€ 850	₩1,204,969

연번	소 속	직위	연수국가/기관	어학연수 기관	과정	청구내역	원화환산액 (원)
				School			
14	광주고등	판사	일본 (동경대학)	유네스코 일본어 교실	연구	￥31,200	₩270,504
합계(원화추산액)							₩42,613,597

* 2023.11.16. 기준 환율(송금보낼 때): 1＄=1,306.40, 1￥=8.67, 1€=1,417.61, 1CAD=948.85

* 개인이 어학연수기관에 결재 후 영수증 첨부하여 어학연수비 신청. 개인통장으로 입금

자료: 대법원 제출

○ 대법원에 따르면, 학자금은 대부분 외화(현지화: 달러, 유로화, 파운드, 엔화 등)로 지급되기 때문에 환율 변동 및 학자금 인상율 등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영미권 연수기관(대학)의 경우 대학마다 학비가 상이하고, 입학 사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학자금의 경우에는 과거 예산 편성 내역 및 집행 결과(지역별·학교별 학자금 자료)를 활용하고, 그 밖에 예산 소요의 환경 변화(환율 변동 및 학자금 인상 등)나 타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025년도 예산안을 산출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위 대법원의 설명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정당국에 학위과정 5명 증원을 위한 증액 요구를 할 당시의 산출 근거로 보이고, 다른 기관들의 경우에도 학자금의 필요액보다 제한된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국외교육여비가 증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예산안에 반영된 1억 700만원의 학자금 증액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액 사유나 규모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

○ 따라서, ‘장단기 해외연수’ 내역사업에 증액 편성된 1억 700만원에 대해서는 국외교육여비와 무관하게 학자금만의 증액이 이루어져야 할 사유와 그 규모에 있어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별도의 지급기준 또는 단가 등이 정해진 바도 없는 학자금의 특성상 예산의 불용을 피하기 위한 등의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지출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 증액분을 삭감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 1] 국가별체재비 단가표

구분	국가(화폐단위)	월지급액	
		갑종	을종
현지화 지급국	그리스(유로)	2,328	1,978
	네덜란드(유로)	2,421	2,057
	노르웨이(크로네)	23,330	19,830
	뉴질랜드(달러)	4,552	3,869
	대만(엔티달러)	89,582	76,144
	덴마크(크로네)	19,366	16,461
	독일(유로)	2,421	2,057
	루마니아(유로)	2,053	1,745
	벨기에(유로)	2,421	2,057
	불가리아(유로)	2,053	1,745
	스웨덴(크로나)	23,913	20,326
	스위스(프랑)	4,333	3,683
	스페인(유로)	2,328	1,978
	싱가폴(달러)	3,800	3,230
	아일랜드(유로)	2,421	2,057
현지화 지급국	영국(파운드)	1,712	1,455
	오스트레일리아(달러)	3,347	2,844
	오스트리아(유로)	2,421	2,057
	이탈리아(유로)	2,421	2,057
	일본(엔)	349,756	297,292
	중국[홍콩제외](위안)	17,099	14,534
	체코(유로)	2,053	1,745
	캐나다(달러)	3,140	2,669
	터키(유로)	2,375	2,018
	포르투갈(유로)	2,328	1,978
	폴란드(유로)	2,053	1,745

구분	국가(화폐단위)	월지급액	
		갑종	을종
	프랑스(유로)	2,421	2,057
	핀란드(유로)	2,513	2,136
	헝가리(유로)	2,053	1,745
미합중국 달러화 지급국	남아프리카공화국	2,149	1,826
	러시아	2,881	2,448
	말레이시아	2,030	1,725
	멕시코	2,244	1,907
	미국	2,479	2,107
	베트남	2,030	1,725
	브라질	2,479	2,107
	사우디아라비아	2,149	1,826
	아랍에미리트연합국	2,244	1,907
	아르헨티나	2,149	1,826
	우즈베키스탄	2,149	1,826
	이스라엘	2,479	2,107
	이집트	2,149	1,826
	인도	2,149	1,826
	인도네시아	2,149	1,826
	칠레	2,149	1,826
	코스타리카	2,030	1,725
	쿠웨이트	2,244	1,907
미합중국 달러화 지급국	태국	2,030	1,725
	필리핀	2,030	1,725
	중국[홍콩]	2,479	2,107

[참고 2] 의료보험료 국가별단가표

가. 의료보험료 : 의료보험제도 시행국가에서 연수를 받는 경우

의료보험료 국가별단가표

국가명	화폐단위	월지급액	국가명	화폐단위	월지급액
뉴질랜드	NZ$	77	오스트리아	EUR	103
덴마크	DKK	1,058	일본	￥	10,000
독일	EUR	184	칠레	US$	170
미국	US$	220	캐나다	C$	61
벨기에	EUR	126	콜롬비아	US$	40
스웨덴	SEK	294	프랑스	EUR	112
스위스	CHF	231	핀란드	EUR	58
스페인	EUR	43	호주	AUD	143
영국	£	45			

* 위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에는 위 표에 열거된 국가의 의료보험제도에 가장 유사한 국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의료보조비 : 의료보험제도 미시행국가에서 연수를 받는 경우

의료보조비 국가별단가표

국가명	화폐단위	월지급액	국가명	화폐단위	월지급액
대만	TWD	2,142	러시아	US$	37
싱가폴	SGD	122	이탈리아	EUR	75
중국(홍콩)	US$	57	터키	EUR	45
중국(홍콩제외)	CNY	400	헝가리	EUR	30
말레이시아	US$	66	기타 구공산권국가	EUR	46
베트남	US$	57	기타 유럽국가	EUR	74
태국	US$	66	멕시코	US$	126
필리핀	US$	66	코스타리카	US$	126
기타 동서남아국가	US$	66	기타 중남미국가	US$	126
네덜란드	EUR	67	기타국가	지역별 지급액에 준하여 지급	
노르웨이	NOK	585			

(6)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1142-401) 사업은 사법행정의 능률향상 및 직원 역량 강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9억 4,800만원(18.1%) 증액된

126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1142-401)	11,617	10,736	12,684	1,948	18.1

○ 내역사업인 '사무환경 개선' 사업은 속기직렬에 대한 스마트속기기계 및 업무용 헤드셋 지원과 각급 법원 디지털복합기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9억 3,200만원(995.9%) 증액된 21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 사업 기능별·세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2025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203	11,721	11,617	84	20	10,736	12,684
사법행정의 능률향상 및 역량강화	2,144	1995	1,892	84	19	1,778	1,778
건강지원운영	958	896	895	-	1	958	908

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2025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보육시설 지원	7,600	8,366	8,366	-	-	7,600	7,700
사무환경개선	**215**	**215**	**215**	**-**	**-**	**194**	**2,126**
야간업무종사자 특수건강검진	86	39	39	-	-	30	30
형사재판부 트라우마 치유	200	210	210	-	-	176	142
□ **비목별 분류(합계)**	**11,203**	**11,721**	**11,617**	**84**	**20**	**10,736**	**12,684**
일반수용비(210-01)	2,442	2,293	2,192	84	17	2,362	2,278
임차료(210-07)	98	2	2	-	-	98	1,660
복리후생비(210-12)	371	370	369	-	2	5	5
기타운영비(210-16)	-	1	1	-	-	-	-
관서업무추진비(240-02)	123	123	123	-	-	123	123
민간위탁사업비(320-02)	7,400	7,400	7,400	-	-	7,400	7,500
공사비(420-03)	250	795	795	-	-	250	250
감리비(420-04)	-	13	13	-	-	-	-
시설부대비(420-05)	-	4	4	-	-	-	-
자산취득비(430-01)	519	721	720	-	1	498	868

자료: 대법원,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증액된 21억 2,600만원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속기직렬에 대한 스마트속기기계 및 업무용 헤드셋 지원을 위해 3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각급 법원에 내구연수가 도과되었거나 수리한계가 초과한 디지털 복합기 교체를 위해 15억 6,200만원이 순증되었음.

<2025년도‘사무환경 개선’사업 증액 세부 내역>

내 역	2024 예산액	2025 예산안	증감	산출근거
스마트 속기기계	100	441	341	· 140대(연간 교체 계획)×315만원=4억 4,100만원
업무용 헤드셋	94	123	29	· 315명×39만원=1억 2,300만원
각급 법원 디지털 복합기 등 지원	-	1,562	1,562	· 법원 총 소요 1,760대, 74억 8,900만원 중 30%인 528대 렌탈 도입
합 계	194	2,126	1,932	

자료: 대법원,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나) 스마트 속기기계 예산의 적정성

○ 대법원은 현재 속기직렬 인원이 총 1,382명이나 이 중 예비용을 포함한 보유분은 1,129개로 부족분이 253개에 달한다고 하면서, 한국스마트속기협회 공인기종인 SMART CAS PLUS(대당 315만원) 스마트 속기기계를 140대 교체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그런데 대법원에서 제출한 각급 법원의 스마트 속기기계 보유 현황 및 요청 현황을 살펴보면, 총 속기직렬 인원은 1,294명으로 대법원에서 설명한 1,382명과 인원수에도 차이가 있고, 예비용을 포함한 보유 개수 또한 총 인원수보다 많아 신규로 기기를 도입할 필요가 없음에도 추가로 요청한 법원도 다수 있는 등 전반적으로 현황 파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음.

<각급 법원 스마트 속기기계 보유 현황 및 요청 현황>

법원	속기직렬 인원	운용(A)	예비용(B)	총 보유 (A+B)	요청
사법정책연구원	2	2	2	4	-
서울고등법원	54	49	14	63	**49**
대전고등법원	7	5	4	9	**4**
대구고등법원	6	5	2	7	-
부산고등법원	6	6	5	11	-
광주고등법원*	10	5	-	5	**1**
수원고등법원	16	11	4	15	**3**
특허법원	9	7	2	9	-
서울중앙지방법원*	168	126	-	126	**19**
서울가정법원	11	8	5	13	**4**
서울행정법원	19	19	-	19	**2**
서울회생법원	1	1	1	2	-
서울동부지법	34	32	2	34	**2**
서울남부지법	39	40	1	41	**3**
서울북부지법	30	29	3	32	**4**
서울서부지법	33	26	4	30	**9**
의정부지법*	35	20	6	26	-
고양지원*	17	12	1	13	**2**
남양주지원*	12	10	1	11	-
인천지방법원	56	42	13	55	**5**
부천지원	18	14	6	20	**3**
인천가정법원	2	1	2	3	**1**
수원지방법원	73	56	6	62	**15**
성남지원*	28	9	-	9	**8**
여주지원*	7	4	1	5	**1**
평택지원	8	8	1	9	**3**
안산지원*	26	14	5	19	**1**
안양지원	14	9	13	22	**17**
수원가정법원*	5	2	-	2	**1**
수원회생법원*	5	1	-	1	**3**
춘천지방법원	12	12	-	12	**7**
강릉지원*	8	4	1	5	**2**
원주지원	4	2	-	2	**3**
속초지원*	2	-	2	2	-

법원	속기직렬 인원	운용(A)	예비용(B)	총 보유 (A+B)	요청
영월지원	5	5	4	9	-
대전지방법원	36	31	5	36	**13**
홍성지원*	8	3	2	5	-
공주지원	3	2	-	2	**2**
논산지원	4	2	2	4	**2**
서산지원	5	4	1	5	**1**
천안지원*	14	7		7	**4**
대전가정법원	2	1	1	2	**1**
청주지방법원	19	19	-	19	**6**
충주지원	7	4	4	8	**3**
제천지원	2	2	-	2	**1**
영동지원	1	1	-	1	-
대구지방법원*	53	36	-	36	**4**
서부지원	16	10	9	19	**5**
안동지원	2	2	1	3	-
경주지원*	5	3	-	3	**1**
포항지원	5	4	1	5	-
김천지원*	5	4	-	4	-
상주지원	3	2	1	3	**3**
의성지원	4	2	1	3	**1**
영덕지원*	3	2	-	2	-
대구가정법원*	6	3	-	3	**1**
부산지방법원	40	37	-	37	**3**
동부지원	14	10	4	14	**2**
서부지원*	16	11	-	11	**2**
부산가정법원*	4	2	-	2	**1**
부산회생법원*	2	1	-	1	-
울산지방법원*	33	18	3	21	**5**
울산가정법원*	6	2	-	2	-
창원지방법원	30	20	-	20	**11**
마산지원	8	6	1	7	**2**
진주지원	2	2	-	2	-
통영지원	6	4	3	7	**4**
밀양지원	5	5	1	6	-
거창지원	3	5	-	5	-
광주지방법원*	50	29	10	39	**6**

법원	속기직렬 인원	운용(A)	예비용(B)	총 보유 (A+B)	요청
목포지원	5	5	4	9	**1**
장흥지원*	5	-	2	2	-
순천지원*	17	10	-	10	**5**
해남지원	3	3	2	5	**2**
광주가정법원*	4	2	-	2	**1**
전주지방법원*	26	20	-	20	**5**
군산지원	9	4	2	6	**4**
정읍지원*	4	2	-	2	**1**
남원지원	2	2	1	3	-
제주지방법원	15	12	5	17	**2**
합계	**1,294**	**952**	**177**	1129	**277**

주1) 음영표시된 법원은 총 인원 이상의 기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신규로 요청한 법원임.

주2) *표시된 법원은 총 인원 이하의 기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요청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요청한 법원임.

자료: 대법원 제출

또한, ① 서울고등법원 등 26개 법원은 총 속기직렬 인원을 상회하는 수의 기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추가로 요청을 하였고, ② 의정부지법 등 30개 법원은 총 인원보다 보유 기기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기기를 요청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각급 법원별 필요한 기기수에 대한 수요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신규 구입이 필요한 기기수가 정확히 얼마만큼 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스마트속기기계는 대당 315만원[367]에 달하는 고가의 기기로서, 이와

367) 대법원은 한국스마트속기협회의 견적가(모델명: smart cas plus)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대당 정가에 해당하는 금액일 뿐 실제 구입대수를 고려한 견적가는 아님.
출처: https://www.smartsteno.org/ (사단법인 한국카스속기협회)

같은 고가기기의 도입에 있어서는 불필요하게 예산의 과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안의 편성에 앞서 필요한 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임.

더불어 ① 속기직렬인원을 하회하는 수의 기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추가로 기기를 요청하지 않은 의정부지법 등 9개 법원, ② 속기직렬 인원보다 적은 수의 속기기계를 보유하면서도 인원수에 못미치는 필요량만 요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21개 법원, ③ 속기직렬 인원에 비해 총 보유 속기계의 수가 많음에도 일부만 운용하는 서울고등법원 등 62개 법원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1인당 한 대의 기기를 보유하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대법원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정확한 수요조사와 업무량 등을 기초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신규 구입이 필요한 기기 수를 파악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다) 업무용 헤드셋 예산의 적정성

○ 업무용헤드셋 구입 예산은 2025년도 예산안에 전년도 대비 2,900만원(30.9%)이 증액된 1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음.

대법원은 업무용 헤드셋 구입은 속기직렬에 대한 청력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재판업무의 특성상 타 부처 속기(국회, 지방의회 등) 대비 업무 강도가 높고, 장시간 녹음청취로 청각기능 저하 및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녹취서·집중심리재판 제도 등의 도입으로 재판 속기 업무량이 증대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함.

○ 대법원은 현재 속기직렬인원이 총 1,382명으로, 현재 업무용헤드셋 총 보유수는 1,214개이나 이 중 내용연수가 도과된 헤드셋이 총 758개로서 연차별로 교체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설명함.

<각급 법원 업무용 헤드셋 보유 현황 및 요청 현황>

법원	속기직렬 인원	보유	내용연수 도래	내용연수 미도래	요청
사법정책연구원	2	-	-	-	**2**
서울고등법원	54	44	38	6	**35**
대전고등법원	7	11	-	11	**-**
대구고등법원	6	5	5	-	**5**
부산고등법원	6	6	6	-	**5**
광주고등법원	10	3	3	-	**5**
수원고등법원	16	13	-	13	**6**
특허법원	9	1	-	1	**7**
서울중앙지방법원	168	153	69	84	**69**
서울가정법원	11	10	10	-	**10**
서울행정법원	19	25	10	15	**4**
서울회생법원	1	1	1	-	**1**
서울동부지법	34	34	-	34	**-**

법원	속기직렬 인원	보유	내용연수 도래	내용연수 미도래	요청
서울남부지법	39	35	3	32	**7**
서울북부지법	30	32	19	13	**7**
서울서부지법	33	25	15	10	**15**
의정부지법	35	25	9	16	**5**
고양지원	17	11	-	11	**5**
남양주지원	12	2	-	2	**10**
인천지방법원	56	40	22	18	**5**
부천지원	18	22	9	13	**9**
인천가정법원	2	2	-	2	**-**
수원지방법원	73	68	30	38	**30**
성남지원	28	12	-	12	**5**
여주지원	7	5	5		**5**
평택지원	8	8	6	2	**7**
안산지원	26	14	6	8	**7**
안양지원	14	18	18		**-**
수원가정법원	5	1	-	1	**2**
수원회생법원	5	-	-	-	**4**
춘천지방법원	12	12	-	12	**-**
강릉지원	8	12	6	6	**-**
원주지원	4	4	-	4	**2**
속초지원	2	2	1	1	**1**
영월지원	5	5	1	4	**1**
대전지방법원	36	72	33	39	**10**
홍성지원	8	6	3	3	**3**
공주지원	3	4	2	2	**4**
논산지원	4	2		2	**2**
서산지원	5	5		5	**5**
천안지원	14	9		9	**-**
대전가정법원	2	2	1	1	**-**
청주지방법원	19	19	1	18	**-**
충주지원	7	7	3	4	**3**
제천지원	2	2	-	2	**-**
영동지원	1	2	1	1	**-**
대구지방법원	53	31	-	31	**-**
서부지원	16	11	-	11	**-**
안동지원	2	3	-	3	**-**
경주지원	5	6	3	3	**1**
포항지원	5	7	4	3	**1**
김천지원	5	4	2	2	**3**
상주지원	3	4	2	2	**1**
의성지원	4	4	-	4	**-**
영덕지원	3	2	-	2	**-**
대구가정법원	6	5	2	3	**-**
부산지방법원	40	77	37	40	**-**

법원	속기직렬 인원	보유	내용연수 도래	내용연수 미도래	요청
동부지원	14	25	4	21	-
서부지원	16	6	-	6	**9**
부산가정법원	4	2	-	2	**1**
부산회생법원	2	-			**1**
울산지방법원	33	25	4	21	**2**
울산가정법원	6	1	-	1	**1**
창원지방법원	30	35	1	34	**5**
마산지원	8	7	-	7	-
진주지원	2	2		2	-
통영지원	6	10	4	6	**3**
밀양지원	5	10	5	5	-
거창지원	3	3	-	3	-
광주지방법원	50	61	23	38	**15**
목포지원	5	5	-	5	-
장흥지원	5	2	-	2	-
순천지원	17	11	11	-	**5**
해남지원	3	3	-	3	-
광주가정법원	4	2	1	1	**1**
전주지방법원	26	30	10	20	-
군산지원	9	5	2	3	**2**
정읍지원	4	5	3	2	-
남원지원	2	4	2	2	-
제주지방법원	15	15	-	15	-
합계	**1,294**	**1,214**	**456**	**758**	**354**

자료: 대법원 제출

○ 위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각급 법원 업무용 헤드셋 보유 현황 및 요청 현황을 파악하면서 내용연수가 도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구분하였으나, 그러한 구분의 기준이 될 업무용 헤드셋의 모델명은 무엇인지, 내용연수는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음.

업무용 헤드셋의 경우에는 속기기계와 달리 속기사들의 필수적 업무 기기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각 모델별로 가격 및 품질에 따라

내용연수도 다를 수밖에 없는 특성을 고려할 때, 예산안 편성 및 그 규모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기의 구체적 모델명과 해당 모델을 선정하게 된 객관적 근거 등이 충분히 설득력있게 제시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대법원은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1억 2,300만원의 세부 산출 내역에 대해 대당 단가를 39만원으로 책정하여 총 315대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헤드셋으로는 고가에 해당하는 39만원의 모델이 왜 필요한지와 해당 모델을 선정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제품 이미지만을 제공하였음.

업무용 헤드셋 제품 이미지





자료: 대법원 제출

○ 대법원에서 제공한 위 제품 이미지는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면 일본 Jabra 사의 Evolve 40이라는 모델로 확인되는데, 해당 모델[368]의 경우 가격이 15만 9,000원으로서 대법원에서 제시하는 39

368) https://brand.naver.com/jabra/products/2141180075 참조

만원 단가와는 큰 차이가 있고, 업무상 용도를 고려해보더라도 속기직렬이 사용하는 기기로서 마이크 기능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음.

○ 또한, 대전지방법원의 경우 총 인원 36명을 훨씬 상회하는 72개를 보유하고, 그 중 39개가 내용연수가 미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개를 추가로 신청한 반면,

인천지방법원(총 인원 56명, 보유분 40개 중 22대가 내용연수가 도과하였으나 신청대수는 5개에 불과), 안양지원(총 인원 14명, 보유분 18개 전체가 내용연수 도과하였으나 미신청) 등과 같이 신청분이 모두 반영되더라도 보유분이 총 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의 사례도 있어 전반적으로 교체 대상에 대한 파악이나 교체 기준의 수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대법원은 업무용 헤드셋의 신규 구매 필요성, 단가 산정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 모델명 및 해당 모델 선정 경위 등을 예산안 심사에 앞서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라) 디지털복합기 예산의 적정성

○ 각급 법원에 디지털복합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2025년도 예산안에 15억 6,200만원이 순증되었음.

동 사업은 각급 법원에 내용연수가 도과하였거나 수리한계가 초과한 디지털 복합기를 교체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법원은 향후 3개년간 교체가 필요한 총 1,760대의 기기를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그 중 30%인 528대의 디지털 복합기에 대해 렌탈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함.

<대법원 보유 디지털 복합기 현황>

법 원	현황		요청 수량		
	총 보유대수	내용연수 도과 (수리한계초과 포함)	흑백	컬러	합계
합계	2,738	1,760	1,465	295	1,760

자료: 대법원 제출

<3년 연차별 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입방식	흑백	컬러	합계
25년	렌탈	1,297,296천원 [468대×월 231천원×12월]	266,400천원 [(60대)×월 370천원×12월]	1,562,696
26년	자산취득	2,144,550천원 [493대×4,350천원]	817,950천원 [123대×6,650천원]	2,962,500
27년	자산취득	2,144,550천원 [493대×4,350천원]	817,950천원 [123대×6,650천원]	2,962,500

자료: 대법원,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위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5년도에 흑백 468대, 컬러 60대 등 총 528대를 렌탈로 운용할 계획인 반면, 2026년도와 2027년도에는 각각 흑백 493대, 컬러 123대 등 총 616대를 자산취득할 예정인 것으로 보임.

대법원은 2025년에는 렌탈로, 2026·2027년에는 자산취득으로 각각 기기 교체 계획이 다른 이유에 대해, 2025년도에는 기본 출력매수 조절을 통해 렌탈료 단가를 낮추는 등으로 내용연수가 도과되었으나 수리한계 비용이 초과한 기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2026년도부터는 특이소요에 한하여 자산취득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위와 같은 설명만으로는 어떠한 이유로 2025년도 예산안에 한하여만 렌탈로 운용할 계획을 수립하였는지에 대해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대법원에 따르면, 디지털 복합기는 내용연수가 6년인 기기로서, 렌탈로 기기를 운용할 경우 6년을 기준으로 흑백은 총 150만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컬러는 103만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2025년도에는 열람·복사 사용량이 많고 시급한 종합민원실, 민사집행과, 총무과 등에 우선 보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1대당 자산취득 및 렌탈 소요액 비교>

- 기준 : 렌탈 6년, 월 1만매, 캐논 NPG83

구분	소요액			절감액	비고
	자산취득		렌탈		
흑백	취득	395만원	연240만원	150만원 (221만원)	렌탈은 유지보수 비용 일체 포함 금액임
	유지보수	연199만원			
	6년 합계 ⇨ 1,590만원		⇨ 1,440만원		
컬러	취득	600만원	연384만원	103만원 (211만원)	
	유지보수	연301만원			
	6년 합계 ⇨ 2,407만원		⇨ 2,304만원		

주1) 렌탈 월1만매와 무제한 요금제는 비용 동일함
주2) 괄호안 금액: 취득비용 대체로 연 금리 3%, 6년 운용 시 절감 기대비용 포함
주3) 토너 1개당 통상 4만 2천매 사용, 평균 수리비 포함
자료: 대법원 제출

○ 위 대법원의 설명대로라면, 내용연수(6년)를 기준으로 할 때 렌탈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인데, 3개년 교체계획 중 2026년도와 2027년도에는 굳이 자산취득으로 계획하게 된 이유도 명확하지 않고, 기기 특성상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하여 반드시 그 이후 바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도 아니기에 6년을 기준으로 한 발생비용의 비교는 합리적이지 않을 여지도 있음.

일례로, 서울고등법원의 디지털 복합기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총 60대의 기기 중 6년이상 경과한 기기는 25대에 해당하나 수리한계에 도달한 기기는 5대에 불과함.

<서울고등법원 디지털 복합기 보유 현황>

복합기 보유 현황						6년 경과 (2018년기준)		수리한계 초과(c)	'24년도 희망대수 (a+b+c)
구입년도	출력량								
	20매	30매	40매	50매 이상	계	일반 복합기(a)	컬러 복합기(b)		
2017년 이전		2	19		21	21		2	23
2018년			5		5	4		1	5
2019년			4	1	5	0	0	2	2
2020년		1	7		8	0	0		0
2021년		1	12		13	0	0		0
2022년			4		4	0			0
2023년			4		4	0			0
소계	0	4	55	1	60	25	0	5	30

자료: 대법원 제출

○ 아울러 대법원은 기기 교체를 위해 2025년도 예산안 15억 6,200만원을 순증 편성하면서도, 교체로 인해 2025년도부터 발생하지 않게 될 기존 528대의 연간 유지보수 비용은 별도로 감액 고려하지 않았는데, 위 대법원의 자료에 따르면 자산취득한 기기의 연간 유지보수비용은 흑백 연 199만원 및 컬러 연 301만원으로[369], 흑백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370] 총 10억 5,000여만원(528대×199만원)에 달함.[371]

○ 따라서 대법원은 디지털 복합기 교체를 위해 순증된 15억 6,200만원에

369) 자산취득한 기기를 기준으로 한 유지보수비용을 참조하였음.
370) 흑백만을 기준으로 한 최소치로, 컬러가 포함되면 대당 연 102만원이 증가함.
371) 렌탈 기기를 기준으로 할 경우 연간 비용은 흑백 연 240만원, 컬러 연 384만원으로, 흑백을 기준으로 하면 528대의 연간 렌탈 비용은 **12억 6,720만원**에 달함.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연간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7) 재판일반경비지원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재판일반경비지원(1143-404) 사업은 재판운영에 소요되는 간접경비의 지원과 법원 구성원이 일반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부적 경비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45억 4,800만원(10.9%) 증액된 461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재판일반경비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재판일반경비지원 (1143-404)	41,277	41,610	46,158	4,548	10.9

(나) 법정통역센터 운영비 증액분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내역사업인 '법정통역센터 운영' 사업은 상근 법정 통·번역 지원제도를 위한 법정통역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500만원(26.9%) 증액된 3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재판일반경비지원 사업 기능별·세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2025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0,376	41,554	41,277	86	191	41,610	46,158
통번역인 인증평가 및 교육 여비 등	138	242	153	73	16	138	372
감정료 · 통번역료 및 의료비	2,542	2542	2528	13	1	2,822	3,142
재판사무감사	91	91	91	-	-	91	91
재판업무지원비	9,989	9,989	9,978	-	11	9,989	11,609
재판활동지원비	14,796	14,796	14,784	-	11	15,128	14,772
민사집행 신원보증 보험료	168	173	173	-	-	168	168
민사 제1심 집중심리 및 형사공판중심주의 등 실무연구회 지원	1,224	1224	1224	-	-	1,224	-
야간업무귀가지원	300	300	300	-	-	300	300
핵심경력법관 역량강화	150	150	145	-	5	150	150
재판운영경비 지원	2,938	4,107	4082	-	26	3,389	3,389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동영상	40	40	38	-	2	40	40
무죄판결 신문공고료 등	400	343	330	-	13	400	50
일반재판업무지원	7,387	7343	7303	-	40	7,387	8,530
법관 등 상대 부당소송 소송대리인 선임지원 등	105	105	95	-	10	105	61
대법원장 퇴임식 및 취임식 행사	108	108	51	-	56	-	-
법정통역센터운영	-	-	-	-	-	279	354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	-	-	-	-	-	-	269

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2025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영상재판 활성화	-	-	-	-	-	-	170
	법원구성원 전문역량 강화	-	-	-	-	-	-	2,691
□	비목별 분류(합계)	40,376	41,554	41,277	86	191	41,610	46,158
	일반수용비(210-01)	9,135	9,108	9,069	13	25	9,501	10,760
	공공요금및제세(210-02)	3,106	4,278	4,252	-	26	3,557	3,557
	특근매식비(210-05)	891	839	802	-	36	877	877
	임차료(210-07)	-	-	-	-	-	-	-
	복리후생비(210-12)	1,269	1,268	1,266	-	2	1,269	2,736
	일반용역비(210-14)	115	199	110	73	16	394	947
	기타운영비(210-16)	267	271	266	-	5	267	267
	국내여비(220-01)	122	122	95	-	27	91	91
	사업추진비(240-01)	9,989	9,989	9,978	-	11	9,989	11,609
	관서업무추진비(240-02)	40	40	10	-	30	-	-
	특정업무경비(250-03)	14,796	14,796	14,784	-	11	15,128	14,772
	일반연구비(260-01)	-	-	-	-	-	-	5
	기타보전금(310-04)	-	-	-	-	-	7	7
	구호및교정비(320-06)	646	646	645	-	1	530	530

자료: 대법원,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전년도 대비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대법원은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영어, 수어 외에 법정통역인 지정건수가 많은 아랍어 등 법정통역센터의 통역 가능 언어를 추가하기 위하여 법정

통역센터 상근 통역인 인원을 현재 5명에서 2025년도에 6명으로 1명 증원하기 위한 제반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그런데 동 사업 예산안 세부 편성 내역을 2024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1인당 연봉은 4,600만원으로 같으나 전년도에 편성되지 않은 일반관리비 1,700만원이 추가로 순증되었고, 그 밖에 위탁고용 수수료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600만원(26.1%), 700만원(28%) 증액 편성되었음.

<2024년 대비 2025년 예산안 비교>

2024 예산	2025 예산안
ㅇ 279백만원	ㅇ 354백만원(+75)
- 위탁사업비 : 279백만원	- 위탁사업비 : 354백만원(+75)
· 연봉 : 230백만원(5명 × 46백만원)	· 연봉 : 276백만원 (6명 × 46백만원) (+46)
	· **일반관리비 : 17백만원(+17)**
· 위탁고용 수수료 : 23백만원	· 위탁고용 수수료 : 29백만원(+6)
· 부가가치세 : 25백만원	· 부가가치세 : 32백만원 (+7)

자료: 대법원제출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채용 등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은 일반용역비(210-14)목에서 집행이 이루어지며, 용역비의 산정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372]」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373]

372)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3호, 2023. 6. 30. 시행)
373)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획재정부, 2024. 5., 230~231면.

위 예규에 따르면, 용역원가계산에 대해서는 제4절(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및 제5절(기타용역의 원가계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374] 원가계산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않도록 하며,[375]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함.[376]

---

374)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조(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절 및 제5절에 의한다.

375) 제24조(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23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23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76) 제28조(일반관리비 등) ① 일반관리비는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이윤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공사 : 100분의 6 / 2.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3.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 4.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9

5.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6.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2 /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6

위 규정을 동 사업에 적용하여 보면, 법정통역센터 운영을 위한 상근 통번역인의 고용을 위한 용역의 경우에는 학술연구용역의 원가계산 규정을 준용하게 되면서 일반관리비 계상 대상인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대법원은 2024년도에는 일반관리비가 편성되지 않았으나 2025년도부터 일반관리비가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는 단순히 필요에 의해 편성되었다고 답변할 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 2025년도 예산안에 일반관리비가 신규 편성됨으로 인해 전체 용역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또한 170여만원 추가로 편성되는 등 전체 제비용은 인건비 1명분(4,600만원)의 65.2%에 해당하는

---

9.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 100분의 7 / 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1 / 12. 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 100분의 10

13.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 /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의 8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00분의 5 / 16. 장비 유지・보수 용역: 100분의 10

17. 기타 용역: 100분의 6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1. 공사 : 100분의 15

2. 제조・구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포함한다) :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4. 용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제외한다) : 100분의 10

3,000만원(일반관리비 1,700만원, 위탁고용 수수료 600만원, 부가가치세 700만원 증액)이 증액 편성되었음.

○ 대법원은 2024년도까지 동 사업에 대한 일반관리비를 편성하지 않다가 2025년도 예산안에 일반관리비를 신규 편성하게 된 사유 및 객관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일반관리비(1,700만원) 및 그에 따라 함께 증액된 위탁고용 수수료(약 10%, 170만원) 및 부가가치세(10%, 170만원) 등 총 2,040만원에 대한 감액 조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8) 전문재판운영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전문재판운영(1144-407) 사업은 사실심의 종국적 분쟁해결 기능 강화를 통한 심급구조 정상화 및 사실심 재판에 대한 신뢰 강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0억 1,300만원(30.6%) 감액된 22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전문재판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전문재판운영 (1144-407)	3,751	3,309	2,296	△1,013	△30.6

(나) WIPO 마스터 클래스 개최 사업 예산에 대한 면밀한 집행계획 마련

○ 내역사업인 ‘특허재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IP 허브코트 구축’ 사업은 특허법원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WIPO 마스터 클래스 개최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저널 발간, 특허소송 법정변론 경연대회 등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100만원 증액된 5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음.

동 내역사업의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WIPO 마스터 클래스 개최를 위한 예산으로 1억 2,600만원이 순증되었고, 지식재산권 관련 저널 발간은 전년도대비 7,400만원(53.2%) 감액된 6,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전문재판운영 사업 기능별·세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2025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884	3,854	3,751	22	80	3,309	2,296
특허재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IP허브코트구축	604	578	529	22	27	525	546
선거재판부 역량강화	117	115	115	-	-	-	-
전문법률분야 실무연구회	1,205	1205	1194	-	11	1,034	-
재판전문성 강화	20	20	20	-	-	20	20

사업명	2023					2024 예산액	2025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회생 및 파산재판 기본운영비	1,245	1,275	1,234	-	41	1,201	1,201
스마트워크센터 지원	201	168	167	-	1	201	201
전문재판역량강화	492	492	492	-	-	328	328
□ **비목별 분류(합계)**	**3,884**	**3,854**	**3,751**	**22**	**80**	**3,309**	**2,296**
일반수용비(210-01)	1,870	1,804	1,770	-	35	1,588	1,572
특근매식비(210-05)	305	303	297	-	6	200	200
임차료(210-07)	44	43	43	-	-	39	39
복리후생비(210-12)	1,217	1,214	1,199	-	14	1,034	-
일반용역비(210-14)	27	27	27	-	-	27	138
국외업무여비(220-02)	113	113	99	-	14	113	113
사업추진비(240-01)	8	8	8	-	-	8	8
관서업무추진(240-02)	4	4	4	-	-	4	4
정책연구비(260-02)	74	116	84	22	10	74	-
공사비(420-03)	58	58	58	-	-	58	58
자산취득비(430-01)	164	164	163	-	1	164	164

자료: 대법원,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 WIPO(국제지식재산권기구)는 지식재산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 세계 각국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을 다루는 판사들의 교류 도모 및 전문성의 제고를 위한 마스터 클래스를 2018년부터 개최하여 세계 각국의 법관들에게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국제적인 표준과 절차, 접근 방식에 대한 교육 제공 및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 WIPO 마스터 클래스 개최 배경과 관련하여 대법원에 따르면, 2023. 11.에 WIPO 측에서 특허법원에 추후 마스터 클래스의 개최 가능성 여부를 문의해왔고, 특허법원에서는 예측 가능한 미래(가능하다면 2025년)에 개최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바,

당시에는 이집트에서 2025년도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나, 2024. 1.경 WIPO 측에서 대한민국 특허법원에 2025년 마스터클래스 개최 가능성을 타진해왔고, 2024. 7.경 WIPO로부터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이에 2025. 5.경으로 잠정적인 일정을 정하였고, WIPO 측에서 미국 순회항소법원의 법관, 유럽통합특허법원의 법관 등을 대상으로 연사 섭외를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함.

○ 대법원에서 받은 WIPO 측의 세부 제안서에 따르면, WIPO 측에서 초청한 법관 및 WIPO 직원 등 총 26명에 대한 여비 및 숙박비는 WIPO측에서 부담하고, 우리측에 마스터 클래스 개최를 위한 행정적 지원, 장소 제공 및 식비와 하루의 숙박이 포함된 문화시찰 등의 비용을 요청하였음.

1. WIPO's contribution:	WIPO will provide: 1. Travel (in economy), daily subsistence allowance (DSA; to cover accommodation costs) and terminal expenses (TE) of the 20 judges invited by WIPO; 2. Travel (in business if more than nine hours), DSA, TE and honoraria of the five international members of the Faculty; 3. Travel, DSA and TE of one WIPO staff
2. Host Institution's contribution:	The host institution will provide: 1. Arrangements for appropriate venue facilities, venue security and necessary local administrative and logistical support; 2. Administrative and logistical support for the Master Class; 3. Visa and entry permit support for international Faculty members and participants; 4. Travel, DSA and TEs of the 10 national participants (if applicable); 5. Hospitality including coffee breaks, meals and reception; 6. Local transportation between venues and from/to airport; 7. Social program (e.g. one night accommodation in Seoul and visit).

자료: 대법원 제출

○ 그런데 2025년도 동 사업 예산안 1억 2,600만원의 세부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자료집 발간 등을 위한 명목으로 1,500만원, 행사 진행 용역비로 1억 1,100만원을 산정하였으나, 구체적으로 행사 진행 용역비와 관련하여 관련 업체 등에 세부 견적서를 의뢰한 바가 없고, 단가 산정을 위한 인원 등에 있어서도 약 30명의 법관들이 참석하는 마스터클래스[377]의 규모와 달리 60명을 기준으로 대강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해당 예산의 편성 및 그 규모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명확하게 예산 산정을 하였다는 문제가 있음.

377) 대법원에 따르면, WIPO 마스터클래스는 세계 각국에서 약 30명의 법관들이 참석하여 지식재산권법의 최신 동향과 도전 과제를 논의하는 국제 심포지엄으로, 지식재산법의 적용을 강화하고 사법부의 사건 처리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함.

<행사진행 PCO 용역비(1억 1,100만원) 산출 내역>

	내 역	금 액 (백만원)
PCO 용역비	PCO 인건비	17
	식음료	41 (오찬 : 60명 * 8만원 * 3일, 만찬 : 60명 * 10만원 * 3일, 커피 및 다과 : 60명 * 5만원 * 3일)
	문화시찰 등 비용	22 (문화시찰 : 3백만원, 식비 : 6백만원, 문화시찰로 인한 숙박 13백만원)
	해외연사 운송	9
	PCO 일반관리비·기업이윤·부가세	22
	합계	111

자료: 대법원 제출

위와 같은 예산안 단가 산정은 특히 그간 집행 경험이 없는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경우에 있어 발생하기 쉬운데, 산정 당시의 산식과는 달리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총액을 기준으로 용도별 구분 없이 사용되기 쉽고, 이에 방만한 예산 집행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됨.[378]

위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PCO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등과 식음료비, 문화시찰 등의 여행경비는 행사를 진행하게 될 호텔 및 여행사 몇 곳에 구체적 인원과 함께 미리 견적서를 받아 이를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나, 대법원은 별도 견적을 의뢰하는 등의 객관적 단가 산정을 위한 절차 없이 단순히 편성된 총액을 적당히 배분하는 식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78) 이를테면 단가 산정시의 인원에 비해 실제 참석 인원이 현저히 적을 경우, 남는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식음료비 등을 지출할 우려가 있다는 것임.

○ 따라서 대법원은 행사 진행에 앞서 각 업체에 정확한 행사 참석 인원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 견적을 받아보고, 이를 근거로 각 항목별 소요 예산을 정확히 산정하여 향후 행사 진행에 있어 방만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계획 수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9) 법원시설관리 등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법원시설관리 등(1253-411) 사업은 법원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법원활동의 수행기반을 구축하고, 보안 검색장비 등을 구비하여 청사 내 근무하는 법원구성원 및 출입일반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36억 8,300만원(27.1%) 증액된 641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법원시설관리 등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법원시설관리 등 (1253-411)	38,905	50,479	64,162	13,683	27.1

(나) 판사실 설치 사업의 실제 수요에 기반한 예산안 편성 필요

○ 법원시설관리 등 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판사실 설치 사업'은 법관 현원 증가에 따라 판사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 6억 7,1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지금까지는 판사실 추가 설치 소요가 발생한 경우 법원시설관리 등의 내역사업인 '각급법원 사무실 환경 효율화 사업' 예산으로 집행하였으나, 2025

년부터는 재판시설확충 사업 중 하나로 독립하여 편성함.

<2025년도 판사실 설치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법원시설관리 등 (1253-411)	38,905	50,479	64,162	13,683	27.1
재판시설확충	3,342	4,143	5,543	1,400	33.7
판사실 설치	-	-	671	671	-

<판사실 설치 사업 예산안(671백만원) 산출내역>

- 공사비(420-03) : 593백만원 (48실 × 12,408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81백만원 (48실 × 1,700천원)

* '24년 창원지법 판사실 설치 공사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산정

○ ① 신임 법관 임용, 복직 등으로 법관 현원의 지속적 증가, ② 독임제 기관으로서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의 특성상 독립된 사무실 필요, ③ 여성 법관의 증가 및 혼성 판사실 근무 어려움 해소 필요 등 판사실 설치 사업의 취지는 인정되나,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의 점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먼저, 현재까지 판사 현원이 꾸준히 증가해온 것은 맞지만, 향후 판사의 현원 증가 여부는 불확실함. 판사의 정원은 법정 사항으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은 판사의 정원을 3,214명으로 정하고 있음[379]. 이에 따라 2023년 12월 기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제외한 판사의 현원은 3,192명이고, 신규 법관을 임용한다고 하더라도 법정된 판사 정원의 한계상 2023년 12월 현원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임. 육아휴직 등 휴직제도 활성화를 고려할 때, 실근무 판사 인원의 증가 여지도 크지 않음.

<최근 5년간 판사 현원 변동 현황>

연도	정원	휴직 포함 현원	휴직 제외 현원	휴직인원
2019	3,214	2,952	2,806	146
2020	3,214	3,036	2,911	125
2021	3,214	3,101	2,985	116
2022	3,214	3,151	3,006	145
2023	3,214	3,192	3,032	160
2024. 9.	3,214	3,096	2,938	158

* 각 연도말 기준(단, 2024년은 9월 1일 기준)

○ 또한, 판사실의 신규 공급은 청사 신·증축과 관련된 법원의 다른 사업에도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어 반드시 판사실 설치 사업을 통해서만

379) 제21대 국회에서 판사의 정원을 늘리는 개정안(의안번호 제2119065호, 제2113144호)이 논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충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예컨대, 법원시설관리 등 사업의 내역사업인 '서울법원종합청사 제1별관 공간 재배치 사업'에 판사실 설치 공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1별관 공간을 재배치한 결과 판사실 8개가 신규 설치될 예정이고, 그 외 각 법원 신축공사에서 많은 개수의 판사실이 추가로 설치되고 있음.

<서울법원종합청사 제1별관 공간 재배치 : 3,834백만원(순증)>

□ 사업내용

○ 서울법원종합청사 사무실 협소도 심화, 여유 공간의 부족 등 판사실, 재판연구원실 · 재판공간의 확보를 위해 민사단독3과 분실 및 제1별관 조정센터를 별도의 공간으로 임차, 이전하고 공간재배치를 추진

□ 산출 내역

○ 공사비용 : 1,098백만원

○ 이전비 및 비품구입 : 285백만원

○ 임차료 : 1,500백만원

○ 임차공간 리모델링 : 951백만원

제1별관 2층(조정센터)



표준법정:2실 / 소법정:2실 / 합의실:1실 / 민원인 대기홀 / **단독판사실:8실** / 부속실:4실

자료 : 대법원 제출

<현재 시공 중인 법원 신축 건물의 판사실 추가 예정 현황>

법원 신축공사 사업명	판사실 설치 예정(개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신축	35
제주지방법원 별관 증축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별관 증축	18
울산지방법원 별관 증축	6

○ 다른 사업과 중복 예산이 편성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판사 현원 증가 여부가 아니라, 각급 법원별 실제 판사실 설치 공사 계획과 이에 근거한 예산의 편성·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대법원은 판사실 추가 설치 소요를 48개로 산정하면서도, 48개실이 필요한 근거 즉, 구체적으로 어느 법원에 몇 개를 설치할 계획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함[380].

○ 명확한 공사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예산의 계획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용하거나 초과집행하기 쉽고, 특히 예산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판사실 설치가 긴요하지 않은 법원에 추가로 설치하거나 단가가 높은 비품을 사용하는 등으로 국가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대법원은 판사실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원 청사 신·증

380) 다만, 대법원은 수요조사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천지원, 성남지원, 안양지원, 대전지방법원, 안동지원, 부산동부지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등 다수의 법원에서 판사실 사용 가능 인원에 비해 실제 사용 인원이 초과한 상태라고 설명함.

축에 반영된 판사실 설치 규모와 판사 현원 변동 추이 및 각 법원별 실소요 등에 근거한 명확한 공사 계획에 따른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다) 재판연구원실 설치 사업의 예산 조정 필요

○ 법원시설관리 등 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재판연구원실 설치 사업'은 재판연구원의 정원 및 현원 증가에 따라 재판연구원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 7억 2,9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지금까지는 재판연구실의 추가 설치 소요가 발생한 경우 법원시설관리 등의 내역사업인 '각급법원 사무실 환경 효율화 사업' 예산으로 집행하였으나, 2025년 예산안부터는 재판시설확충 사업 중 하나로 독립하여 편성함.

<2025년도 재판연구원실 설치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법원시설관리 등 (1253-411)	38,905	50,479	64,162	13,683	27.1
재판시설확충	3,342	4,143	5,543	1,400	33.7
재판연구원실 설치	-	-	729	729	-

<재판연구원실 설치 사업 예산안(729백만원) 산출내역>

- 공사비(420-03) : 593백만원 [40실(2인1실) × 14,821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36백만원 (80명 × 1,700천원)

* '20년 춘천지법 재판연구원실 구조개선 공사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산정

○ 재판연구원은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법관의 재판 업무를 돕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재판연구원규칙」으로 정하고 있음[381]. 재판지연 해소 및 재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재판연구원 정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현재 정원은 400명(현원 399명)이고, 2025년에도 정원을 80명 더 늘리기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완료함.

<「재판연구원규칙」상 재판연구원 정원 변동 현황>

연도	재판연구원 정원
2011년	200명
2019년	250명
2020년	300명
2023년	350명
2024년	400명
2025년	(480명 예정)

○ 다만, 재판연구원 정원의 증가로 재판연구원실 추가 설치를 위한 예산 편성 취지는 인정되더라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정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재판연구원실 신규 공급은 청사 신·증축과 관련된 법원의 다른 사업에도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어 반드시 재판연구원실 설치 사업을 통해서만 충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예컨대, '서울법원종합청사 제1

381) 「재판연구원규칙」 제2조(정원) 각급 법원에 두는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400명으로 한다.

별관 공간 재배치 사업'에 재판연구원실 설치 공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1별관 공간을 재배치한 결과 재판연구원실 1개가 신규 설치될 예정이고, 그 외 각 법원 신축공사를 통해 재판연구원실이 추가 설치되고 있음.

<서울법원종합청사 제1별관 공간 재배치 : 3,834백만원(순증)>

□ 사업내용

○ 서울법원종합청사 사무실 협소도 심화, 여유 공간의 부족 등 판사실, 재판연구원실 · 재판공간의 확보를 위해 민사단독3과 분실 및 제1별관 조정센터를 별도의 공간으로 임차, 이전하고 공간재배치를 추진

□ 산출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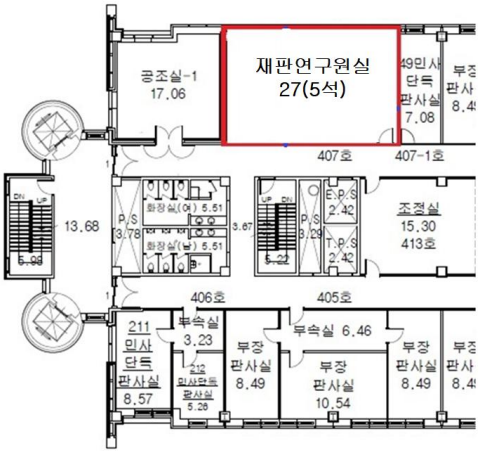
○ 공사비용 : 1,098백만원

○ 이전비 및 비품구입 : 285백만원

○ 임차료 : 1,500백만원

○ 임차공간 리모델링 : 951백만원

제1별관 4층(조정전담 판사실)



재판연구원실 : 1실

자료 : 대법원 제출

<현재 시공 중인 법원 신축 건물의 재판연구원실 추가 예정 현황>

법원 신축공사 사업명	재판연구원실 설치 예정(개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신축	2
울산지방법원 별관 증축	2

○ 예산의 중복·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증원되는 인원이 아니라 각급 법원별 실제 재판연구원실 공사 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이 필요한데. 대법원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법원에 몇 개의 재판연구원실이 설치될 것인지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함.

○ 또한, 대법원은 80명의 재판연구원을 위해서 2인1실을 기준으로 40개의 재판연구원실을 추가로 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재판연구원의 신분인 나급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사무관(5급)에 준하여 대우하고 있으므로, 2인1실을 제공할 필요성은 다소 낮을 수 있음.

참고로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상 배정면적기준에 따르면, 사무관에게 배정되는 사무실 집무공간은 7㎡정도가 적절하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다른 기관들의 경우 서기관, 사무관 및 일반직원 등 다수 인원이 하나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형태가 일반적임.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전문임기제 나급 (5급 상당)	1명	채용일로부터 1년	성과평가정책국 연구평가혁신과 (세종특별자치시)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임기제 나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제2024-939호)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1]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

계 급 별	구 분	일반사무실 (제곱미터)	단독사무실 (제곱미터)	비 고
4 급	국장 · 과장	17		집무면적
	서기관	7		집무면적
	기관장실		33	집무실 · 부속실
5 급	과 장	17		집무면적
	사무관	7		집무면적
	기관장실		17	집무실
6급 이하	과 장	10		집무면적
	일반직원	7		집무면적
	기관장	17		집무면적

○ 더불어, 재판연구원의 정원이 400명이고 현재 각급 법원에 설치된 전체 재판연구원실이 총 100여개이므로 평균적으로 네 명당 한 개의 사무실이 배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인1실이 아니라 4인1실을 기준으로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가 예산의 절감 및 공무원의 일반적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가 필요한 재판연구원실 개수를 40개가 아니라 20개로 산정하고, 법원 청사 신·증축에 반영된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등 재판연구원실 설치 사업 예산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예시) <재판연구원실 20개 설치 비용(433백만원) 산출내역>

- 공사비(420-03) : 297백만원 [20실(4인1실) × 14,821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36백만원 (80명 × 1,700천원)

  * 예산안 대비 296백만원 감액

2. 등기특별회계

《총 괄》

(1) 등기특별회계 유효기간 도래에 대응한 존치 여부 검토 필요

○ 등기특별회계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열람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하여 등기소 시설 확충과 등기사무의 전산화 등 등기업무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목적[382]으로 1994년 「등기특별회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설치되었음.

○ 등기특별회계는 신설 당시 10년간 한시적으로 존속할 예정[383]이었으나, 2003년과 2010년 2차례에 걸쳐 존속기간이 각각 7년씩 연장되었고, 2017년에는 존속기간이 10년 연장되어 2027년 유효기간이 도래할 예정임.

○ 등기특별회계의 연장 사유는 인터넷을 통한 등기신청서비스, 온라인 등기처리 완결시스템의 도입, 등기업무전산화에 따른 광역등기소의 설치 필요성, 노후화된 등기정보시스템 전면 재설계 등과 같이 사회·기술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었음.

○ 그러나, 대법원이 2017년 등기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 필요성의 주된

---

382) 「등기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등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이하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383) 신설 당시 상황에서는 등기업무 전산화와 노후등기소의 증·개축 및 등기소가 없는 지역 시·군·구에 등기소를 1개소씩 설치하는 데 약 10년간의 기간으로 운영을 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제16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1993. 5. 17.)

근거로 제시[384]한 미래형 등기전산화 사업인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은 2025년 개발이 완료되어 유지보수 단계가 될 예정이며, 등기소 광역화 사업 실시 대상은 3개소[385] 정도 밖에 남지 않게 된 상황임.

○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운영되는 회계[386]인데, 등기특별회계의 경우 지난 10년간 세출 총액 평균액(257,771백만원) 중 주요사업비의 지출 평균액(75,211백만원)은 29.18%에 불과하고 인건비와 기본경비 지출 평균액(156,748백만원)이 60.80%를 차지해, 법무부 소관 교도작업특별회계[387]와 비교시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다소 부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또한, 최근 몇 년간 등기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등기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와 관련된 비용이 지출되어 감사원 감사[388] 및 국회 결산심사[389] 등에서 다수 지적을 받은 바 있음. 이는 등기특별회계와 일

---

384)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정부제출, 의안번호2005659)', 2017. 8.

38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역등기소(성남지원 등기과와 분당등기소 통합),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평택등기소(평택지원 등기과와 송탄등기소 통합)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광역등기소(동부지원 등기과와 남부산 등기소 통합)

386)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③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387) 2023년 결산 기준(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회수 및 이월금 제외) 총 세입(69,680백만원) 중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 판매 수입인 교도소 수입(67,602백만원)이 9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세출(66,046 백만원) 중 교정활동 관련 주요사업비인 시설보완, 직업훈련, 교도작업 세부사업의 지출액 합계(65,512백만원)가 99.2%를 차지함.

388) '제목 : 등기특별회계 설치목적 외 편성 및 집행 부적정', '대법원 재무감사 감사보고서', 감사원, 2019. 10., p.66. ~ 73.

389) '등특 예산으로 법원사용자지원센터 등 공사비 집행 부적정',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결결과', p.221.,
'등특 예산으로 사법역사문화교육관 공사비 집행 지양', '2021 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

반회계의 지출이 혼재되어 집행될 수 밖에 없는 다음과 같은 법원의 조직구조 등의 특징 때문으로 보임.

○ 등기특별회계는 책임운영기관이나 소속기관 등 독립된 기관이 운영하거나 특정 실·국이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주요사업비는 사법등기국이 관리하는 구조로 되어있음.

등기업무 조직도 법원 내의 별도 독립조직인 소속기관이 아닌 법원행정처·각급법원 조직 내의 국·과·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등기업무 부서 중 일부 부서는 별도의 건물이 아닌 지방법원 건물 내부에서 지방법원의 재판 관련 부서 등과 함께 근무하고 있음.

○ 즉, 등기특별회계와 관련된 예산 관리 주체, 업무 인력, 근무 장소 등이 법원의 조직 내에서 일반회계로 편성·집행되는 재판 지원 관련 부서 등과 별도로 분리되지 못한 상황이 등기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와 관련된 용도로 집행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임.

○ 등기특별회계의 존치 여부는 향후 지출구조 측면에서 등기특별회계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성의 논거가 될 수 있는 신규사업이 존재하느냐, 등기특별회계를 일반회계와 보다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집행할 수 있느냐라는 과제 등에 따라 판단될 필요가 있으며, 대법원도 이

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결결과’, p.222.

러한 인식 하에 최근 '제4차 등기특별회계(2018~2027)의 성과 및 향후 과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음[390].

○ 등기특별회계 존치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해야 하는 시한은 2027년 예산안을 요구하는 2026년 5월까지인 만큼, 대법원은 2025년부터는 회계통합 등으로 인한 재정운용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가져오는 장점과 등기 관련 사업에 대한 적시성 있는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비교하여 향후 등기특별회계 미래에 대한 최적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최근 10년간 등기특별회계 세입·세출 추이(결산 기준)>

(단위: 억 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입	281,031	325,106	282,057	283,199	284,349	287,343	318,867	353,446	317,306	301,102
수수료	239,593	278,736	248,256	240,935	243,137	241,730	262,761	262,652	230,725	222,011
이월금	34,447	39,216	23,411	28,112	25,877	42,283	40,666	77,897	73,685	68,050
기타	7,001	7,154	10,390	14,152	15,335	3,330	15,440	12,897	12,896	11,041
세출	241,815	301,695	253,945	257,322	242,065	246,676	240,970	279,761	249,256	264,203
주요사업비[391]	69,278	83,340	66,234	66,116	85,168	70,244	82,321	79,503	74,780	75,125
인건비	109,967	111,811	118,680	124,550	128,418	124,041	130,911	138,622	144,618	143,383
기본경비	27,569	28,034	29,030	26,985	28,479	27,806	27,738	32,455	29,858	34,520
전출금	35,000	78,510	40,000	39,671	-	24,586	-	29,181	-	11,176

자료: 대법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390) 과거에도 대법원은 다양한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등기특별회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일반회계와의 통합, 사법서비스 진흥기금과의 통합(이원희, '대법원 소관 재정의 효율적 운용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사)재정성과연구원, 2021. 9., p.130.~140.), 등기특별회계 관리부서가 될 사법등기국의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전환(장용근, '2차 등기특별회계(2011~2017년)의 성과 및 향후 과제', 한국재정법학회, 2015. 11., p.49.) 등 여러 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391) 등기소확충 단위사업(1252) 및 등기업무전산화(1334) 단위사업

《세　입》

(2) 토지대여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토지대여료(51-511)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로 인한 국가토지 임대료 수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과 동일한 1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토지대여료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항목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토지대여료 (51-511)	53	100	100	-	-

(나) 실제 수납액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 필요

○ 대법원은 등기소 부지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토지 대여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토지대여료 수입은 현금 자동 입출금기(이하 'ATM 기기') 및 전기차충전시설 등의 유상허가에 대한 사용료 수입과 유휴등기소 부지와 건물 전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임대하여 얻는 수입으로 최근 5년간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최근 5년간 토지대여료 징수결정액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세부 징수내역
2020	95	8	8	-	- ATM 기기 등 토지대여료(징수결정액·수납액 8)
2021	95	45	26	19	- ATM 기기 등 토지대여료(징수결정액·수납액 9) - 파주등기소 토지대여료(징수결정액 36, 수납액17, 미수납액 19)
2022	100	48	28	20	- ATM 기기 등 토지대여료(징수결정액·수납액 9) - 파주등기소 토지대여료(징수결정액39, 수납액 19, 미수납액 20)
2023	100	116	53	63	- ATM 기기 등 토지대여료(징수결정액·수납액 9) - 파주등기소 토지대여료(징수결정액39, 수납액 20, 미수납액 19) - 남대전등기소 토지대여료(징수결정액68, 수납액24, 미수납액 44)
2024	100	50	50	-	- ATM 기기 등 토지대여료(징수결정액·수납액 8) - 파주등기소 토지대여료(징수결정액·수납액 19) - 남대전등기소 토지대여료(징수결정액·수납액 23)

자료 : 대법원 제출

○ 대법원이 토지대여료 수입을 얻고 있는 구)파주등기소의 경우 유휴등기소를 2020년 파주시에 매각하였으나, 구)파주등기소 부지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 제기된 결과 대법원은 토지 지분중 3841.8분의 304.3을 계속해서 보유[392]하게 되었고, 현재 파주시에게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후 토지대여료를 매년 약 1,900여만원 징수하고 있음.

392) 원고 A의 상속인 중 7인이 국가를 상대로 구)파주등기소 부지 3,841.8㎡ 지분 476.63㎡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했고, 국가가 패소하였으며 이들은 지분 전부를 취득 한 후 파주시로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으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원고 A의 상속인 1인과, 소제기 가능성이 있는 B의 지분인 304.3㎡는 매각하지 않고 대법원에서 보유하기로 함.

○ 그러나, 남대전등기소의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가 임시 행정복지센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2023년 9월 22일부터 1년간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으나, 대법원이 사인과의 국유재산 교환계약을 통해 2024년 5월 남대전등기소의 교환이 완료됨에 따라 남대전등기소 사용허가는 2024년 5월 28일 자로 취소되었음.

즉, 2025년에는 남대전등기소의 국유재산 사용허가로 인한 토지대여료 수입은 발생하지 않을 예정이며 대법원에 따르면 현재 유휴 등기소에 대한 신규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예정되어있는 곳은 없다고 함.

○ 따라서, 2025년 토지대여료 수입은 ATM기기 등 사용허가에 따른 수입과 파주등기소 사용허가에 따른 수입만 예정되어있는 상황으로 실제 징수액은 2,7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므로, 2025년 토지대여료 수입은 실제 예측되는 징수액에 부합되게 일부 감액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면허료 및 수수료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면허료 및 수수료(65-651)는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제증명의 교부수수료, 등기기록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수수료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 등기업무 관련 수입금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640억 1,200만원(△20.8%) 감액된 2,439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항목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면허료 및 수수료 (51-511)	222,011	307,988	243,976	△64,012	△20.8

(나) 대법원이 산출한 기준으로 세입예산 조정 필요

○ 대법원은 2019년도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등기특별회계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면허료 및 수수료의 과다 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393]에 따라 세입 예산의 구체적 산출방식 도출을 위해 2021년 9월 '대법원 소관 재정의 효율적 운용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394]'

393) '등기특별회계 수입예산 과다계상 개선 필요',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p.268.

394) 이원희, '대법원 소관 재정의 효율적 운용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사)재정성과연구원, 2021. 9.

라는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음.

해당 연구용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결산액을 회귀분석하여 예산액과 결산액의 괴리액을 최소화하는 예산산출 방식을 제안하였는데, 당해연도 결산액이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경우 4년 가중평균의 방식을, 전년도 대비 10% 미만 증가할 경우 2년 가중평균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임.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 산출 방식>

결산액 전년대비 증감율	산출방식
10% 이상	4년 가중평균 = $\frac{4년전결산액 + (3년전결산액 \times 2) + (2년전결산액 \times 3) + (1년전결산액 \times 4)}{10}$
10% 미만	2년 가중평균 = $\frac{2년전결산액 + (1년전결산액 \times 2)}{3}$

자료 : 대법원 제출

○ 2023년 결산액(222,011백만원)이 2022년 결산액(230,725백만원) 보다 3.8% 감소되어, 결산액의 전년도 증감율이 10% 미만이므로 위 산출방식에 따라 대법원은 223,948백만원을 산출[395]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였음.

기획재정부는 최근 2년간 수입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여 예·결산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2025년 예산안에서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을 20,028백만원 증액한(8.9%) 243,97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395) [2022년도 결산액(230,725백만원) + (2023년도 결산액(222,011백만원) × 2)]÷3

<최근 5년간 면허료 및 수수료 대법원 요구액 및 기획재정부 조정액 등>

(단위: 백만원)

연도	대법원요구액	기획재정부 조정액 (A)	결산액(B)	괴리금액 (A-B)
2020	323,624	294,380	262,761	31,619
2021	313,874	313,874	262,652	51,222
2022	258,087	258,087	230,725	27,362
2023	257,309	352,003	222,011	129,992
2024	242,116	307,988	224,915(추정)	83,073

자료 : 대법원 제출

○ 비록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액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 변동되는 경향이기는 하지만 구체적 근거 없이 편성된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산출된 대법원의 최초 예산요구액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건물매각대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건물매각대(71-711)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용도폐지한 등기소 건물 매각대금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4억 5,200만원(48.2%) 증액된 13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건물매각대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항목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건물매각대 (71-711)	79	937	1,389	452	48.2

(나) 유휴등기소 매각 수입 확보 방안 검토 필요

○ 등기특별회계의 건물매각대는 광역등기소 신축 등으로 인한 등기소 통·폐합에 따라 용도폐지된 등기소 건물의 매각으로 인한 수입이며, 최근 5년간 수납현황은 다음과 같음.

<최근 5년간 건물매각대 수납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세부내역
2020	1,323	1,523	1,523	- 구)동대구등기소 매각 : 311 - 구)부산강서등기소 매각 : 164 - 구)고흥등기소 매각 : 35 - 구)파주등기소 매각 : 1,013
2021	1,323	175	175	구)은평등기소 매각 : 175
2022	1,389	64	64	구)광주등기소 매각 : 64
2023	1,389	79	79	구)포천등기소 매각 : 79
2024. 7.	947	-	-	

자료 : 대법원 제출

○ 2024년 예산안 편성 당시 대법원은 유휴등기소 중 구)전주등기소와 구)대덕등기소의 매각을 계획하며 예산액을 9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24년 7월 기준 두 등기소는 모두 매각되지 못한 상황이고 연내 매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2024년 4월 수원광역등기소가 개청됨에 따라 구)동수원등기소와 구)장안등기소가 유휴 되었고, 2025년 하반기 통합 여수등기소가 신축되면 구)여수등기소와 구)여천등기소도 유휴될 예정임.

○ 2025년까지 유휴중이거나 유휴가 예상되는 등기소 중 대법원의 국유재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2025년 매각대상인 등기소는 구)전주등기

소, 구)대덕등기소, 구)장안등기소로 매각대상 등기소가 2024년 대비 한 곳 늘어남에 따라 대법원은 2025년 예산액을 13억 8,900만원으로 증액하였음.

<유휴등기소 현황>

(단위: 백만원)

등기소 명	건축 연도	건물면적(㎡)	건물 대장가액	유휴결정시점	향후계획
구)울산중부등기소	1995	634.40	286	2014.11.17. 신청사이전	활용계획 협의 중
구)전주등기소	1999	1,287,96	864	2019.12.2. 신청사이전	2024년 매각 또는 교환 추진 중
구)남양주등기소	2006	694.96	-	2022.1.1. 남양주지원 개원	법원기록관 신축 예정(설계중)
구)대덕등기소	1983	483.0	113	2022.10.4.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개원	2024년 매각 또는 교환 추진 중
구)동수원등기소	2000	2644.1	2,840	2024.4.1.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개원	장래활용 대비 보유(2026년 이후 매각 등 예정)
구)장안등기소	2002	817.65	724	2024.4.1.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개원	2025년 매각 또는 교환 추진 중
구)여수등기소	1975	490.8	273	2025.8. 여수등기소 신축 예정	장래활용 대비 보유(2028년 이후 매각 등 예정)
구)여천등기소	1988	905.5	305	2025.8. 여수등기소 신축 예정	장래활용 대비 보유(2028년 이후 매각 등 예정)

자료 : 대법원 제출

○ 2025년 매각 예정 등기소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희망하고 있는 등기소는 구)전주등기소가 유일한 상황[396]인데, 대법원에 따르면 전주시의 예산 문제로 2025년 매입 예산 편성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전주시와 매각을 위한 협의가 계속 중이라고 함.

구)대덕등기소의 경우 대전지방법원이 대전시 대덕구청과 매각 또는 교환을 협의 중에 있고, 구)장안등기소는 우선 장래 활용성을 검토해보고 매각 또는 교환을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2025년 세입예산안에 매각대상으로 예정된 등기소들의 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은 아직 계획 중에 있지 않다고 함.

○ 유휴등기소의 향후 활용방안 관련 경쟁입찰 매각시 감정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될 우려 등의 이유로 장기간 보유하는 것 보다는 적극적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국회의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397]이 있었는데, 울산지방법원에서 활용계획을 검토중인 구)울산중부등기소의 경우 10년이 지나도록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유휴등기소를 조속히 매각·처분하여 건물매각대를 편성된 예산안대로 수납하는 것이 국가 재정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2025년 매각을 계획 중인 유휴등기소들의 경쟁입찰을 통한 매각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

396) 전주시 측에서 ‘행정목적을 위한 시 현안 사업 부지로 구 전주등기소를 매입할 계획’ 임을 2024년 6월 공문으로 전주지방법원 측에 통보함.

397) ‘유휴 등기소 활용 방안 적극 강구 : 유휴 등기소인 구)전주등기소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마련되기까지 약 5년이 경과하였고, 구)울산중부등기소의 경우 9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없음’,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p.220.

《세　출》

(5) 등기소 신·증축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등기소 신·증축(1252-411) 사업은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 노후·협소한 일반등기소를 신축 및 리모델링하고, 대도시 지역의 등기소를 통·폐합하여 통합등기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15억 1,700만원(△15.1%) 감액된 85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등기소 신·증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등기소 신·증축 (1252-411)	15,227	10,035	8,518	△1,517	△15.1

(나) 노후등기소 리모델링에 따른 이전비 조정 필요

○ 등기소 신·증축 사업의 예산비목 중 일반수용비는 2025년도 예산안에 노후등기소 리모델링에 따른 이전비 용도로 4억원, 등기소 기록물 보존 및 관리 용도로 8,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최근 4년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음.

<등기소 신증축 일반수용비 집행현황(2021년~2024년)>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산액(A)	집행액(B)	예산집행률(B/A)
2021	487	198	40.6
2022	487	250	51.3
2023	487	73	14.9
2024.7.	487	22	4.5

자료 : 대법원 제출

○ 등기소 신·증축 사업의 일반수용비의 집행이 부진한 이유는 등기소 리모델링에 따른 이전비가 각 등기소 별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금액 수준으로 집행이 되고, 매년 리모델링 되는 노후 등기소는 5개 내외였으므로 실제 필요한 예산은 1억 5,000만원 수준이었는데 비해 예산액이 매년 4억원으로 동일하게 편성되었기 때문임.

<등기소 신·증축 사업의 이전비 집행 현황(2021년~2023년)>

(단위: 원)

연도	구분	예산편성 당시 입주예정 등기소	실제입주 등기소	입주일	이전비 및 이전 관련 일반수용비 집행액
2021	신축	부산통합등기소	부산통합등기소	2021. 3. 14.	141,116,240
	리모델링	진천등기소	진천등기소	2022. 1. 23.	8,900,000
		영암등기소	영암등기소	2021. 12. 26.	28,739,000
		동수원등기소	동수원등기소	2021. 3. 1.	26,250,000
		하남등기소	하남등기소	2022. 2.28.	-[398]
2022[399]	신축	대전통합등기소	대전통합등기소	2022. 10. 3.	149,138,000
	리모델링	보은등기소	보은등기소	2022. 11. 27.	24,750,000
		장수등기소	장수등기소	2022. 12. 10.	26,428,000
		인제등기소	인제등기소	2023. 1. 7.	21,960,000
2023[400]	리모델링	문경등기소	문경등기소	2023. 12. 16.	23,723,500
		화천 또는 남해등기소	남해등기소	2023. 12. 2.	28,937,000

자료 :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398) 등기소 내부 공사시 주말 이용 등의 사유로 이전비 미발생

399) 2022년 신축 및 리모델링 이외 등기소 기록물 보존 관리 용도로 21,478,000원 집행

400) 2023년 신축 및 리모델링 이외 등기소 기록물 보존 관리 용도로 20,250,000원 집행

아울러, 대법원이 제출한 등기소 이전비 관련 일반수용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통합등기소의 이전비도 동 세부사업에서 집행했는데, 이러한 통합등기소의 이전비는 통합등기소가 완공될 때 등기업무운영지원 세부사업(7032-311)에서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상황[401]이므로 이를 동 세부사업에서 집행한 것은 동 세부사업의 일반수용비가 과다 편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따라서, 매년 노후등기소 리모델링 수요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이전비 예산 4억원은 2025년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는 5개 등기소(순창, 예산, 영주, 연천, 산청 등기소)의 소요에 실제 사용될 비용인 약 1억 5,000만원(1개 등기소당 소요비용 3,000만원 × 5개소)으로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401) 등기업무 운영지원(7032-311)사업에서 여수등기소 이전비, 이전행사 지원비(2025년 예산안) : 38백만원, 수원통합등기소 이전비, 이전행사 지원비(2024년 예산) : 86백만원, 대전통합등기소 이전비, 이전비(2022년 예산) : 41백만원 편성

(6) 등기업무 전산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등기업무전산화(1334-305) 사업은 등기업무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81억 4,400만원(△19.6%) 감액된 333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등기업무전산화 (1334-305)	40,407	41,532	33,388	△8,144	△19.6

(나) 등기정보시스템 감리비 예산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 필요

○ 등기정보시스템은 등기소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등기업무시스템, 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발급 등을 위한 인터넷등기소, 등기빅데이터시스템, 등기정보광장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 및 제도 개선과 정보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지속적인 변경 및 유지관리를 필요로 함.

○ 2025년 4월 미래등기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현행 등기정보시스템 중 등기업무전산화 세부사업과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운영 세부사업에 편성된 유지보수비 중 일부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세부사업으로 이전됨.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이전되는 등기정보시스템 현황>

연번	시스템 명칭	미래등기시스템 이전 여부	현재 유지보수비 지급 세부사업
1	부동산등기시스템	○	
2	법인등기시스템	○	
3	등기내부포털시스템	○	
4	디지털등기소시스템	○	
5	통합전자등기시스템	○	
6	부동산등기인터넷열람/발급시스템	○	
7	기타등기인터넷시스템	○	
8	법인등기전자표준양식	○	
9	법인등기전자신청시스템	○	
10	법인등기인터넷열람/발급시스템	○	
11	동산·채권담보등기전자표준양식	○	
12	동산·채권담보등기전자신청시스템	○	
13	동산·채권담보등기인터넷열람/발급시스템	○	
14	전자확정일자전자신청시스템	○	
15	전자확정일자인터넷열람/발급시스템	○	
16	등기외부포털시스템	○	
17	전자납부시스템	○	
18	재판사무전자촉탁시스템	○	
19	표시변경전자촉탁시스템	○	
20	압류와압류말소전자촉탁시스템	○	등기업무전산화(1334-305)
21	공통고유번호시스템	○	
22	국민주택채권시스템	○	
23	소유권변동및코드통지시스템	○	
24	법인유관기관연계시스템	○	
25	전자확정일자연계시스템	○	
26	첨부서면연계시스템	○	
27	전자수입인지연계시스템	○	

연번	시스템 명칭	미래등기시스템 이전 여부	현재 유지보수비 지급 세부사업
28	등기수수료은행연계시스템	○	
29	사법부무상열람시스템	○	
30	등록면허세취득세통지시스템	○	
31	행정정보공동이용연계유/무상열람시스템	○	
32	통계시스템	○	
33	사용자지원시스템	○	
34	부동산전환시스템	×	
35	기타등기시스템	×	
36	동산·채권담보등기시스템	×	
37	전자확정일자시스템	×	
38	집행관통합시스템	×	
39	집행관관리감독시스템	×	
40	통합이미지전환시스템	×	
41	재외국민등록번호관리시스템	×	
42	법무사명부관리시스템	×	
43	사용자등록시스템	×	
44	등기소출입증관리시스템	×	등기업무전산화(1334-305)
45	등기소환급시스템	×	
46	수입징수관환급시스템	×	
47	이미지음영화시스템	×	
48	등기소출입증신청/등기이용지원시스템	×	
49	메일고지시스템	×	
50	이러닝시스템	×	
51	SLM시스템	×	
52	무인발급기서비스지원시스템	×	
53	전자문서관리시스템	×	
54	등기정보광장시스템	○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운영 (1334-306)
55	등기빅데이터연계관리시스템	○	
56	등기빅데이터시스템	×	

자료 : 대법원 제출

○ 개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소관 세부사업 이동에 따른 각 세부사업별 2025년도 예산요구액은 다음과 같으며,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라 등기업무전산화 세부사업내의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예산은 전년도 대비 46억 9,800만원(△39.1%)이 감액된 120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음.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액>

(단위: 백만원)

연도	등기업무전산화 (1334-305)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운영 (1334-306)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1334-307)
2024	16,716 (53개 시스템)	868 (3개 시스템)	-
2025	12,018 [(53개시스템 × 3개월 : 4,005백만원)+ (33개시스템 × 9개월 : 7,466백만원)]	873 [(3개시스템 × 3개월 : 302백만원)+ (1개시스템 × 9개월 : 571백만원)]	7,821

자료 : 대법원 제출

그런데,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규모가 전년대비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감리비용은 전년대비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이 편성되었음.

○ 대법원은 2024년 이전까지 감리비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포함한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을 사용[402]하여 감리비 예산을 집행해 왔으나, 2024년 감리비 1억원을 예산안에 별도로 반영했고 2025년 예산안에서는 낙찰차액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감리비 예산액을 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함.

<최근 5년간 감리비 세부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예산[403]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계약금액(B)	낙찰차액 (A-B)	감리용역 예산현액	감리용역 집행액
	등기업무 전산화	등기 빅데이터	합계(A)				
2020	15,500	867	16,367	15,544	823	-	262
2021	15,500	867	16,367	15,810	557	-	277
2022	17,315	867	18,182	17,641	541	-	285
2023	16,585	824	17,409	17,028	381	-	167
2024.7.	16,716	868	17,584	17,176	408	100	284 (계약체결액)

자료 :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402) '정보화 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감리비, 조달수수료,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요금의 부족분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86.

403) 대법원은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등기업무 전산화(1334-305) 세부사업 예산과 등기 빅데이터시스템 운영(1334-306) 세부사업 예산을 합쳐서 발주하고 있음.

○ 그러나,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만으로도 최근 5년간 평균 5억 4,200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예산액이 전년대비 39.1% 줄어들어도 낙찰차액은 일정 부분 여전히 발생할 것이고 감리비가 부족할 땐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규모 축소에 따라 감리용역 사업 규모도 유사 규모로 축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지난 5년간 감리용역 평균 집행액 2억 5,500만원에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예산 감액 비율인 39.1%를 제외하면 약 1억 5,500만원의 금액이 산출됨.

참고로, 2023년 대법원이 실시한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사업 감리용역의 경우 대상인 동 사업의 계약금액이 122억 1,000만원으로 2025년도 등기업무전산화 사업의 예산편성액과 유사한 규모인데 감리용역 예산을 1억 6,000만원으로 입찰공고하여 1억 5,800만원을 집행한 사례가 있었음.

○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낙찰차액, 감리용역 규모 축소 필요성 및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2025년에 편성된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감리비 2억원은 효율적 예산 활용을 위해 보다 적정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운영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운영(1334-306) 사업은 사용자맞춤형 등기정보를 제공하는 등기빅데이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4억 6,600만원(△26.6%) 감액된 12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운영 (1334-306)	1,913	1,752	1,286	△466	△26.6

(나) 세부사업(등기빅데이터시스템 운영) 존치에 대한 검토 필요

○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운영 사업은 방대하고 다양한 등기정보를 빅데이터 플랫폼에 적재하여 다차원적 활용을 하고자 하는 등기빅데이터시스템, 한국부동산원 등 연계기관에 정보를 전달하는 등기빅데이터연계관리시스템, 일반인들이 등기통계정보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등기정보광장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의 등기정보광장시스템 3개로 운영됨.

○ 위 3개의 시스템 중 등기빅데이터시스템을 제외한 등기빅데이터연계관리시스템과 등기정보광장시스템은 2025년 4월 미래등기시스템이 구축되면 미래등기구축시스템으로 9개월분의 유지보수비가 이관되어 해당 세부사업에서 수행될 예정임.

○ 등기빅데이터시스템의 주된 하위 사업은 ①데이터센터 운영('24예산 202백만원 → '25예산 53백만원), ②시스템 유지관리('24예산 868백만원 → '25예산 873백만원), ③데이터센터의 전산장비 유지보수('24예산 301백만원 → '25예산 360백만원)인데, 2025년 예산안상 ①의 9개월분 예산 등이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이관될 예정으로, 그 후 등기빅데이터시스템의 하위사업은 ② 중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유지관리와 ③만 남게 됨.

○ 그런데, 등기업무 전산화 세부사업의 등기정보시스템도 위 하위사업(①, ②, ③)과 동일하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대법원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서 위의 세 하위사업 모두 등기업무전산화의 사업과 통합하여 발주해왔기 때문에,

<2024 등기정보시스템 데이터센터 운영 등 발주·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예산총액	발주금액	계약금액
2024년도 사법부 데이터센터 유지관리 운영	등기업무 전산화	4,223	11,098 404)	11,098	10,987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운영	202			
2024년도 등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기업무 전산화	16,716	17,584	17,350	17,176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운영	868			
2024년도 사법부 데이터센터 전상장비 유지보수	등기업무전산화	1,537	13,572 405)	13,572	13,438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운영	301			

자료 : 대법원 제출

등기빅데이터시스템의 하위 사업 모두 등기업무 전산화 세부사업과 동일한 계약상대방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데, 여러 등기정보시스템 간 유기적으로 혼합되어 정확히 분리할 수 없는 특정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집행금액을 다른 정보시스템과 분리하여 정확히 산정

404) 등기특별회계 예산 이외에도 일반회계의 사법업무전산화(1331-300) 1,390백만원, 전자소송(1331-302) 1,277백만원,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구축(1331-303) 3,546백만원,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1333-304) 72백만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영(1335-307) 388백만원의 예산을 통합하여 발주함.

405) 등기특별회계 예산 이외에도 일반회계의 사법업무전산화(1331-300) 5,062백만원, 전자소송(1331-302) 1,445백만원,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구축(1331-303) 2,495백만원, 가족등록업무전산화(1332-303) 1,937백만원,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1333-304) 220백만원, 연수원 운영지원(7031-308) 15백만원, 교육원 운영지원(7031-309) 25백만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공탁시스템 개발 및 운영(1335-307) 388백만원의 예산을 통합하여 발주함.

하기 어렵고,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을 어느 세부사업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배분할지 결정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등기빅데이터시스템을 등기업무 전산화와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관리·운영 관점에서 비효율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음.

○ 한편,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사업은 「2023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면밀한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미흡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자체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임.

○ 따라서, 등기빅데이터시스템 사업의 일부가 미래등기시스템 사업으로 이관되어 세부사업 규모가 줄어드는 점,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과 차별화되지 않는 사업내용과 운영상 비효율,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2025년도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동 세부사업(등기빅데이터시스템 운영)을 유사한 등기업무 전산화 세부사업과 통폐합해 사업구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1334-307) 사업은 노후화된 등기정보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여 미래등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4억 9,300만원(△2.3%) 감액된 210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1334-307)	17,578	21,535	21,042	△493	△2.3

(나) 미래등기추진단 운영예산 절감 노력 필요

○ 미래등기시스템은 기존 종이기반의 등기 업무프로세스 및 노후화된 등기시스템의 전면 재설계를 통해 등기 전단계에서 부실등기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시스템 구축비 805억 4,300만원이 투입되고

2030년까지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가 2,223억 6,400만원인 정보화사업임.

○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해 대법원은 직원 19명으로 구성된 미래등기추진단을 구성하였고, 계약업체측 직원 75명과 함께 근무할 사무공간을 외부에 마련[406]하여 사업시작 연도인 2020년 7월 10일부터 사무실 임차료 예산을 매월 약 6,000만원씩 집행하여 2025년 4월까지 4년 10개월간 34억 1,100만원을 사무실 임차비용으로 집행하게 되며,

최초 서울시 사당동에 있는 임차사무실에 입주하면서 가벽설치와 칸막이 및 네트워크 케이블 공사 비용 등으로 4,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 1월말 현재 임차하고 있는 서초동의 사무용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한 뒤 2025년 예산안에 임차 사무실 원상복구 공사비[407] 5,400만원을 편성하였음.

○ 한편, 대법원이 2020년 이후 실시한 대규모 정보화사업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408]'과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409]'

406) 대법원은 사업이 시작되던 2020년 당시 서울 시내 유휴등기소는 등기기록 정비사업소 및 콜센터 용도로 모두 사용중인 상황이어서, 대규모 정보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미래등기추진단 및 외부사업자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임차사무실에 입주하였다고 함.

407) 대법원은 사당동 사무실의 소유쥬가 변경되고, 새로운 소유주의 재건축 계획에 따라 임차사무실을 옮기게 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시설 철거 등 원상회복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함. 이전한 서초동 사무실은 최초 입주시 임대인이 시설 보수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계약 개시일 당시의 조건과 상태로 임대목적물을 원상복구하고 부속물 매수청구권,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원상복구 공사비가 발생함.

408) 총사업비 213,089백만원(구축비 103,882백만원, 운영·유지보수비 109,207백만원), 사업기간 2020년 ~ 2029년(구축 2020년 ~ 2024년, 운영·유지보수 2024년 ~ 2029년), 추진단 인원 중 대법원전

모두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였으나,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하는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 추진단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무실 임차 등으로 인한 운영비가 별도로 소요되지 않았음.

○ 즉, 법원의 내부 유휴시설 등을 활용할 경우 추진단 운영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2022년 임차사무실 이전 당시 유휴시설 활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2022년 3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개원으로 대법원과 차량거리 24km의 구)구리등기소(현 서울가정법원 광역면접교섭센터, 2024년 3월 개소) 및 차량거리 26km의 구)남양주등기소(법원기록관 설립 추진 중, 2025년 6월 착공 예정)가 유휴되었으므로 이 공간들을 활용했다면 사무실 임차료, 내부 공사비 등의 미래등기추진단 운영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음.

○ 따라서, 향후 대법원은 대규모 정보화사업에 수반되는 추진단을 구성할 경우 추진단의 사무실을 법원 보유시설 내부에 마련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래등기추진단 사무실 원상복구 공사비의 경우 공사 규모 및 계약업체와의 비용 분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산정보센터 근무 인원 41명

409) 총 구축비 23,612백만원, 사업기간 2023년 ~ 2030년(구축 2023년 ~ 2025년, 유지보수 2026년 ~ 2030년)추진단 인원 중 대법원전산정보센터 근무 인원 22명

Ⅴ. 대체토론의 요지

1. 법무부 소관

○ 검찰 특수활동비의 적합한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세부 집행내역 등 자료제출을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법무부와 검찰의 자료 미제출·부실제출로 제대로 된 검증이 불가능하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한이 형해화되는 등 예산편성 산출근거의 타당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감액 필요

○ 외국인 이민정책은 국가의 미래전략인 동시에 인구정책을 보완하고 경제정책을 지원하는 국가 기간정책으로, 이민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이민당국 간 교환연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 이민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이민정책개발 지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증액 필요

○ 형 집행 시설의 현대화 및 시설보수를 위해 시설장비유지비 10억 증액 필요

○ 전자감독출동을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인 무도실무관의 경우 업무의 위험성 및 중요성이 높아 특수직무수당 지급이 필요하므로 증액 필요

○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형사보상 건당 지급액이 지속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형사보상금 예산 증액 필요

○ 소년범의 재범률을 낮추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므로, 전문강사 초빙 및 교재 제작·구입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

○ 최근 취약계층 법률구조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취약계층 민사소송비용 지원 강화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조금 예산 증액 필요

○ 외국인 보호시설 수용 포화로 인한 단속 적체 및 인권침해 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적 보호시설, 외국인 출국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비, 토지보상비 등 사업비 증액 필요

○ 70평에 달하는 대형평형의 호화관사가 확인되었지만, 국회의 검증 요구에 매우 불성실하고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호화관사 숨기기에만 급급한 법무부는 예산을 심사하고 감시할 의무를 갖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검증을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관사 임차예산 전액 삭감 필요

2. 법제처 소관

○ 2025년 신규사업으로 의원입법 관련 안내 자료로 “최신 입법 트렌드”를 책자로 발간할 계획인데, 그 구성과 내용이 기존 월간 소식지인 “법나들이” 및 “새 법령 소개” 등 다른 소식지 및 발간물과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3,150만원 감액하고, 법령해석국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를 위해 일반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유사한 형식의 행사인 행정법제 혁신 공청회·설명회의 경우

최근 4년간 980만원에서 2,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감액 필요

○ 어린이법제관 사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인바, 사업 홍보가 부족한 경우 학생들의 참여 유도가 어렵고, SNS나 학교 알림장 앱을 활용한 홍보만으로는 신청율 및 수료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홍보 예산 1,500만원 증액 필요

○ 세계법제 지원 사업 중 ‘분야별 법령 외국어 번역본 정비 연구’는 2025년 신규 사업으로 법제처가 국내법령 번역본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인바, 국내법령의 외국어 번역 업무 추진 체계에 비추어 한국법제연구원 또는 번역수요를 가진 소관 부처에서 번역본 감수업무를 수행함이 타당하므로 감액 필요

○ 국가법령정보 통합 검색서비스 사업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예산으로 ‘법령정보 전자점자 문자 제공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1억 7,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법령정보를 정확하게 변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입 등이 필요하므로 8,300만원을 증액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불편요소 제거를 위한 화면구성 개편 및 모바일 환경 적합 화면 표출 등 시스템 개편을 위한 예산 7억 6,100만원 증액 필요

○ 법제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편성된 강의실 사용료는 나라키움 태안 정책연수원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방침이 예산 편성 이후 무상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임차료 예산 4억 7,850만원 감액 필요

3. 감사원 소관

○ 증원 등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나, 연례적으로 결원이 과다하여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고, 충원이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건비를 감액할 필요가 있음.

○ 결산 심사에서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등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을 반영하여 택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관서업무추진비를 감액할 필요가 있음.

○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세부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고, 특수활동비를 수당화하거나 명절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등 편성 목적 외로 활용하는 등 예산편성의 산출근거에 대한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감액할 필요가 있음.

○ 적극행정 지원사업 예산의 선제적 증액을 통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이 사업 예산의 증액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검사 현원이 정원에 못미치는 등 인력확보가 되고 있지 않으므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공수처 출범 후 수사성과가 부진하므로 효과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한 노력 필요

5. 헌법재판소 소관

○ 헌법재판소 인건비 불용률은 정부 전체 일반회계 인건비 불용률(1.6%), 대법원 일반 인건비 불용률(0.1%)보다 높으므로, 인건비 불용 방지를 위해 사무차장 공석 또는 휴직·퇴직 등 결원으로 인한 불용 예상액을 감안하여 인건비 예산안 일부(1억원)를 감액하여 조정할 필요

○ 헌법재판소의 인건비 불용률은 여전히 높은 편이고, 이는 정원 미달 운영 및 적시 결원 미보충 등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므로 인건비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휴직·퇴직 등 인력에 대한 충원계획을 보다 충실히 수립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할 필요

○ 헌법재판소는 세부사업인 '본부기본경비'에 2025년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참석을 위하여 1,3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해당 예산은 참석자 수 조정(3명->2명) 및 대회 개최국 기준 실소요 금액으로 조정함으로써 과다 편성된 예산을 감액 조정(239만원 감액)할

필요

○ 세부사업인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개최’ 사업은 참여도가 지속적으로 저조하고 수상작이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등 헌법교육에 대한 교육현장의 관심을 유도하고 헌법문화를 확산하려는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워 전액(1,900만원) 감액 조정할 필요

○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개최’ 사업은 대회가 실제로 헌법 교육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및 평가가 부족하고, 참여 대비 예산 규모가 과도하므로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의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과 저조한 참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

6. 대법원 소관

○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축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

○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판결문 등에 대한 시각장애인 점역서비스 제공 사업의 집행실적이 전체적으로 저조하므로,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 증액 필요

○ 대법원은 기획재정부 지침에 명시된 복리후생비의 용도와 다르게 복리후생비 예산을 국선변호인, 유관기관 등 세미나나 간담회, 워크숍 행사 개최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편성한 경우가 많으므로, 본래 용도에 부합하지 않게 편성된 복리후생비 예산은 그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

○ 징계부과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매년 매우 저조한 편이고, 대법원은 매년 일정 규모의 징수결정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부과금 세입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아 적극적인 수납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부과금에 대한 구체적인 체납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할 필요

○ 속기직렬에 대한 스마트속기기계 교체를 위해 반영한 예산이 각급 법원의 실제 수요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에 기초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일부 감액 필요

○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사업 중 ‘장단기 해외연수’ 사업을 ‘법관 단기국외훈련’ 사업 및 ‘연임법관 연수’ 사업과 통합하고, 예산을 증액할 필요

○ 예산 부족으로 인해 2023년부터 누적된 일반국선변호료 미집행액과 2024년 일반국선변호료 예상 부족액 해소를 위해 일반회계 ‘국선변호료 지원’ 사업 예산 증액 필요

○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관련 대법원의 추가 과업지시에 대하여 사업수행자와 분쟁이 있는 상황이므로, 추가 과업지시에 따른 추가 비용 지급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할 필요

○ 법원 내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확보 현황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법원 내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

○ 등기특별회계 ‘등기소 신.증축’ 사업 중 ‘통합등기소 신축’ 사업과 ‘일반등기소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은 법원 운영 및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필수적이므로 신속.충분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예산 확보 필요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장경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1.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601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113억 8,100만원을 증액하여, 487억 3,900만원을 순감액하였음.

구체적으로,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900만원과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원은 세부 집행 내역 등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우리 위원회 방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고, 법무부의 소관 업무가 아님에도 시행령에만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은 타 부처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면서, 관련 운영 예산 4억 1,9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음.

한편, 무도실무관, 감호실무관 등 특수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공무직 근로자 588명의 수당 및 고용부담금 지급을 위해 “전자감독” 등 4개 세부사업에서 총 7억 1,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취약계층의 민사소송비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6억 2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음.

다음으로,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였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출계획안에 대해서는 3억 1,700만원을 감액하고, 35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음.

구체적으로, 운용실적이 미흡한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장치’ 예산 3억 1,700만원을 감액하여 이를 전년대비 감액 편성된 ‘범죄피해자 임시안전숙소’ 예산에 증액 반영하였고, 상근 진술조력인의 급여 현실화를

위한 예산 8,600만원도 반영하였음.

아울러, 법무부에 민영교도소 노후 시설 개선 비용 확보를 위해 자체 수입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총 2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

2. 법제처 소관

나라키움 정책연수원 무상사용 방침에 따라 법제교육 사업 임차료 4억 7,9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법령해석국 20주년 세미나 개최 예산 2,000만원, 분야별 법령 외국어 번역본 정비연구 예산 2,000만원 등 총 5억 5,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법제교육시스템 보안 강화 및 기능 개선 예산 3억 9,600만원, 전자 점자소프트웨어 구입 예산 8,300만원, 국가법령정보센터 개편 예산 7억 6,100만원 등 총 12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음. 또한, 생활조례콘텐츠의 업데이트 주기를 단축하도록 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

3. 감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증액 없이 91억 600만원을 감액하였음.

구체적으로, 예산 편성 산출근거의 타당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없는 감사원 특수활동비 15억 1,9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 45억 1,900만원을 각각 전액 감액하였고, 감사원 업무용택시 예산도 그동안 불투명한 집행 관행이 누적되어 온 점을 반영하여 3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음.

또한,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관서업무추진비 1억 4,800만원과 국내여비 1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음.

아울러, 적극행정 지원사업 예산 증액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등 총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사업에서 전자적 증거보존 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1억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집행이 부진한 위원회 수당 3,000만원,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처리사건이 많지 않음을 감안하여 형사보상금 5,700만원 등 총 2억 200만원을 감액하였음.

아울러, 공판역량강화 사업 추진 시 체계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검사의 공판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

5. 헌법재판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인건비에서 연례적으로 높은 불용률과 2025년 불용예상액을 고려하여 1억원, 본부기본경비에서 과다 편성된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석' 예산 200만원, 총 1억 200만원을 감액하였음.

아울러, 헌법재판연구원에서 개최하는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등 총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

6. 대법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3억 6,300만원을 감액하고, 187억 100만원을 증액하여, 183억 3,800만원을 순증액하였음.

구체적으로, 대법원에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적극 촉구하는 취지로 본부 운영지원 공공요금에서 2025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예상액의 10%에 해당하는 3억 6,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산부족으로 인한 일반국선변호인 보수 미집행 이월액 등 해소를 위해 국선변호료 지원 예산 178억 6,600만원, 법원 내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5억원 등을 증액하였음.

등기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안은 원안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시각장애인 점역서비스 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1,000만원을 증액하였음.

아울러 복리후생비 예산이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 명시된 용도와 명칭에 명확히 부합하게 편성하도록 하는 등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

Ⅶ. 심사결과

1. 법무부 소관

가. 일반회계 세입: 원안의결

나. 일반회계 세출: 수정의결 〔붙임2 참조〕

○ 기업환경지수개선 (1032-307)
· 기업환경평가대응 분쟁해결분야 역량강화 1억원 감액

○ 법무실 기본경비 (7011-253) 200만원 감액

○ 외국인 사회통합지원 (1233-301)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3억원 감액

○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1355-306)
·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 5,000만원 감액

○ 형사부 등 수사지원(1335-301)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수당 1,500만원 감액

○ 공공수사(1335-302)
· 선거범죄신고포상금 3,200만원 감액

○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1335-303)
· 금융·증권분야 위탁교육 1억 4,000만원 감액

○ 사회적약자대상 범죄수사(총액)(7011-200)
· 범죄피해자 심리·예술치료 200만원 감액

○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7011-200)
· 인사정보관리단 8,600만원 감액

○ 기관운영기본경비(7011-250)
· 인사정보관리단 3억 3,300만원 감액

○ 법률구조(1131-300)
· 대한법률구조공단 3억 6,000만원 감액
· 대한법률구조공단 16억 200만원 증액

○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1333-300)
· 중재산업 활성화 10억원 증액

○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1431-300) 1억 4,500만원 증액

○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1431-301)
· 기업·청년해외진출지원 1억 6,600만원 증액

○ 이민정책개발지원(1231-300) 2억 1,000만원 증액

○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1232-300)
· 공무직근로자 운영 7,300만원 증액

○ 외국인보호관리(1233-300)
· 공무직근로자 운영 2억 6,100만원 증액

○ 교정시설장비 운용 및 현대화(1531-302)
· 교정기관 재난·안전관련 시설 유지관리 10억원 증액

○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1531-304)
· 대체복무 물품구입 3억 4,400만원 증액

○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1532-300)
· 수용관리 간접경비 17억 3,100만원 증액

○ 치료감호자수용관리(1634-300) 4억 1,900만원 증액

○ 전자감독(1635-301)
· 전자감독·신상정보 등록 전담인력 운영 2억 700만원 증액

○ 소년원생수용(1632-300)
· 교육과정운영등 5억원 증액
· 공무직 등 인력지원 1억 7,600만원 증액

○ 과학수사 인프라구축(1333-302)
· AI기반 증거분석 장비 고도화 4억 5,000만원 증액

○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1337-301) 9,700만원 증액

○ 형사보상(1337-302) 30억원 증액
○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900만원 감액
○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원 감액

2. 법제처 소관

가. 일반회계 세출: 수정의결 〔붙임3 참조〕

○ 기관운영기본경비(1011-250) · 세미나 개최 용역비 등	5,200만원 감액
○ 법령정보제공(1031-300) ·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1,500만원 증액
○ 세계법제정보서비스(1031-301) · 세계법제 지원	2,000만원 감액
○ 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1033-500) · 국가법령정보 통합 검색서비스	8억 4,400만원 증액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1034-300) · 법제교육	8,300만원 감액

3. 감사원 소관

가. 일반회계 세출 : 수정의결〔붙임4 참조〕

○ 인건비(1101-151)	10억원 감액
○ 기본경비(1111-251)	3억 6,700만원 감액
○ 감사활동경비(1131-303)	76억 8,000만원 감액
○ 국제교류협력강화(1135-322)	3,700만원 감액
○ 감사기구역량강화(ODA)(1135-323)	2,200만원 감액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가. 일반회계 세출: 수정의결 〔붙임5 참조〕

○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1031-301)

· 디지털포렌식 장비도입 3억 9,900만원 증액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32-301) 6,000만원 증액

5. 헌법재판소 소관

가. 일반회계 세출: 수정의결 〔붙임6 참조〕

○ 인건비(1001-150) 1억원 감액

○ 본부기본경비(1011-250) 200만원 감액

6. 대법원

가. 일반회계 세출: 수정의결 〔붙임7 참조〕

○ 가족관계등록사무(1136-351)

· 시각장애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점역서비스 1,000만원 증액

○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1140-361)

· 장단기 해외연수 3억원 증액

○ 사법정책연구개선(1143-405)

· 법원정책연구비 2,500만원 증액

○ 국선변호료지원 (1143-409)

· 국선변호인 보수 178억 6,600만원 증액

○ 법원시설관리 등(1253-411)

· 청사환경개선(청소노동자 휴게시설) 5억원 증액

○ 본부 기본경비 (7011-250)

· 공공요금 및 제세(장애인 고용부담금) 3억 6,300만원 감액

나. 등기특별회계 세출: 수정의결 (붙임7 참조)

○ 등기업무 운영지원(7032-311)

·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법행정 운영지원 1,000만원 증액

Ⅷ. 부대의견

■ 법무부

○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국외업무여비 예산 편성 시 방문 국가 등을 포함한 국외 출장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집행한다.

○ 법무부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 시범사업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2025년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

○ 법무부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 사업 예산 집행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 법무부는 사회적 취약계층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법률구조 사업의 성과지표를 개선한다.

○ 법무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현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조정하고, 그 차액분을 퇴직적립금으로 편성하여 명세서에 명시함으로써 퇴직적립금 고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법무부는 2025년도 민영교도소 교정활동사업비(법정민간대행)가 감액되어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노후된 시설 개선 비용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수익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 법무부는 전자감독 장치의 부착대상자 수 증감 추이 및 연도말 보유수량 등을 고려하여 운용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적정한 수량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법무부는 2024년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권 무시’ 과잉 단속 논

란이 발생한 만큼, 무주군 외국인 출국지원센터 신축 시 인권침해 예방 대책을 사업 수립 단계에서부터 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 특별감찰관실은 현재 진행 중인 정부청사 사무실 이전 협의를 지속하여 내년도 하반기 사무실 이전 계획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 법무부는 노후된 대형 소유관사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교환, 임차 전환 등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적정한 규모의 관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업무정보화 사업에 편성된 기념품 구입비 및 음원이용료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을 철저히 관리한다.

○ 법무부는 선거범죄신고포상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과 포상금에 대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공직선거가 없는 해에는 미집행 최소화를 위해 예산을 축소하는 등 탄력적·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운영한다.

○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 전문화 교육’ 및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 사업이 각 범죄 유형별 대응 역량 강화라는 추진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 집행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한다.

○ 법무부와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D-Net)의 법적 설치 근거, 운영 및 통제 방법,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법률적 통제장치를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시까지 신속히 마련하고, 통제장치가 마

련되기 전까지 그 추진 상황 및 시스템 관리 현황 등을 국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한다.

○ 법무부와 검찰은 형사법정비 사업에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가 형사법 제·개정 등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법무부는 지출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한 사업에 대해 신규 소요를 이유로 증액 편성하는 것은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법무부와 검찰은 피조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영상녹화를 실시하고, 영상녹화실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하는 등 영상녹화조사 사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 법무부는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산출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특수활동비 세부내역을 국회에 보고하고,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 법무부는 특정업무경비 예산 편성 산출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특정업무경비 세부내역을 국회에 보고하고, 특정업무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 법무부는 예산 편성 산출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관서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국회에 보고하고, 관서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업무는 법무부의 소관 업무가 아니므로, 불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를

타 부처로 이관하고, 지금까지 집행된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의 세부내역 및 활동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

■ 법제처

○ 법제처는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생활조례 콘텐츠의 양적 확대보다는 업데이트 주기를 단축하여 변경된 생활조례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감사원

○ 감사원은 인력 충원율 저조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다방면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감사원은 예산안 편성 산출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본경비 중 택시비, 관서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국회에 보고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감사원은 예산안 편성 산출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경비 중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관서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국회에 보고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감사원은 적극행정 지원사업 예산 증액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감사원은 전산운영경비 사업 추진에 요구되는 절차 등 제반 사항들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을 적기에 체결할 필요가 있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업무의 효율화 및 최적화를 위하여 해외연수 사업을 추진한다.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인건비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휴직·퇴직 등 인력에 대한 충원계획을 보다 충실히 수립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한다.

○ 헌법재판소는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의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 및 저조한 참여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

■ 대법원

○ 대법원은 향후 복리후생비 예산이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 명시된 용도와 명칭에 명확히 부합하도록 편성한다.

○ 대법원은 징계부과금의 구체적인 체납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한다.

○ 대법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축소

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대법원은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의 소송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부당한 압력이 행사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비용을 지급하게 될 수 있으므로 소송 상황을 면밀히 살펴 소요 예산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는 한편, 향후 정보화전략 계획 수립에 있어 사업수행자에 대한 부당한 추가 과업지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한다.

○ 대법원은 증액된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의 구체적 사용 계획과 기대되는 효율성 보장 방안을 설명하고, 유지관리 비용 절감과 시스템 통합 관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 대법원은 통합등기소 신축 및 일반등기소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붙임 1. 2025년도 예산안 조정 총괄표

1. 세입예산안 예비심사결과 : 원안의결

2. 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소 관	회 계	수정의결		
			증 액	감 액	증 감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일반회계	11,381	△60,120	△48,739
		교도작업특별회계	-	-	-
	법제처	일반회계	1,255	△551	704
	감사원	일반회계	-	△9,106	△9,10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반회계	459	-	459
	헌법재판소	일반회계	-	△102	△102
	대법원	일반회계	18,701	△363	18,338
		등기특별회계	10	-	10
	합 계		31,806	△70,242	△38,436

붙임 2. 2025년도 법무부 예산안 수정현황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 원안의결

(2) 교도작업특별회계 : 원안의결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	기업환경지수개선 (1032-307)	253	2,753	2,653	△100	○ 신규 내역사업인 **'기업환경평가대응 분쟁해결분야 역량 강화'**사업(25억원)과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1033-304)'의 '중재산업 활성화' 내역사업 모두 해외 설명회 등 우리나라 국제중재 홍보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두 사업 모두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수행하고, 사업 목적·방향 및 국재중제 홍보, 중재전문인력 양성 등 세부 내용에 있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예산 1억원 감액	
2	법무실 기본경비 (7011-253)	590	709	707	△2	○ 기존 국제법무과와 국제분쟁대응과가 국제법무국으로 이관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법무실 기본경비 예산 중 최근 3년간 국제법무국 소관 사무용 집기류 구입을 위한 집행액의 평균인 자산취득비(430-01) 228만원 감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3	외국인 사회통합지원 (1233-301)	15,427	17,939	17,639	△300	○ 내역사업인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22억 1,900만원, 전년대비 12억 5,500만원 증액)은 입국 초기 외국인 중 대한민국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사회에 신속한 적응을 위해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신규 외국인등록자의 평균적인 교육 참여 비율은 13.5%에 불과하고, 비자 발급 총량 대비 발급 실적 역시 저조한 상황으로, 전년대비 예산 증가율 100% 수준을 위한 예산 3억원 감액 필요	
4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1335-306)	6,252	6,252	6,202.4	△50	○ 내역사업인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1억 4,000만원, 전년동)의 예산상 통보 건수가 실제 통보 건수대비 과다하게 책정되어 예산 집행이 부진한 점을 고려하여 4,960만원 감액	
5	형사부 등 수사지원 (1335-301)	86,475	87,963	87,948	△15	○ 내역사업인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수당'**(1억 5,100만원, 신규)은 2025년 개최 목표 횟수(67개 검찰청에서 5회씩 총 335회)가 최근 개최 실적 대비(청 당 3회 내외) 높게 책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10%(1,500만원) 감액	
6	공공수사 (1335-302)	3,276	3,438	3,406.5	△32	○ 내역사업인 **'선거범죄신고포상금'**(4,512만원, 전년동)은 2019년 이후 집행률이 매년 1% 미만으로 크게 저조한 점, 2025년에는 전국단위 선거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3,150만원 감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7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1335-303)	14,644	15,408	15,268	△140	○ 내역사업인 '**금융·증권분야 위탁교육**'(2억 8,000만원, 신규)은 사업 준비 상황 및 교육생 선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업 첫 해인 2025년에는 2학기부터 위탁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한 학기 분인 1억 4,000만원 감액	
8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수사 (1335-305)	3,481	3,704	3,702	△2	○ 내역사업인 '**범죄피해자 심리·예술치료**'(1,580만원, 전년동)는 최근 치료 실적 및 예산 집행이 크게 저조한 점, 범피기금의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1135-300) 사업에서 범죄피해자 심리치료시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0만원 감액	
9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7011-200)	3,386	3,473	3386.6	△86	○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업무는 법무부의 소관 업무가 아니며, 불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므로,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 8,642만원 전액 감액	
10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4,034	4,388	4,054.8	△333	○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업무는 법무부의 소관 업무가 아니며, 불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므로,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 3억 3,322만원 전액 감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1	**법률구조** **(1131-300)**	64,817	67,697	68,939	△360	○ 내역사업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매년 계획과 상이한 불요불급한 목적으로 집행되는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비 7,100만원과, 사업의 효과성·필요성 고려 시 축소할 필요가 있는 사생활보호형 상담실 구축예산 2억 8,900만원 등 3억 6,000만원 감액	
					1,602	○ 내역사업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취약계층 법률구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취약계층 민사소송비용 지원 강화를 위해 16억 200만원 증액	
12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1033-304)**	3,400	2,595	3,595	1000	○ 내역사업인 **'중재산업 활성화'**사업(17억 7,100만원, 전년대비 8억 700만원 감액)은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중재를 활성화하려는 사업으로, 중재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국제중재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온라인 분쟁해결시스템 구축 예산 10억원 증액	
13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 **(1431-300)**	381	516	661	145	○ 2023. 8. 출범한 '국제법무지원과'의 국제소송 업무 관련, 구글·메타·넷플릭스 등이 정부 상대로 제기한 소송 수행 및 법률지원 업무가 계속 증가하나, 이를 담당할 전문위원 등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신설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제업무 전문위원 2명 인건비 예산 1억 4,500만원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4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1431-301)**	728	734	900	166	○ 내역사업인 **'기업·청년해외진출지원'** 사업(8,800만원, 전년 동)의 경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지원 사업과 해외진출기업의 국제법무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및 홍보의 필요성, **'통상협상 법률지원'** 사업(8,000만원, 전년 동)의 경우 각종 국제협약의 자문 사례금을 늘려 보다 내실있는 국제협약 리서치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1억 6,600만원 증액 필요	
15	**이민정책 개발지원 (1231-300)**	386	190	400	210	○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이민정책 실태조사 연구용역, 정책개발 업무지원 및 개발연구 사업 등의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과거 정부 출범 당시 "이민청" 설립계획을 발표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민청 설립을 위해 이민정책개발지원에 대한 예산사용의 우선순위를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2억 1,000만원 증액 필요	
16	**출입국외국인 관서시설운영 (1232-300)**	51,419	55,163	55,236	73	○ 내역사업인 **'공무직근로자 운영'**사업(178억 7,200만원, 전년대비 13억 5,300만원 증액) 관련, 계호 및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 업무의 위험성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의 50% 수준인 특수직무수당(월 8.5만원) 지급을 위한 7,300만원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7	**외국인보호관리** **(1233-300)**	22,287	21,372	21,633	261	○ 내역사업인 **'공무직근로자 운영'**사업(121억 7,000만원, 전년대비 3억 6,100만원 증액)과 관련, 계호 및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 업무의 위험성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의 50% 수준인 특수직무수당(월 8.5만원) 지급을 위한 2억 6,100만원 증액 필요	
18	**교정시설장비** **운용 및 현대화** **(1531-302)**	100,834	85,596	86,596	1,000	○ 내역사업인 **'교정기관 재난·안전관련 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각종 시설유지관리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형 집행 시설의 현대화 및 시설보수를 위해 시설장비유지비 10억원 증액(사형집행시설 제외)	
19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 **(1531-304)**	16,459	17,241	17,585	344	○ 대체복무는「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현역병과 동일한 처우 수준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인 **'대체복무 물품구입'**은 전년 대비 90% 이상 감액되어 원활한 시설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물품 구입예산 3억 4,400만원 증액	
20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1532-300)**	269,102	290,348	292,079	1,731	○ 내역사업인 **'수용관리 간접경비'** 중 교정시설 공공요금은 반복되는 이·전용에 따라 행정 비효율과 공공요금 부족 재원 보충을 위해 이·전용 대상 비목 예산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는 바, 교정시설 공공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정부안 대비 17억 3,1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21	**치료감호자수용 관리 (1634-300)**	12,680	12,581	13,000	419	○ 동 사업은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심신장애, 마약·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및 정신성적 장애 범죄자에 대해 특수한 치료·재활교육으로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적절한 수용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용자 급량비 및 의료비의 확충, 감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등이 요구되므로 4억 1,900만원 증액	
22	**전자감독 (1635-301)**	32,427	36,847	37,054	207	○ 내역사업인 **'전자감독·신상정보 등록 전담인력 운영'**(100억 8,100만원, 전년대비 4억 1,900만원 증액)은 전자감독 범죄예방팀 운영을 위한 신속대응 요원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위한 전담인력(계약직)의 보수, 고용부담금 등 인건비성 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임 ○ 전자감독출동을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업무의 위험성 및 중요성이 높아 특수직무수당 지급이 필요하므로,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총 2억 73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23	**소년원생수용** **(1632-300)**	26,887	26,971	27,647	500	○ 내역사업인 **'교육과정운영등'**(90억 5,800만원, 전년 대비 4억 2,800만원 감액)은 초중등교육과정, 직업훈련과정, 의료재활교육과정, 인성교육과정 등 보호소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제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임 ○ 소년범의 재범률을 낮추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므로, 전문강사 초빙 및 교재 제작·구입을 위한 예산 5억원 증액	
					176	○ 내역사업인 **'공무직 등 인력지원'**(92억 7,500만원, 전년대비 3억 5,800만원 증액)은 소년원생에 대한 감호업무 지원 등 공무직 근로자(감호실무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특수교사) 및 검정고시 지도 등 유급강사 인건비를 지원하려는 것임 ○ 공무직 근로자 중 감호업무를 수행하는 감호실무관의 경우 업무의 위험성 및 중요성이 높아 특수직무수당 지급이 필요하므로,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총 1억 7,56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24	**과학수사 인프라구축 (1333-302)**	11,021	12,250	12,700	450	○ 내역사업인 '**AI기반 증거분석 장비 고도화**'(11억 6,000만원, 신규) 사업 추가 증액 ① 신속하고 고도화된 감정 지원을 위해 딥보이스 최신 분석 장비 및 시스템 추가 도입을 위한 '음성분석시스템'예산 1억 6,500만원 증액 ② 안정적 딥페이크 분석 수행에 필요한 장비 업그레이드 및 첨단영상포렌식시스템 구축비용 추가 반영을 위한 '영상분석시스템'예산 2억 8,500만원 증액	
25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1337-301)**	7,262	7,262	7,359	97	○ 자유형 미집행자, 불출석 피고인 검가 업무를 수행하는 검거 담당 수사관의 사고 예방을 위해 방검복 구입 예산 9,700만원 증액 (60개 지검, 지청 × 3명 × 54만원)	
26	**형사보상 (1337-302)**	40,000	42,000	45,000	3,000	○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형사보상 건당 지급액이 지속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2021년대비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약 15%)을 적용, 정부안 대비 30억원 증액 ※ 최저임금 상승 : 2021년 8,720원 → 2025년 10,030원 (15%↑)	

※ 검찰 특수활동비 심사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예산 (특수활동비)	2025(안)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 수정액	수정이유	비고
1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1333-306)	25,457 **(482)**	24,208 **(482)**	**△482**	○ 검찰 특수활동비의 적합한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세부 집행내역 등 자료제출을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법무부와 검찰의 자료 미제출·부실제출로 제대로 된 검증이 불가능하고, 특수활동비 예산편성 산출근거의 타당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7개 세부사업에 편성된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900만원 전액 감액	
2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1334-501)	10,419 **(110)**	10,059 **(110)**	**△110**		
3	형사부 등 수사지원 (1335-301)	86,475 **(4,567)**	87,963 **(4,567)**	**△4,567**		
4	공공수사 (1335-302)	3,276 **(320)**	3,438 **(320)**	**△320**		
5	국민생활침해 범죄수사 (1335-303)	14,644 **(1,324)**	15,408 **(1,624)**	**△1,624**		
6	마약수사 (1335-304)	8,204 **(248)**	9,958 **(748)**	**△748**		
7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1335-306)	3,481 **(158)**	3,704 **(158)**	**△158**		
특수활동비 합계		**7,209**	**8,009**	**△8,009**		

※ 검찰 특정업무경비 심사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예산 (특정업무경비)	2025(안) (특정업무경비)	특정업무경비 수정액	수정이유	비고
1	과학수사 인프라구축 (1333-302)	11,021 **(89)**	12,250 **(153)**	**△153**	○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 특정업무경비의 세부내역을 비공개하고 있어 집행의 적정성이나 예산편성 산출근거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검찰활동 프로그램(1300) 11개 세부사업에 편성된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원 전액 감액	
2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1333-306)	25,457 **(4,539)**	24,208 **(4,539)**	**△4,539**		
3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1334-501)	10,419 **(88)**	10,059 **(88)**	**△88**		
4	형사부 등 수사지원 (1335-301)	86,475 **(34,533)**	87,963 **(35,543)**	**△35,543**		
5	공공수사 (1335-302)	3,276 **(1,578)**	3,438 **(1,740)**	**△1,740**		
6	국민생활침해 범죄수사 (1335-303)	14,644 **(3,542)**	15,408 **(3,726)**	**△3,726**		
7	마약수사 (1335-304)	8,204 **(1,337)**	9,958 **(1,387)**	**△1,387**		

8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수사 (1335-305)	3,481 **(720)**	3,704 **(942)**	**△942**		
9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1335-306)	3,481 **(1,186)**	3,704 **(1,186)**	**△1,186**		
10	공판활동지원 (1337-300)	2,037 **(772)**	2,037 **(772)**	**△772**		
11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1337-301)	7,262 **(614)**	7,262 **(614)**	**△614**		
검찰 특정업무경비 합계		**48,998**	**50,691**	**△50,691**		

(2) 교도작업특별회계 : 원안의결

붙임 3. 2025년도 법제처 예산안 수정현황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해당없음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	기관운영기본경비 (1011-250)	3,277	3,507	3,455	△32	○ 2025년 신규사업으로 의원입법 관련 안내 자료로 “최신 입법 트렌드”를 책자로 발간할 계획인데, 그 구성과 내용이 기존 월간 소식지인 “법나들이” 및 “새 법령 소개” 등 다른 소식지 및 발간물과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3,150만원 감액	
					△20	○ 법령해석국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를 위해 일반용역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유사한 형식의 행사인 행정법제 혁신 공청회·설명회의 경우 최근 4년간 980만원에서 2,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2,000만원 감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2	**법령정보제공 (1031-300)**	1,718	1,552	1,567	15	○ 내역사업인 ‘어린이·청소년 법제관’(3억 5,300만원, 전년 대비 1,900만원 감액) 중 어린이법제관 사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임. ○ 사업 홍보가 부족한 경우 학생들의 참여 유도가 어렵고, SNS나 학교 알림장 앱을 활용한 홍보만으로는 신청율 및 수료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홍보 예산 1,500만원 증액	
3	**세계법제정보 서비스 (1031-301)**	1,662	1,702	1,682	△20	○ 내역사업인 ‘세계법제 지원’(15억 9,100만원, 전년 대비 3,800만원 증액) 중 ‘분야별 법령 외국어 번역본 정비 연구’는 2025년 신규 사업으로 법제처가 국내법령 번역본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임. ○ 국내법령의 외국어 번역 업무 추진 체계에 비추어 한국법제연구원 또는 번역수요를 가진 소관 부처에서 번역본 감수업무를 수행함이 타당하므로 예산 2,000만원 감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4	**법제업무정보화 추진(정보화) (1033-500)**	8,744	8,046	8,890	83	○ 내역사업인 ‘국가법령정보 통합 검색서비스’(46억 3,200만원, 전년 대비 4억 5,000만원 감액)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생산하는 법령정보를 지속적으로 통합,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인공지능(AI)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 구축을 통한 법령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 시각장애인을 위한 예산으로 ‘법령정보 전자점자 문자 제공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1억 7,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법령정보를 정확하게 변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입 등을 위한 예산 8,300만원(자산취득비 430-01목) 증액	
					761	○ 시각장애인 등의 불편요소 제거를 위한 화면구성 개편 및 모바일 환경 적합 화면 표출 등 시스템 개편을 위한 예산 7억 6,100만원(일반연구비 260-01목)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5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 육성 (1034-300)**	1,555	2,281	2,198	△479	○ 내역사업인 ‘법제교육’(20억 1,700만원, 전년 대비 6억 9,900만원 증액)은 중앙행정지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법제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임. ○ 태안정책연수원에서 법제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편성된 강의실 사용료는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방침이 예산 편성 이후 무상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임차료 예산 4억 7,850만원 감액	
					396	○ 법제처가 구축하여 운영 중인 법제교육시스템은 망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 정보유출 및 해킹 우려가 있는바, 망 분리(내부망/외부망) 보안기능을 구축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등 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한 예산 3억 9,600만원 증액	

붙임 4. 2025년도 감사원 예산안 수정현황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 원안의결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	인건비 (1101-151)	94,182	98,994	97,994	△1,000	○ 결원의 과다로 인한 인건비 불용과 충원이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억원 감액	
2	기본경비 (1111-251)	13,451	14,768	14,401	△330	○ 일반수용비 중**'업무용택시'**(4억 5,000만원, 전년 동)는 결산 심사에서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등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을 반영하여 3억 3,000만원 감액	
					△37	○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관서업무추진비(2억 6,100만원, 전년 대비 3.700만원 증액)를 전년 수준으로 하기 위하여 3.700만원 감액	
3	감사활동경비	16,938	16,914	9,234	△1,519	○ 특수활동비(15억 1,900만원, 전년 동)는 사용 내역을 제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예산심의를 회피하였고, 특수활동비를 수당화하거나 명절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등 편성 목적 외로 활용하였으며, 예산 편성의 산출근거에 대한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15억 1,900만원 전액 감액	
	(1131-303)				△4,519	○ 특정업무경비(45억 1,900만원, 전년 대비 9,700만원 감액)는 세부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어 집행의 적정성이나 예산편성의 산출근거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45억 1,900만원 전액 감액	
					△148	○ 관서업무추진비(7억 3,900만원, 전년 대비 1억원 감액)는 적법한 예산 집행 여부 및 산출 근거를 판단할 수 없고,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며,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1억 4,800만원 감액	
					△1,150	○ 국내여비(57억 4,800만원, 전년 대비 1억 9,400만원 감액)는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11억 5,000만원 감액	
					△5	○ 일반수용비 중**'정보이용, 시험·검사, 통계분석 등 감사자료 취득 관련 비용'**(1억 3,500만원, 전년 동)은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도서의 구입·배포 등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되고 있는 등 예산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500만원 감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330	○ 일반수용비 중**'공공기관 회계감리 전문가 자문 등'**(3억 3,000만원, 신규사업)은 기 작성된 공공기관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감사원이 수행하는 결산검사의 전문성 보강 및 사각지대 방지를 위하여 민간 회계전문가를 회계감리(監理) 전 과정에 참여시키고 자문료를 지급하려는 사업임 ○ 감사원이 기존 25개 내외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결산검사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산 검사 대상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순증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3억 3000만원 감액	
					△9	○ 일반수용비 중**'감사원 SNS, 블로그 운영 및 홍보책자 발간 등'**(2,600만원, 전년 동)은 연례적 집행부진 및 당초 편성과 다른 집행 전력을 고려하여 900만원 감액	
4	국제교류협력강화 (1135-322)	854	1,062	1,025	△37	○ 내내역사업 **'국제기구 외부감사인 진출 추진'**(1억 2,900만원, 신규사업)은 통상 우리나라 전체 선거 수가 약 10회~15회인 점을 고려하면 2025년 한 해 동안 3개 선거의 입후보를 추진하는 것은 지나쳐 보이므로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국외업무여비 3,700만원 감액	
5	감사기구 역량강화(ODA) (1135-323)	292	292	270	△22	○ 국가별 연수생 초청 항공료가 일반용역비(2억 4,200만원, 전년 동) 예산 중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 항공료 단가가 지침상 단가 대비 높게 책정된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용역비 2,200만원 감액 필요	

붙임 5. 2025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예산안 수정현황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 해당없음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1031-301)	2,330	855	1,254	399	○ 내역사업 **'디지털포렌식 장비도입'**(5억 6,100만원, 전년 동)은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도입하여 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디지털증거의 수집 · 분석 기법 연구 및 증거물 관리를 하려는 것임 ○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에 대한 법적 신뢰성을 유지하고 최신 범죄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의 주기적 갱신 및 최신 장비·소프트웨어 도입이 필요하나, 분석 수요 대비 장비 및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3억 9,9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2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32-301)**	1,720	1,430	1,490	60	○ 동 사업은 범죄정보 수집 관리, 전문 수사역량 강화, 수사활동 국내여비 등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원활히 하기 위한 직간접적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 국제반부패기구협의회 참석, 스웨덴 헌법위원회 답방 등 해외 교류를 통한 수사업무의 효율화 및 최적화가 필요하므로, 국외업무여비 6,000만원 증액	

붙임 6. 2025년도 헌법재판소 예산안 수정현황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 원안의결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	인건비 (1001-150)	33,533	34,792	34,692	△100	○ 인건비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에게 매월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 헌법재판소 인건비의 연례적으로 높은 불용률과 2025년 불용예상액을 고려하여 1억원 감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2	본부기본경비 (1011-250)	6,991	6,957	6,955	△2	○ 본부기본경비는 본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연례·반복적인 소규모 운영 경비를 지출하려는 것임 ○ 본부기본경비 사업에 편성된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석' 국외업무여비(220-02) 예산(1,300만원)은 참석자 수 조정(3명→2명) 및 대회 개최국 기준 실소요 금액으로 예산을 조정함으로써 과다 편성된 예산 239만원 감액	

붙임 7. 2025년도 대법원 예산안 수정현황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 원안의결

(2) 등기특별회계 : 원안의결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	**본부 운영지원** **(7031-303)**	109,178	116,911	116,548	△363	○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대법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대법원에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취지로 **'공공요금및제세(210-02목)'**(212억 3,000만원, 전년 대비 50억 4,300만원 증액)를 3억 6,300만원(2025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예상액 36억 3,100만원의 10%) 감액	

2	**가족관계 등록사무 (1136-351)**	14,448	11,479	11,489	10	○ 내역사업인 **'시각장애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점역서비스'**(400만원, 전년 동)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에 대한 시각장애인 점역서비스 제공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000만원 증액	
3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1140-361)**	7,586	7,693	7,993	300	○ 내역사업인 **'장단기 해외연수'**(53억 3,100만원, 전년 대비 1억 700만원 증액)는 법관의 외국 대학 등에서의 교육훈련 및 연구활동 참가 확대를 위해 3억원 증액	
4	**사법정책 연구개선 (1143-405)**	2,549	1,945	1,970	25	○ 내역사업인 **'법원정책연구비'**(6억 5,000만원, 전년 대비 2억 3,500만원 감액)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1161-306)의 내역사업인 **'국민참여재판 등 지원'**(20억 7,700만원, 전년 대비 5억 1,900만원 감액)의 조사연구비(2,500만원)를 이관	※증감액연계 (세부사업간) (회계기금간)
5	**국선변호료지원 (1143-409)**	69,884	53,400	71,266	17,866	○ 동 사업은 일반국선변호인 보수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예산부족으로 인한 미집행 이월액 및 2024년 예상 부족액 해소를 위해 178억 6,600만원 증액	
6	**법원시설관리 등 (1253-411)**	50,479	64,162	64,662	500	○ 내역사업인 **'청사환경개선'**(245억 200만원, 전년 대비 59억원 증액)은 법원 내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에 대한 개선을 위해 5억원 증액	

(2) 등기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1	**등기업무 운영지원 (7032-311)**	24,561	24,086	24,096	10	○ 내역사업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법행정운영지원'**(500만원, 전년 대비 2,600만원 감액)은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한 시각장애인 점역서비스 제공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000만원 증액	